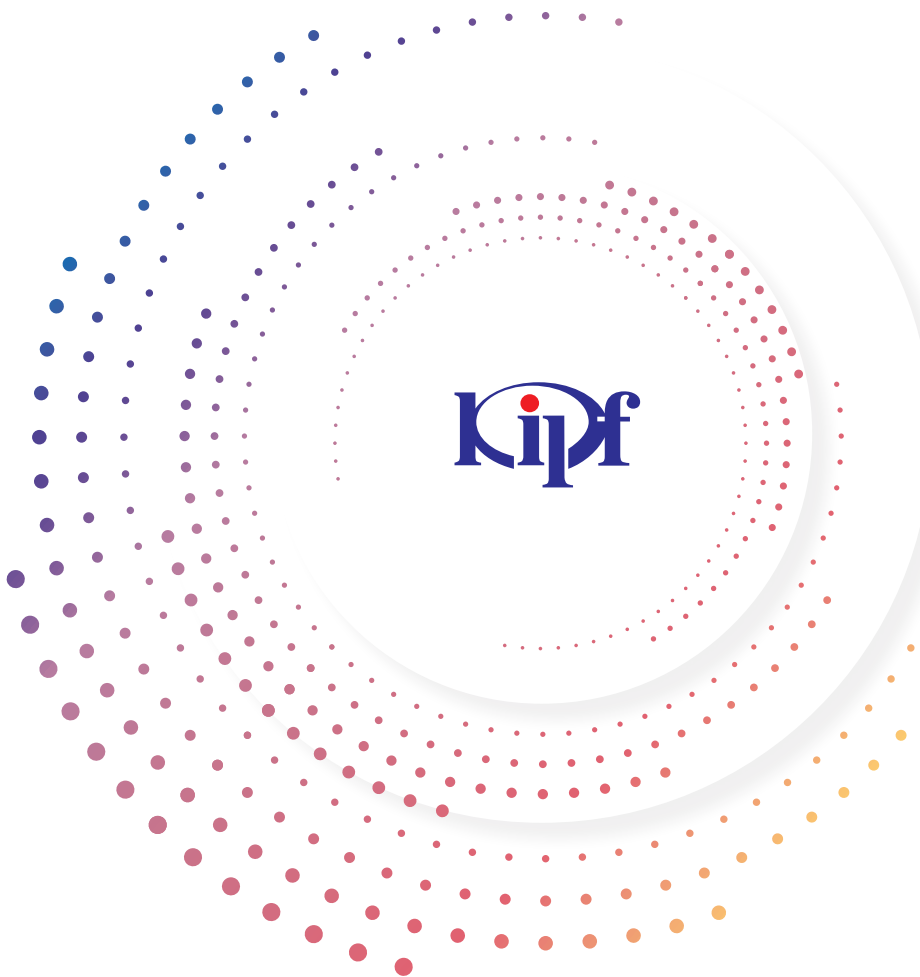


2023. 12

재정 동향

2023 | 하반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 센터장

배진수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제도분석팀장

박정흠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강민채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구윤모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미국)

김은숙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영국)

김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OECD)

염보라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IMF)

오윤서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대한민국)

이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연구원(미국)

이정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일본)

이정인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프랑스)

한혜란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독일)

황보경 재정지출분석센터 선임연구원(EU)

2023. 12

재정 동향

2023 |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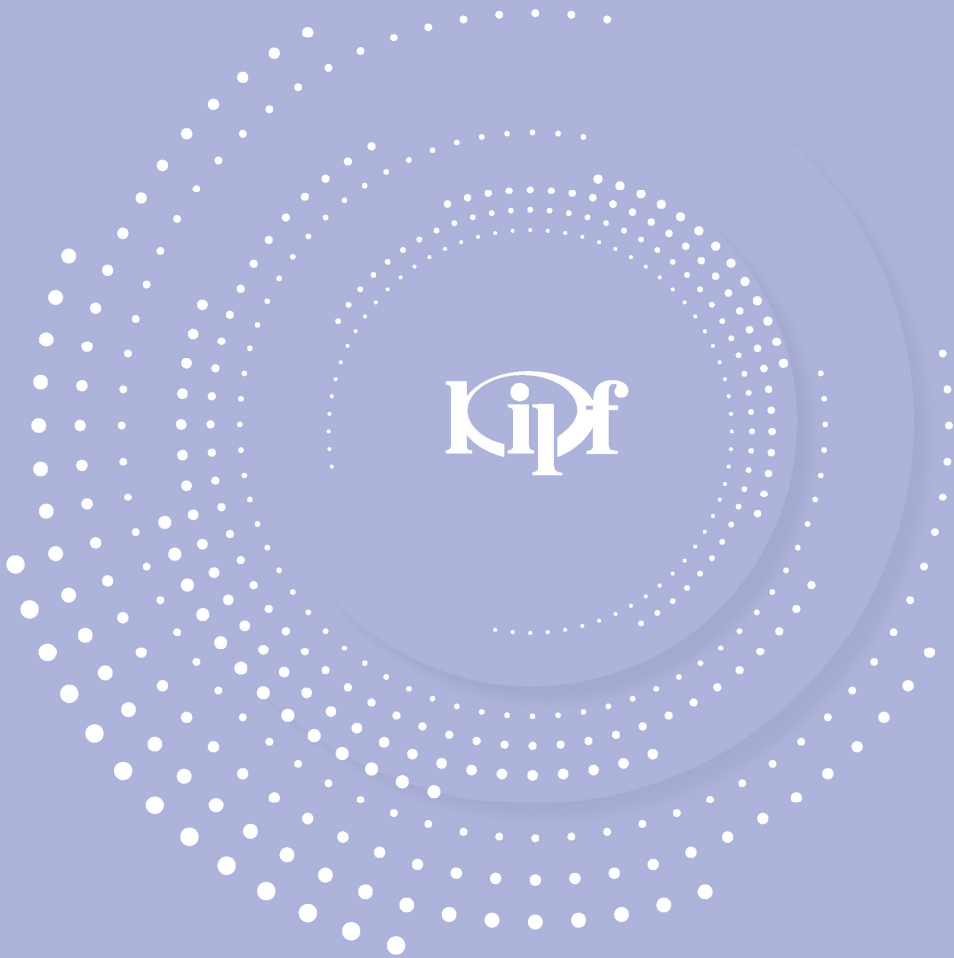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
동향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ontents

제1부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	2
1.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
2.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3
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5
4.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6
5.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	7
6. 2024년 예산 국회 확정	8
7.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11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I. 유럽연합(EU)	14
1. 유럽연합(EU) 예산	15
2. European Semester	20
3. 주요 정책 및 이슈	30
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41
II. 국제통화기금(IMF)	59
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60
2. 연례협의	73
3. 금융지원	83
4. 기타	86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90
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91
2. 주요 경제지표 동향	97
3. 재정 및 기타 이슈 보고서	103

제3부

주요국 재정동향

I. 미국	110
1. 예산 및 결산	112
2. 주요 정책 및 이슈	128
II. 일본	166
1. 예산 및 결산	167
2. 주요 정책 및 이슈	180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190
III. 독일	195
1. 예산 및 결산	196
2. 주요 정책 및 이슈	214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230
IV. 프랑스	237
1. 예산 및 결산	238
2. 주요 정책 및 이슈	248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256
V. 영국	264
1. 예산 및 결산	265
2. 주요 정책 및 이슈	271
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285
[주요 자료 출처]	296

2023년 하반기 재정동향

제 1 부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

I 국내 재정동향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01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2023. 6. 2.)

- 정부는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여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
 - 예산편성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 집중 투자하여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을 강조
- 예산편성 방향 이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 재고 방안
 -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 국력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윤서 연구원(ysoh112@kipf.re.kr)이 기획재정부(<http://www.moef.go.kr/>) 보도·발표·게재자료 등을 발췌·정리하여 작성

02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2023. 8. 29.)

-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
- 2024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여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
 - 규모 : 총지출은 2023년 예산 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 규모, 총수입은 2023년 예산 대비 2.2% 감소한 612.1조원
 - * 총지출의 증가 규모인 2.8%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에 해당하고,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61.8조원으로 축소
 -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

표 1-I-1 2024년 재정운용(안)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증감	
			증감분	증감비율
총수입	625.7	612.1	△13.6	△2.2
국세	400.5	367.4	△33.1	△8.3
세외	225.2	244.7	19.5	8.7
총지출	638.7	656.9	18.2	2.8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3.1 (△0.6)	△44.8 (△1.9)	△31.7 (△1.3%p)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58.2 (△2.6)	△92.0 (△3.9)	△33.8 (△1.3%p)	
국가채무 (GDP 대비 %)	1,134.4 (50.4)	1,196.2 (51.0)	61.8 (0.6%p)	

자료: 기획재정부,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 2023. 8., pp. 3~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추구
 - 재정수입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
 - 국세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
 -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 규모는 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증가세 유지 예상
 - 세외수입은 연평균 4.6%, 기금수입은 연평균 5.4% 수준 증가 전망
 - 재정지출은 2023~2027년 기간 중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 계획
 - 2025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초를 이어가되, 재정혁신 등을 통해 필요 자원 확보
 - 의무지출은 연평균 5.0%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2.0% 증가 전망
 -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부터 $\Delta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 비율은 GDP 2027년 말까지 50%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표 1-I-2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¹⁾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625.7	612.1	661.5	692.0	722.3	3.7
국세	400.5	367.4	401.3	423.2	444.9	2.7
세외	25.0	27.9	33.6	30.9	29.9	4.6
기금	200.3	216.8	226.6	237.9	247.5	5.4
총지출	638.7	656.9	684.4	711.1	736.9	3.6
의무	340.3	348.2	373.3	394.0	413.5	5.0
재량	298.4	308.7	311.1	317.1	323.4	2.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58.2$ ($\Delta 2.6$)	$\Delta 92.0$ ($\Delta 3.9$)	$\Delta 72.2$ ($\Delta 2.9$)	$\Delta 69.5$ ($\Delta 2.7$)	65.8 ($\Delta 2.5$)	
통합 재정수지 (GDP 대비 %)	$\Delta 13.1$ ($\Delta 0.6$)	$\Delta 44.8$ ($\Delta 1.9$)	$\Delta 22.9$ ($\Delta 0.9$)	$\Delta 19.2$ ($\Delta 0.7$)	$\Delta 14.6$ ($\Delta 0.5$)	
국가채무 (GDP 대비 %)	1,134.4 (50.4)	1,196.2 (51.0)	1,273.3 (51.9)	1,346.7 (52.5)	1,417.6 (53.0)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2023. 8., pp. 7~9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03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2023. 8. 29.)

- 2024년 국세 수입은 2023년 예산(400.5조원) 대비 33.1조원(8.3%) 감소한 367.4조원으로 전망
 - 일반회계 : 2023년 예산(390.3조원) 대비 34.1조원 감소한 356.2조원 전망
 - 특별회계 : 2023년 예산(10.2조원) 대비 1.0조원 증가한 11.2조원 전망

표 1-I-3 2024년 국세세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안	2023년 예산 대비	
				증감액	%
총국세	3,959,393	4,004,570	3,673,750	△330,820	△8.3
일반회계	3,851,596	3,902,539	3,561,792	△340,747	△8.7
특별회계	107,797	102,031	111,958	9,927	9.7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보도자료, 2023. 8. 29., 참고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3년 예산 대비 소득세 6.0조원, 법인세 27.3조원, 부가가치세 1.8조원 감소 전망
 - (소득세) 자산시장 불확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나, 임금 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 예상
 - (법인세) 2023년 기업실적 둔화에 따라 감소 예상
 - (부가가치세) 소비 증가 등에 따라 2023년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년 예산 기준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

04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2023. 9. 18.)

-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14.8%)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전망
 - 일반회계 : 2023년 예산(390.3조원) 대비 15.2% 감소한 331.1조원 전망
 - 특별회계 : 2023년 예산(10.2조원) 대비 0.7% 증가한 10.3조원 전망
 - 국세수입 감소는 2022년 4/4분기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

표 1-I-4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실적(A)	2023년		전년대비(C-A)	비율	예산대비(C-B)	비율
		예산(B)	전망(C)				
총 국 세	395.9	400.5	341.4	△54.5	△13.8	△59.1	△14.8
일반회계	385.2	390.3	331.1	△54.0	△14.0	△59.1	△15.2
(소득세)	128.7	131.9	114.2	△14.5	△11.3	△17.7	△13.4
(법인세)	103.6	105.0	79.6	△24.0	△23.1	△25.4	△24.2
(부가세)	81.6	83.2	73.9	△7.7	△9.5	△9.3	△11.2
특별회계	10.8	10.2	10.3	△0.5	△4.6	0.1	0.7

자료: 기획재정부, 「금년 국세수입은 예산대비 △59조원으로 예상되며,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추진」, 보도자료, 2023. 9. 17., p. 4.

-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모두 전년 대비 감소 예상
 - (소득세)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진 영향 등으로 2022년 대비 감소 예상
 - (법인세) 2022년 기업실적 하락 등으로 2022년 대비 감소 예상
 - (부가세) 수입 부진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라 2022년 대비 감소 예상

- 정부는 2023년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방침
 -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하여 대응
 - 불가피하게 2023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7조원, 2022년 7.9조원)도 고려하여 관리 예정
 - 관계법(「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세수 감소에 연동하여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해 나갈 계획
 - * 자체재원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34조원, 적립기준), 세계잉여금(7조원) 등 약 41조원 수준

05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2023. 12. 14.)

- 2022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3.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73.5%로 각각 전년 대비 2.2%p, 4.9%p 상승
 - (일반정부 부채(D2)) 2022년 일반정부 부채는 1,157.2조원으로 2021년 1,066.2조원 대비 90.9조원 증가
 -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에 기인
 - (공공부문 부채(D3)) 2022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7조원으로 2021년 1,427.3조원 대비 161.4조원 증가
 -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의 결과

표 1-I-5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정부 부채비율	40.0	42.1	48.7	51.3	53.5
공공부문 부채비율	56.8	58.9	66.0	68.6	73.5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2023. 12., p. 7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06 2024년 예산 국회 확정(2023. 12. 21.)

- 2024년 총지출은 656.9→656.6조원(△0.3조원)으로 감소하고 총수입은 612.1→612.2(+0.1조원)으로 증가
 - 총지출은 국회 심사단계에서 4.2조원이 감액되고, 3.9조원이 증액되어 0.3조원 순감
- 2024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3.9%, △1.9%로 유지되고, 국가채무는 1,196.2→1,195.8조원으로 0.4조원 축소되는 등 건전재정 기조 강화

표 1-I-6 2024년 확정예산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총수입	625.7	612.1	612.2	0.1	△13.5	△2.2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7.9	2.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58.2 (△2.6)	△92.0 (△3.9)	△91.6 (△3.9)	0.4 -	△33.4 -	
통합 재정수지 (GDP 대비 %)	△13.1 (△0.6)	△44.8 (△1.9)	△44.4 (△1.9)	0.4 -	△31.3 -	
국가채무 (GDP 대비 %)	1,134.4 (50.4)	1,196.2 (51.0)	1,195.8 (51.0)	△0.4 -	61.4 -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 확정」, 보도자료, 2023. 12. 21., p. 4.

표 1-I-7 2024 확정예산 주요 증액 내역

증액 내역	주요 내용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차주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 무기질 비료 구입비용 지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장 및 신규인원 지원
미래대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 확대 -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 확대
안전·안보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인건비 지원 - 첨단전력 신규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 수요 사업 중점 지원 -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 계속공사비 반영 -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분야 기술개발 및 시설·장비구축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3. 12. 21., pp. 6~10.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1-I-8 2024 확정예산 주요 감액 내역

(단위: 억원)

증액 내역	세부사업	감액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기여금지원)	△1,300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4,300
기획재정부	예비비	△8,00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출연(ODA)	△984
외교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ODA)	△996
방위사업청	무기도입·개발 등 사업 ¹⁾	△3,994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손익계정) 전출	△1,195

주: 1) 국회에서 감액된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들의 총합

자료: 김윤성,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나보포커스, 제69호, 국회예산정책처, 2023.

표 1-I-9 분야별 자원배분 변동내역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2024년 정부안(A)	204년 최종(B)	증감 (B-A)
총지출	638.7	656.9	656.6	△0.3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242.9	-
2. 교육	96.3	89.7	89.8	0.1
3. 문화·체육·관광	8.6	8.7	8.7	-
4. 환경	12.2	12.6	12.5	△0.1
5. R&D	31.1	25.9	26.5	0.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28.0	0.7
7. SOC	25.0	26.1	26.4	0.3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25.4	-
9. 국방	57.0	59.6	59.4	△0.2
10. 외교·통일	6.4	7.7	7.5	△0.2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24.4	0.1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110.5	△0.8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3. 12. 21., p. 5.

07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024. 1. 4.)

- 정부는 1월 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
 -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4대 기본방향(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제시

표 1-I-10 경제정책방향 세부내용

증액 내역	주요 내용
(1) 민생경제 회복	① 물가·서민생활 안정
	②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③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④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
(2) 잠재위험 관리	① 부동산 PF 연착륙
	② 가계부채 체계적 관리
	③ 공급망 안정 확보
	④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
(3) 역동경제 구현	① 혁신 생태계 강화
	② 공정한 기회 보장
	③ 사회 이동성 제고
(4) 미래세대 동행	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② 인구·기후 위기 대응
	③ 미래세대 기회 확대

자료: 기획재정부,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2024. 1. 4., p. 6 바탕으로 저자 정리



KIPF

제2부

국제기구 재정동향

I. 유럽연합(EU)

II. 국제통화기금(IMF)

I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 유럽연합(EU)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1 EU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3. 7. 6.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2023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2023. 7. 12.	EU 이사회, 2024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
2023. 7. 13.	유로그룹, 유로지역 재정기준에 대한 성명 채택
2023. 7. 14.	EU 이사회,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IP) 결론 채택
2023. 7. 25.	EU 이사회,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시행
2023. 7. 27., 9. 14.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
2023. 9. 11.	EU 집행위원회, 2023년 여름 중간 경제전망 발표
2023. 10. 1.	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작 발표
2023. 10. 3.	EU 의회, EU 장기 예산 개정 논의
2023. 10. 9.	EU 이사회,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승인
2023. 10. 17.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진행상황 검토
2023. 10. 17.	EU 이사회, EU 집행위원회의 '전력시장 설계' 개혁안에 합의
2023. 10. 25.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발표
2023. 11. 11.	EU 이사회-의회, 2024년 연간 예산 합의
2023. 11. 9.	유럽의회, 새로운 EU 자체 재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승인
2023. 11. 15.	EU 집행위원회,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3. 11. 21.	EU 집행위원회,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4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에 대한 평가 발표
2023. 11. 21.	EU 집행위원회, 2024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
2023. 12. 14.	유럽중앙은행(ECB), 현행 정책금리 유지
2023. 12. 21.	EU 이사회, EU 재정준칙 개혁에 합의

자료: 저자 작성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황보경 선임연구원(hwangbo@kipf.re.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강민채 선임연구원(mckang@kipf.re.kr)

01 유럽연합(EU) 예산

※ EU 연간 예산은 집행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이사회 입장 채택, 의회 입장 채택, 조정 절차를 통한 합의안 도출(이사회와 의회 입장이 다를 경우 개시되며 합의 실패 시 집행위원회가 새로운 예산안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 EU 이사회, 2024년 EU 예산안에 대한 입장 채택(2023. 7. 12.)³⁾⁴⁾

- (심의 방향) 이사회는 2024년 EU 예산이 우크라이나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관련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높은 물가상승률 및 에너지 가격으로 증가하는 행정지출을 제한하기 위한 공통 조치를 요구
- (규모) EU 이사회는 승인기준 1,886억유로, 지급기준 1,425억유로를 채택해 집행위안 대비 각각 7억 7천만유로, 5억유로 감액
 -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분야에서 2억유로, 결속, 회복력 및 가치 분야에서 6억유로가 감액되었으며, 파트너 및 세계 분야는 1억유로 증액
 - 유럽 공공 행정 분야와 기타 특수 기금은 원안 유지
- (부대 의견) 위원회는 행정 지출 조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때 모든 기관에 동등하게 수평적이고 대칭적 접근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장
 - 유럽 공공행정 분야 예산이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한도를 초과하지 않거나 특수 기금이 동원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
- (향후 일정) 9월 5일까지 공식 서면 절차를 완료한 후, 이후 의회와 심의·조정을 진행할 예정

3) EU 이사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4: Council position*, 2023. 7. 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12/eu-budget-for-2024-council-agrees-its-position-on-the-draft-budget/>, 검색일자: 2023. 7. 13.

4)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승인기준 1,893억유로, 지급기준 1,430억유로 규모의 2024년 EU 예산안을 발표.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2023을 참고 바람

표 2-I-2 2024년 EU 예산안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¹⁾			지급기준 ²⁾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집행위 예산안 (A)	이사회 입장 (B)	차이 (B-A)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31	21,201	-230	20,916	20,908	-8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4,979	74,367	-613	34,186	33,613	-573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4,665	64,665	0	24,156	24,156	0
2.b. 회복력 및 가치	10,314	9,701	-613	10,030	9,458	-573
3. 천연자원 및 환경	57,389	57,379	-10	54,233	54,228	-5
4. 이주 및 국경관리	3,897	3,877	-20	3,258	3,238	-20
5. 안보 및 국방	2,304	2,287	-17	2,028	2,021	-7
6. 파트너 및 세계	15,830	15,948	118	15,111	15,209	98
7. 유럽 공공 행정	11,950	11,950	0	11,950	11,950	0
기타 특수 기금 ³⁾	1,561	1,561	0	1,371	1,371	0
합계	189,341	188,569	-772	143,053	142,538	-515

주: 1)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2)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3)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세계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조정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자료: EU 이사회, *Draft general budget of the European Union for the financial year 2024: Council position*, 2023. 7. 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12/eu-budget-for-2024-council-agrees-its-position-on-the-draft-budget/>, 검색일자: 2023. 7. 13.

■ EU 의회, EU 장기 예산 개정 논의(2023. 10. 3.)⁵⁾

- (배경) 지난 5월 유럽의회는 EU 장기 예산인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⁶⁾ 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6월 20일 EU 집행위원회는 MFF 수정안을 발표

5) EU 의회, "Parliament argues for a top-up to multi-annual budget for crisis response," 2023. 10. 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929IPR06130/parliament-argues-for-a-top-up-to-multi-annual-budget-for-crisis-response>, 검색일자: 2023. 10. 17.

EU 의회, "Revision of EU long-term budget: why Parliament wants improvements," 2023. 10. 4.,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headlines/eu-affairs/20230928STO06014/revision-of-eu-long-term-budget-why-parliament-wants-improvements>, 검색일자: 2023. 10. 17.

6)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는 EU의 다양한 우선순위에 지출할 수 있는 최대 연간 예산을 규율한 7개년 재정계획으로, 각 연도 예산은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를 준수해야 함. 2021~2027년 동안 1조 743억유로 규모(2018년 가격기준)의 EU 장기예산이 편성되어 시행 중.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0 참고

- 2021~2027년 동안 1조 743억유로 규모(2018년 가격기준)의 EU 장기예산이 편성되어 시행 중이며, 7개년 예산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3년에 중간 개정을 검토함
 - 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19 등의 여러 위기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추가 자원이 고갈되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EU 예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요 우선순위 프로그램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내용) 유럽의회는 EU 예산의 미래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4~2027년 동안 758억유로 추가 투입
 -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658억유로 외에 2024~2027년 동안 추가로 100억유로를 승인
 - (집행위 제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500억유로, 이민 관리와 주요 제3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150억유로, 핵심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⁷⁾ 창설 등
 - (의회 추가 의견)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인도적 지원에 10억유로,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지원에 10억유로,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에 30억유로, 위기 대응 및 유연성 제공을 위해 50억유로 추가 예산 필요
 - (향후 일정) EU 장기 예산 개정은 2024년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의회의 3주간 입장 조정 과정을 거쳐 의회 동의 후 발효될 예정
- EU 이사회·의회, 2024년 연간 예산 합의(2023. 11. 11.)⁸⁾
- (규모) 확정된 2024년 예산은 승인기준 1,893억 8,540만유로, 지출기준 1,426억 3,030만유로

7) InvestEU, Innovation Fund, Horizon Europe, European Defence Fund,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EU4Health, Digital Europe and cohesion funds 등 기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 산업의 경쟁력을 지원

8)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4: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3. 11.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11/eu-budget-for-2024-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3. 11. 13.

- 이는 EU 27개국 GNI 대비 각각 1.06%, 0.8%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21~2027년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MFF) 지출한도 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정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약 3억 6천만유로의 재정적 여유(financial leeway)를 확보
- (주요 내용⁹⁾) 2024년 예산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경제 회복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 인근국 지원, 개발원조 및 국제협력(NDICI), 인도적 지원(HUMA) 등에 162억유로 편성
 - 농식품 및 수산업 부문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위기 관리를 위해 공동농업정책에 537억유로, 유럽해양양식기금에 11억유로 편성
 -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과 친환경 인프라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 및 결속(cohesion)에 479억유로 편성
 - 연구 및 혁신에 136억유로를 편성하고, 그중 129억유로는 EU의 핵심 연구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투자
 - 유럽의 전략적 투자에 46억유로를 편성하고, 그중 27억유로는 유럽연결시설, 13억유로는 디지털유럽프로그램, 3억 4,800만유로는 InvestEU¹⁰⁾에 투자
 - 유럽우주프로그램 등 우주 부문에 23억유로를 편성
 - 사람, 사회적 결속 및 가치에 219억유로, 유럽사회기금(ESF)에 168억유로, 교육 이동 기회 창출을 위한 Erasmus+¹¹⁾에 38억유로, 예술가와 창작자 지원에 3억 3,500만유로, 정의, 권리, 가치 증진을 위해 2억 6,100만유로 편성
 - 경제회복기금 차입비용 증가에 33억유로 편성
 - 환경 및 기후 행동에 24억유로 편성
 - 국경관리에 22억유로, 이주 관련 지출에 17억유로, 국방 과제 해결에 16억유로 편성
 - 단일시장프로그램에 6억 200만유로, 단일시장 기능 보장을 위해 9억 5,800만유로 편성

9)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6월호, 7월호, 2023 참고

10) 연구 및 혁신,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보건 분야, 전략 기술 관련 프로그램

11) 교육, 훈련, 청소년 및 스포츠 분야의 인력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통합 보건 시스템인 EU4Health에 7억 5,400만유로, 시민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rescEU에 2억 4천만 유로 편성
- 안보에 7억 3,300만유로를 지원하고, 그중 테러, 인종차별, 조직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안보기금(ISF)에 3억 2,200만유로를 편성
- 현재 진행 중인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 개정¹²⁾은 향후 신속하게 수정 예산을 채택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할 계획

표 2-I-3 2024년 EU 확정 예산

(단위: 백만유로, %)

구분	승인기준 ¹⁾	지급기준 ²⁾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93	20,828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4,561	33,716
3. 천연자원 및 환경	57,339	54,151
4. 이주 및 국경관리	3,893	3,249
5. 안보 및 국방	2,321	2,035
6. 파트너 및 세계	16,230	15,291
7. 유럽 공공 행정	11,988	11,988
기타 특수 기금 ³⁾	2,222	1,734
합계	189,385	142,630
EU 27개국 GNI 대비 %	1.06%	0.8%

주: 1) 승인기준(commitments)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

2) 지급기준(payments)은 주어진 해에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의미

3)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세계화조정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조정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자료: EU 이사회, "EU budget for 2024: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agreement," 2023. 11.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1/11/eu-budget-for-2024-council-and-parliament-reach-agreement/>, 검색일자: 2023. 11. 13.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10월호, 2023 참고

02 European Semester

※ European Semester는 회원국들의 경제·재정 정책을 EU 차원에서 합의된 목표와 규정에 맞추어 조율하기 위한 연간 순환과정임

■ EU 집행위원회, 회원국의 2023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2023. 7. 6.)¹³⁾

- * 동 검토 보고서는 EU 수준에서 회원국들의 재정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 분석은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SCPs)¹⁴⁾¹⁵⁾의 국가별 평가를 기초로 하며, 특히 유로지역의 재정 기조와 정책 조합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경제 회복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2022년 EU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4%, 채무 비율은 85.4%로 전년에 비해 더욱 감소(2021년 재정적자는 4.8%, 채무는 88.0%)
 - 포스트 팬데믹 반등 효과로 2021년에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이어 2022년에도 강한 경제 회복세가 이어져 3.5%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가스 공급 제약의 해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사회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측면의 충격을 완화함
 - 유리한 거시경제 상황과 코로나19 긴급 임시조치의 단계적 폐지로 2022년 재정적자가 하락하였고, 채무는 물가상승률의 영향과 이자율을 초과하는 명목 GDP 성장률로 2020년 GDP 대비 92% 수준에서 2022년 85.4%로 크게 감소함

13) EU 집행위원회, *The 2023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3. 7. 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3-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overview-assessment-euro-area-fiscal-stance_en, 검색일자: 2023. 7. 7.

14) 매년 4월말까지 EU 회원국들은 EU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의 재정 계획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지역 국가들은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 비유로 국가들은 수렴 프로그램(Convergence programmes)을 통해 재정계획 등을 발표

15) 2023년에는 3월 8일에 EU 집행위원회가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 준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고, 이 지침에서는 2023년 말에 안정성장협약의 일반면책조항 적용의 종료를 명시하였으며, 회원국들에게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재정정책 시행을 요청함. EU 회원국들은 4월 30일 기한까지 EU 집행위원회에 안정화 및 수렴프로그램 보고서(SCPs)를 제출하였고, 5월 24일에 EU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재정권고(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CSRs)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의 2023년 봄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3년 EU의 재정적자는 전년에 비해 더 낮아진 GDP 대비 3.1%로 전망하고, 에너지 지원 조치의 감소 등으로 유로지역의 2023년 재정기조는 다소 긴축적으로 운용할 계획
 - 회원국의 안정화 및 수렴 프로그램에서는 봄 경제전망보다 약간 더 많은 재정적자를 전망¹⁶⁾
 - 두 발표의 예측 시점이 달라 에너지 지원 조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서 기인
 - 국가별로 에너지 지원 조치의 철회를 진행하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 재정 상황 및 전망은 회원국마다 다양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감소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치의 종료와 에너지 지원의 감소 및 민간 투자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지출 재분류에 따라 민간 투자 보조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진 것에 기인(특히 이탈리아)
 - 2023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높은 물가의 영향과 금리보다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였으나, 에너지 지원의 일부 감소와 민간 투자 보조금이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감소로 2023년에는 재정긴축 기조로 전환([그림 2- I -1] 참고)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안정성장협약의 일반면책조항¹⁷⁾ 적용을 2024년에 종료할 계획에 따라 국가별로 정량적인(quantitative) 재정 권고¹⁸⁾¹⁹⁾를 제안

16) EU 집행위원회의 봄 경제전망은 안정화 및 수렴 보고서 제출(2023. 4. 30.) 이후인 2023년 5월 15일에 발표되어 2023년과 2024년에 에너지 지원 조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부 다른 가정을 사용하였으므로 봄 경제전망과 안정화 및 수렴보고서 전망이 다를 수 있음

17) 일반면책조항(general escape clause)은 특수한 상황에서 재정준칙 준수 의무로부터 예외적인 이탈을 용인하는 EU 규정으로 2020년 3월 23일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유로지역 혹은 EU 전체의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이라고 보아 중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EU 재정준칙 준수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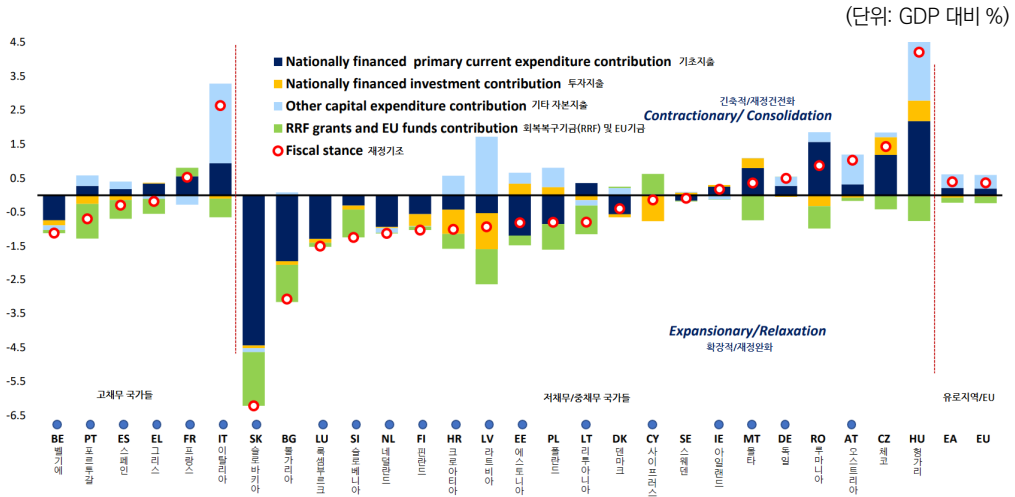
18) 2024년 재정지침은 회원국별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약 0.3~0.7% 수준의 재정 조정을 요구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U 집행위원회, 재정정책 권고 European Semester 봄 패키지 발표(2023. 5. 24.)」, KIPF 재정동향, 2023년 5월호, 2023. 6. 2.,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47>, p. 7 참고, 검색일자: 2023. 7. 25.)

19)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0.5%의 중기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기준점 삼아 국가별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대해 2024년 최소 0.3%의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을 권고하고,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최소 0.7%의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EU 집행위원회, "2023 European Semester: Country Specific

- 회원국들은 에너지 지원 조치를 축소하고, 공공 투자를 유지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회복·복구기금 및 기타 EU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를 받음
- 2024년에는 회원국들이 에너지 지원 조치를 완전히 폐지할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EU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약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대부분의 EU 국가에서 에너지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조치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재정적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재정적자 증가는 팬데믹 이후 시행된 일부 재정정책의 영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공공 투자의 증가가 영향을 미침
 - 2024년 유로지역의 재정기조는 GDP 대비 약 0.75% 수준의 긴축 재정이 전망되고 ([그림 2- I -2] 참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국가별 권고사항의 요구 재정노력 수준을 만족할 것으로 예상
 - 일부 회원국에서는 에너지 지원 조치의 감축보다 긴축 재정규모가 적어서 에너지 지원 절감분을 적자 감축 외에 지출 항목의 물가연동을 위한 지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24년에도 채무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지만 더 느린 속도로 감소할 전망
- 2025년과 2026년에 대부분의 EU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감소하여 GDP 대비 3%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26년 EU 재정적자는 GDP 대비 1.7%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4개 국가(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프랑스)는 2026년 GDP 대비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2026년 말 EU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8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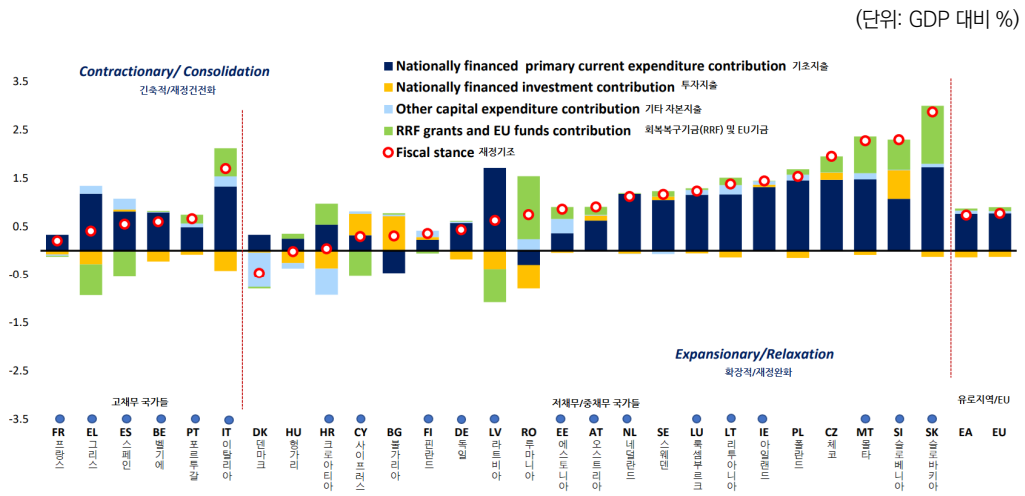
Recommendations / Commission Recommendations,” 2023. 5. 24.,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3-european-semester-country-specific-recommendations-commission-recommendations_en, 검색일자: 2023. 7. 26.)

그림 2-I-1 2023년 EU 회원국별 재정기조



주: 파란원이 표시된 국가는 유로지역 국가. 덴마크,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웨덴, 폴란드, 체코는 비유로(non-euro) 국가
 자료: EU 집행위원회, The 2023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3. 7. 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3-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overview-assessment-euro-area-fiscal-stance_en, p. 25, Graph2.8, 검색일자: 2023. 7. 7.

그림 2-I-2 2024년 EU 회원국별 재정기조



주: 파란원이 표시된 국가는 유로지역 국가. 덴마크,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웨덴, 폴란드, 체코는 비유로(non-euro) 국가
 자료: EU 집행위원회, The 2023 Stability & Convergence Programmes, 2023. 7. 6.,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publications/2023-stability-convergence-programmes-overview-assessment-euro-area-fiscal-stance_en, p. 26, Graph2.10, 검색일자: 2023. 7. 7.

■ 유로그룹,²⁰⁾ 유로지역 재정기조에 대한 성명 채택(2023. 7. 13.)²¹⁾

- (주요 내용) 2024년 유로지역은 전반적으로 긴축적인 재정기조(restrictive fiscal stance)를 달성할 것이며, 동시에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국방 능력 등의 공통 우선 순위를 위한 구조개혁 이행과 투자 유지 및 확대가 필수적인 목표
 - 2020~2022년 동안 유로지역 재정기조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보호 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으나 공공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 이에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와 재정여력 확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세대 간 형평 성 문제를 포함한 미래 도전과제에 대한 유로지역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이 고 현실적인 재정건전화 요구됨
 - 지난 5월 발표된 차별화된 재정권고안(CSR)²²⁾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2023년 말 까지 에너지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위원회는 유로지역 회원국들 이 재정권고안을 이행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
- 유로그룹은 정기적으로 경제 및 재정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책 조언 을 조정할 것이며, 2024년 예산안 초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로지역 회원국의 예산 정책을 검토할 계획

■ EU 이사회,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IP)²³⁾ 결론 채택(2023. 7. 14.)²⁴⁾

- (주요 내용)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 심층 검토²⁵⁾에 대한 결론을 채택

20) 유로지역(유로화 사용 20개국) 재무부장관 협의체

21) 유로그룹, "Eurogroup statement on the euro area fiscal stance for 2024," 2023. 7. 1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13/eurogroup-statement-on-the-euro-area-fiscal-stance-for-2024/>, 검색일자: 2023. 7. 17.

22) 코로나19로 인한 일반면책조항 적용을 해제하고, 2024년 재정지침은 회원국별 재정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GDP 대비 약 0.3~0.7% 수준의 재정 조정을 요구.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5월호 참고

23) 거시경제 불균형은 경상수지, 일반정부 채무, 실업률 등 14개의 주요 지표와 추가 보조 지표들을 기초로 평가되며,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를 통해 1차 검토를 수행 후 →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대상 국가를 선별하여 → 불균형이 심한 국가를 대상으로 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를 시행할 수 있음. 초과불균형절차가 시행되면 대상 회원국은 수정된 재정구조계획을 제시해야 함.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11월호 참고

24) EU 위원회, "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 Council adopts conclusions." 2023. 7. 14.,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14/macroeconomic-imbalance-procedure-council-adopts-conclusions/>, 검색일자: 2023. 7. 17.

25) 2023년 경고체계보고서에서 지적된 17개국을 심층검토했으며,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2년 5월호 참고

- EU 경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며, EU 및 국가 차원의 신속한 정책 조치와 투자 및 구조개혁 지원으로 팬데믹 이후 강력한 회복을 보임
- 높은 명목 성장률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채무 관련 불균형이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하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2023년 경상수지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회원국은 비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2022년에 여러 회원국에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지속적인 거시금융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
- 높은 물가상승률 변동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불균형을 대비하여 고령화와 기후변화 관련 구조적 문제 해결,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기존 거시경제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시급
- 사이프러스, 헝가리,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등 9개국은 불균형(imbalance), 그리스, 이탈리아 2개국은 과도한 불균형(excessive imbalance) 상태로 평가
 - 사이프러스는 채무가 하향경로에 있으며 과도한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남
 - 헝가리는 매우 강한 물가상승 압력과 자금조달로 불균형을 겪고 있어 긴급한 정책 조치가 필요
 - 그리스, 이탈리아 2개국은 정책 조치의 진전으로 취약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해서 과도한 불균형 상태로 평가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은 불균형 상태로 평가되나, 독일,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은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불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
 - 불균형 국가 중 루마니아는 하방위험으로 긴급한 정책 조치가 필요
 -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6개국은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고 평가

■ EU 집행위원회, 유로지역 회원국들이 제출한 2024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에 대한 평가 발표(2023. 11. 21.)²⁶⁾

- * European Semester의 일환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유로지역 국가들은 차년도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며, EU 집행위는 11월 회원국의 재정계획안이 안정성장협약(SGP) 요건 및 2023년 7월 EU 집행위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함
- 2024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는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모멘텀을 상실했으며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상황
 - 2024년 유로지역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미만으로 예상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4년에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4년 재정기조는 잔존하는 에너지 관련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긴축 재정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긴축 기조는 적절하며,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정책은 기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평가
- 2024년 대다수 회원국에서 긴축 재정기조 예상
 - 그러나 다섯 개의 회원국에서는 확장적 재정기조 예상(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에너지 관련 조치를 폐지하는 중이며 에너지 관련 조치 절감액의 사용 계획에 따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음
 - 에너지 관련 조치의 절감액을 모두 적자 감축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한다면, 2024년 예상 재정기조는 더욱 긴축적일 것으로 예상
 - 많은 회원국에서 비에너지 관련 새로운 순경상지출을 도입하기로 계획했고, 이러한 조치가 영구적이고, 보상조치(compensatory measures)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회원국의 장기적인 조정 필요에 부담이 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의 회원국 재정계획안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에서 채택된 재정권고에 기초하여 에너지 지원 조치의 철회, 투자 증대 등을 권고

26) EU 집행위원회, "Draft budgetary plans 2024," 2023. 11. 2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stability-and-growth-pact/annual-draft-budgetary-plans-dbps-euro-area-countries/draft-budgetary-plans-2024_en, 검색일자: 2023. 11. 22.

- 2023년 말 일반 면책 조항²⁷⁾이 종료될 예정이며, 2023년 7월 순지출 최대 증가율을 기준으로 국가별 양적 권고가 이루어짐(2023년 중기재정목표²⁸⁾ 미달성이 예상되는 회원국은 제외)
- 회원국 공통 사항으로 세 가지를 권고
 - 첫째, 2023년과 2024년에 에너지 지원 조치의 빠른 폐지(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은 에너지 관련 절감을 사용하여 적자 감소 권고)
 - 둘째, 국내 자금 조달 투자를 유지
 - 셋째, 회복·복구기금(RRF)²⁹⁾ 및 기타 EU 자금의 효과적 활용 보장
- 재정긴축 기조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유로지역 전역에서 투자 증가 예상
 - 2024년 투자가 약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가 조달 자금 및 EU 자금의 투자 성장 기여 정도는 회원국에 따라 다름
 - 국가 예산 재원의 투자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지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사회는 투자에 대한 권고와 RRF 기금 투자 지원과 일치)
- 유로지역 평균 재정적자는 감소하지만, 일부 회원국에서는 2023년과 2024년에 EU 조약 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회원국 중 8개 회원국은 2023년과 2024년에 모두 GDP 대비 3% 초과 적자가 예상되며, 2024년에는 9개 회원국에서 초과 전망
 - 2023년과 2024년 적자 기준을 초과하는 8개 회원국은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이며, 2024년에는 이 국가들에서 핀란드가 추가됨

27) EU 안정성장협약은 EU 또는 유로지역 전체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국이 재정준칙 준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면책 조항(escape clause)을 규정하고 있으며, E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일반 면책 조항을 적용하여 시행.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정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됨

28) 중기재정목표(Medium-term objectives, MTO). EU 안정성장협약에서 예방적 조치(The preventive arm)를 통해 EU 회원국이 각 국가의 재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정책 및 협조에 관한 약속(commitments)의 이행을 지원. 모든 EU 회원국이 중기재정목표(MTO)를 달성하거나 연간 GDP의 0.5%의 비율로 구조적 예산 흑자(또는 적자)를 개선하여 건전 재정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함

29) 회복·복구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RRF)은 EU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인 Next Generation EU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회원국들이 수행하는 개혁 및 공공투자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함.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잘 준비하고자 함

- 2024년 봄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규정에 따라 2023년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적자 절차 개시를 제안할 예정이므로 회원국은 2023년 예산 집행과 2024년 재정계획 수립 시에 이 점을 고려하여 진행할 것을 전달

■ EU 집행위원회, 2024 경고체계보고서(Alert Mechanism Report) 발표(2023. 11. 21.)³⁰⁾

- * 경고체계보고서(AMR)는 EU의 경제 기능을 저해하는 불균형(imbalance)을 확인하고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s Procedure, MIP)³¹⁾의 첫 단계인 심층검토(in-depth review)가 필요한 국가를 선별함
- (전반적 평가) 강력한 명목 경제 성장이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 감축(deleveraging)을 촉진했으나 타이트한 자금 조달 여건으로 기존의 높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일부 회원국은 높은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특히 부채 등 취약성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2022년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고 적자가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지가 회복됨
 - 대부분의 회원국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주택 가격 인상 속도가 감소되거나 완만하게 인하되는 모습을 보임
- (심층검토 대상) 대내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³²⁾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12개 회원국을 심층검토 대상으로 지정
 - 키프로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1개 회원국은 2023년에도 심층검토 대상이었으며, 기존 평가를 업데이트하고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는지 2024년 상반기에 심층검토가 수행될 예정

30) EU 집행위원회, “2024 European Semester: Alert Mechanism report,” 2023. 11. 21.,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4-european-semester-alert-mechanism-report_en, 검색일자: 2023. 11. 22.

31) 경고체계보고서(AMR)를 통해 심층검토 대상 국가 지정(11월경)→대상 국가에 대한 심층검토보고서 발표(차년도 2월 경)→초과불균형절차(excessive imbalance procedure, EIP) 시행

32) i) 대외 불균형 및 경쟁력 지표군: 경상수지(3년 평균), 순국제투자지위, 실질실효환율, 수출시장비율, 명목단위 노동비용지수, ii) 대내 불균형 지표군: 주택 가격지수, 민간부문 여신, 민간부문 채무, 국가 채무, 총금융부문부채, iii) 고용지표군: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장기실업률, 청년실업률(15~24세)

- 슬로바키아의 경우 현재 불균형 상태는 아니나 새로운 거시경제 불균형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심층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비용 경쟁력, 대외 수지, 국가 채무, 주택가격, 가계 부채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추세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나머지 회원국들은 현 시점에서 심층검토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2023년 봄에 심층검토 대상이었던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의 경우 경제 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 불균형 위험이 감소하고 있다고 결론

■ EU 집행위원회, 2024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ASGS) 발표(2023. 11. 21.)³³⁾

* 연간 지속가능 성장 조사는 향후 12~18개월 동안 EU의 경제·사회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4년 European Semester(회원국의 경제 및 고용 정책 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

○ (우선순위) 2020년부터 EU는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성(competitive sustainability)을 위해 ① 환경 지속가능성 ② 생산성 ③ 공정성 ④ 거시경제 안정을 네 가지 우선순위로 삼고 현황 및 개선점을 모색

- 2024년 European Semester 동안 집행위원회는 EU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조정을 진행하며, REPowerEU³⁴⁾를 포함한 회원국 회복·복구 기금(RRF)의 지속적 이행을 재평가할 예정
- 특히 경쟁력 문제에 중점을 두고, 국가 보고서와 심층 검토를 통해 각 회원국과 지역의 경쟁력 실현을 위한 구조적/새로운 과제를 식별할 계획
- 2023년 말에 안정성장협약(SGP) 일반면책조항이 비활성화될 예정이므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및 장기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해야 함

33) EU 집행위원회, 2024 European Semester: Annual Sustainable Growth Survey, 2023. 11. 21.,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2024-european-semester-annual-sustainable-growth-survey_en, 검색일자: 2023. 11. 24.

34)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에너지 시장 혼란에 대응하여 EU는 2022년 5월부터 에너지 절약, 청정에너지 생산,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를 추진하는 REPowerEU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EU 자금 조달) 회복·복구기금(RRF) 개혁을 통해 투자 병목 현상을 제거하여 투자를 촉진·가속화하고, 결속 정책 기금³⁵⁾과 회복·복구 기금을 함께 결합 사용하여 2026년 이후까지 포괄적인 투자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임
- (결론) EU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으로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결속 정책 기금과 새롭게 도입된 회복·복구 계획 및 REPowerEU의 시너지 효과와 보완성을 보장·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추가 투자 및 개혁이 필요한 영역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

03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통화 정책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3. 7. 27.)³⁶⁾
 - ECB 정책 위원회는 적기에 중기 물가상승률 목표(2.0%)를 달성하기 위해 8월 2일 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4.25%, 4.5%, 3.75%로 인상
 - 2022년 7월부터 9번째 연속 금리인상이며 금리 인상폭은 0.25%p로 지난달과 동일
 - 유로지역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0.6%로 정점을 찍은 이후 5월에 6.1%, 6월에 5.5%로 하락세이나, 에너지 및 식품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5.5%로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 한편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0일부터 최소 지급준비금³⁷⁾(remuneration of minimum reserves)에 대한 이자율을 0%로 설정하기로 결정

35) 결속정책기금(Cohesion policy funds)은 EU의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EU 평균의 90% 미만인 회원국에 환경 및 유럽 횡단 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함

36)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7. 27.,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727~da80cfcf24.en.html>, 검색일자: 2023. 8. 4.

37) 최소 지급 준비금은 신용 기관이 국가 중앙은행에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잔액으로 통상 특정 부채(고객예탁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해야 함

■ 유럽중앙은행(ECB), 정책금리 추가 인상(2023. 9. 14.)³⁸⁾

- ECB 정책 위원회는 지난 7월 금리 인상에 연이어 0.25%p 추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며, 9월 20일부터 기준금리, 한계대출금리, 수신금리를 각각 4.5%, 4.75%, 4.0%로 인상
 - 금번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률 전망, 근원 물가상승 압력, 통화정책 전달 강도 등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를 반영한 결과
 - 9월 거시경제 전망에 따르면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5.6%, 2024년 3.2%, 2025년 2.1%로 전망되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3년 5.1%, 2024년 2.9%, 2025년 2.2%로 전망
- 7월부터 자산매입프로그램(APP)³⁹⁾ 만기도래분의 재투자는 중단되었으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의 만기채권 원금은 적어도 2024년 말까지 재투자할 계획

■ 유럽중앙은행(ECB), 현행 정책금리 유지(2023. 12. 14.)⁴⁰⁾

- (정책금리) 주요 정책금리인 기준금리(4.50%), 수신금리(4.00%), 한계대출금리(4.75%) 동결
- (물가) 최근 몇 달간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 예상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내년에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며, 2025년에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23년 5.4%, 2024년 2.7%, 2025년 2.1%, 2026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 유로지역 물가상승률 전망은 9월 시점 전망치에 비해 각각 0.2%p, 0.5%p 하락하였으나, 노동비용의 강한 성장세로 인해 대내 가격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

38)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9. 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0914~aab39f8c21.en.html>, 검색일자: 2023. 9. 18.

39)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40) 유럽중앙은행, "Monetary policy decisions," 2023. 12. 14., <https://www.ecb.europa.eu/press/pr/date/2023/html/ecb.mp231214~9846e62f62.en.html>, 검색일자: 2023. 12. 18.

-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5.0%, 2024년에 2.7%, 2025년에 2.3%, 2026년에 2.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경제)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하락과 임금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경제가 회복될 전망
 - 2023년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0.6%, 2024년에 0.8%,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5%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자산매입) ‘자산매입 프로그램’⁴¹⁾과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⁴²⁾의 정상화를 계속 진행
 -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만기 도래 채권의 원금 상환을 더 이상 재투자하지 않으므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⁴³⁾
 - 2024년 상반기 매입할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은 만기 도래 채권의 원금 상환을 완전히 재투자할 예정이나, 하반기부터 월 평균 75억유로씩 줄여 나가고 2024년 말 중단할 계획⁴⁴⁾

41) 자산매입프로그램(Asset purchase programme)은 유럽중앙은행이 2%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리 외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출처: 유럽중앙은행, “What is the ECB’s asset purchase programme?,” 2022. 11. 25., <https://www.ecb.europa.eu/ecb/educational/explainers/tell-me-more/html/asset-purchase.en.html>, 검색일자: 2023. 12. 20.)

42)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PEPP)은 코로나19로 인한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과 유로지역에 미칠 심각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 시작된 민간 및 공공 부문 채권 임시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2020년 3월 초 7,500억유로 규모에서 2020년 6월 4일 6천억유로, 12월 10일 5천억유로를 추가하여 총 1조 8,500억유로 규모로 확대되었고, 기존 자산매입 프로그램의 적격 자산 범주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함

43) 자산매입프로그램은 통화정책 전달 메커니즘 지원 등을 위해 2014년에 시작되었고, 2023년 11월 기준 3조 384억 규모이며, 세부 프로그램별 비중은 기업부문 매입프로그램(CSPP) 10.7%, 공공부문 매입프로그램(PSPP) 79.4%, 자산유동화증권 매입프로그램(ABSPP) 0.45%, 커버드본드(CBPP3) 9.4%를 차지하고 있음.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통한 순매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조 4,500억유로를 매입하였고,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순매수 없이 환매 재투자가 이뤄진 후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100억유로 순매수.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에는 환매액을 전액 재투자하였고,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일부만 재투자했으며, 2023년 7월부터 환매 재투자 없음(유럽중앙은행, Asset purchase programmes, <https://www.ecb.europa.eu/mopo/implement/ap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3. 12. 20.)

44)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순매수 누적액은 1조 5,975억유로이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순매수 누적금액은 1조 7,136억유로이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순매수 누적금액은 1조 7,125억유로. 2021년 12월 16일 유럽은행 이사회는 2022년 3월 말 PEPP를 통한 순자산 매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PEPP로 매입한 채권의 만기 원금 지급금은 2024년 말까지 재투자 예정(출처: 유럽중앙은행,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PEPP),” <https://www.ecb.europa.eu/mopo/implement/pepp/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3. 12. 20.)

표 2-I-4 EU 정책금리 인상 경로

(단위: %)

구분	2022				2023						
	7월	9월	11월	12월	2월	3월	5월	6월	7월	9월	12월
기준금리	0.50	1.25	2.00	2.50	3.00	3.50	3.75	4.00	4.25	4.50	4.50
한계대출금리	0.75	1.50	2.25	2.75	3.25	3.75	4.00	4.25	4.50	4.75	4.75
수신금리	0.00	0.7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4.00
변동폭(%p)	+0.5	+0.75	+0.75	+0.5	+0.5	+0.5	+0.25	+0.25	+0.25	+0.25	-

자료: 유럽중앙은행, "Key ECB interest rates," 2023. 12. 14., https://www.ecb.europa.eu/stats/policy_and_exchange_rates/key_ecb_interest_rates/html/index.en.html, 검색일자: 2023. 12. 18.

나. 기후 및 에너지 가격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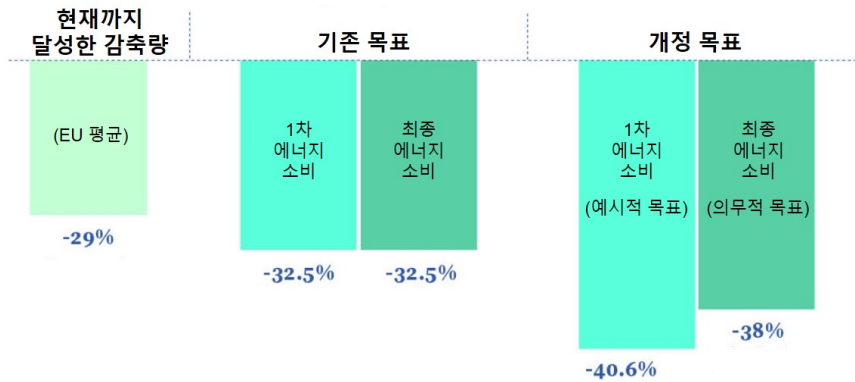
■ EU 이사회,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시행(2023. 7. 25.)⁴⁵⁾

- (배경) 현재 에너지효율지침은 'Fit for 55'* 입법패키지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2007년 추산) 대비 3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
- (주요 내용) EU 27개국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 에너지 사용량 전망치(2020년 추산) 대비 11.7% 감축하도록 에너지효율지침을 개정
 - 2007년에 추산한 2030년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29% 감축을 달성했으며, 개정된 에너지효율지침은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1차 에너지 소비량⁴⁶⁾ 감축 목표를 각각 38%, 40.6%로 상향
 - 최종 에너지 소비 한도는 전체 회원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별 기여도는 ±2.5% 범위 내에서 결정될 예정, 반면 1차 에너지 소비 한도는 예시적(indicative) 목표
 -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 한도를 석유로 환산하면 7억 6,300만 석유환산톤(toe),⁴⁷⁾ 1차 에너지 소비량은 9억 9,300만 석유환산톤(toe)과 동일

45) EU 이사회, "Council adopts energy efficiency directive," 2023. 7. 25.,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07/25/council-adopts-energy-efficiency-directive/>, 검색일자: 2023. 8. 16.

46)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consumption)는 에너지 생산·공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량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와 전환손실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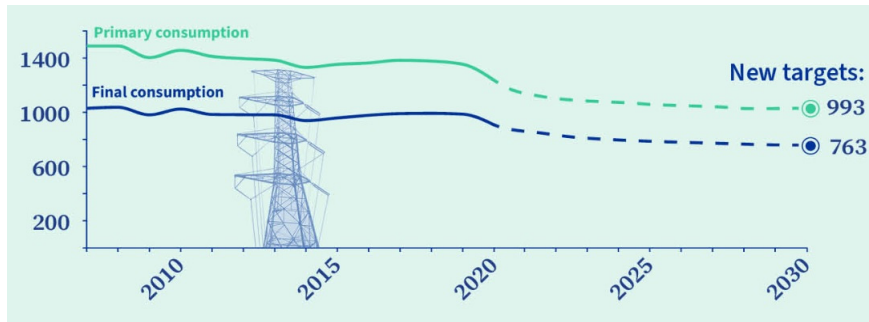
그림 2-I-3 EU 에너지효율지침 목표(2007년 추산 기준)



주: 1. 2007년에 추산한 2030년 에너지 소비량 전망치 기준
 2. 최종 에너지소비(Final consumption)는 최종 소비자(end-user)가 사용하는 에너지이며,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consumption)는 에너지 생산·공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량으로 최종 에너지소비와 전환손실을 포함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s- Fit for 55," 2023.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fit-for-55-how-the-eu-will-become-more-energy-efficient/>, 검색일자: 2023. 8. 17.

그림 2-I-4 EU 27개국의 에너지 소비량 목표

(단위: 석유 환산 메가톤)



주: 1. 에너지 소비량 목표를 석유 환산 메가톤(Mtoe)으로 환산
 2. 최종 에너지소비(Final consumption)는 최종 소비자(end-user)가 사용하는 에너지이며,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consumption)는 에너지 생산·공급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포함한 소비량으로 최종 에너지소비와 전환손실을 포함
 자료: EU 이사회, "Infographics- Fit for 55," 2023. 7. 26., <https://www.consilium.europa.eu/en/infographics/fit-for-55-how-the-eu-will-become-more-energy-efficient/>, 검색일자: 2023. 8. 17.

- 2024~2030년 기간 동안 연간 에너지 절약 목표는 연평균 1.49%에서 점진적으로 1.9%에 도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대중교통과 군사 분야는 제외)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연간 1.9%를 의무 감축하도록 함

47) 석유환산톤(toe: Ton Of Equivalent)이란 에너지 원별로 상이하게 표기되는 에너지 단위를 통합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원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열량(10⁷kcal)을 1toe로 정의(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2023. 8., 부록 참고)

■ EU 이사회, 재생에너지 지침⁴⁸⁾ 개정안 승인(2023. 10. 9.)⁴⁹⁾

- (배경) 2022년 5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환경의 최근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침 목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수개월에 걸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함
 - 현 EU 재생에너지 비중은 21.8%(2021년 기준)이며, 기존 재생에너지 지침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30년까지 EU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의 32%에서 42.5%로 상향하고, 재량적으로 2.5%의 추가적(top-up) 달성을 통해 45%까지 목표 상향을 권고
 - (운송) 2030년까지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14.5%로 감축 또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9%로 확대
 - (산업)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연평균 1.6%씩 높이고, 비생물계 재생에너지 연료(RFNBO) 기반 수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60%로 확대
 - (건물) 2030년까지 건물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49%로 확대하고, 건물 냉난방에 사용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회원국별로 2026년까지 연간 0.8%씩,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연간 1.1%씩 점진적 확대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허가절차 신속화
- (향후 일정) 지침이 공식 채택되어 20일 후 발효될 예정이며, 회원국은 지침 발효 후 18개월 내에 동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함

■ EU 집행위원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작 발표(2023. 10. 1.)⁵⁰⁾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전환기간 동안 회원국의 탄소배출량(GHG)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 계획

48) 재생에너지 지침(2018/2001/EU)은 EU 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 EU 국가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이후 2018년 한 차례 개정되었으며, 2021년 6월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짐. 재생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운송부문과 냉난방뿐만 아니라 일반 재생 에너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함

49) EU 이사회, "Renewable energy: Council adopts new rules," 2023. 10. 9.,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0/09/renewable-energy-council-adopts-new-rules/>, 검색일자: 2023. 10. 17.

50) EU 집행위원회,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starts to apply in its transitional phase," 2023. 9. 2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685, 검색일자: 2023. 10. 17.

- 전환기간 동안 탄소 집약적이고 배출량이 가장 큰 6개 수입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및 수소)에만 우선 적용되며, 2023년 4분기(10~12월)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보고 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임
 -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나 현 단계에서 재정적 비용 부담은 없으며, 내재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예정
 - 2026년부터는 수입품목에 대한 CBAM 인증서 구입 의무화

■ EU 이사회,⁵¹⁾ EU 집행위원회의 '전력시장 설계'⁵²⁾ 개혁안에 합의(2023. 10. 17.)⁵³⁾

- (배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2022년 EU 전역에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으로 미래 에너지가격 충격을 피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전력시장 설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음(2023. 3. 14.)⁵⁴⁾
 - (문제) EU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전력 가격 책정 방식으로 인해 화석연료 가격의 상승이 전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함
 - (주요 내용) 전기 계약 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안정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재생에너지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도모 등
- (EU 이사회 합의) 전력시장 설계 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합의함으로써 EU의회의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

51) EU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는 EU 회원국들의 정부를 대표하며 각 EU 회원국들의 장관들이 모여 법률을 채택하고 정책을 조정함. 참고로 EU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는 EU 회원국의 국가원수 혹은 정부수반, EU 집행위원장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구성된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EU차원의 일반적인 정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함(출처: EU 이사회,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 검색일자: 2023. 10. 23.)

52) EU's electricity market design(EMD)

53) EU 이사회, "Council agrees on electricity market reform," 2023. 10.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tte/2023/10/17/>, 검색일자: 2023. 10. 18.

_____, "Reform of electricity market design: Council reaches agreement," 2023. 10.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0/17/reform-of-electricity-market-design-council-reaches-agreement/>, 검색일자: 2023. 10. 24.

_____, "Electricity market reform," 2023. 10. 2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lectricity-market-reform/>, 검색일자: 2023. 10. 24.

54) 고정가격, 장기계약 확대를 통한 가격 변동성을 낮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p. 9, 2023. 4. 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99> 참고

- EU 이사회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비자가 에너지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선택권 확립
 - 재생가능 에너지와 저탄소 원자력 에너지 관련 공공자금 프로젝트에 차액 계약⁵⁵⁾ 의무화
 - 차액 계약을 통해 얻은 수익의 소비자 배분(전기 가격 하락으로 부담 완화)
 - EU ‘전기가격 위기’ 선언에 이사회의 역할 강화⁵⁶⁾

다. 재정 준칙 개혁

-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⁵⁷⁾ 개혁 진행상황 검토(2023. 10. 17.)⁵⁸⁾
 - (배경)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국가 재정 및 경제 정책에 대한 일련의 공통 규칙으로 높은 채무 수준과 새로운 투자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2020년 2월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을 위한 공개 토론을 시작
 - 개혁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1년 10월 다시 시작되었으며, 2023년 3월 14일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에 합의⁵⁹⁾
 - 현재 70% 수준의 기술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공통된 정량적 벤치마크 설계, 국가 개혁 및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협의 중
 - 10월 17일 개최된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서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진행상황을 검토하였으며, 연말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
 - 아래 3개의 법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하였으며, 이사회는 기술적, 정치적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을 강조

55) CfD(two-way Contracts for Difference)는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시장가격이 합의된 고정가격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

56) 일시적으로 국지적 혹은 EU 전역의 전기가격 위기를 선언하는 것에 EU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력가격 위기를 선언하는 조건을 개정(최소 6개월 이상 평균 도매 전기요금에 매우 높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전기 소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전기요금 위기로 선언되도록 함)

57) EU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는 안정성장협약(SGP), European Semester, 국가재정체계 요건, 거시경제불균형절차(MIP), 거시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경제 안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고용 증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

58) EU 이사회,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17 October 2023,” 2023. 10. 17.,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cofin/2023/10/17/>, 검색일자: 2023. 10. 18.

59)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참고

- ① 경제 정책 및 다자간 예산 감독의 효과적인 조정에 대한 규정(Regulation on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ies and multilateral budgetary surveillance)
- ② 초과적자시정절차(EDP) 이행을 가속화하고 명확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on speeding up and clarif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excessive deficit procedure)
- ③ 회원국들의 예산 체계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Directive on requirements for budgetary frameworks of the member states)

■ EU 이사회, EU 재정준칙 개혁에 합의(2023. 12. 21.)⁶⁰⁾

- (배경) 2020년부터 재정준칙 등을 포함한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을 위한 공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3년 넘게 중단된 준칙 준수 의무가 2024년부터 다시 활성화될 예정임
 - 2023년 4월 집행위원회가 세 가지 입법 패키지를 제안한 후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침
- (주요 목표) 개혁의 주요 목표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재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혁 및 투자를 통해 모든 회원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임
 - 이사회는 디지털, 친환경, 사회, 국방 등에 대한 개혁과 투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점진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채무 및 적자를 감축하는 프레임워크의 전반적 목표에 동의
- (주요 내용)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재정수지준칙(GDP 대비 3% 한도)과 채무준칙(GDP 대비 60% 한도)의 기준값과 초과적자시정절차(EDP)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각 회원국에 4년간의 채무 감축 계획 수립 기간을 부여하되 특정 투자 및 개혁 조치가 수반될 경우 최대 7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60) 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review: Council agrees on reform of fiscal rules," 2023. 12. 2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3/12/21/economic-governance-review-council-agrees-on-reform-of-fiscal-rules/>, 검색일자: 2023. 12. 22.

- 국가별 중기재정구조계획(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각 회원국은 4~5년에 걸쳐 지속가능하고 점진적인 채무의 감소와 포용적 성장을 보장하는 재정경로를 계획
 - 투자와 개혁 장려: 회원국들은 특정 개혁과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채무 감축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순지출경로(Net expenditure paths): 순기초지출⁶¹⁾을 단일 지표로 설정
 - 채무 지속가능성 안전장치(Debt sustainability safeguard): 채무(D2)⁶²⁾가 GDP의 90%를 초과하는 회원국은 매년 GDP의 1%p씩 채무 감축이 요구되며, 채무 수준이 60~90% 범위에 속하는 국가는 연간 GDP의 0.5%p씩 감축
 - 적자 회복탄력성 안전장치(Deficit resilience safeguard): 재정적자가 GDP의 1.5~3% 범위에 속하는 회원국은 연간 GDP의 0.4%씩 적자를 개선해야 하며, 중기 재정구조계획 기간을 4년에서 7년으로 연장 시 연간 GDP의 0.25%씩 개선 필요
 - 초과적자시정절차(EDP):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는 자동으로 초과적자시정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위반이 계속될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초과적자시정절차가 개시되면 연간 GDP의 0.5% 이상의 구조적재정수지 조정이 요구되며 이에 맞게 순지출경로(net expenditure path)도 수정되어야 함
 - 다만 2025~2027년의 임시 기간 동안에는 초과적자시정절차 내에서 조정 노력을 계산할 때 이자율 상승이 공공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음⁶³⁾
 - 시정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GDP의 최대 0.05%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은 효과적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6개월마다 누적됨
- (향후 일정) EU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쳐 발효 예정

61) 순기초지출(net primary expenditure) = 총지출 - 이자지출 - 주기적 실업수당 - 일회성지출 - 팬데믹 관련 긴급조치

62) 국가채무(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63) 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11조 c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자지급 증가를 고려하여 벤치마크를 조정할 수 있음. 이는 회복·복구기금(RRF)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해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며, 명시된 조건에 따르면 European semester의 국가별 권고사항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에 대응하는 투자 및 개혁 이행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달성과 국방 역량 강화 목표에 부합해야 함

라. 기타

- 유럽의회, 새로운 EU 자체 재원을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승인(2023. 11. 9.)⁶⁴⁾
 - (배경) 현재 EU 자체 수입원은 관세, 부가가치세, 국민총소득 기반 기여금(EU 수입의 70% 이상 차지)으로 구성되며,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recovery fund)⁶⁵⁾ 차입으로 인한 부채 상황을 위해 새로운 자체 재원의 도입이 필수적임
 - (주요 내용) 찬성 399표, 반대 138표, 기권 61표로 EU의 수입을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 이른바 ‘자체 재원에 관한 결정(Own Resources Decision)’을 채택
 - 개정안은 ① 배출권거래제(ETS) 수입 ②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징수금액 ③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재원 등 세 가지 신규 자체 재원을 도입
 - 배출권거래제(ETS) 수입의 30%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징수금액의 75%
 - 기업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재원(The statistical own resource based on company profits)은 Eurostat상 통계에 기초하여 기업 총 영업이익(GOS)의 0.5%를 각 회원국에 기여금 형태로 부과
 - (향후 계획) 채택된 법률개정안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하며,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함

64) EU 의회, “MEPs clear way for new EU revenue, call on EU countries to swiftly follow suit,” 2023. 11. 9.,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1106IPR09027/meps-clear-way-for-new-eu-revenue-call-on-eu-countries-to-swiftly-follow-suit>, 검색일자: 2023. 1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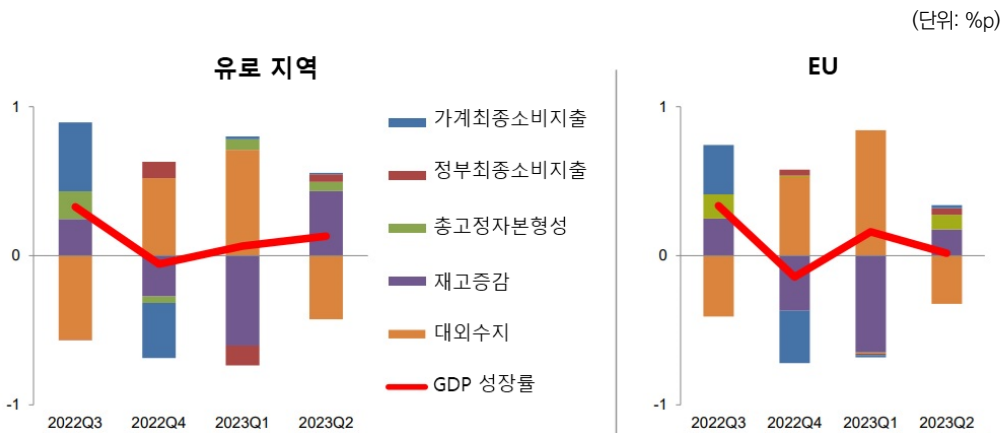
65) 경제회복기금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을 지원

04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9. 7.)⁶⁶⁾
 - (전체) 2023년 2분기 유로지역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분기 경제성장률과 동일한 0.1%,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0.2%p 하락한 0.0%로 집계
 -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유로지역 0.5%, EU 0.4%를 기록하여 두 지역 모두 1분기 성장률(1.1%)보다 하락
 - (국가별) 리투아니아(2.9%), 슬로베니아(1.4%), 그리스(1.3%) 순으로 전 분기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폴란드(-2.2%), 스웨덴(-0.8%), 오스트리아(-0.7%) 순으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임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 전 분기 대비 재고증감이 0.4%p,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0.0%p,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0.1%p, 총고정자본형성은 0.1%p를 기여한 반면, 대외수지는 -0.4%p(수출 -0.4%p, 수입 0.0%p)를 기여

그림 2-I-5 부문별 GDP성장률 기여도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2023. 9. 7.

66)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2023. 9. 7.,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467476/2-07092023-AP-EN.pdf/7e5a0792-7a97-eac1-de9d-6461274a3f56>, 검색일자: 2023. 9. 11.

표 2-I-5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		2023		2022		2023	
	Q3	Q4	Q1	Q2	Q3	Q4	Q1	Q2
벨기에	0.3	0.1	0.4	0.2	2.1	1.5	1.3	0.9
독일	0.4	-0.4	-0.1	0.0	1.2	0.8	-0.3	-0.1
에스토니아	-0.7	-1.4	-0.7	-0.2	-0.9	-3.2	-3.8	-3.0
아일랜드	2.4	-0.9	-2.6	0.5	8.9	10.8	1.0	-0.7
그리스	0.3	1.2	0.0	1.3	4.1	4.8	2.0	2.7
스페인	0.4	0.4	0.5	0.4	4.9	3.0	4.2	1.8
프랑스	0.3	0.1	0.0	0.5	1.2	0.7	0.8	1.0
크로아티아	-0.5	0.5	1.3	1.1	5.5	3.7	2.6	2.5
이탈리아	0.3	-0.2	0.6	-0.4	2.5	1.5	2.0	0.4
사이프러스	1.4	0.2	1.1	-0.4	5.6	4.0	3.2	2.3
라트비아	-1.3	1.1	0.5	-0.3	0.8	1.2	0.3	-0.1
리투아니아	0.7	-0.5	-2.1	2.9	1.4	-0.4	-2.6	1.0
룩셈부르크	1.5	-3.7	2.0	N/A	3.8	-2.2	-0.4	N/A
몰타	0.6	1.6	0.6	1.1	4.8	5.3	5.0	3.9
네덜란드	-0.2	0.9	-0.4	-0.3	3.0	3.2	1.7	-0.3
오스트리아	-0.4	-0.2	0.4	-0.7	1.9	2.7	1.8	-0.9
포르투갈	0.3	0.3	1.6	0.0	4.8	3.2	2.5	2.3
슬로베니아	-1.3	0.8	0.7	1.4	3.9	1.3	0.9	1.6
슬로바키아	0.4	0.3	0.3	0.4	1.2	1.0	1.1	1.3
핀란드	-0.5	-0.6	0.3	0.6	1.2	-0.4	0.0	-0.4
유로지역 20개국	0.3	-0.1	0.1	0.1	2.3	1.7	1.1	0.5
불가리아	0.5	0.5	0.4	0.4	3.1	2.1	2.2	1.9
체코	-0.2	-0.4	0.0	0.1	1.4	0.1	-0.4	-0.4
덴마크	-0.1	0.5	0.7	0.3	2.3	0.4	2.0	1.5
헝가리	-1.0	-0.6	-0.4	-0.3	3.7	0.7	-1.2	-2.3
폴란드	1.2	-2.0	1.6	-2.2	5.0	1.0	-0.6	-1.4
루마니아	0.4	0.9	0.5	0.9	3.7	4.0	2.9	2.7
스웨덴	0.4	-0.8	0.4	-0.8	2.8	-0.4	0.8	-2.4
EU 27개국	0.3	-0.1	0.2	0.0	2.5	1.6	1.1	0.4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second quarter of 2023," 2023. 9. 7.

■ EU 집행위원회, 2023년 여름 중간 경제전망 발표(2023. 9. 11.)⁶⁷⁾⁶⁸⁾

- (전체 평가)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노동시장이 견고한 가운데 경제성장 모멘텀이 약화
 -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견고한 노동 시장 상황(낮은 실업률,⁶⁹⁾ 고용 확대, 임금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 및 소비 약세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부진
- (EU 경제) 2023년 상반기 성장 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2023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5월 발표된 봄 전망에 비해 0.2%p 하향 조정된 0.8%로 전망하고, 2024년은 1.4%로 전망
 - 2023년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이 예상보다 높아 민간 소비가 감소하여 국내 수요가 약세
 - 2024년까지 이어질 성장 모멘텀 약화와 통화 긴축 정책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완화와 견고한 노동시장, 실질 소득의 점진적 회복으로 완만한 경제 반등을 예상
- (유로지역⁷⁰⁾경제) 2023년과 2024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에 비해 0.3%p씩 감소하여 각각 0.8%, 1.3%로 전망
 - (독일) 2023년 경제성장률은 소비경기 둔화와 건설투자 감소로 봄 전망 대비 0.6%p 감소한 -0.4%로 전망하고, 2024년에는 소비 회복으로 1.1%의 경제성장률 전망
 - (스페인) 2023년 상반기 견고한 실적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에 비해

67)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3*, 2023. 9. 1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ip255_en.pdf, 검색일자: 2023. 9. 12.

EU 집행위원회, *Summer 2023 Economic Forecast: Easing growth momentum amid declining inflation and robust labour market*, 2023. 9. 11.,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4408, 검색일자: 2023. 9. 12.

68) EU 집행위원회는 연 4회(계절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 봄과 가을 전망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주요 데이터들의 전망치를 다루고,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만 업데이트. 기존 여름 경제전망 발표는 7월이나, 2023년에는 9월로 발표가 늦어져 3분기 실질GDP 성장률과 8월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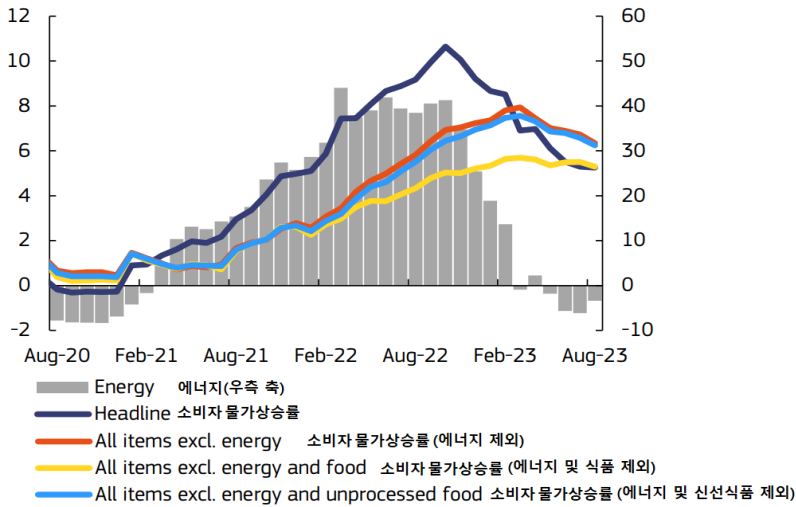
69) 2023년 7월 실업률은 EU 5.9%, 유로지역 6.4%로 각각 3개월과 2개월 연속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EU는 2000년 이후, 유로지역은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치(국가별 7월 실업률은 독일 2.9%, 프랑스 7.4%, 이탈리아 7.6%, 스페인 11.6%, 네덜란드 3.6%, 폴란드 2.8%, 몰타 2.5% 등)

70)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3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 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

- 0.3%p 상승한 2.2%로 전망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 둔화가 이어져 2024년에는 1.9% 전망
- (프랑스) 2023년 2분기 순수출 주도의 경제 반등세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0%, 2024년은 1.2%로 전망하고, 물가 상승 완화로 소비 회복 및 투자의 점진적 회복 전망
 - (이탈리아) 팬데믹 기간 건축물 개선에 대한 특별임시 지원의 단계적 폐지로 2023년 2분기 건설투자가 감소하였고, 하반기에는 산업 생산 등 일부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성장률은 2023년 0.9%, 2024년 0.8% 전망
 - (네덜란드)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계 구매력이 약화되어 소비가 감소했으며, 2023년 경제성장률은 봄 전망 대비 1.3%p 하향 조정된 0.5%
 - 2024년에는 가계 구매력의 부분 회복과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요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한 1.0%로 전망
 - (폴란드) 비유로지역인 폴란드는 재고 감소 및 민간소비 감소로 2023년 경제성장률이 0.5%로 예상
 - 2024년 물가상승 압력 완화와 추가 정부 재정조치로 가구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성장이 전망되어 2024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
- (물가) 유로지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2023년 5.6%로 봄 전망에 비해 0.2%p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2.9%로 감소할 전망(EU 물가상승률은 2023년 6.5%, 2024년 3.2% 전망)
- 2023년 하반기에 에너지 소매 가격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어 2023년 물가상승률은 감소할 전망이고, 2024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봄 전망 대비 0.1%p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은 긴축 통화정책과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으로 인한 수요가 둔화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

그림 2-I-6 유로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3*, 2023. 9. 11., Graph 1.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ip255_en.pdf, 검색일자: 2023. 9. 12.

- (위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광범위한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문제, 세계적인 긴축 통화정책 운용 등이 유럽경제전망에 관한 상·하방 리스크로 작용하여 불확실성이 높음
 - (대외 환경) 2023년에 미국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오래 지속될 경우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 경제 전망이 개선된 반면, 중국은 부동산 침체, 높은 채무 불균형, 신뢰도 저하 등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 (물가) 세계적으로 높은 근원 물가상승률은 정책 금리의 장기적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취약성이 높은 국가에 영향을 미쳐 금융 안정성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지정학적 긴장) 미·중의 적대감 고조로 인한 무역제한 조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으로 세계무역 둔화가 심화되어⁷¹⁾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 있음

71) 2023년 2월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겨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세계 무역의 둔화와 요인을 다루면서 “Global trade fragmentation risks”로 세계 경제 분절화에 대해 서술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3* 보고서의 Box 1.1을 참고(출처: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3,” 2023. 2. 13., https://ec.europa.eu/economy_finance/forecasts/2023/winter/Box1_Global_trade_fragmentation_risks.pdf, 검색일자: 2023. 9. 27.)

- (통화정책) 가계와 기업의 대차대조표가 동반 악화되어 경제 심리와 은행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긴축 정책이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음
 - 반면 긴축이 빠른 물가 하락으로 이어져 실질소득 회복 가속화 가능성도 있음
- (기후) 전례없는 여름 산불 및 홍수와 같이 극한 기상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자연 자본 손실과 관광을 비롯한 경제활동 악화 등 EU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표 2-I-6 EU 및 유로지역 여름 경제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9월 여름 중간전망			2023년 5월 봄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질 GDP성장률						
유로지역	3.3	0.8	1.3	3.5	1.1	1.6
EU	3.4	0.8	1.4	3.5	1	1.7
독일	1.8	-0.4	1.1	1.8	0.2	1.4
스페인	5.5	2.2	1.9	5.5	1.9	2
프랑스	2.5	1	1.2	2.6	0.7	1.4
이탈리아	3.7	0.9	0.8	3.7	1.2	1.1
네덜란드	4.3	0.5	1	4.5	1.8	1.2
폴란드	5.1	0.5	2.7	5.1	0.7	2.7
물가상승률						
유로지역	8.4	5.6	2.9	8.4	5.8	2.8
EU	9.2	6.5	3.2	9.2	6.7	3.1
독일	8.7	6.4	2.8	8.7	6.8	2.7
스페인	8.3	3.6	2.9	8.3	4	2.7
프랑스	5.9	5.6	2.7	5.9	5.5	2.5
이탈리아	8.7	5.9	2.9	8.7	6.1	2.9
네덜란드	11.6	4.7	3	11.6	4.9	3.3
폴란드	13.2	11.4	6.1	13.2	11.7	6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summer 2023*, 2023. 9. 11, Table 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09/ip255_en.pdf, 검색일자: 2023. 9. 12.

■ EU 집행위원회,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3. 11. 15.)⁷²⁾

- (전체 평가) 올해 유럽 경제는 높은 물가, 대외 수요 약화, 통화 긴축 등으로 인해 성장 추진력을 잃었으나, 향후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경제) 유로지역과 EU의 GDP 성장률은 지난 9월에 발표된 여름 전망*보다 소폭 하향 조정되어, 2023년에 두 지역 모두 0.6%에서 2024년에는 각각 1.2%, 1.3%로 완만한 회복세를 전망
 - * 여름 전망(9월 발표)에서 유로지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두 지역 모두 0.8%에서 2024년에는 각각 1.3%, 1.4%로 증가 전망
 - 팬데믹 이후 2021~2022년에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22년 4분기부터 실질 GDP가 둔화되어 2023년 1~3분기 동안은 거의 성장하지 않음
 -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통화 긴축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면서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1.6%, EU는 1.7%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물가) 유로지역과 EU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각각 5.6%, 6.5%에서 2024년에 3.2%, 3.5%로 감소할 전망
 - 10월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1년 전 최고치인 10.6%에서 2.9%로 하락하여 2021년 7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작년에는 주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 영향이 컸으나, 현재는 에너지와 식품 외에 모든 주요 소비 범주의 물가상승률이 광범위하게 완화되고 있음
- (노동)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2023년 상반기에 강한 성과를 보이고 있어 회복력이 유지될 전망
 - 2023년 2분기 EU 경제활동참가율(61.4%) 및 고용률(65.3%)이 Eurostat이 도입된 2009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월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인 6.0%에 근접
 - EU 고용증가율은 2023년 1.0%에서 2024년과 2025년에 0.4%로 완화될 전망되며, EU 실업률은 2023년과 2024년에 6.0%로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2025년에 5.9%로 감소 전망

72) EU 집행위원회, *Autumn 2023 Economic Forecast: A modest recovery ahead after a challenging year*, 2023. 11. 1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5743, 검색일자: 2023. 11. 16.

-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물가상승률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부터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한편 낮은 실업률, 높은 구인률(vacancy rate), 노동력 부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경직되어(tight) 있음을 시사
- (재정) 재정지원 조치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되면서 재정적자 감소 전망
 - 불리한 경제 환경 및 높은 이자지출로 인한 재정 압박은 팬데믹 관련 지원 조치의 단계적 중단, 민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에너지 관련 조치의 순예산 영향(net budgetary impact) 감소로 인해 상쇄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과 EU의 재정적자는 재량적 재정 지원 조치의 지속적인 제한으로 2023년에 3.2%에서 2024년 2.8%, 2025년 2.7%로 개선될 전망
 - 유로지역과 EU의 국가채무는 각각 2023년에 90.4%, 83.1%에서 2024년 89.7%, 82.7%로 개선될 전망이며, 2025년에는 채무비율이 대체로 안정화되어 2019년 수준인 약 79%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하방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가함
 - (지정학적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동 분쟁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증가했으며, 에너지 공급 중단 위기가 글로벌 생산량 및 전반적인 가격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외 환경)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높은 채무 불균형으로 인한 급격한 성장 둔화가 EU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 (통화 정책) 고금리 환경에서 통화 긴축의 영향이 예상보다 더 크고 오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기후) 폭염, 화재, 가뭄, 홍수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가 EU 경제에 심각한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신규 후보 국가) 금번 경제전망에서는 처음으로 EU 가입 후보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망을 다루었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 침공 이후 2022년에 -29%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이 민간 소비와 공공투자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2023년 4.8%, 2024년 3.7%, 2025년 6.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표 2-1-7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 전망

(단위: %)

국가	실질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재정수지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벨기에	1.4	1.4	1.5	2.4	4.2	1.9	5.6	5.6	5.4	-4.9	-4.9	-5.0
독일	-0.3	0.8	1.2	6.2	3.1	2.2	3.1	3.2	3.2	-2.2	-1.6	-1.3
에스토니아	-2.6	1.9	2.7	9.4	3.5	2.1	7.0	6.9	6.8	0.6	1.1	0.5
아일랜드	-0.9	3.0	3.4	5.3	2.7	2.1	4.2	4.2	4.3	0.9	0.6	1.0
그리스	2.4	2.3	2.2	4.3	2.8	2.1	11.4	10.7	9.9	-2.3	-0.9	-0.8
스페인	2.4	1.7	2.0	3.6	3.4	2.1	12.1	11.6	11.1	-4.1	-3.2	-3.4
프랑스	1.0	1.2	1.4	5.8	3.0	2.0	7.2	7.4	7.5	-4.8	-4.4	-4.3
크로아티아	2.6	2.5	2.8	8.1	2.4	1.6	6.5	6.2	5.8	-0.1	-1.8	-1.8
이탈리아	0.7	0.9	1.2	6.1	2.7	2.3	7.6	7.4	7.3	-5.3	-4.4	-4.3
키프로스	2.2	2.6	2.9	4.1	3.0	2.2	6.4	6.1	5.9	2.3	2.1	2.5
라트비아	-0.2	2.4	3.0	9.6	3.2	1.9	6.8	6.6	6.5	-3.2	-3.1	-3.1
리투아니아	-0.4	2.5	3.4	8.8	2.9	2.5	6.8	6.7	6.5	-1.6	-2.3	-2.1
룩셈부르크	-0.6	1.4	2.0	3.2	3.0	1.8	5.5	5.9	6.0	-1.9	-2.1	-1.0
몰타	4.0	4.0	4.2	5.7	3.3	3.1	2.7	2.7	2.7	-5.1	-4.6	-4.1
네덜란드	0.6	1.1	1.7	4.6	3.7	2.0	3.6	3.9	3.9	-0.5	-1.8	-2.0
오스트리아	-0.5	1.0	1.3	7.7	4.1	3.0	5.3	5.4	5.3	-2.6	-2.4	-2.2
포르투갈	2.2	1.3	1.8	5.5	3.2	2.4	6.5	6.5	6.4	0.8	0.1	0.0
슬로베니아	1.3	2.0	2.7	7.5	3.9	2.4	3.6	3.7	3.6	-3.7	-3.3	-2.9
슬로바키아	1.3	1.7	2.0	10.8	5.2	3.0	5.7	5.4	5.2	-5.7	-6.5	-6.8
핀란드	0.1	0.8	1.5	4.4	1.9	2.0	7.2	7.3	7.0	-2.4	-3.2	-3.4
유로지역 20개국	0.6	1.2	1.6	5.6	3.2	2.2	6.6	6.6	6.4	-3.2	-2.8	-2.7
불가리아	2.0	1.8	2.6	8.8	4.0	2.9	4.2	4.2	4.2	-3.0	-3.0	-3.2
체코	-0.4	1.4	3.0	12.2	3.2	2.4	2.4	2.5	2.5	-3.8	-2.4	-1.8
덴마크	1.2	1.4	1.6	3.6	2.4	2.1	4.6	5.2	5.5	2.6	1.8	1.2
헝가리	-0.7	2.4	3.6	17.2	5.2	4.1	4.1	4.2	4.1	-5.8	-4.3	-3.8
폴란드	0.4	2.7	3.2	11.1	6.2	3.8	3.0	2.8	2.7	-5.8	-4.6	-3.9
루마니아	2.2	3.1	3.4	9.8	5.9	3.4	5.4	5.2	5.3	-6.3	-5.3	-5.1
스웨덴	-0.5	-0.2	1.3	5.7	1.8	2.2	7.6	8.4	8.6	-0.2	-0.7	-0.6
EU 27개국	0.6	1.3	1.7	6.5	3.5	2.4	6.0	6.0	5.9	-3.2	-2.8	-2.7

주: 재정수지는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자료: EU 집행위원회, *European Economic Forecast*, Autumn 2023, Table 1■ EU 통계청,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12. 7.)⁷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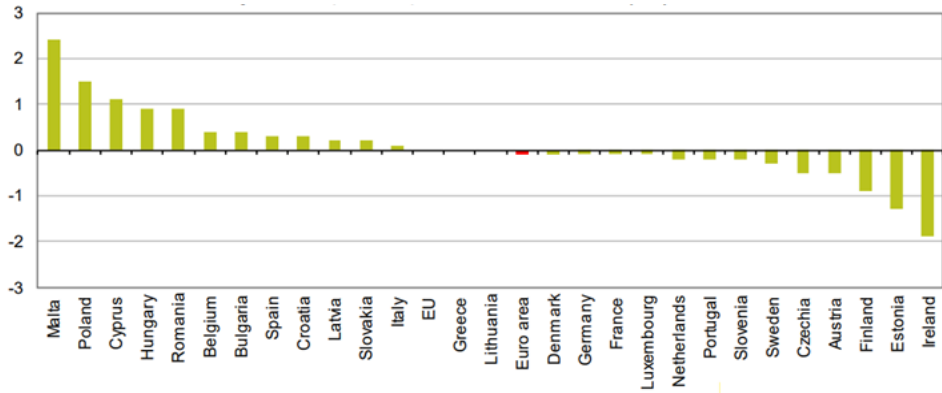
- (전체) 2023년 3분기 유로지역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했으며,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은 0.0%로 전분기와 동일하게 유지
 -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두 지역 모두 0.0%로 집계

73)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3," 2023. 12. 7., c199bc64-2324-272b-79db-437182a4a6ae (europa.eu), 검색일자: 2023. 12. 11.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몰타(2.4%)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폴란드(1.5%), 사이프러스(1.1%)이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아일랜드(-1.9%), 에스토니아(-1.3%), 핀란드(-0.9%) 순
- (부문별) 유로지역 기준으로 GDP 성장률 기여도는 가계 최종소비지출이 0.2%p,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0.1%p를 기록한 반면, 재고증감이 -0.3%p, 총고정자본형성이 0.0%p, 국제수지가 0.0%p(수입은 0.6%p, 수출은 -0.6%p)를 기록함

그림 2-I-7 2023년 3분기 EU 회원국별 GDP 성장률

(단위: 전 분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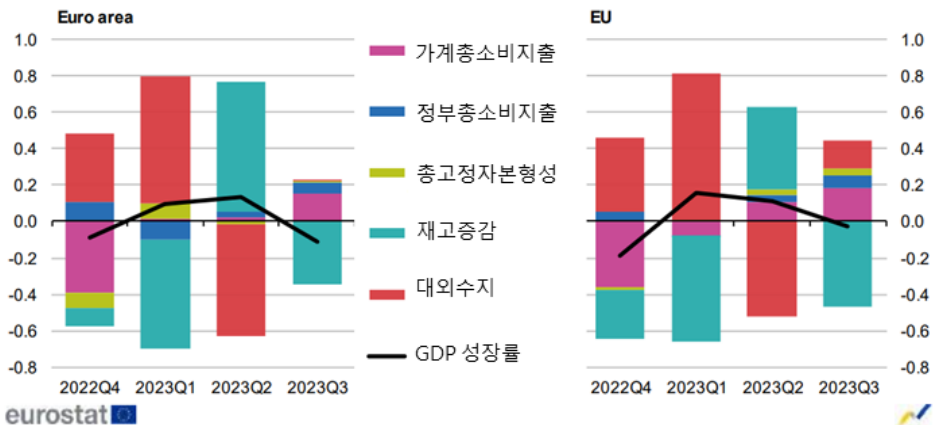


eurostat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3," 2023. 12. 7.

그림 2-I-8 부문별 GDP성장률 기여도

(단위: 전 분기 대비, %p)



eurostat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3," 2023. 12. 7.

표 2-I-8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2	2023			2022	2023		
	Q4	Q1	Q2	Q3	Q4	Q1	Q2	Q3
벨기에	0.2	0.4	0.3	0.4	1.4	1.7	1.3	1.4
독일	-0.4	0.0	0.1	-0.1	0.8	-0.2	0.1	-0.4
에스토니아	-1.4	-0.8	-0.6	-1.3	-3.2	-3.8	-3.3	-4.0
아일랜드	-1.6	-1.9	-0.4	-1.9	10.7	2.4	-0.4	-5.6
그리스	0.9	0.1	1.1	0.0	4.2	1.9	2.6	2.1
스페인	0.5	0.6	0.4	0.3	3.8	4.1	2.0	1.8
프랑스	0.0	0.1	0.6	-0.1	0.8	0.9	1.2	0.6
크로아티아	0.3	0.9	1.5	0.3	3.3	1.6	2.2	3.0
이탈리아	-0.2	0.6	-0.4	0.1	1.6	2.1	0.3	0.1
사이프러스	0.5	1.0	-0.4	1.1	2.8	3.2	2.2	2.2
라트비아	0.6	-0.5	-0.3	0.2	1.6	-0.4	-0.8	0.0
리투아니아	-0.5	-1.9	2.4	0.0	0.1	-2.3	0.7	0.1
룩셈부르크	-2.3	-0.9	-0.2	-0.1	-2.4	-1.6	-1.4	-1.8
몰타	2.1	0.5	1.9	2.4	7.3	6.4	6.0	7.1
네덜란드	0.7	-0.5	-0.4	-0.2	3.2	1.7	-0.2	-0.5
오스트리아	-0.1	0.1	-1.1	-0.5	2.2	1.7	-1.3	-1.6
포르투갈	0.5	1.5	0.1	-0.2	3.4	2.5	2.6	1.9
슬로베니아	0.6	0.2	1.0	-0.2	1.0	1.1	1.7	1.6
슬로바키아	0.2	0.2	0.4	0.2	1.0	0.9	1.2	1.1
핀란드	-0.6	0.1	0.4	-0.9	-0.3	0.1	-0.4	-1.2
유로지역 20개국	-0.1	0.1	0.1	-0.1	1.8	1.3	0.6	0.0
불가리아	0.6	0.3	0.4	0.4	2.7	2.4	2.0	1.8
체코	-0.4	0.1	0.1	-0.5	0.1	-0.4	-0.4	-0.7
덴마크	0.3	1.1	-0.9	-0.1	0.4	2.9	0.8	0.3
헝가리	-0.8	-0.2	0.0	0.9	0.5	-1.1	-2.2	-0.3
폴란드	-2.3	1.1	0.3	1.5	0.8	-1.4	-0.3	0.6
루마니아	1.2	-0.8	1.6	0.9	5.0	1.2	2.6	2.9
스웨덴	-0.8	0.5	-0.8	-0.3	-0.3	1.5	-0.4	-1.4
EU 27개국	-0.2	0.2	0.1	0.0	1.7	1.1	0.5	0.0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자료: EU 통계청,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3," 2023. 12. 7.

나. 재정 동향·전망

- EU 통계청, 2023년 1분기 재정통계 발표(2023. 7. 21.)⁷⁴⁾
 - 2023년 1분기 GDP 대비 일반정부 계절조정 재정적자는 유로지역⁷⁵⁾ 20개국에서 3.2%, EU 27개국의 경우 3.0%로 두 지역 모두 전 분기 대비 1.5%p 감소
 - 전 분기인 2022년 4분기 유로지역의 재정적자는 4.7%, EU의 경우는 4.5%
 - 유로지역과 EU 회원국 모두 총지출의 감소와 명목 GDP 상승으로 재정적자 감소
 - 높은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분기 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다수 회원국에서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2023년 1분기 말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91.2%(전 분기 91.4%) 이고, EU에서는 2022년 4분기 83.8%에서 83.7%로 0.1%p 하락
 - GDP 규모의 증가분이 채무 증가분보다 더 커서 채무 비율이 약간 감소
 - 국가별 2023년 1분기 채무 비율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168.3%), 이탈리아(143.5%), 포르투갈(113.8%) 순으로 높았고, 에스토니아(17.2%), 불가리아(22.5%), 룩셈부르크(22.5%) 순으로 채무 비율이 낮음
 - 전 분기 대비 채무 비율 변화는 11개 국가에서 채무 비율이 증가하였고, 16개 국가에서 채무 비율이 감소
 - 룩셈부르크(+3.4%p), 벨기에(+2.2%p), 오스트리아(+2.1%p), 라트비아(+2.1%p) 순으로 채무 비율이 증가했으며, 그리스(-3.0%p), 사이프러스(-2.5%p), 네덜란드(-1.8%p) 순으로 감소

74)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3.0% of GDP in the EU," 2023. 7.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215486/2-21072023-BP-EN.pdf/5b12c1e8-06e5-15bf-50d9-d0de82e163be>, 검색일자: 2023. 7. 25.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1.2%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3.7% of GDP in EU," 2023. 7.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206540/2-21072023-AP-EN.pdf/5d83466f-811a-750a-4c5c-906cc7a313ef>, 검색일자: 2023. 7. 25.

75) EU 회원국이면서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는 20개국(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표 2-I-9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의 2023년 1분기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Q1	2022Q4	2023Q1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2.7	-4.7	-3.2
정부수입	47.2	46.9	46.2
정부지출	49.9	51.6	49.4
정부채무	95.0	91.4	91.2
EU 27개국			
재정수지	-2.4	-4.5	-3.0
정부수입	46.6	46.2	45.4
정부지출	49.0	50.7	48.5
정부채무	87.4	83.8	83.7

주: 1.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2. 재정수지·수입·지출은 계절조정된 수치임

자료: 1.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2% of GDP in the euro area and at 3.0% of GDP in the EU," 2023. 7. 21.,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215486/2-21072023-BP-EN.pdf/5b12c1e8-06e5-15bf-50d9-d0de82e163be>, 검색일자: 2023. 7. 25.

2.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91.2% of GDP in euro area Down to 83.7% of GDP in EU," 2023. 7. 21., 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206540/2-21072023-AP-EN.pdf/5d83466f-811a-750a-4c5c-906cc7a313ef, 검색일자: 2023. 7. 25.

■ EU 통계청, 2023년 2분기 일반정부 재정통계 발표(2023. 10. 23.)⁷⁶⁾

- (재정수지) 2023년 2분기 유로지역(20개국⁷⁷⁾)의 계절조정 재정수지⁷⁸⁾는 전 분기와 동일하게 GDP 대비 -3.3%로 안정적으로 유지

76)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at 3.2% of GDP in the EU,"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4164/2-23102023-CP-EN.pdf/77e6dfb1-de02-c0b6-aa01-7f6617c12daa>, 검색일자: 2023. 10.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0.3% of GDP in euro area,"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5721/2-23102023-BP-EN.pdf/94083c00-c5e1-fe02-a30f-6f4122e9d744>, 검색일자: 2023. 10. 24.

77) 유로화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로 벨기에,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EU 27개국은 유로지역 20개국에서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이 포함)

78) 발생주의에 따른 누적 개념

- EU 27개국의 계절조정 재정수지는 전 분기 -3.1%에 비해 0.1%p 악화된 -3.2%
 -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1~2분기에 높은 에너지가격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정부 조치가 재정수지에 계속해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다수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기록
- (채무) 2023년 2분기 말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90.3%로 전 분기 90.7%에서 0.4%p 감소하였고, EU 27개국은 전 분기 83.4%에서 0.3%p 감소한 83.1%
 - 유로지역과 EU 둘 다 채무비율이 감소한 이유는 채무보다 GDP 증가가 컸기 때문
 - GDP 대비 채무비율은 그리스(166.5%), 이탈리아(142.4%), 프랑스(111.9%), 스페인(111.2%), 포르투갈(110.1%), 벨기에(106.0%) 순으로 높았음
 - 채무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8.5%), 불가리아(21.5%), 룩셈부르크(28.2%), 덴마크(30.2%), 스웨덴(30.7%) 순으로 낮은 채무 비율을 기록
 - 2022년 2월 전년 동 분기와 비교한 GDP 대비 채무비율은 6개 회원국에서 채무비율이 증가하였고, 21개국은 감소
 - (증가) 룩셈부르크(+2.9%p), 핀란드(+2.1%p), 에스토니아(+1.6%p), 체코(+0.8%p), 슬로바키아(+0.4%p), 불가리아(+0.2%p) 순으로 많이 증가
 - (감소) 그리스(-16.6%p), 포르투갈(-11.8%p), 사이프러스(-8.1%p), 아일랜드(-7.4%p), 크로아티아(-6.0%p), 슬로베니아(-4.5%p), 오스트리아 및 이탈리아(모두 -4.0%p), 스페인(-3.3%p), 네덜란드(-3.1%p) 순으로 많이 감소

표 2-I-10 2023년 2분기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재정통계

(단위: GDP 대비 %)

국가	계절조정 재정수지					채무비율		
	2022년			2023년(잠정치)		2022년	2023년(잠정치)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유로지역 20개국	-2.7	-4.0	-5.1	-3.3	-3.3	93.5	90.7	90.3
EU	-2.3	-3.7	-4.8	-3.1	-3.2	85.9	83.4	83.1
벨기에	-3.8	-4.3	-4.0	-4.3	-4.1	107.5	106.4	106.0
불가리아	-3.5	-5.9	1.5	-3.5	-3.8	21.3	22.1	21.5
체코	-2.9	-3.9	-3.5	-3.7	-3.3	43.5	44.5	44.3
덴마크	3.5	2.8	3.4	3.5	2.8	31.5	29.5	30.2
독일	-1.4	-2.2	-5.8	-2.9	-2.6	67.4	65.7	64.6
에스토니아	1.2	-1.4	-2.6	-2.3	-0.7	16.9	7.2	18.5
아일랜드	1.8	2.3	1.4	2.8	2.4	50.5	43.6	43.1
그리스	:	:	:	:	:	183.2	168.6	166.5
스페인	-4.6	-4.9	-5.9	-2.2	-4.4	114.5	111.2	111.2
프랑스	-3.7	-4.8	-5.8	-4.7	-4.6	113.3	112.4	111.9
크로아티아	0.4	0.2	-0.6	-0.6	-0.5	72.4	69.1	66.5
이탈리아	:	:	:	:	:	146.4	140.9	142.4
사이프러스	:	:	:	:	:	93.4	83.1	85.3
라트비아	-4.6	-4.1	-5.3	-2.7	0.1	42.0	43.0	39.5
리투아니아	0.9	0.4	-5.4	-0.9	-0.7	39.3	38.1	38.1
룩셈부르크	0.2	-0.7	-1.8	-0.2	-0.4	25.4	28.4	28.2
헝가리	-4.9	-7.0	-8.8	-10.2	-6.6	76.7	75.4	75.2
몰타	-3.2	-5.1	-7.1	-2.5	-3.1	52.7	52.4	50.7
네덜란드	0.9	-1.0	0.1	-0.2	0.2	50.0	48.3	46.9
오스트리아	0.0	-5.7	-4.9	-3.0	-2.0	82.7	80.3	78.6
폴란드	-1.1	-3.9	-8.2	-2.1	-4.1	51.3	48.1	48.4
포르투갈	2.7	1.4	-5.5	2.1	2.3	121.9	112.4	110.1
루마니아	-4.1	-7.4	-6.3	-5.9	-6.3	48.3	49.0	48.2
슬로베니아	-3.3	-3.6	-2.8	-3.1	-2.5	75.0	72.0	70.5
슬로바키아	-1.6	-1.7	-2.9	-4.1	-4.8	59.2	58.0	59.6
핀란드	-0.4	-0.6	-0.5	-2.3	-3.8	72.5	73.3	74.6
스웨덴	2.5	0.9	-0.2	-0.3	-1.1	33.6	31.8	30.7

주: 계절조정 재정수지 “:” 기호는 비공개 혹은 유로통계청 추정치

자료: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3.3% of GDP in the euro area and at 3.2% of GDP in the EU,” p. 4,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4164/2-23102023-CP-EN.pdf/77e6dfb1-de02-c0b6-aa01-7f6617c12daa>, 검색일자: 2023. 10. 24.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90.3% of GDP in euro area, p. 5, 2023. 10. 23., <https://ec.europa.eu/eurostat/documents/2995521/17725721/2-23102023-BP-EN.pdf/94083c00-c5e1-fe02-a30f-6f4122e9d744>, 검색일자: 2023. 10. 24.

다. 주요 보고서

■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⁷⁹⁾ 2022 발표(2023. 10. 25.)

- * 동 보고서는 EU 공공 재정에 관한 주요 재정정책 동향 및 연구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으며, 아래 내용은 1장 EU의 경제·재정 상황 및 지난 팬데믹 이후 재정정책의 어려운 환경에 대해 정리함⁸⁰⁾
 - 유로지역 경제는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견뎌내고 있음
 - (경제성장률) 2023년 봄 전망⁸¹⁾에 따르면 유로지역 실질경제성장률은 2022년에 3.5%로 성장 이후 2023년에 1.1%로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며, 2024년에는 1.6%로 소폭 상승 전망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2년 8.4%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5.8%, 2024년 2.8%로 감소 전망이며, 근원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지속될 전망
 - 지난 경제 위기에 재정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로지역에 기록적으로 높은 채무를 남김
 - (재정 수지) 유로지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에너지 지원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2022년 3.6%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2%, 2.4%로 개선 전망
 - (재정 기초) 2020~2022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했으나 2023년에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긴축 재정기조로 전환되어 GDP 대비 약 0.5% 수준의 긴축 재정이 전망되며, 2024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정부 채무) 유로지역의 GDP 대비 채무는 2020년 사상 최고치(99.1%)에 도달한 후 2022년 93.1%로 감소했으며, 2024년에 89.9%까지 하락할 전망
 - (정책 대응 비용) 2020~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약 GDP 대비 3%에 달하는 전례 없는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에너지 가격 대응으로 인한 유로지역 순예산비용은 2022년에 약 1.3%, 2023년에 1.2% 수준으로 추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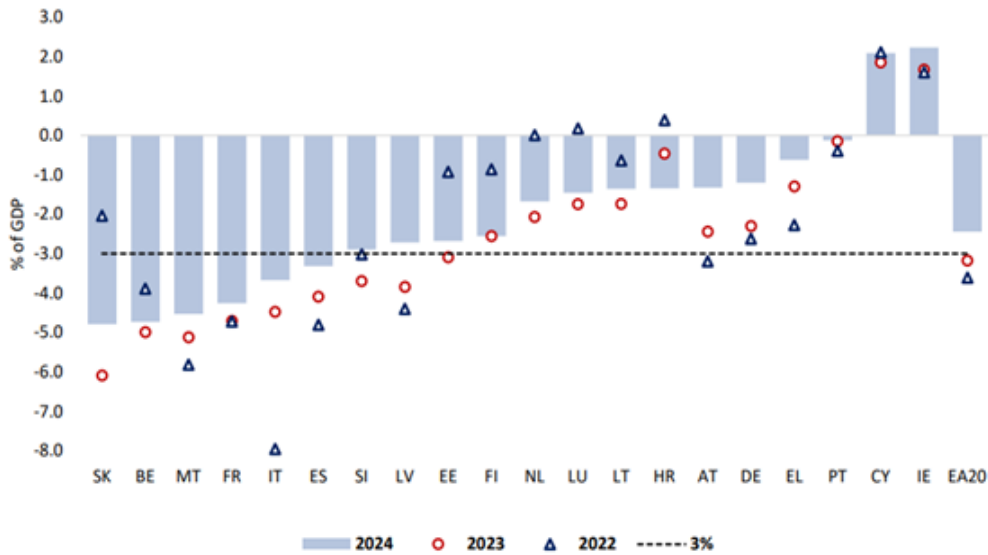
79)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80)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는 1~3장으로 이뤄져 있음. 2장은 EU 재정 감축 동향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3장은 인플레이션이 공공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구성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혹은 향후 게시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을 참고 바람(<https://www.kipf.re.kr/cfa/index.do>)

81)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5월호, 2023를 참고 바람

그림 2-I-9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재정수지(2022-2024)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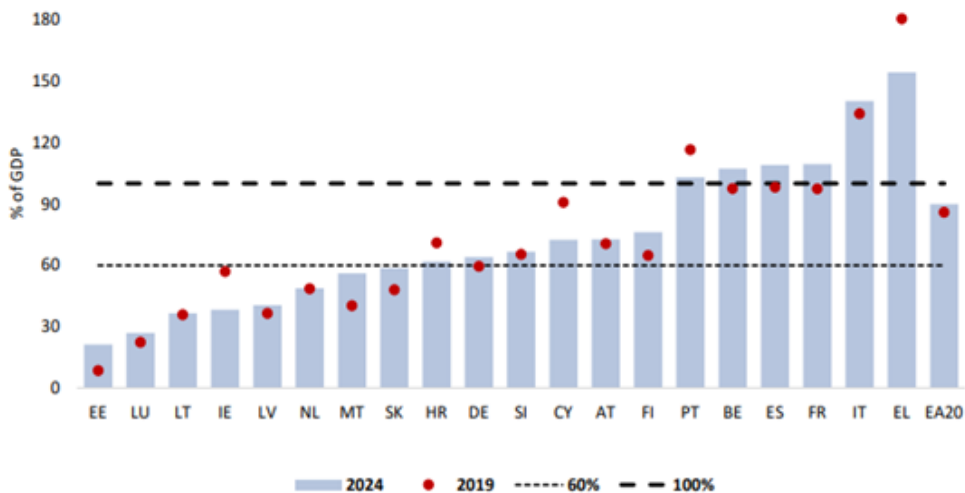


주: SK 슬로바키아, BE 벨기에, MT 몰타, FR 프랑스, IT 이탈리아, ES 스페인, SI 슬로베니아, LV 라트비아, EE 에스토니아, FI 핀란드, NL 네덜란드, LU 룩셈부르크, LT 리투아니아, HR 크로아티아, AT 오스트리아, DE 독일, EL 그리스, PT 포르투갈, CY 키프로스, IE 아일랜드, EA20 유로지역 20개국

자료: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1.3.

그림 2-I-10 유로지역의 일반정부 채무(2019년, 2024년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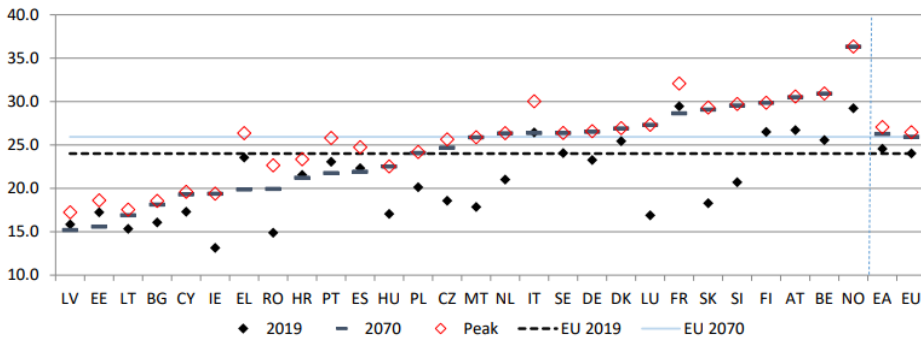
주: 상단 그림주 참고

자료: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1.6.

- 한편 고령화와 녹색 및 디지털 전환(twin transition) 등 장기로 소요되는 지출이 공공 재정 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로 인한 재정정책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2026년까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가 경제회복기금(NGEU)⁸²과 ‘REPowerEU’⁸³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EU의 근로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의료, 장기요양 지출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EU의 총 고령화비용(연금, 의료, 장기요양 포함)은 2019년에 GDP 대비 24.6% 규모이며, 2070년까지 1.7%p 증가한 26.3%로 전망
 - S2 지표⁸⁴로 평가한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에서 7개 회원국(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은 고위험으로 평가되었으며, 12개 회원국⁸⁵은 중위험 국가로 평가됨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방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그림 2-I-11 EU의 총 고령화 비용

(단위: GDP 대비 %)



- 주: 1. EU 회원국별로 상당한 다양성이 있으나, 고령화 비용의 정점(◊)은 전망 기간의 중간에 발생함. 이는 연금개혁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일부 국가의 경우 인구 고령화의 영향이 2070년 이전에 정점에 이르기 때문.
 2. LV 라트비아, EE 에스토니아, LT 리투아니아, BG 불가리아, CY 키프로스, IE 아일랜드, EL 그리스, RO 루마니아, HR 크로아티아, PT 포르투갈, ES 스페인, HU 헝가리, PL 폴란드, CZ 체코, MT 몰타, NL 네덜란드, IT 이탈리아, SE 스웨덴, DE 독일, DK 덴마크, LU 룩셈부르크, FR 프랑스, SK 슬로바키아, SI 슬로베니아, FI 핀란드, AT 오스트리아, BE 벨기에, NO 노르웨이, EA 유로지역, EU 유럽연합

자료: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22, 2023*, Graph I.2.5

82)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은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을 지원
 83) 2022년 5월 에너지 공급을 다양화하고 EU 에너지 공급의 독립성 및 안보를 높여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REPowerEU’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까지 총 2,100억유로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
 84) S2 지표는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의 주요 요소로 정부 예산 제약의 무한 기간을 설정하여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재정수지 규모를 측정
 85) 불가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II 국제통화기금(IMF)⁸⁶⁾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7. 19.	IMF 집행위원회, 유로지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3. 7. 25.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023. 9. 6.	IMF, 연례협의를 위한 한국 방문 및 예비 조사 결과 발표
2023. 10. 10.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2023. 10. 12.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3. 10. 18.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발표
2023. 10. 18.	IMF 총재, 2023 IMF-WB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 및 빈곤감축·성장기금(Fundraising Targets for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1차 목표 달성 발표
2023. 11. 7.	IMF 집행위원회, IMF 쿼타 증액 제안 승인
2023. 11. 16.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
2023. 12. 8.	IMF 대표단, 리히텐슈타인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방문절차 완료

자료: 저자 확인

8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염보라 연구원(ybr119@kipf.re.kr)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 IMF,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2023. 7. 25.)⁸⁷⁾
 - (동향)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영향으로 경제 부문과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둔화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글로벌 비상사태 해제를 발표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크게 반등하고 세계경제는 회복탄력성을 보였지만 부문별 지역별로 격차를 보임
 - 2023년 1분기 글로벌 경제활동의 회복력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이동성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추가 가속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을 포함한 비서비스 부문의 경제활동은 약세를 띠
 -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빈곤국에서 투자를 위한 재정여력을 제한하고 세계 최빈국의 경우 코로나19 전 예측에 비해 생산량 손실이 여전히 큼
 - (지속되는 물가 전쟁)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이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 중앙은행의 차입비용 증가. 경제활동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
 - 물가 압력을 반영하는 근원물가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 저조한 생산성, 높은 임금 상승, 타이트한 노동시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은행부문의 압력 심화와 낮은 신용가용도) 은행부문의 높은 압력은 당국의 신속한 조치에 따라 완화되었지만, 자금조달비용 및 신용위험의 증가로 신용가용도(credit availability)는 낮은 상태
 - (중국의 회복세 약화) 중국은 봉쇄조치 완화 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반등으로 높은 회복력을 보였으나. 최근 부동산 부문의 약세, 국외수요 감소, 높은 실업률(2023년 5월 기준 20.8%) 등으로 중국의 회복세는 점차 약화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3.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0~2019년의 평균 성장률인 3.8%보다 낮은 수치

87)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ly 2023, 2023. 7. 25.,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3/07/10/world-economic-outlook-update-july-2023#tools>, 검색일자: 2023. 7. 27.

-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약화가 서비스업의 활동 증가를 상쇄하면서 성장률이 감소세를 보이고,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추세를 보임
 - 선진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4월 예측치보다 약 0.2%p 상향 조정된 1.5%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1.4%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2023년 4.0%, 2024년 4.1%로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예측치보다 2023년 0.1%p 상향 조정, 2024년 0.1%p 하향 조정됨
- (미국)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8%, 2024년 1.0%로 둔화될 전망
 - 실질소득과 차량구매 증가 등 2023년 1분기의 소비 성장 모멘텀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서비스와 관광업의 반등으로 2023년 0.9%에서 2024년 1.5%로 증가할 전망
- (영국)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감소, 글로벌 금융압력 해소에 따라 2023년 0.4%에서 2024년 1.0%로 상승할 전망
- (일본)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억눌린 수요와 경기순응적 정책의 영향으로 2023년 1.4%를 기록한 후 부양책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2024년 1.0%로 둔화될 전망
- (중국)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가 둔화됨에 따라 순수출 기여도가 감소하여 2023년 5.2%에서 2024년 4.5%로 둔화될 전망
- 세계 무역 성장도 국내 서비스로의 국제수요 이동, 미국 달러 강세, 무역 장벽의 심화 등 영향으로 2022년 5.2%에서 2023년 2.0%로 감소한 후 2024년 3.7%로 회복할 전망
- 긴축정책으로 주요 중앙은행 및 세계 금리가 상승한 뒤 2024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 단기 물가상승 기대치가 하락함에 따라 명목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후에도 실질금리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음
- 세계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연평균 6.8%에서 2024년 5.2%까지 하락할 전망이지만 팬데믹 이전(2017~2019년) 수준인 3.5%보다 높으며, 긴축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점차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세계 근원물가지수는 2023년 연평균 6.0%에서 2024년 4.7%로 감소할 전망이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음
- (위험) 2023년 4월 세계경제전망 이후 부정적 위험(adverse risk)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에 치우쳐져 있음
 - (상방위험) 에너지 가격 하락, 노동시장 완화 등으로 인해 근원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여 세계 경제성장은 예상보다 긍정적일 수 있으며, 가계 초과저축, 소비강제, 중국에서의 정책지원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심화된 긴축 통화 기조가 요구될 수 있음
 - (하방위험) 최근 경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의 지속, 금융시장의 불안, 중국의 저조한 회복세, 부채 증가, 지리경제적 분열 심화 등의 위험을 가짐
 - 타이트한 노동시장, 환율 하락, 엘니뇨,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가상승률을 증가시켜 근원물가와 정책대응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기준금리 및 자산가격의 하락에 대해 높아진 기대감은 금융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글로벌 교역 및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 소비 부진, 재정 긴축 등으로 성장 전망에서 하방 위험이 증가하면서 교역 상대국에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글로벌 금융시장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은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이 제한되고 부채 부실화 위험이 증가함
 -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어 더 많은 무역제한, 자본 이동 제약이 발생하고 세계 공공재에 대한 다자간 협력을 저해
- (정책권고) 물가상승 방지, 재정안정, 취약계층 보호 및 재정완충장치 재구축,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의 자금압박 완화, 기후변화의 회복탄력성 및 공급 강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권고
 - (물가상승 방지) 중앙은행은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근원물가가 하락할 때까지 실질금리를 높은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총수요를 줄이는 정부의 지출 삭감 및 세금 인상 또한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재정안정) 바젤 III⁸⁸⁾ 시행 등 관리·감독 강화, 은행과 비은행 금융 부문의 관리·감독 격차 해소, 선제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사용 등을 실시하고 잠재적인 은행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재건해야 함
- (취약계층 보호 및 재정완충장치 재구축) 예산의 여력과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채 구조조정 및 중기 재정건전화 필요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 조치를 실시하면서 에너지 가격 보조금과 같이 특정 타겟이 없는 광범위한 지원은 단계적인 폐지 필요
- (개발도상국 및 저소득국의 자금압박 완화) 단기 차입 비용을 낮추고 부채위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G20 프레임워크 및 세계국채원탁회의(Global Sovereign Debt Roundtable)를 통한 부채 해결을 위한 조정 필요
- (기후변화의 회복탄력성 및 공급 강화) 노동시장 완화 및 산업 정책의 개혁은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 공급 및 탈탄소화 목표에 매우 중요

표 2-II-2 2023년 7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

(단위: %)

국가	추정		전망		2023년 4월 전망대비 ¹⁾	
	2021	2022	2023	2024	2023	2024
세계 경제	6.3	3.5	3.0	3.0	0.2	0.0
선진국	5.4	2.7	1.5	1.4	0.2	0.0
미국	5.9	2.1	1.8	1.0	0.2	-0.1
유로존	5.3	3.5	0.9	1.5	0.1	0.1
독일	2.6	1.8	-0.3	1.3	-0.2	0.2
프랑스	6.4	2.5	0.8	1.3	0.1	0.0
이탈리아	7.0	3.7	1.1	0.9	0.4	0.1
스페인	5.5	5.5	2.5	2.0	1.0	0.0
일본	2.2	1.0	1.4	1.0	0.1	0.0
영국	7.6	4.1	0.4	1.0	0.7	0.0
캐나다	5.0	3.4	14.7	1.4	0.2	-0.1
그 외 선진국 ²⁾	5.5	2.7	2.0	2.3	0.2	0.1
한국	4.3	2.6	1.4	2.4	-0.1	0.0
신흥개도국	6.8	4.0	4.0	4.1	0.1	-0.1

88)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확정된 신국제은행자본규제로 은행재무건전성 기준이 되며 자본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를 골자로 함

표 2-II-2 의 계속

(단위: %)

국가	추정		전망		2023년 4월 전망대비 ¹⁾	
	2021	2022	2023	2024	2023	2024
아시아 신흥개도국	7.5	4.5	5.3	5.0	0.0	-0.1
중국	8.4	3.0	5.2	4.5	0.0	0.0
인도 ³⁾	9.1	7.2	6.1	6.3	0.2	0.0
유럽 신흥개도국	7.3	0.8	1.8	2.2	0.6	-0.3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7.0	3.9	1.9	2.2	0.3	0.0
중동 및 중앙 아시아	4.4	5.4	2.5	3.2	-0.4	-0.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7	3.9	3.4	4.1	-0.1	-0.1
세계무역(재화 및 서비스)⁴⁾	10.7	5.2	2.0	3.7	-0.4	0.2
선진국	9.9	6.1	2.3	3.2	-0.1	0.3
신흥개도국	12.2	3.7	1.5	4.5	-0.9	-0.2
원자재 가격(미 달러)						
오일 ⁵⁾	65.8	39.2	-20.7	-6.2	3.4	-0.4
비연료	26.7	1.9	-4.8	-1.4	-2.0	-0.4
세계소비자물가⁶⁾	4.7	8.7	6.8	5.2	-0.2	0.3
선진국 ⁷⁾	3.1	7.3	4.7	2.8	0.0	0.2
신흥개도국 ⁶⁾	5.9	9.8	8.3	6.8	-0.3	0.3

주: 1. 실질실희환율은 2023. 5. 2.~2023. 5. 20.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며, 경제 규모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나열되고 집계된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에 따라 조정

1) 현재 및 2023년 4월 WEO 전망에 대한 반올림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이며, 2023년 4월 WEO 전망관련 업데이트된 국가는 구매력 평가 가중치로 측정된 세계 GDP의 약 90%를 차지

2) G7(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및 유로존 국가 제외

3) 인도의 데이터 및 전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2022-23 회계연도는 2022년 열에 표시. 인도의 성장 전망은 역년을 기준으로 2023년 6.6%, 2024년 5.8%

4) 수출 및 수입 성장률의 단순 평균.

5) UK Brent, Dubai Fateh 및 West Texas Intermediate 원유 가격의 단순 평균치.

선물시장(2023. 6. 1. 기준) 기준 배럴당 미국달러 평균 유가는 2023년 \$76.43, 2024년 \$71.68

6) 베네수엘라 제외

7) 물가상승률: 유로존 2023년 5.2%, 2024년 2.8%, 일본 2023년 3.4%, 2024년 2.7%, 미국 2023년 4.4%, 2024년 2.8%

자료: IMF,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23, July, p. 4, Table 1. (한국수치는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Update/July/English/WEOJuly2023update.ashx>, Real GDP Growth 항목 참고)

■ IMF, 세계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3. 10. 10.)⁸⁹⁾⁹⁰⁾

- (동향)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증가하는 지리경제학적 분열로 인해 세계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3.0%로 둔화
 -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식품 가격의 위기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한 전례 없는 긴축 통화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함에 따라 회복력이 감소
 - 경제 재개 및 반등, 작년 대비 감소한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활동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
- (전망) 2024년 세계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1%p 하락한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기적인 전망치는 3.1%로 과거(2000~2019) 평균인 3.8%를 하회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제반등은 예상보다 강하지만 유로존의 성장은 예상보다 약한 가운데 2022년 2.6%에서 2023년 1.5%, 2024년 1.4%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과 독일과 같은 제조업 국가에 비해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서비스 중심 경제가 크게 회복
 -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2022년 4.1%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4.0%로 둔화될 전망
 - 부동산 위기로 인한 역풍이 커지고 신뢰도가 악화되는 중국의 성장률을 반영하여 0.1%p 하향조정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1.4%, 2024년 2.2%로 7월 전망대비 각각 0.0%p, 0.2%p 하향조정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는 2023년 5.9%, 2024년 4.8%, 2025년 3.6%~ 3.9%까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점진적 이기는 하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위험) 심각한 금융불안은 지난 4월 이후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하방위험이 우세

89)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WEO/2023/October/English/text.ashx>

90) IMF Blog, "Resilient Global Economy Still Limping Along, With Growing Divergences," 2023. 10. 10.,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0/10/resilient-global-economy-still-limping-along-with-growing-divergences>, 검색일자: 2023. 10. 16.

- 스위스와 미국의 부채한도(debt ceiling)에 대한 억제조치로 금융불안은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는 글로벌 파급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세계 경제에 주요한 위협이며, 부동산 개발업체의 구조조정, 금융안정성 유지, 공공재정의 부담해결 등이 필요
- 원자재가격의 변동성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광물을 포함한 상품가격의 지역 간 격차 역시 심화
 - 6월 이후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일부 비회원국) 국가의 공급 감소로 인해 유가는 약 25% 상승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으로 식량가격은 계속 상승
- 근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 물가 기대치는 목표치를 훨씬 상회
 - 미국 달러 가치의 증가는 신흥시장의 자본 유출을 촉발하며 차입 비용과 부채 위험을 증가시킴
- (정책권고)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을 지원하고 재정여력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와 지리경제학적 분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조치가 필요
 - 긴축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나 디스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단기 물가 기대치가 하락하여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유지 필요
 - 모든 국가의 재정정책은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재정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구조개혁이 필요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재정여력 축소, 부채 취약성 증가, 저성장 및 고금리 등으로 인해 중장기전망이 취약하므로, 외부 부문, 거버넌스 등의 구조적 개혁 필요
 - 세계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 및 발전을 저해하는 지정학적 분열을 제한하고 다자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경제성장 결과의 달성이 가능함

표 2-II-3 2023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세계경제	3.5	3.0	2.9	0.0	-0.1	0.2	-0.1
선진국	2.6	1.5	1.4	0.0	0.0	0.2	0.0
미국	2.1	2.1	1.5	0.3	0.5	0.5	0.4
유로지역	3.3	0.7	1.2	-0.2	-0.3	-0.1	-0.2
독일	1.8	-0.5	0.9	-0.2	-0.4	-0.4	-0.2
프랑스	2.5	1.0	1.3	0.2	0.0	0.3	0.0
이탈리아 ²⁾	3.7	0.7	0.7	-0.4	-0.2	0.0	-0.1
스페인	5.8	2.5	1.7	0.0	-0.3	1.0	-0.3
일본	1.0	2.0	1.0	0.6	0.0	0.7	0.0
영국 ²⁾	4.1	0.5	0.6	0.1	-0.4	0.8	-0.4
캐나다	3.4	1.3	1.6	-0.4	0.2	-0.2	0.1
기타선진국 ³⁾	2.6	1.8	2.2	-0.2	-0.1	0.0	0.0
한국	2.6	1.4	2.2	0.0	-0.2	-0.1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4.0	4.0	0.0	-0.1	0.1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아시아	4.5	5.2	4.8	-0.1	-0.2	-0.1	-0.3
중국	3.0	5.0	4.2	-0.2	-0.3	-0.2	-0.3
인도 ⁴⁾	7.2	6.3	6.3	0.2	0.0	0.4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유럽	0.8	2.4	2.2	0.6	0.0	1.2	-0.3
러시아	-2.1	2.2	1.1	0.7	-0.2	1.5	-0.2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4.1	2.3	2.3	0.4	0.1	0.7	0.1
유럽연합	3.6	0.7	1.5	-0.3	-0.2	0.0	-0.1
아세안-5 ⁵⁾	5.5	4.2	4.5	-0.4	0.0	-0.3	-0.1
저소득 개도국	5.2	4.0	5.1	-0.5	-0.1	-0.7	-0.3
세계 무역(재화 및 서비스)	5.1	0.9	3.5	-1.1	-0.2	-1.5	0.0
수입							
선진국	6.7	0.1	3.0	-1.8	-0.1	-1.7	0.3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3.2	1.7	4.4	-0.2	-0.5	-1.6	-0.7
수출							
선진국	5.3	1.8	3.1	-1.0	-0.1	-1.2	0.0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4.1	-0.1	4.2	-1.3	0.1	-1.7	-0.1

표 2-II-3 의 계속

(단위: %, %p)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7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년 4월 전망 대비 차이 ¹⁾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원자재 가격 (미 달러)							
오일 ⁶⁾	39.2	-16.5	-0.7	4.2	5.5	7.6	5.1
비연료(세계 원자재 수입 가중치에 기반한 평균)	7.9	-6.3	-2.7	-1.5	-1.3	-3.5	-1.7
소비자물가⁷⁾	8.7	6.9	5.8	0.1	0.6	-0.1	0.9
선진국 ⁸⁾	7.3	4.6	3.0	-0.1	0.2	-0.1	0.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⁷⁾	9.8	8.5	7.8	0.2	1.0	-0.1	1.3

주: 1. 실질실효환율은 2023. 7. 25.~2023. 8. 22. 사이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순서는 경제규모순으로 나열. 분기별 데이터는 계절조정.

1) 2023년 4월 WEO 업데이트 및 2023년 7월 WEO 예측에 대해 반올림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 차이

2) 통계 부록의 “국가 정보” 섹션에서 이탈리아와 영국에 대한 국가별 정보 참조

3) G7과 유로존 지역 제외

4) 인도의 데이터와 전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제시되며, 2011년 이후의 GDP는 2011-12 회계연도를 기준연도로 함

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6) 영국 브렌트유(Brent), 두바이 파테유(Fateh),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22년 배럴당 평균 가격은 96.36달러. 선물 시장 기준으로 가정한 가격은 2023년 80.49달러, 2024년 \$79.92달러.

7) 베네수엘라 제외

8) 2023년과 2024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유로지역 5.6%, 3.3%, 일본 3.2%, 2.9%, 미국 4.1%, 2.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2023. p. 12, Table1.1.

한국의 수치는 한국 수치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2023, Table A2. 참고하여 재계산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2023. 10. 12.)⁹¹⁾⁹²⁾

- (동향) 많은 국가들이 높은 부채 및 이자율, 저조한 성장 전망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 거시경제적 위험도 동시에 증가
 - 모든 국가에서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 (Policy goals)-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정치적 증세 한계선 (Political red lines) 사이의 트릴레마가 심각

91)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3,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fiscal-monitor/2023/October/English/text.ashx>

92) IMF, “Introductory Remarks to the Fiscal Monitor Press Conference,” 2023. 10.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1/introductory-remarks-to-the-fiscal-monitor-press-conference-vitor-gaspar>, 검색일자: 2023. 10. 23.

-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차입비용과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예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과세에 대한 혐오로 인한 정치적 한계가 재정적 균형의 트릴레마로 작용
- (채무 및 재정적자) 총채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GDP 대비 채무비율이 2023~2028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매년 1%p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빠른 속도
 - 세계 채무상승 추세는 주요 경제(미국과 중국)에서의 빠른 채무 증가와 전 세계적 성장 둔화, 실질 이자율 상승, 차입비용 증가 등에 기인
 - 저소득 국가에서는 이자 비용과 공공 채무에 대한 평가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즉각적인 재정압박은 없지만 추후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지속 불가능한 재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몇 국가에서는 공공 투자 증가, 재생 에너지 보조금 등 지출 조치에 크게 의존하는 배출 감소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온실가스 대량 배출 국가의 경우 공공채무를 GDP의 40~50%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공공채무 증가 예상 시나리오에 따르면 선진국은 2050년까지 GDP의 10~15%(GDP 대비 재정적자의 경우 연간 0.4%p씩) 증가하고 신흥시장국의 증가율 역시 2050년까지 GDP의 약 15%로 선진국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
 - 탄소 가격제의 시행 지연은 매년 연간 GDP의 0.8~2.0%의 추가 공공채무 증가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높은 채무와 이자비용 상승 등에 직면한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 특히 더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
 - 세계가 넷제로(net-zero) 달성 궤도에 진입하면 화석연료 생산국의 원자재 수입도 급격히 감소하여 공공 재정 및 경제 다각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 (정책권고) 단일 정책만으로는 기후 목표를 완전히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 실용성, 정치적 타당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
 - 탄소 가격제와 더불어 저탄소 기술의 혁신 촉진, 시장 실패 및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 면제, 녹색 보조금, 규제 표준 등 다른 수단으로의 보완 필요
 - 거시재정적 관점에서 정책은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탄소 가격제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탄소 가격제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 공유는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약 50개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도입을 고려 중인 23개 이상의 국가에 도움을 줌

- 또한 기업은 탈탄소화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부는 기업이 녹색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일부 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도 녹색전환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인센티브는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녹색 보조금은 의도치 않은 왜곡과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을 야기하므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일치해야 함
- IMF의 연구결과는 저탄소 기술의 지식 이전 및 확산, 지출 효율화, 수익 증대, 민간 부문에서의 자금 조달과 외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IMF 역시 회복 및 지속가능성 기금(Resilience and Substantiality Trust)을 통해 장기자금조달을 제공
 - 정책과 기후 변화의 비선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기후 조치를 부채 지속가능성 분석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표 2-II-4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재 정 수 지							
세계경제	-3.3	-5.2	-4.4	-4.2	-3.9	-3.8	-4.0
G20 선진국	-4.0	-6.1	-5.3	-5.0	-4.7	-4.5	-4.7
캐나다	-0.8	-0.7	-0.6	-0.5	-0.4	-0.3	-0.2
유로지역	-3.6	-3.4	-2.7	-2.3	-2.1	-2.1	-2.1
프랑스	-4.8	-4.9	-4.5	-4.0	-3.6	-3.5	-3.6
독일	-2.5	-2.9	-1.7	-0.9	-0.6	-0.5	-0.5
이탈리아	-8.0	-5.0	-4.0	-3.3	-2.7	-2.7	-2.5
스페인 ¹⁾	-4.7	-3.9	-3.0	-3.4	-3.4	-3.4	-3.4
일본	-6.9	-5.6	-3.7	-2.6	-2.7	-2.9	-3.3
영국	-5.5	-4.5	-3.9	-3.7	-3.7	-3.5	-3.5
미국 ²⁾	-3.7	-8.2	-7.4	-7.4	-7.0	-6.7	-7.0
한국	-1.6	-1.2	-0.9	-0.3	-0.2	0.0	0.0
신흥시장국 및 중진국	-5.1	-5.6	-5.5	-5.3	-5.2	-5.2	-5.3

표 2-II-4 의 계속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채 무							
세계경제 ³⁾	112.3	112.1	112.7	113.8	114.6	115.3	116.3
G20 선진국	122.6	122.7	124.0	125.5	126.6	127.6	129.0
캐나다 ⁴⁾	107.4	106.4	103.3	100.6	98.6	96.6	94.7
유로지역	91.0	89.6	88.3	87.1	86.1	85.5	84.9
프랑스	111.8	110.0	110.5	110.4	110.4	110.5	110.8
독일	66.1	65.9	64.0	61.8	59.9	58.6	57.5
이탈리아	144.4	143.7	143.2	142.8	141.9	141.0	140.1
스페인	111.6	107.3	104.7	103.9	103.8	103.8	103.8
일본	260.1	255.2	251.9	250.6	251.1	251.9	252.8
영국	101.9	104.1	105.9	107.3	108.5	108.2	108.2
미국 ⁴⁾	121.3	123.3	126.9	130.3	132.9	135.1	137.5
한국	53.8	54.3	55.6	56.5	57.1	57.5	57.9
인흥시장국 및 중진국	65.3	68.3	70.1	72.3	74.3	76.2	78.1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채무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 계정 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채무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채무 불포함되며, EU에서 발행하여 회원국에게 제공되는 용자는 회원국의 채무 데이터 및 지역별 집계에도 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 채무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채무를 제외하도록 조정

자료: IMF, *Fiscal Monitor*, October 2023, 2023. Table A1, A7, A9, A15 참고하여 재구성

■ IMF,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Asia and Pacific) 발표(2023. 10. 18.)⁹³⁾

- (동향)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3.9%에서 2023년 4.6%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93)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 2023, 2023., 2023. 10. 18.,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REO/APD/2023/October/English/text.ashx>, 검색일자: 2023. 10. 19.

IMF Blog, "Asia Continues to Fuel Global Growth, but Economic Momentum is Slowing," 2023. 10. 13.,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10/13/asia-continues-to-fuel-global-growth-but-economic-momentum-is-slowing>., 검색일자: 2023. 10. 19.

- 2023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은 중국의 경제 재개와 일본 및 인도의 상반기 반등에 기인하며, 경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부문이 강세를 띠
 -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인 1.5%에서 1.4%로 하향조정 되었으며, 이는 반도체 주기(semiconducto cycle) 지연과 중국의 부동산위기 영향, 글로벌 수요 약화 등에 기인
 - 일본의 경제는 여전히 확장적인 재정기조 및 내수 증가로 2023년 성장률이 기존 1.4%에서 2.0%로 상향조정
- (전망) 2024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 4월 4.4%에서 4.2%로 하향 조정
 - 2024년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대외 수요 약화와 중국의 부동산 투자 둔화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하향 조정됨
 - 중국의 경기호조는 부동산 부분의 침체 심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2024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치보다 0.3%p 하향 조정된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년 말까지 각국의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이내로 하락할 전망⁹⁴⁾
- (위험)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은 단기적으로 하방위험에 치우쳐 있으나, 제조업 및 설비 투자, 빠른 기술주기 전환,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상방위험 역시 상존
 - 중국의 주택시장 위기 심화 및 장기화의 경우 교역 상대국에게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국이나 역내의 급격한 금융 긴축은 레버리지가 높은 경제 및 부문의 성장을 저해
 - 글로벌 금융의 긴축기조는 자본의 유출로 이어지고 아시아 환율에 압력을 가해 물가상승 감소 과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추가 급등과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해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
 -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선진경제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함에 따라 물가상승의 압력으로 근원물가의 상승세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신흥시장 및 저소득국은 필수식량 가격의 변동성에 취약

94)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Oct 2023, 2023, p. 6, Figure 1. 7. Inflation Outlook(Panel 1. Expected Inflation)

-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들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거나 근접해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 기온상승, 자연 재해 등 기후위기에 따른 비용이 상승
 -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증가는 취약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식량 안보의 위협까지 초래
- (정책권고) 장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국가들은 공공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다자간 및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여 지정학적 분열의 영향을 최소화
 - 중앙은행은 물가상승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 감독 강화, 시스템적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함께 필요
 - 중기재정 프레임워크를 통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여력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블록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중기 전망에 매우 중요
 - 비관세 무역 장벽을 낮추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개혁은 더 많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수적

02 연례협의

■ IMF 집행위원회, 영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7. 11.)⁹⁵⁾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긴축 통화 및 재정정책과 교역조건 악화의 영향으로 2023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0.4%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물가상승세 둔화로 실질소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1%로 증가할 전망

95)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보도 자료, 2023. 7.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10/pr23259-imf-executive-board-concludes-2023-article-iv-consultation-with-the-united-kingdom>, 검색일자: 2023. 7. 18.

- 2022년 9월 이후 시장압력은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조치와 신중한 예산 편성으로 완화되었으며, 2023년 2월 채택한 윈저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⁹⁶⁾를 통해 브렉시트 이후의 불확실성이 감소
 -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50bps 인상
- 에너지가격 하락 및 경기침체로 2023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은 5.2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중반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지속되는 물가조정 정책의 강화로 인한 역성장 심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거시금융 파급효과 등의 위험을 함께 갖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물가상승 방지를 위해서 재정 정책이 통화정책을 지원하고 부채안정화, 세입강화 등 재정체계의 강화가 필요
 -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주요 공공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금융 안정성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며, 은행 유동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강조
- 2025년과 2026년에는 통화 및 금융시장 완화에 따라 평균 약 2%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이후 성장률은 중기적으로 1.5%에 안착할 전망

표 2-II-5 **영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4.1	0.4	1.0
실업률(Q4 평균)	3.7	3.9	4.2
물가상승률(Inflation, 연평균)	9.1	7.9	3.7
공공부문 종합수지(Public sector overall balance, GDP 대비 %)	-6.2	-4.9	-3.8
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¹⁾	89.0	92.2	94.4
경상수지(GDP 대비 %)	-3.8	-3.8	-3.7

주: 1. 2023, 2024는 추정치

1) 공공부문의 총 채무는 일반정부 및 비금융 공기업이 보유한 유동자산을 뺀 값이며, 영국 중앙은행의 운영은 포함됨

출처: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2023. 7. 11.

96) 2023년 영국과 유럽연합이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발표한 브렉시트의 후속 합의안으로 북아일랜드가 영국 본섬과 교역할 때 발생하는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EU의 새로운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북아일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스토몬트)가 긴급 제동을 걸고 영국 정부가 해당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국은 북아일랜드에서의 부가가치세(VAT)와 주류세,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갖음

■ IMF 집행위원회, 독일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7. 17.)⁹⁷⁾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2023년 독일의 실질 GDP성장률은 에너지가격 상승과 긴축기조로 인해 마이너스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2025년에는 성장 모멘텀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전망
 - 건전한 금융 시스템과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이후 실시한 가스절약 및 에너지 확보 노력을 통해 독일의 경제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며, 물가는 에너지가격 하락과 긴축 재정정책으로 점차 하락할 전망
 - 중기적인 실질 GDP 성장률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성 및 노동공급의 증가가 없다면 1%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독일의 불확실성은 비정상적으로 높고 상방 및 하방위험이 모두 상존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인구고령화 수용 및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재정여력 창출이 필요
 - 근원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은 수십 년간 다른 선진국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현상이며,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시 추가적인 긴축통화정책이 필요하고 글로벌 시장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여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재정적 여력을 만들기 위해 지출개혁과 추가 세수 동원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 재정규칙에 따른 부채 억제 장치(Debt brake rule)의 개정도 고려할 필요

표 2-II-6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1.8	-0.3	1.3
실업률(Q4 평균)	3.1	3.3	3.3
물가상승률(CPI, 기간평균)	8.7	5.8	2.6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	-2.7	-3.0	-1.5
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66.2	66.4	65.0
경상수지(GDP 대비 %)	4.2	5.4	5.7

주: 2023, 2024는 추정치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Germany," 2023. 7. 17.

97)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Kingdom," 보도 자료, 2023. 7. 1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14/pr23264-germany-imf-executive-board-concludes-2023-article-iv-consultation-with-germany>, 검색일자: 2023. 7. 20.

■ IMF 집행위원회, 유로지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7. 19.)⁹⁸⁾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유로지역 경제는 실질소득 증가, 외부 수요 및 공급계약의 완화 등으로 2023~2024년 점진적으로 성장할 전망
 -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무역위기 속에서 신속한 정책대응과 서비스업의 강력한 반등에 힘입어 높은 회복력을 보임
 - 물가는 공급확대와 수요 감소에 따라 점차 하락하겠지만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
 - 불안정한 금융시장은 신용 축소 및 위험 회피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감소한 외부수요는 성장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및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경제 거버넌스의 개혁과 중기재정정책 수립의 신속한 합의를 독려
 - 구조적 개혁과 투자가 잠재 성장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및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방법이며, 에너지가격 지원조치 중단, 횡재수입(revenue windfalls) 저축, 고부채 국가의 재정 지속가능성 보호를 위한 적자 감소 등의 노력을 강조

표 2-II-7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실질 GDP(연평균)	3.5	0.9	1.5	1.8	1.7	1.4	1.3
실업률(Q4 평균)	6.7	6.8	6.7	6.6	6.5	6.5	6.5
물가상승률(Inflation, 연평균)	8.4	5.2	2.8	2.1	2.0	1.9	1.9
재정수지(Fiscal balance, GDP 대비 %)	-3.6	-3.5	-2.7	-2.3	-2.1	-2.0	-2.0
채무(Public debt, GDP 대비 %)	91.2	89.4	88.2	87.1	86.3	85.6	85.1
수출(Exports) ¹⁾	7.2	3.4	3.9	3.5	3.4	3.2	3.1
수입(Imports) ¹⁾	8.3	2.7	4.2	3.6	3.5	3.3	3.3

주: 1. IMF 국가 팀의 최신 예측 집계를 기반으로 한 추정치임

1) 유로지역 내 무역 포함

출처: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Euro Area," 2023. 7. 19.

98)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Euro Area," 보도자료, 2023. 7. 19.,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18/pr23268-euro-area-imf-executive-board-concludes-2023-article-iv-consultation>, 검색일자: 2023. 7. 24.

■ IMF 집행위원회, 브라질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7. 31.)⁹⁹⁾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022년 2.9%에서 2023년 2.1%로 감소하고, 중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¹⁰⁰⁾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3년 초에는 농업 생산량이 성장을 뒷받침하였으나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은 부진하였으며,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감소로 추가적인 성장 둔화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GDP의 약 2.3%까지 줄어들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2023년 말 5.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기대치 역시 목표를 상회
 - 급격한 국제 경기 둔화 및 긴축금융, 원자재 가격의 큰 변동성, 재정의 불확실성과 물가상승의 지속 등이 하방위험으로 존재
 - IMF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녹색 경제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정건전화 및 물가안정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장려
 - 간접세 및 직접세 개혁, 지출 합리화, 추가적인 세입 동원 등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선 지출을 위한 재정여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생산성 향상, 녹색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춘 브라질의 구조 개혁 우선순위를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 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브라질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99) IMF 집행위원회,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razil," 2023. 7. 3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31/pr23280-brazil-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8. 22.

100) 2024년 1.2%, 2025년 1.7%, 2026년 1.9%,

표 2-II-8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2.9	2.1	1.2
실업률(Q4 평균) ¹⁾	9.3	9.5	9.4
물가상승률(Inflation, 연평균)	9.3	5.1	4.6
중앙정부 기초수지(GDP 대비 %) ²⁾	0.5	-1.3	-0.8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72.9	77.1	79.3
경상수지(GDP 대비 %)	-3.0	-2.3	-2.5

주: 1. 2023, 2024는 추정치

1) 2022년 실업률은 3월, 6월, 9월, 12월의 평균치

2) 연방정부, 중앙은행, 사회보장제도(INSS) 포함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razil," 2023. 7. 31.

■ IMF, 연례협의를 위한 한국 방문 및 예비 조사 결과 발표(2023. 9. 6.)¹⁰¹⁾

- 한국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하고, 물가상승의 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물가상승의 문제와 급격한 성장둔화에 직면해 있으나 반도체 부문이 하반기부터 회복되면서 경제가 개선될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였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 현재 긴축 통화 및 재정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높은 수준의 민간부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중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
 - 주택시장 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드러난 금융부문의 취약성은 관리가능한 수준이며,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수준 이상 금리 유지가 필요
 - 구조개혁 우선순위에는 재정준칙 기반 재정체계 구축, 연금시스템 개혁, 성별격차 해소, 기후정책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함

101) IMF, "IMF Staff Completes 2023 Article IV Mission to Republic of Korea," 2023. 9. 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9/05/pr23304-republic-of-korea-imf-staff-completes-2023-article-iv-mission>, 검색일자: 2023. 9. 25.

■ IMF 집행위원회,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11. 16.)¹⁰²⁾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한국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 국내 노동시장의 호조, 주택시장의 안정 등으로 2023년 1.4%, 2024년 2.2% 성장할 전망
 - 반도체 경기의 점진적인 회복, 국내 주택시장 안정, 중국인 단체관광 등 관광산업의 회복으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글로벌 수요 및 국내 수요의 약화와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장기적으로 높은 글로벌 금리로 2022년 중반부터 성장세가 감소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띠
 - 물가상승률은 2024년 말까지 당국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는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은 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경제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하방위험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
 - 주요국의 성장 둔화와 긴축 통화 정책,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 금융불안, 국내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위험으로 작용하며, 단기 전망에는 반도체 주기의 반등과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결정적으로 작용
 - IMF는 단기적으로 공공 부채의 증가를 제한하고 디스인플레이션을 위한 정책 조합과 상당기간 동안의 긴축기조 유지, 규제·감독을 통한 재정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강조
 -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준칙 기반의 프레임워크, 연금 개혁, 비은행 금융 기관(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NBF)의 건전성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중요성 등을 강조
 - 현재 가계부채가 높고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으므로 장기주택자금 대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강화와 주택 및 금융 시장 안정 조치가 필요

102) IMF 집행위원회,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Republic of Korea," 2023. 11. 16.,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1/16/pr23397-republic-of-korea-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11. 20.

- 노동 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잠재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민정책 고려 필요
- 개방적인 무역 환경과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제1차 국가 기본 계획과 더불어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권고

표 2-II-9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연평균)	2.6	1.4	2.2
실업률	2.9	2.7	3.2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5.1	3.6	2.4
재정수지(GDP 대비 %) ¹⁾	-3.0	-1.8	-1.7
중앙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47.8	49.3	50.6
경상수지(GDP 대비 %)	1.8	1.3	2.6

주: 2023, 2024년은 예측치

자료: IMF, "STAFF REPORT FOR THE 2023ARTICLE IV CONSULTATION," 2023, pp. 39~41 편집

■ IMF 집행위원회, 벨기에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12. 8.)¹⁰³⁾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벨기에는 코로나19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금융 부문의 심각한 순환적, 구조적 도전과제와 전망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실질 GDP 증가율이 2023년 1.4%, 2024년 1.0%로 점차 둔화될 전망
 - 대부분의 유로지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근원물가지수는 여전히 높고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공공 부채와 구조적 재정 적자가 더욱 증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10.3%에서 2023년 2.5%까지 하락하였으나 2024년 4.4%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에너지 가격 지원 조치의 완화와 기저효과에 기인함

103)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elgium," 2023. 12.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2/08/pr23429-belgium-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12. 12.

- 인구 노령화와 기후 변화는 공공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참여율은 잠재성장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
- 부채감소 등 재정 건전화와 함께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생산성과 잠재성장력을 높이고 녹색 전환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
-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의료 분야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조세징수 개선 및 조세 행정 강화 등 조세개혁의 필요성 강조
-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시스템의 완충장치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하였으며, 금융부문의 위기관리 및 감독, 시스템적 위험 평가 강화를 통해 금융 정책 프레임워크의 보강 필요

표 2-II-10 벨기에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 증가율(연평균)	3.0	1.4	1.0
실업률	5.6	5.6	5.6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10.3	2.5	4.4
구조적재정수지(GDP 대비 %)	-4.1	-4.6	-4.4
중앙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104.3	105.5	104.7
경상수지(GDP 대비 %)	-1.0	-0.9	-0.3

주: 2023, 2024년은 예측치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Belgium," 2023. 12. 8.

■ IMF 집행위원회, 아일랜드와의 연례협의 결과 발표(2023. 12. 15.)¹⁰⁴⁾

- ※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 아일랜드 경제는 코로나19와 국내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회복력을 보였으며, 실질 경제성장률이 2023년 1.5%에서 2024년 2.4%로 더욱 강화될 전망
- 조정국민총소득(Modified Gross National Income)을 기반으로 측정된 국내 경제는 점차 완화되어 실질 GNI 증가율이 2022년 6.7%에서 2023~2024년 2.5%를

104)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reland," 2023. 12. 15.,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2/14/pr23446-ireland-imf-exec-board-concludes-2023-art-iv-consult>, 검색일자: 2023. 12. 19.

기록하고 중기적으로 2.25% 수렴할 것으로 전망

- 금융부문은 높은 회복력을 띠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2025년 후반 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대외수요 약화, 원자재 가격의 재상승, 전쟁 심화 등 외부 위협이 경제전망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고도로 개방된 아일랜드 경제는 심화되는 지경학적 분열과 국제 법인세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투자 지원 및 투자 효율성 강화, 예산의 적시 집행, 조세기반 확대 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구조개혁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녹색전환 가속화에도 기여할 것
-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소득세 개선, 부가가치세 단순화 등 세입 확대 및 다양화 필요
- 긴축된 금융 상황,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 금융안정성 위협에 대한 경계와 국내 은행의 신용 및 유동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형 금융(market-based finance, MBF) 부문과 아일랜드 경제의 연관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

표 2-II-11 아일랜드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2022	2023	2024
실질 GDP 증가율(연평균)	9.4	1.5	2.7
실질 GNI 증가율(연평균)	6.7	2.5	2.5
실업률	4.5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8.1	5.3	3.2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GDP 대비 %)	1.8	1.9	1.6
중앙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44.4	40.4	37.4
경상수지(GDP 대비 %)	10.8	9.8	9.0

주: 2023, 2024년은 예측치

자료: IMF,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Ireland," 2023. 12. 15.

03 금융지원

- IMF 집행위원회, 파키스탄에 30억달러 규모의 SBA(Stand-By Arrangement)협정¹⁰⁵⁾ 승인(2023. 7. 12.)¹⁰⁶⁾
 - IMF 집행위원회는 파키스탄의 경제 안정화 및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9개월간 22억 5천만SDR(30억달러, 쿼타의 111%)을 지급하는 협정을 승인
 - 이번 SBA는 국내 및 외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경제를 안정시키고 추가적인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즉각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즉시 인출 가능한 금액은 8억 9,400만SDR(약 12억달러)
 -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한 대외 부채, 코로나19 그리고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홍수 등이 겹치면서 2023회계연도 경제가 더욱 악화
 - 파키스탄에 필요한 주요 사회지출을 유지하면서 재정조정을 통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2024회계연도 예산구현에 초점을 맞춰 예정
 -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 및 외환부족 해소, 물가상승 방지를 목표로 하는 긴축 통화정책, 공기업 거버넌스 및 기후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구조적개혁을 지원
- IMF 집행위원회, 온두라스와 3년 확대신용기금제도 및 확장신용지원금융의 연장협정 합의(2023. 7. 12.)¹⁰⁷⁾
 - IMF는 온두라스의 경제 개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36개월간 8억 3천만달러 규모를 지원하는 확대신용기금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와 확장신용지원금융(Extended Credit Facility, ECF)¹⁰⁸⁾ 협정에 합의

105) 쿼타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인출로 IMF와 협약을 맺어 신용을 인출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신용공여조건 및 관련 프로그램을 이행

106) IMF,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US\$3 billion Stand-By Arrangement for Pakistan," 2023. 7. 12.,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7/12/pr23261-pakistan-imf-exec-board-approves-us3bil-sba>, 검색일자: 2023. 7. 21.

107) IMF 집행위원회, "IMF and Honduras Reach Staff-Level Agreement on a Three-Year Extended Credit/Fund Facility Arrangement," 2023. 8.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8/11/pr23287-imf-and-honduras-reach-staff-level-agreement>, 검색일자: 2023. 8. 24.

108) EFF: 일반적인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적 용자제도, 2023년 3월 기준 약정기간 동안의 누적 한도는 쿼타의 600%

ECF: 저소득국가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 온두라스 경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둔화를 포함한 국내 및 외부의 여러 충격에 대해 경제 회복력을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회구조적 문제에 직면
- IMF가 지원하는 온두라스의 개혁 프로그램은 긴급한 사회 지출 및 투자 요구를 해결하는 동시에 거시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여력을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혁의 핵심은 다음 네가지임
 -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부채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지속적인 물가상승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 IMF 기술지원을 통해 통화 및 외환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
 - (재정여력 확보) 투명한 지출 집행을 방해하는 신탁 자금 제거, 소득세 면제 축소 등 조세 및 관세 강화와 예산의 투명성 강화
 - (금융 안정성 보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transmission mechanism) 기능 지속 강화,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국고채 정기 발행 재개, 중기 부채 전략 마련, 금융시스템 모니터링 등
 - (거버넌스 및 경제 회복력 강화) 국제 표준에 맞춘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강화, 거버넌스와 투명성 개선을 위한 공공정보 비밀법 폐지와 전국적 기업 등록, 공무원의 전자 자산신고 시스템 구현

■ IMF 총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023년 연차총회 개최 발표 및 모로코에 13억달러 융자 지원(2023. 9. 18.)¹⁰⁹⁾¹¹⁰⁾

-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세계은행 총재 및 모로코 경제재정부 장관과 함께 2023년 IMF 연차총회를 예정대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하기로 발표
 - 9월 8일 모로코에서 지진발생 이후 IMF는 세계은행, 모로코 당국 및 전문가팀과 협력하여 구호 및 재건을 방해하지 않고 연차총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마라케시의 역량을 평가

109) IMF, "Statement by World Bank President Ajay Banga,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and Morocco's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adia Fettah Alaoui on the 2023 World Bank-IMF Annual Meetings," 2023. 9. 1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09/18/pr23316-statement-wb-president-imf-managing-director-morocco-minister-econfin-2023-annual-meetings>, 검색일자: 2023. 9. 22.

110) MAP, "Résilience climatique: Le FMI va accorder au Maroc un prêt de 1,3 MM de dollars(Kristalina Georgieva)," 2023. 9. 18., <https://www.mapnews.ma/fr/actualites/economie/r%C3%A9silience-climatique-le-fmi-va-accorder-au-maroc-un-pr%C3%AAt-de-13-mm-de-dollars> 검색일자:2023. 9. 26.

- 평가 결과, IMF와 세계은행은 모로코 상황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면서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마라케시에서 2023년 연차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
- 또한 모로코의 지진과 관련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13억달러 규모의 장기 용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모로코국영통신(Maghreb Agence Presse, MAP)¹¹¹⁾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로코와 장기자금 조달을 위한 IMF 직원수준의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며, IMF 집행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승인할 예정
- IMF, 세계은행(WB)과 함께 소말리아의 채무 45억달러 탕감 발표(2023. 12. 13.)¹¹²⁾
 - IMF 집행위원회와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는 소말리아에 대한 고채무빈곤국(HIPC) 채무구제 자격을 인정하여 총 45억달러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발표
 - 고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¹¹³⁾ 완료 이후 소말리아의 대외부채는 2018년 GDP의 64%에서 2023년 말 GDP의 6%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자원은 소말리아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
 - IMF(3억 4,320만달러), IDA(4억 4,850만달러), 아프리카개발기금(ADF)(1억 3,100만달러), 기타 다자간 채권자(5억 7,310만달러) 양자 및 상업 채권자(30억달러)를 통해 채무 탕감을 제공
 - 소말리아는 최소 1년 동안 빈곤 감소 전략 및 확대신용지원(Extended Credit Facility, ECF) 프로그램을 이행하여 건전한 거시 경제 관리 기록을 유지하였으며, IMF는 새로운 3개년 재정 협정을 통해 소말리아와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발표
 - 코로나19 대유행, 장기간의 심각한 가뭄, 식량 공급망 문제 및 가격에 대한 외부 영향, 안보 위험 등에도 불구하고 공공 재정 및 지출 관리, 국내 수입 개선 등 구조 개혁에 대한 꾸준한 진전을 보임

111) 1959년 설립되어 1973년 국유화된 모로코 왕국의 정부 소유 공식 통신사

112) IMF, "IMF and World Bank Announce US\$4.5 billion in Debt Relief for Somalia," 2023. 12. 13.,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2/13/pr23438-imf-and-world-bank-announce-us-4-5-billion-in-debt-relief-for-somalia>, 검색일자: 2023. 12. 18.

113) IMF와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빈곤국 부채탕감 프레임워크로, 채무국이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거시경제 조정과 구조개혁 및 사회정책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시행할 것을 전제로 부채탕감을 제공함. 소말리아는 HIPC이니셔티브 완료 지점에 도달한 37번째 국가

04 기타

■ IMF 블로그, ‘화석연료 보조금 7조달러로 급증’ 게시(2023. 8. 24.)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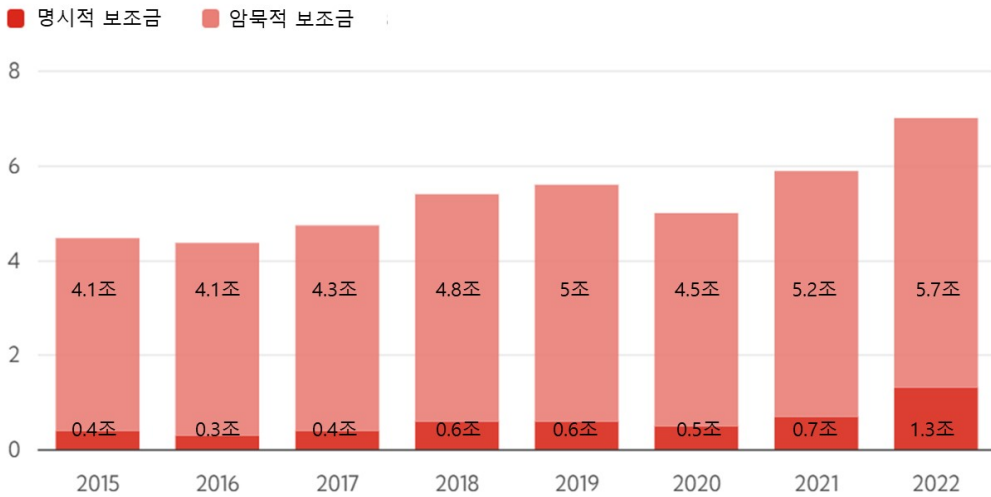
- IMF 연구진들은 2022년 화석연료 보조금이 7조달러로 급증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170개국) GDP의 7.1% 해당(의료부문 10.9%, 교육부문 4.3%)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회복과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명시적 보조금(화석연료 공급 비용에 대한 과소 청구)이 증가
 - 화석연료 가격 특히, 석탄 및 디젤에는 환경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의 대부분은 암묵적 보조금(implicit subsidies, 환경비용 과소 청구 및 소비세 감면) 형태이며,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소비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명시적 보조금의 규모는 2021~2022년 사이 1조 3천억달러로 약 2배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보조금은 지난 2년 동안 2조달러 증가[그림 2-II-1]
 - 연료 형태별 보조금은 석유 47%, 석탄 30%, 천연가스 18%, 전기 5%를 차지하고, 국가별로는 중국(2,235억달러), 미국(757억달러), 러시아(421억달러) 순으로 보조금 규모가 큼(한국 162억달러)¹¹⁵⁾
 -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환경과 정부의 재정여력 증가를 위해 명시적 및 암묵적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시기
 - 명시적 및 암묵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면 매년 정부 수입은 4조 4천억달러 증가하고,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상화할 것으로 분석

114) IMF Blog, “Fossil Fuel Subsidies Surged to Record \$7 Trillion,” 2023. 8. 24.,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3/08/24/fossil-fuel-subsidies-surged-to-record-7-trillion>, 검색일자: 2023. 8. 28.

115) Simon Black 외, “IMF Fossil Fuel Subsidies Data: 2023 Update,” IMF working paper, 2023, p. 17, p. 27.

그림 2-II-1 화석연료 보조금 추이

(단위: 달러)



주: 2019~2022는 연료 사용량에 따른 추정치

자료: IMF, "IMF Fossil Fuel Subsidies Data: 2023 Update," 2023.

■ IMF 총재, 2023 IMF-WB 연차총회에서 공동성명 및 빈곤감축 성장기금(Fundraising Targets for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1차 목표 달성 발표 (2023. 10. 18.)¹¹⁶⁾¹¹⁷⁾

- 2023 IMF-WB 연차총회에 참석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는 세계은행 총재, 모로코 경제재정부 장관, 모로코 중앙은행 총재과 함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세계는 성장과 개발, 일자리 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여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충격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2030년까지 절대빈곤 해소 목표 달성이 불투명

116) IMF, "Statement by World Bank President Ajay Banga,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 Morocco's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Nadia Fettah, and Bank Al-Maghrib Governor Abdellatif Jouahri on the Marrakech Principles for Global Cooperation," 2023. 10.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1/pr23345-statement-world-bank-imf-morocco-on-the-marrakech-principles-for-global-cooperation>, 검색일자: 2023. 10. 24.

117) IMF, "IMF Managing Director Kristalina Georgieva's Statement on the Achievement of Stage 1 Fundraising Targets for th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2023. 10. 14.,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0/14/pr23352-imf-managing-director-statement-achievement-stage-1-fundraising-targets-for-prgt>, 검색일자: 2023. 10. 24.

- 세계가 직면한 주요 위험에 대한 대응과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1.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 2. 회복력 구축, 3. 변혁적 개혁, 4. 글로벌협력 강화 및 현대화라는 마라케시 4대 방침을 발표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공공지출 효율화, 취약지 및 분쟁지역의 식량 및 에너지 문제 해결
 - (회복력 구축) 제도적 역량 강화, 건전한 거시경제를 위한 외부 안정성 유지, 대외 채무관리 강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자연재해 위험 개선
 - (변혁적 개혁) 녹색전환 가속화, 디지털 포용성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 보건시스템 강화,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 제공, 양성평등사회 구축
 - (글로벌협력 강화 및 현대화) 국제 통화 시스템 및 협약 강화, 다자간 무역체제 및 협력 강화
- 또한 IMF-WB 연차총회에서 2021년 7월 회원국들이 합의한 빈곤감축·성장기금(PRGT)의 기금 모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음을 발표
 - PRGT는 무이자 자금 조달을 통해 IMF가 저소득 국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연차총회를 앞두고 PRGT 대출을 위한 170억달러(126억 SDR) 및 보조금 지원 30억달러(23억SDR) 모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PRGT를 통한 무이자 대출은 5배 증가한 약 300억달러로 56개국이 혜택을 제공받았으며, 2024년까지 PRGT 수요는 약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강력한 수요로 인해 PRGT 보조금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PRGT의 장기 자금 조달 능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할 예정

■ IMF 집행위원회, IMF 쿼타¹¹⁸⁾ 증액 제안 승인(2023. 11. 7.)¹¹⁹⁾

- IMF 집행위원회는 현재 회원국들의 쿼타에 비례하여 50% 증액하는 제16차 쿼타

118) 쿼타(Quota): IMF의 가장 기본적인 용자재원으로 IMF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한 신용공여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을 산출하고 IMF 신용 이용한도 및 SDR 배분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국민소득, 수출입규모 등을 변수로 하는 쿼타공식(Quota Formula)을 이용해 산정

119) IMF 집행위원회, "IMF Executive Board Approves a Proposal to Increase IMF Quotas," 2023. 11. 7.,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1/07/pr23383-imf-executive-board-approves-a-proposal-to-increase-imf-quotas>, 검색일자: 2023. 11. 14.

일반 검토를 제안하고 2023년 연차총회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지침에 따라 승인

- 현재 쿼타에 비례하여 회원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50%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쿼타 증액은 IMF의 영구 자원을 강화하고 차용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한국의 쿼타: 8,582.7millionSDR(총 SDR의 0.13%)

- 쿼타의 증액이 시행되면 IMF의 대출능력 유지를 위해 구성했던 양자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NAB)의 자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집행위원회는 2025년 6월까지 제17차 쿼터 일반 검토에 따라 새로운 쿼타 공식을 통한 재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

■ IMF 대표단, 리히텐슈타인¹²⁰⁾의 회원국 가입에 대한 방문절차 완료(2023. 12. 8.)¹²¹⁾

- IMF 대표단은 리히텐슈타인 정부의 IMF 회원가입 신청 절차를 위해 수도인 파두츠를 방문하여 관련 논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말까지 회원국 승인을 고려
 - 방문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와 의무, IMF 재정 운영, 예금 및 재정 기관 지정, IMF 거버넌스 및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쿼타 계산을 위한 데이터 수집 등 회원 자격을 위한 준비 단계를 수행
 - 회원 자격이 주어지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 IMF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조언 및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20)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나라,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작은 나라로 EFTA의 가입국이지만 유럽 연합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121) IMF, "IMF Staff Completes Membership Mission to the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2023. 12. 8.,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3/12/08/pr23430-liechtenstein-imf-staff-completes-membership-mission-principality>, 검색일자: 2023. 12. 12.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²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표 2-Ⅲ-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7. 11.	2023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3) 발표
2023. 8. 10.	2023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
2023. 9. 19.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3. 10. 3.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2023. 11. 14.	2023년 9월 실업률 발표
2023. 11. 16.	기후보고서(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1) 발표
2023. 11. 21.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
2023. 11. 29.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2023. 12. 1.	화석 연료 지원방안 보고서(OECD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23) 발표
2023. 12. 3.	세입통계(Revenue Statistics 2023) 발표

자료: 저자 확인

1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정은 선임연구원(jekim@kipf.re.kr)

01 경제·재정 전망 및 평가

- 중간경제전망보고서(Interim Economic Outlook)¹²³⁾ 발표(2023. 9. 19.)¹²⁴⁾
 - (현황) 2023년 초반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세계경제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각각 3.0%와 2.7%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하락하던 에너지 가격도 감산 등에 따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서비스가격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경제성장전망) 세계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통화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추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그간 축적된 초과저축이 가계지출을 뒷받침하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긴축 영향이 가시화되며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실질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라지며, 2023년 0.6%로 둔화되고, 2024년에는 1.1%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영국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감소 효과와,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둔화
 -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23년 5.1%, 2024년 4.6%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경제성장률은 2023년 1.5%, 2024년 2.1%로 모두 6월 전망 수준을 유지
 - (물가전망)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감소하고 있지만 근원물가상승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은행 목표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상당수 G20 국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나 국가별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123)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발표하며, 대상국은 세계경제와 G20 국가

124) OECD, *Confronting inflation and low growth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September 2023,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september-2023/>, 검색일자: 2023. 9. 20.

- G20 국가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3년 6%, 2024년 4.8%로 완화, G20 선진국의 근원 물가상승률은 올해 4.3%에서 2024년 2.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엔화 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영향을 받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물가상승률이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재화 부문 물가 상승은 꾸준히 둔화되고 있으나, 노동 및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부문 물가 상승은 지속되고 있음
- (위험) 통화정책의 강도 및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
 - 인플레이션 지속 시 긴축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이자율 상승은 민간부채 수준이 높고 변동 모기지 비율이 높은 국가의 금융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정책 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지 않더라도 기존 모기지 대출 금리가 조정되거나 기업 롤오버 등에 따라 한동안 계속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변화 등으로 에너지 공급 차질 가능성이 높고, 식량 가격 상승세도 지속 중
 - 예상보다 급격한 중국 경기둔화 또한 하방위험으로 작용
 - 중국의 내수성장률이 3%p 하락하는 경우, 세계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며, 타이트한 글로벌 금융 여건 감안 시 잠재적으로는 1.0%p 이상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정책권고) 재정 여력 재구축, 구조적 개혁 노력 등을 권고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재정 확장, 기후변화 및 고령화, 국방비 지출 등이 재정 지출 압력을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향후 정책수요 충족과 미래 대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통화정책 부담을 경감하여 적절한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
 -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기후, 디지털화 대응 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및 노동 참여 촉진 등 구조개혁 필요

표 2-III-2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중간경제전망	6월 전망과 차	중간경제전망	6월 전망과 차
세계	3.3	3.0	0.3	2.7	-0.2
G20 ¹⁾	3.1	3.1	0.3	2.7	-0.2
호주	3.7	1.8	0.0	1.3	-0.1
캐나다	3.4	1.2	-0.2	1.4	0.0
유로지역	3.4	0.6	-0.3	1.1	-0.4
독일	1.9	-0.2	-0.2	0.9	-0.4
프랑스	2.5	1.0	0.2	1.2	-0.1
이탈리아	3.8	0.8	-0.4	0.8	-0.2
스페인 ²⁾	5.5	2.3	0.2	1.9	0.0
일본	1.0	1.8	0.5	1.0	-0.1
한국	2.6	1.5	0.0	2.1	0.0
멕시코	3.9	3.3	0.7	2.5	0.4
튀르키예	5.5	4.3	0.7	2.6	-1.1
영국	4.1	0.3	0.0	0.8	-0.2
미국	2.1	2.2	0.6	1.3	0.3
아르헨티나	5.0	-2.0	-0.4	-1.2	-2.3
브라질	3.0	3.2	1.5	1.7	0.5
중국	3.0	5.1	-0.3	4.6	-0.5
인도 ³⁾	7.2	6.3	0.3	6.0	-1.0
인도네시아	5.3	4.9	0.2	5.2	0.1
러시아	-2.0	0.8	2.3	0.9	1.3
사우디아라비아	8.8	1.9	-1.0	3.1	-0.5
남아프리카공화국	1.9	0.6	0.3	1.1	0.1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2023. 9., Table 1

■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 A mild slowdown in 2024 and slightly improved growth in 2025) 발표(2023. 11. 29.)¹²⁵⁾¹²⁶⁾

- (현황) 세계경제는 회복 둔화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완화세를 지속
 - 긴축 통화 정책,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 등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125) OECD, <https://www.oecd.org/newsroom/economic-outlook-a-mild-slowdown-in-2024-and-slightly-improved-growth-in-2025.htm>, 검색일자: 2023. 11. 30.

126) 1장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 및 추후 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 바람

-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 긴축 통화 정책 및 에너지 가격 안정 등으로 완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에서 2024년에는 2.7%로 완만한 둔화, 2025년에는 3%까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둔화되나,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소폭 개선될 전망
 - (미국) 통화 긴축, 일자리 증가 속도 둔화, 실업률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 수요 증가는 2024년 중반까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 하락,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 등이 예상되면서 2025년에는 점차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유로지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통화 정책이 완화되어 실질소득이 회복하면서 성장세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일본)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온 일본은 거시경제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통화정책의 순수출 기여가 사라져 경제성장률은 2024년 1.0%, 2025년 1.2%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한국) 수출 위축과 긴축 통화정책으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로 바닥을 친 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정책금리 인하로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3%와 2.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국) 완화적 통화정책 및 인프라 투자가 수요를 보완하고 있지만, 소비와 부동산 부문 부진에 따라 성장률은 점차 둔화
 - (인도) 급증하는 서비스수출 및 공공투자가 경기를 견인하고 있으며, 2025-26 회계연도까지 엘니노 기상 패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정책 개혁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성장률을 최대 6.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
 - 세계 무역은 재고 감소, 아시아 무역의 지속적인 회복, 2025년 세계 투자 증가율의 회복 등으로 세계 수요와 함께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은 식품과 에너지 부문의 추가 충격이 없는 한, 2025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국가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지정학적 갈등, 세계 무역 회복 지연, 통화긴축, 중국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 존재

- 지정학적 긴장은 단기적인 불확실성의 주요 원인이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고조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의 투자 회복이 더디거나, 긴축통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 무역 개선이 예상보다 더딜 여지가 있음
 - 고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가계·기업의 부채 리스크가 확대되고 신흥시장국의 부채 취약성이 증가하여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파급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 상방요인으로는 산유국 감산 철회에 따른 유가 하락, 노동 참여 인구 증가, 팬데믹 기간 동안 누적된 초과저축의 소비 부양 효과 등을 언급
- (정책권고) 긴축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재정건전성 확보, 신흥시장국 거시안정성 제고, 국제 교역 확대, 기후대응 등 권고
- 국의 물가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근원 물가가 높은 만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제약적 통화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팬데믹 이후 공공부채 증가, 유럽 일부 국가의 국방비 지출 인상, 정부부채 조달금리 상승 등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 지출 구성의 재평가, 연금개혁 등 노력 촉구
 - 팬데믹 관련 재정 지원 감소와 에너지 관련 조치의 점진적 감소 등으로 신흥시장국 재정 적자는 감소세이나, 부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세수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환경 내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건, 서비스 교역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 간 디지털 연결성 제고 등을 통해 세계 무역 확대 노력
 - 녹색 투자 강화,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준과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권고

표 2-III-3 실질 GDP 성장률 및 주요 지표

(단위: %)

	2013-2019 평균	2022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Q4	Q4	Q4
실질GDP성장률								
세계	3.4	3.3	2.9	2.7	3.0	3.0	2.9	3.0
G20	3.5	3.0	3.1	2.8	3.0	3.2	2.9	3.0
OECD	2.3	2.9	1.7	1.4	1.8	1.7	1.5	1.9
미국	2.5	1.9	2.4	1.5	1.7	2.4	1.3	1.9
유로지역	1.9	3.4	0.6	0.9	1.5	0.5	1.1	1.6
일본	0.8	0.9	1.7	1.0	1.2	1.6	1.4	1.1
한국 ¹⁾	0.9	2.6	1.4	2.3	2.1			
비 OECD	4.4	3.6	4.0	3.8	4.0	4.1	4.0	3.9
중국	6.8	3.0	5.2	4.7	4.2	5.5	4.4	4.1
인도 ²⁾	6.8	7.2	6.3	6.1	6.5			
브라질	-0.4	3.0	3.0	1.8	2.0			
OECD 실업률	6.5	5.0	4.8	5.1	5.1	4.9	5.1	5.1
물가상승률								
G20	3.0	7.9	6.2	5.8	3.8	5.4	4.5	3.4
OECD	1.6	9.3	7.4	5.3	3.9	6.4	4.3	3.6
미국	1.3	6.5	3.9	2.8	2.2	3.2	2.5	2.1
유로지역 ³⁾	0.9	8.4	5.5	2.9	2.3	3.2	2.6	2.1
일본 ⁴⁾	0.9	2.5	3.2	2.6	2.0			
한국 ¹⁾	1.2	5.1	3.6	2.7	2.0			
OECD 재정수지 ⁵⁾	-3.2	-3.4	-4.8	-4.3	-4.0			
세계무역성장률	3.4	5.2	1.1	2.7	3.3	2.0	3.0	3.4

주: 1)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Economic Outlook No 114 - November 2023 사용하여 계산

2) 회계 연도 4월 1일~이듬해 3월 31일

3) 조화 소비자 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4)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5) GDP 대비 비중

자료: 1.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3. 9., p. 12, Table 1. 1.

2.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114 - November 2023*,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O>, 검색일자: 2023.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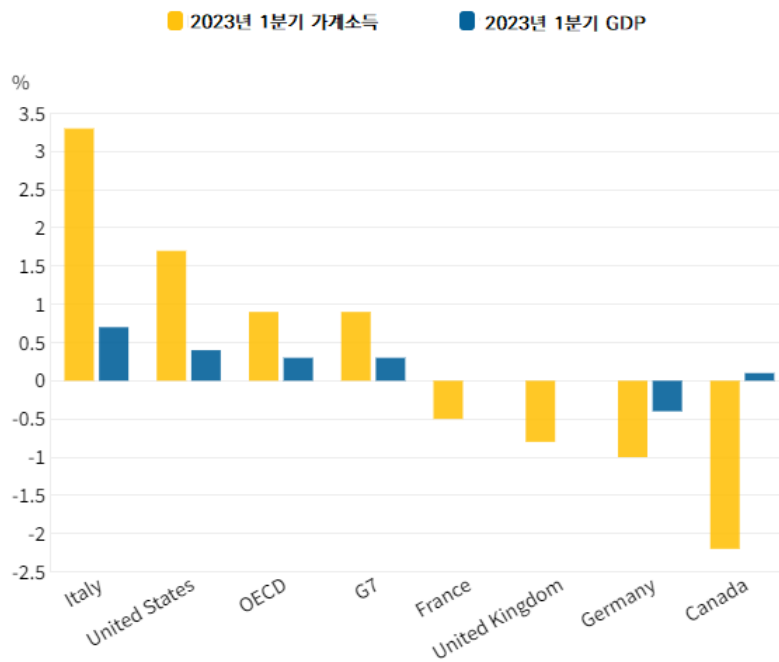
02 주요 경제지표 동향

- 2023년 1분기 가계소득 증가율 발표(2023. 8. 10.)¹²⁷⁾
 - OECD 회원국의 2023년 1분기 1인당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은 전기 대비 증가하여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인 0.3%를 상회한 0.9%로 나타남
 -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3분기 연속 증가했으며, 팬데믹 관련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증가한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증가율을 보임
 - 2023년 1분기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다른 양상을 보여, 데이터가 제공되는 21개국 중 11개국은 증가한 반면 10개국은 감소
 - G7 국가 중 이탈리아와 미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증가하였지만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감소
 - 캐나다는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이 가장 크게 감소(-2.2%)했는데, 이는 이전 분기 보다 가계에 대한 정부 이전이 더 낮아졌기 때문
 - 독일의 1인당 실질 GDP와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은 모두 2분기 연속 하락함
 - 이탈리아는 2023년 1분기 1인당 실질 가계소득(3.3%)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둔화되어 실질 기준으로는 가계소득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미국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의 증가(1.7%)는 주로 임금 및 급여 증가 및 2020년 세금 납부 지연 등으로 인해 2022년에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한 후 2023년 1분기에 납부할 세금이 감소한 데 기인¹²⁸⁾
 - 기타 OECD 회원국 중 폴란드는 1인당 실질 GDP(3.9%)와 1인당 실질 가계소득(3.5%)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덴마크(4.3%), 벨기에(4.1%), 네덜란드(2.6%)의 1인당 실질 가계소득도 크게 증가함

127)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irst quarter 2023," <https://www.oecd.org/newsroom/growth-and-economic-well-being-first-quarter-2023-oecd.htm>, 검색일자: 2023. 8. 14.

128) 세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납부하지만, 국민 계정에는 발생 기간(분기)에 납부할 세금이 표시됨

그림 2-III-1 2023년 1분기 G7 국가 실질 가계소득 및 실질 GDP증가율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일본의 경우 2022년 분기별 추정치가 제공되지 않아 G7 국가에서 제외됨

3. 2023년 1분기 프랑스와 영국의 GDP는 0.0%의 성장률을 기록

자료: OECD, "Growth and economic well-being: Fourth quarter 2023," 2023. 8. 14., p. 1, Figure. 1.

■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3. 10. 3.)¹²⁹⁾

-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한 OECD 회원국의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은 2023년 7월 5.9%에서 2023년 8월 6.4%로 상승
 - OECD 회원국 14개국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9개 국가는 0.5%p 이상 증가, 그 중 터키는 약 10p%의 급격한 상승을 기록함
 -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11개 국가에서는 마이너스를 유지했으나, 25개국에서 상승하여 7월 -7.5%에서 8월 -1.4%로 하락세가 둔화됨
 - 식품가격 상승률은 계속해서 둔화되었지만 이전 달보다 느린 속도로 7월 9.2%에 이어 8월에는 8.8%에 도달
 -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인플레이션은 8월 6.8%로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임

129) OECD, "Consumer Prices, OECD - Updated: 3 October 2023," <https://www.oecd.org/newsroom/consumer-prices-oecd-updated-3-october-2023.htm>, 검색일자: 2023. 10. 4.

- G7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7월 3.9%에서 8월 4.2%로 상승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
 - 캐나다, 프랑스, 미국에서는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0.5%p 이상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이탈리아는 8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되어 2022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
 - 식품가격 상승률은 모든 G7 국가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핵심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조화소비자물가지수(HICP)로 측정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7월 5.3%, 8월 5.2%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임
- G20 국가의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7월 5.8%에서 2023년 8월 6.3%로 증가함

표 2-III-4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품목									
OECD 전체	4.0	9.6	8.8	7.7	7.4	6.5	5.7	5.9	6.4
G7	3.5	7.1	6.4	5.4	5.4	4.6	3.9	3.9	4.2
유럽연합(HIPC)	2.9	9.2	9.9	8.3	8.1	7.1	6.4	6.1	5.9
유로지역(HIPC)	2.6	8.4	8.5	6.9	7.0	6.1	5.5	5.3	5.2
G20	4.3	8.6	8.0	6.9	6.5	5.9	5.5	5.8	6.3
캐나다	3.4	6.8	5.2	4.3	4.4	3.4	2.8	3.3	4.0
프랑스	1.6	5.2	6.3	5.7	5.9	5.1	4.5	4.3	4.9
독일	3.1	6.9	8.7	7.4	7.2	6.1	6.4	6.2	6.1
이탈리아	1.9	8.2	9.1	7.6	8.2	7.6	6.4	5.9	5.4
일본	-0.3	2.5	3.3	3.2	7.5	3.2	3.3	3.3	3.2
영국	2.5	7.9	9.2	8.9	7.8	7.9	7.3	6.4	6.3
미국	4.7	8.0	6.0	5.0	4.9	4.0	3.0	3.2	3.7
식량									
OECD 전체	3.5	13.2	14.9	14.0	12.1	11.0	10.1	9.2	8.8
G7	2.5	10.4	11.9	10.9	9.7	8.6	7.7	6.6	5.8
유럽연합(HIPC)	1.6	11.9	19.1	19.2	16.4	15.0	13.8	12.5	10.7
유로지역(HIPC)	1.3	10.5	17.3	17.5	15.0	13.7	12.5	11.6	10.2

표 2-III-4 의 계속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에너지									
OECD 전체	15.5	29.7	11.9	1.3	0.7	-5.1	-9.6	-7.5	-1.4
G7	16.3	27.4	10.7	-0.2	-0.2	-6.1	-10.3	-8.0	-1.1
유럽연합(HIPC)	12.6	35.2	16.6	2.6	4.4	-0.3	-4.1	-4.4	-2.0
유로지역(HIPC)	13.0	36.9	13.7	-0.9	2.2	-1.8	-5.6	-6.1	-3.3
식량 및 에너지 제외									
OECD 전체	3.0	6.8	7.3	7.2	7.1	6.9	6.6	6.7	6.8
G7	2.6	4.9	5.1	5.1	5.2	5.0	4.7	4.5	4.3
유럽연합(HIPC)	1.8	4.7	6.6	6.6	6.5	6.1	6.2	6.2	5.9
유로지역(HIPC)	1.5	4.0	5.6	5.7	5.6	5.4	5.5	5.5	5.3

자료: OECD, "OECD Consumer Prices Index," Paris, 3 October 2023, Table 2 재구성.

■ 2023년 9월 실업률 발표(2023. 11. 14.)¹³⁰⁾

- OECD 회원국의 실업률은 2023년 9월 4.8%로 안정적이었고, 2022년 7월 이후 5.0% 미만을 유지 중
 - 2023년 9월 OECD 회원국 실업률은 남성, 여성, 청년(15~24세), 25세 이상 근로자 등 모든 범주에서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남
 - 그러나 9월 청년 실업률은 16개 국가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한국, 체코, 룩셈부르크, 스웨덴은 1%p 이상 증가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표 2-III-6 참고)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23년 2월 이후 6.5% 안팎을 보이고 있으며, 9월에는 그리스를 제외한 모든 유로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유럽 이외의 OECD 회원국에서는 실업률이 대체로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했으며,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캐나다와 미국의 실업률은 각각 5.7%와 3.9%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130) OECD, "Unemployment Rates," <https://www.oecd.org/newsroom/unemployment-rates-oecd-updated-november-2023.htm>, 검색일자: 2023. 11. 15.

표 2-III-5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OECD 전체	6.2	5.0	4.8	4.8	4.8	4.8	4.8	4.8
G7	5.2	4.1	3.9	4.1	4.0	4.0	4.1	4.1
유럽연합	7.1	6.2	6.0	5.9	6.0	6.0	6.0	6.0
유로지역	7.7	6.7	6.5	6.5	6.4	6.5	6.4	6.5
호주	5.1	3.7	3.7	3.6	3.5	3.7	3.7	3.6
캐나다	7.5	5.3	5.0	5.2	5.4	5.5	5.5	5.5
프랑스	7.9	7.3	7.3	7.3	7.3	7.4	7.3	7.3
독일	3.6	3.1	2.9	3.0	3.0	3.0	3.0	3.0
이탈리아	9.6	8.1	7.8	7.6	7.4	7.6	7.3	7.4
일본	2.8	2.6	2.6	2.6	2.5	2.7	2.7	2.6
한국	3.7	2.9	2.6	2.5	2.6	2.8	2.4	2.6
스페인	14.8	12.9	12.1	11.9	11.9	11.9	11.9	12.0
영국	4.5	3.7	4.0	4.2	4.3
미국	5.4	3.7	3.4	3.7	3.6	3.5	3.8	3.8

자료: OECD, "UNEMPLOYMENT 14 November 2023," p. 3, Table 1 재구성

표 2-III-6 OECD 회원국의 청년실업률(15~24세, 계절조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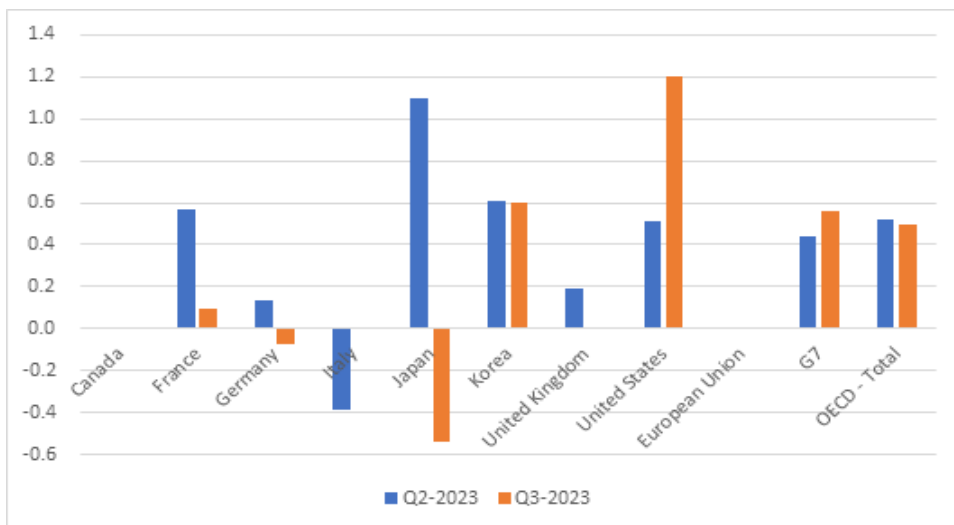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2023		
			Q2	Q4	7월	8월	9월
OECD 전체	12.8	10.9	10.2	10.5	10.5	10.5	10.5
G7	10.6	9.0	8.5	9.1	8.9	9.2	9.1
유럽연합	16.7	14.5	14.1	14.1	14.1	14.1	14.2
유로지역	16.9	14.5	13.9	14.0	14.0	13.9	14.0
호주	11.3	8.2	8.0	8.3	8.6	8.3	8.0
캐나다	13.6	10.1	10.6	10.7	10.2	11.3	10.5
프랑스	18.9	17.3	16.5	16.1	16.2	16.1	16.0
독일	7.0	5.9	5.9	5.8	5.8	5.8	5.8
이탈리아	29.9	23.7	22.2	22.0	22.1	21.9	21.9
일본	4.6	4.3	3.9	3.7	3.8	3.7	3.7
한국	8.5	7.0	5.3	5.5	5.9	4.4	6.3
스페인	24.7	21.7	21.3	21.2	18.2	22.1	23.4
영국	12.3	10.5	12.3
미국	9.7	8.1	7.1	8.3	8.0	8.6	8.4

자료: OECD, "UNEMPLOYMENT 14 November 2023," p. 6, Table 4 재구성

■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2023. 11. 21.)¹³¹⁾

- 2023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잠정) 전 분기 대비 0.5% 증가
- G7 국가의 GDP 성장률은 미국의 성장이 크게 가속화¹³²⁾되면서 3분기 0.6%로 상승
 - 나머지 G7 국가들은 3분기에 0, 0에 가까운 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성장이 정체되었고, 프랑스는 0.1%,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0.5% 및 -0.1%)를 기록
- 그 외 다른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폴란드와 코스타리카가 3분기에 가장 높은 GDP 성장률(각각 1.4%, 1.3%)을 기록했고, 대조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 아일랜드는 -1.8%, 그 뒤를 이은 핀란드가 -0.9%를 기록
- 2023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실질 GDP는 팬데믹 이전(2019년 4분기) 수준보다 6.0% 증가
 - 체코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그림 2-III-2 실질 GDP 성장률(전기 대비, 계절조정)



주: 2023년 2분기 및 3분기 캐나다, 유로지역 성장률은 0.0%, 2023년 3분기에는 이탈리아와 영국이 제로 성장을 기록
출처: OECD,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 (Database),"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QNA>, 검색일자: 2023. 11. 22.

131) OECD, "GDP Growth - Third quarter of 2023," <https://www.oecd.org/newsroom/gdp-growth-third-quarter-2023-oecd.htm>, 검색일자: 2023. 11. 22.

132) 민간소비가 2분기 0.2% 증가한 데 비해 3분기 1.0% 증가하면서 GDP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2분기 0.5%에서 3분기 1.2%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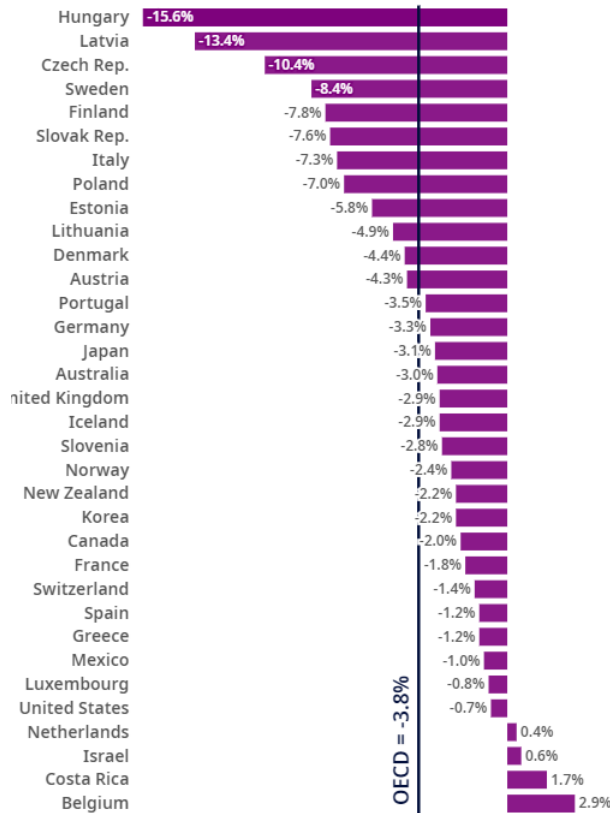
03 재정 및 기타 이슈 보고서

- 2023년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23) 발표(2023. 7. 11.)¹³³⁾¹³⁴⁾
 - OECD는 2023년 고용 전망을 통해 약간의 완화 징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 고용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었으며, OECD 회원국 전체의 실업률은 197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
 -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여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으며,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기 이전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
 - 그러나 명목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
 - 명목 임금은 상승했지만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거의 모든 산업과 국가에서 실질 임금은 하락세를 보임
 - 많은 국가에서 인건비보다 기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하여 국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생계비 위기 속에서 실질 임금 하락은 에너지와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임금-물가 나선효과 징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단체협상은 구매력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번 고용 전망에서는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AI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은 자동화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일자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13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obs*, <https://www.oecd.org/employment-outlook/2023/>, 검색일자: 2023. 7. 12.

134) OECD, "Executive summary," in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OECD Publishing, Paris.를 요약하였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 바람

그림 2-III-3 실질임금상승률



주: 2022년 1분기 대비 2023년 1분기
 자료: OECD (2023), *OECD Employment Outlook 2023*.

- 기업의 AI 도입률은 아직 낮지만 생성형 AI(예: ChatGPT), 비용 하락, AI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의 증가 등 빠른 진전은 OECD 회원국들이 AI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며, AI를 포함한 모든 자동화 기술을 고려할 때 전체 일자리의 27%는 대체 가능성이 상당해 임금 감소와 일자리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제조 및 금융 부문의 AI 사용에 대한 OECD 설문조사의 결과,¹³⁵⁾ 금융업 종사자의 63%, 제조업 종사자의 57%가 향후 10년 이내에 AI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답변

135) 2022년 제조·금융 부문 기업 2,000곳에서 근무하는 5,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근로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하며 단체교섭, AI 사용을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 표준 설정, 적절한 규정 또는 지침 시행, AI에 대한 교육 제공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기본권과 복지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AI가 노동시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함
 - AI 개발과 도입이 빨라짐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저숙련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숙련 근로자도 교육이 필요하며 정부는 고용주가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교육에 통합하고, AI 인력의 다양성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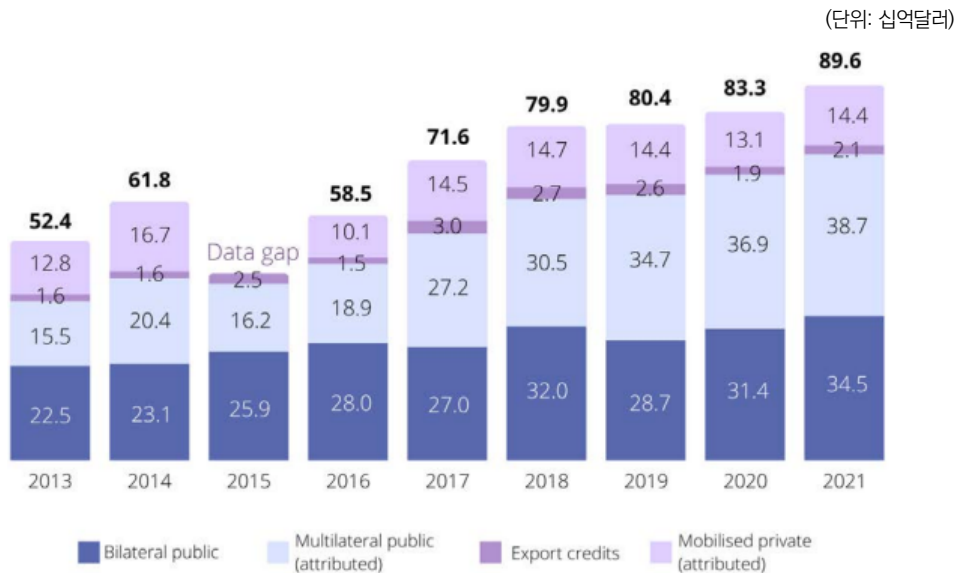
- 기후보고서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1 발표(2023. 11. 16.)¹³⁶⁾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매년 공동으로 조성하는 재원인 기후금융(Climate Finance)¹³⁷⁾은 2021년 약 896억달러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 2.1%보다 훨씬 높은 수치임
 - 공공 기후금융(양자 및 다자)은 2013~2021년 동안 380억달러에서 731억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했으며, 이는 현재 전체 규모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부터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민간 기후금융 규모는 2021년 144억달러에 달해 2019년 수준을 회복
 - 수출신용은 전년도와 비슷한 21억달러로 나타났으나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금융은 증가하고 있지만 2020년 목표치인 1천억달러¹³⁸⁾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36) OECD,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1," <https://www.oecd.org/climate-change/finance-usd-100-billion-goal/>, 검색일자: 2023. 11. 17.

137) 공공 기후금융, 민간 기후금융, 수출신용(exports credit)을 포괄하고 있으며 공공 기후금융은 양자(bilateral) 원조와 다자(multilateral)원조로 구성, 민간 기후금융은 공적 투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민간부문 재원을 의미함. 수출신용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OECD에 보고된 공적 수출신용 등을 의미

138) 2009년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15)에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1천억달러를 조성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2025년까지 목표를 연장

그림 2-Ⅲ-4 기후금융현황



주: 민간 기후금융은 2016년부터 데이터 수집에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2013~2014년과 2016년 이후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자료: OECD,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1," p. 8, Figure 1

■ 2023년 화석 연료 지원방안 보고서 OECD Inventory of Support Measures for Fossil Fuels 2023 발표(2023. 12. 1.)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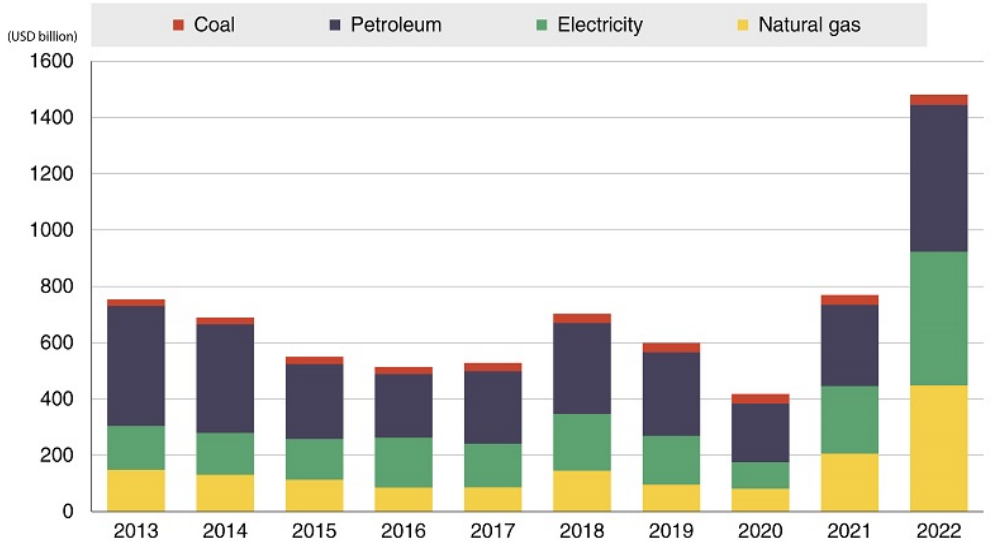
- OECD와 IEA가 발표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22년 각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을 완화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화석 연료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지원 조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상승한 에너지 가격 지원 조치에 의해, 82개국의 화석 연료에 대한 글로벌 재정 지원 비용은 2021년 7,695억달러에서 2022년 1조 4,813억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
 - 석유, 전기, 가스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절대적인 금액은 작지만 석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2022년 지원 금액은 2013년 이후 60% 증가한 361억 달러로 나타남

139) OECD, <https://www.oecd.org/newsroom/cost-of-support-measures-for-fossil-fuels-almost-doubled-in-2022-in-response-to-soaring-energy-prices.htm>, 검색일자: 2023. 12. 4.

- OECD는 2022년 화석연료 지원 조치와 관련된 직접 이전 및 세금 지출이 4,27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IEA는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된 화석연료가 1조 1,266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함

그림 2-III-5 연료별 재정 지원 비용

(단위: 십억달러)



주: 민간 기후금융은 2016년부터 데이터 수집에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2013~2014년과 2016년 이후를 직접 비교할 수 없음

자료: OECD, "Climate Finance Provided and Mobilised by Developed Countries in 2013-21," p. 8, Figure 1

■ 세입통계 Revenue Statistics 2023 발표(2023. 12. 6.)¹⁴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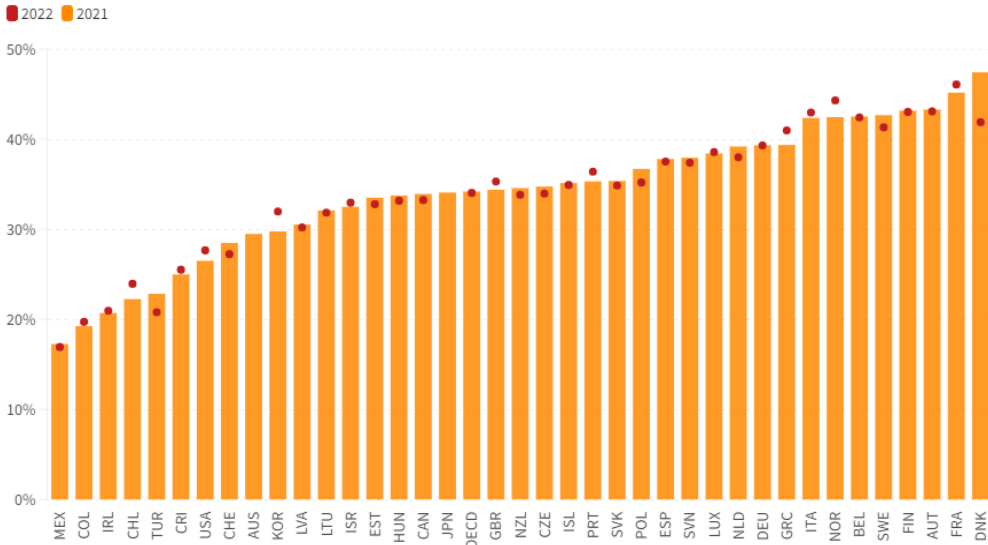
- 2022년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이 감소했고, OECD 평균은 34.0%로 전년 대비 0.15%p 감소
- 2023년 OECD 세입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으로 촉발된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세 인하를 유도하여 많은 국가에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됨
 - 전체 세수는 2022년 36개국 중 21개국에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했고, 14개국에서는 증가했으며 1개국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함

140) OECD, <https://www.oecd.org/newsroom/global-energy-crisis-and-government-responses-drive-a-significant-fall-in-tax-levels-in-oecd-countries.htm>, 검색일자: 2023. 12. 7.

- 주로 소득세 수입이 감소한 덴마크에서 -5.5p%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한국은 2.2p%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가, 1.8p% 증가한 노르웨이는 에너지 부문의 예외적인 수익으로 인해 큰 증가율을 보임
- 소비세(excise tax)¹⁴¹⁾는 예측치를 사용할 수 있는 36개국 중 34개국에서 GDP 대비 비중이 감소함
- 부가가치세도 에너지와 식품 가격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19개국에서 감소함

그림 2-III-6 2021-2022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 조세수입 비중

(단위: %)



주: 2022는 예측치

자료: OECD, "Global energy crisis and government responses drive a significant fall in tax levels in OECD countries," <https://www.oecd.org/newsroom/global-energy-crisis-and-government-responses-drive-a-significant-fall-in-tax-levels-in-oecd-countries.htm>, 검색일자: 2023. 12. 12.

141)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비필수재 또는 사치재, 주류, 담배 및 에너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설탕, 사탕무, 성냥, 초콜릿 등 개별 제품에 대한 특별세, 특정 범위의 재화에 대해 다양한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 담배 제품, 주류, 자동차 연료 및 탄화수소 오일에 부과되는 세금이 포함. 만약 수입품에 대해 주로 징수되는 세금이 동일한 법에 따라 해당 국내 생산품에도 적용된다면, 이 세금의 수입은 수입 관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됨. 물, 전기, 가스 및 에너지와 같은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세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세금(5126)이 아닌 소비세로 간주되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세(5110), 재정 독점(5122), 관세 및 기타 수입 관세(5123), 또는 수출에 대한 세금(5124)을 제외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INTERPRETATIVE GUIDE. p. 12~22 정리)

제 3 부

주요국 재정동향

- I. 미국
- II. 일본
- III. 독일
- IV. 프랑스
- V. 영국

I 미국¹⁴²⁾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4회계연도: 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¹⁴³⁾

표 3-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6. 30.	미국 대법원,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 위헌 판결
2023. 7. 12.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5. 23.~2023. 6. 29. 기간)
2023. 7. 13.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 포럼(BFF, Bipartisan Fiscal Forum) 출범
2023. 7. 26.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2025 경제 수정 전망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보고서 발표
2023. 7. 26.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2023. 7. 27.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2분기 GDP(속보) 발표
2023. 7. 28.	미국 관리예산처(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SR; Mid-Session Review) 발표
2023. 8. 1.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미국 신용등급 AAA → AA+로 강등
2023. 8. 10.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7월 CPI 발표
2023. 8. 16.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4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
2023. 9. 1.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8월 고용통계 발표
2023. 9. 6.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6. 30.~2023. 8. 27. 기간)
2023. 9. 20.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1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윤모 선임연구원(ymgoo@kipf.re.kr)-이재원 연구원(jaiwon@kipf.re.kr) 작성.

143) 2023회계연도: 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

표 3-I-1 의 계속

일자	주요 내용
2023. 9. 30.	미국 의회, 2024회계연도 1차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5860) 가결
2023. 10. 10.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3회계연도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3. 10. 18.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8. 28.~2023. 10. 5. 기간)
2023. 10. 19.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년래 최고치 기록
2023. 10. 20.	미국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추경 세출예산 요청서 의회 제출
2023. 10. 26.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3분기 GDP(속보) 발표
2023. 11. 1.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2023. 11. 10.	신용평가사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Aaa 안정적 → Aaa 부정적으로 하향
2023. 11. 14.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0 가구소득 분배(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보고서 발표
2023. 11. 15.	미국 의회, 2024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6363; P.L. 118-15) 가결
2023. 11. 29.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10. 6.~2023. 11. 16. 기간)
2023. 12. 5.	미국 의회 상원, “국가안보 및 국경지원”을 위한 추경 세출예산 법안(National Security and Border Bill) 추진
2023. 12. 7.	미국 의회 하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 상환 규칙 폐지(disapproval) 결의안(H.J.Res.88) 가결
2023. 12. 13.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1) 2024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 OMB, 대통령 예산안 수정 전망(MSR; Mid-Session Review) 발표(2023. 7. 28.)¹⁴⁴⁾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 전망 수정 규모는 1조 8,770억달러로 3월 본 예산안 전망(1조 8,460억달러) 대비 1.7% 증가
 - 2024회계연도 GDP 대비 재정적자는 전년도(추정치) 대비 1.0%p 상승한 6.8% 전망
 - (수입) 2024회계연도 총수입 전망 수정 규모는 5조 280억달러로 3월 본 예산안 전망(5조 360억달러) 대비 0.2% 감소
 - 2024회계연도 수입 변화는 경제적 가정 조정¹⁴⁵⁾으로 인한 상향 조정(+40억달러) 및 기술적 수치 수정(technical revisions)으로 인한 하향 조정(-470억달러), 기타(+350억달러) 등으로 하향 조정
 - (지출) 2024회계연도 총지출 전망 수정 규모는 6조 9,050억달러로 3월 본 예산안 전망(6조 8,830억달러) 대비 0.3% 증가
 - 2024회계연도 지출 변화는 신규 입법 및 지출 재추정(국방분야 등)에 따른 수치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하향 조정
 - ※ 한편 2023회계연도 지출 변화는 신규 입법(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2023) 및 지출 재추정(연방학자금¹⁴⁶⁾ 등)에 따른 수치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하향 조정
 - (채무) 2024회계연도 연방채무(내부거래 제외) 전망 수정 규모는 27조 80억달러로 3월 본 예산안 전망(27조 7,830억달러) 대비 2.8% 감소
 - 2024회계연도 GDP 대비 채무 수치는 전년도 실적(추정치) 대비 2.9%p 증가한 98.4% 전망

144)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07/msr_fy2024.pdf, 검색일자: 2023. 8. 4.

145) revised economic assumptions

146) 연방학자금 관련(미국 대법원의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행정조치 위헌 판결)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7월호 재정동향」, 2023. 8." 참고

표 3-I-2 예산안 전망(대통령 예산안(3월) VS MSR(7월) 수정 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망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2	2033
예산총량 (십억달러)												
수입	3월	3,421	4,047	4,897	4,802	5,036	5,419	5,773	6,080	...	7,601	7,991
	7월				4,587	5,028	5,414	5,762	6,039	...	7,672	8,043
지출	3월	6,550	6,822	6,273	6,372	6,883	7,091	7,294	7,589	...	9,472	10,026
	7월				6,130	6,905	7,111	7,323	7,629	...	9,456	10,013
재정 적자	3월	3,129	2,775	1,376	1,569	1,846	1,671	1,521	1,509	...	1,871	2,035
	7월				1,543	1,877	1,697	1,561	1,590	...	1,784	1,970
연방 채무 ¹⁾	3월	21,017	22,284	24,252	25,910	27,783	29,592	31,233	32,851	...	41,553	43,619
	7월				25,344	27,008	28,825	30,508	32,203	...	40,924	42,938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3월	16.3	18.1	19.6	18.2	18.5	19.1	19.5	19.7	...	20.0	20.1
	7월				17.3	18.3	18.9	19.3	19.4	...	20.0	20.1
지출	3월	31.2	30.5	25.1	24.2	25.3	24.9	24.6	24.6	...	24.9	25.2
	7월				23.1	25.2	24.8	24.5	24.5	...	24.7	25.0
재정 적자	3월	14.9	12.4	5.5	6.0	6.8	5.9	5.1	4.9	...	4.9	5.1
	7월				5.8	6.8	5.9	5.2	5.1	...	4.7	4.9
연방 채무 ¹⁾	3월	100.1	99.6	96.9	98.4	102.0	104.1	105.2	106.3	...	109.1	109.8
	7월				95.5	98.4	100.6	102.0	103.4	...	106.7	107.3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p. 17, Table S-1.

- (경제전망) 올해('23년) 4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 동기(0.9%) 대비 0.5%p 하락한 0.4%로 전망되며, 내년('24년)에는 1.8% 전망
 - (물가)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은 3.3%, 2024년에는 2.5%로 하락하며, 장기적으로는 2.3% 전망
 - (실업률) 올해('23년) 실업률은 전년(3.6%) 대비 소폭 증가한 3.8%로 전망되며, 이후 장기적으로는 3.8%를 유지할 전망
 - (금리) 2023년에 5.0%에서 시작한 금리(단기 채권¹⁴⁷⁾ 기준)는 이후 2028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3.4% 전망

* (금리 전망 추이) 5.0%('23) → 4.1%('24) → 3.2%('25) → 2.7%('26) → 2.4%('27)

147) 91-Day Treasury Bills

표 3-I-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2	2023	2024	2025	2026	...	2033
	실적	전망					
실질성장률 ¹⁾	0.9	0.4	1.8	2.4	2.0	...	2.2
도시소비자물가지수(CPI-U) ¹⁾	7.1	3.3	2.5	2.3	2.3	...	2.3
실업률 ²⁾	3.6	3.8	4.4	4.2	4.1	...	3.8

주: 1)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증가율, Chained(2012) Dollars

2) 연평균, 계절 조정

자료: OMB, "Mid-Session Review," 2023. 7. 28., p. 6, Table 2.

2) 2024회계연도 임시 예산

■ 의회, 2024회계연도 1차 임시 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5860) 가결 (2023. 9. 30.)¹⁴⁸⁾

- (배경) 2024회계연도의 만료일(2023. 9. 30.)이 도래하였으나, 총 12개 분야의 정 규세출예산 모두 통과되지 못함
 - 양당(공화당·민주당)은 예산 방향에 대한 이견(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며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 (법안 진행과정)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McCarthy) 하원 의장은 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피하기 위해 동 임시예산안(H.R. 5860)이 발의되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임시예산안(H.R. 5525)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과 연합하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킴¹⁴⁹⁾
- (규모 및 만료시한¹⁵⁰⁾) 동 임시 예산법(P.L. 118-15)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¹⁵¹⁾로 진행되며, 만료 시한은 2023년 11월 17일까지로 규정

148)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5860," 2023. 9. 3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3/09/30/press-release-bill-signed-h-r-5860/>, 검색일자: 2023. 10. 4.149) 이로 인해, 의회 하원의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하원 의장 탄핵결의안(H.Res. 757)을 발의하였으며, 민주당과 함께 의장 탄핵안이 최종 가결됨(의회 하원 홈페이지,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519," 2023. 10. 3., <https://clerk.house.gov/evs/2023/roll519.xml>, 검색일자: 2023. 10. 4.

150) 동 임시 예산법에는 바이든 정부에서 요구한 재난 지원 관련 예산(160억달러)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 관련 추경예산은 포함되지 않음

151) 2023회계연도(2022. 10.~2023. 9.)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7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3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12월 23일 통과(CBO 법안비용 추계 참고 링크: CBO, "H.R. 5860,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24 and Other Extensions Act," 2023. 10. 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3-10/CR_10_4.2023_hr5860.pdf, 검색일자: 2023. 10. 4.)

- (향후 전망) 의회가 11월 17일 자정까지 정규세출예산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2차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켜야 하며, 의회의 양당 대치가 지속되어 CR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정부 섯다운*(government shutdown)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존재
 - * 섯다운이 발생할 경우, 필수(essential)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이게 되어, 복지 관련 수급 지연 및 국립공원 등이 일시적 폐쇄에 놓이는 등 전반적인 정부 운영이 지연(또는 정지)될 수 있음
- 의회, 2024회계연도 2차 임시 세출예산안(Continuing Resolution; H.R. 6363; P.L. 118-15) 가결 (2023. 11. 15.)¹⁵²⁾
 - (배경) 2024회계연도 1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시한이 도래하였으나 총 12개 세출 분야에 대한 정규예산이 모두 통과되지 못한 상황
 - * 1차 임시 세출예산¹⁵³⁾의 경우, 2024회계연도의 만료일(2023. 9. 30.)까지 총 12개 분야의 정규 세출예산이 모두 통과되지 않아 의회는 임시 예산안(만료시한: 2023. 11. 17.)을 가결
 - (법안 진행과정)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McCarthy) 하원 의장 탄핵 이후, 같은 당에서 의장으로 선출(10. 25.)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¹⁵⁴⁾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원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336:95의 표결로 동 법안이 가결됨
 -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된 상원에서도 87:11로 통과(2023. 11. 15.)됨
 - (규모 및 만료시한) 임시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준하는 규모¹⁵⁵⁾로 진행되며, 만료 시한은 두 시기(two-tiered)로 나누어 (2024년 1월 19일 & 2월 2일)까지로 규정

152)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6363," 2023. 11. 1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3/11/17/press-release-bill-signed-h-r-6363/>, 검색일자: 2023. 11. 20.

153) H.R. 5860; P.L. 118-15

154)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McCarthy) 하원 의장 탄핵 이후 열린 최종 하원 의장 선거에서 같은 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의원은 220표를 얻어 209표를 받은 민주당 후보인 Hakeem Jeffries의원과 11표 차이로 하원 의장에 당선(2023. 10. 25.) →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9월호 재정동향」, 2023. 10." 참고

155) 2023회계연도(2022. 10. ~ 2023. 9.) 정규 세출예산법의 규모는 약 1.7조달러 규모이며, 동 법은 3차례의 임시예산을 거친 후 2022년 12월 23일 통과

- (2023년 1월 19일 만료 분야) 총 4개¹⁵⁶⁾ 분야(① 군사시설·재향군인 ② 에너지·수자원 ③ 농업 등 ④ 교통·주택/도시개발)
- (2023년 2월 2일 만료 분야) 1월 19일 만료 분야 외 나머지 8개 분야
- (특이 사항¹⁵⁷⁾¹⁵⁸⁾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 시한을 두 구간(1. 19. & 2. 2.)으로 나누어 설정된 점을 포함하여, 바이든 정부에서 추경 세출예산으로 요청해 온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항목뿐만 아니라 공화당 측에서 요청해 온 국경안보 강화 예산 배정 및 예산 삭감 등도 미포함
- (향후 전망) 2차 임시예산안 만료시한까지 정규 세출예산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존재
 - * 최근 무디스는 공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립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 신용평가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¹⁵⁹⁾(2023. 11. 10.)한 바 있음
 - 한편 두 구간으로 나누어진 이번 임시 세출예산법에 대해 2개의 셧다운 예정일이 설정된 것이기에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존재¹⁶⁰⁾
 -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임시 세출예산이 두 구간으로 나누어짐에 따라 정규 세출 예산 합의에 필요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의견을 피력¹⁶¹⁾

156) ① 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② Energy and Water, Agriculture ③ Rural Development, FDA ④ Transportation, HUD

157) National Public Radio(NPR), "Bill to keep the government running doesn't include aid to Israel or Ukraine," 2023. 11. 16., <https://www.npr.org/2023/11/16/1213400996/bill-to-keep-the-government-running-doesnt-include-aid-to-israel-or-ukraine>, 검색일자: 2023. 11. 17.

158) Government Executive, "House passes two-tiered stopgap bill days before shutdown," 2023. 11. 14., <https://www.govexec.com/management/2023/11/house-passes-two-tiered-stopgap-bill-days-shutdown/392007/>, 검색일자: 2023. 11. 17.

159) 하향 조정의 주요 요인으로 대규모 적자와 극단적인 정쟁으로 인한 채무 여력(debt affordability) 감소 등이 언급

160) Government Executive, "House passes two-tiered stopgap bill days before shutdown," 2023. 11. 14., <https://www.govexec.com/management/2023/11/house-passes-two-tiered-stopgap-bill-days-shutdown/392007/>, 검색일자: 2023.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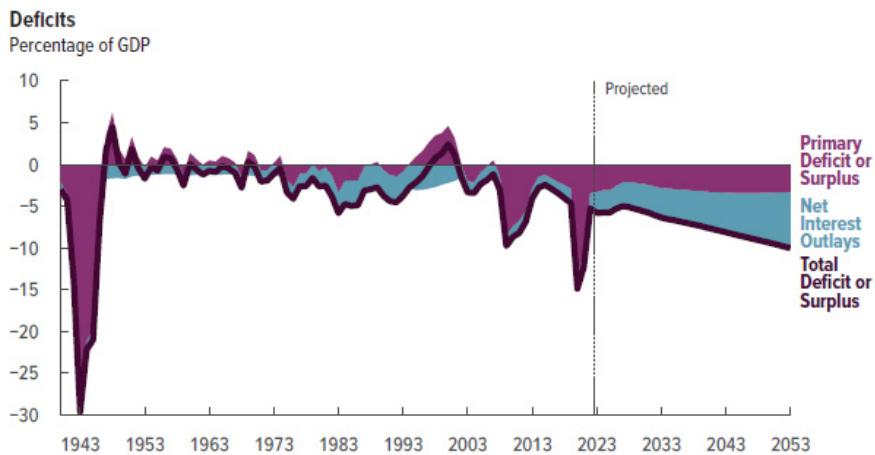
161) CNBC, "House passes bill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Senate to vote next," 2023. 11. 14., <https://www.cnbc.com/2023/11/14/house-passes-bill-to-avoid-government-shutdown-senate-to-vote-next.html>, 검색일자: 2023. 11. 22.

3) 예산·경제 전망

- 미국 의회예산처, 2023 장기재정전망(The 2023 Long-Term Budget Outlook) 보고서 발표(2023. 6. 28.)¹⁶²⁾¹⁶³⁾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GDP의 5.8%로 추정되며, 2027년까지 GDP의 5.0%로 감소했다가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53년에는 GDP의 1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I-1 미국 재정수지 장기전망(2023-2053회계연도)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23 Long-Term Budget Outlook," p. 6, Figure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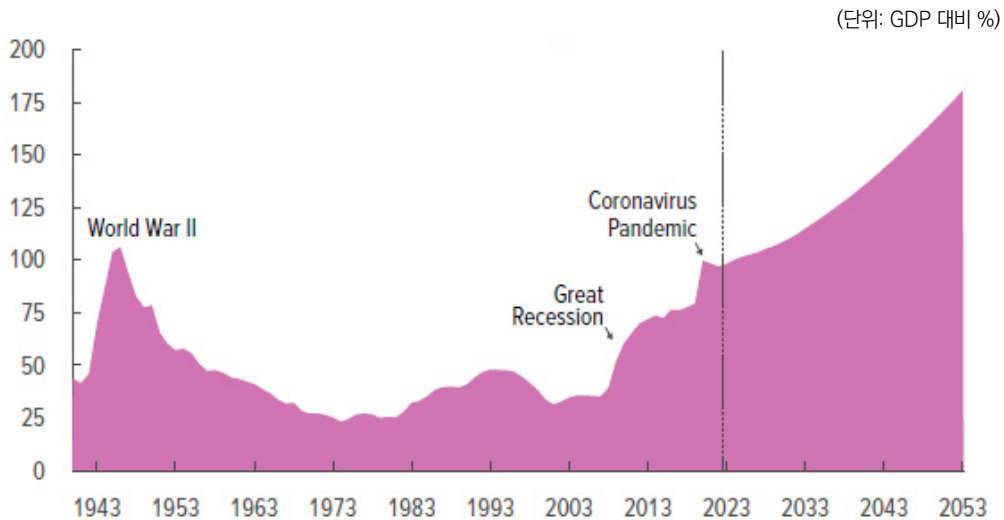
- 기초재정수지 적자는(primary deficit)¹⁶⁴⁾ 2023회계연도와 2053회계연도에 GDP의 3.3%로 동일하나,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 재정적자는 증가
- (연방채무) 2023회계연도 말 연방채무는 GDP의 98%로 추정되며, 2029년에는 GDP의 107%로 역사상 최고점을 넘어 2053년 GDP의 18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162)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2023 Long-Term Budget Outlook," 2023. 6. 2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3-06/59014-LTBO.pdf>, 검색일자: 2023. 7. 4.

163) 해당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2023년 5월 CBO에서 발표한 예산 기준선 전망(2023-2033년)에 2023년 6월 3일 입법된 재정책임법의 예산 효과를 반영한 것을 바탕으로, 향후 30년간(2023-2053년)에 대해 장기재정 전망을 제시

164)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제외

그림 3-I-2 미국 연방채무 장기전망(2023-2053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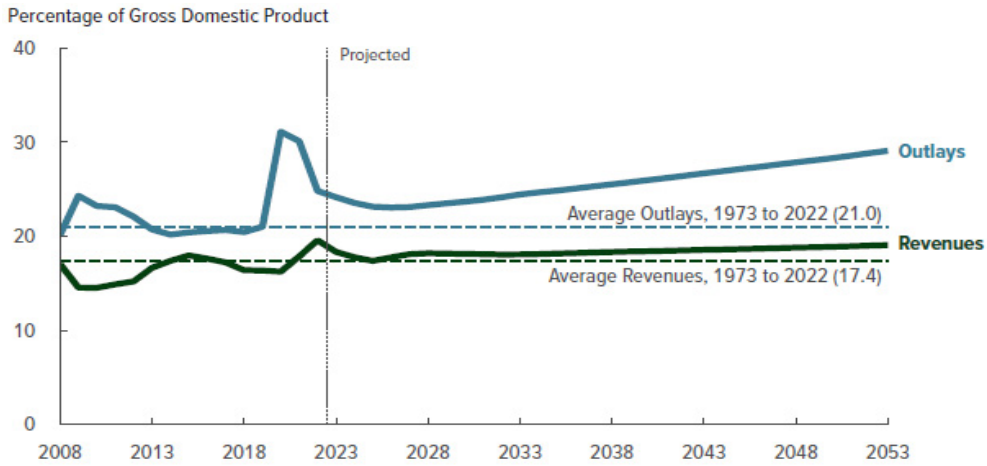


자료: CBO, "The 2023 Long-Term Budget Outlook," p. 6, Figure1-1.

- CBO는 연방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
 - 차입비용 증가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 미국 국채를 소유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가 수입 감소
 - 미국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위험성 증가로 인해 이자율이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의 나선효과 발생 가능
 - 금리 인상으로 미국의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증가
 -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기타 목적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실행에 대한 제약 증가
 - (재정지출) 2023회계연도 지출은 GDP의 24.2%로 추정되며, 2053회계연도에는 GDP의 29.1%로 증가
- 2023회계연도 지출은 팬데믹 대응 관련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GDP의 24.2%로 감소하며, 2026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
 - 지난 50년간(1973-2022회계연도) 평균 연방 재정지출은 GDP의 21.0%이며, 향후 30년간(2023-2053회계연도) 평균 연방 재정지출은 GDP의 25.7%로 추정됨

그림 3-I-3 미국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장기전망(2023-2053회계연도)

(단위: GDP 대비 %)



자료: CBO, "The 2023 Long-Term Budget Outlook," p. 14, Figure2-1.

- 2023년도 전망을 2022년도 전망과 비교할 경우 2023년도 재정지출 전망은 2025년까지는 작년보다 높게 추정되었으며, 2025년 이후로는 작년보다 낮게 추정됨
 - 재정지출 전망이 작년 대비 증가한 것은 ▲유해물질 노출 참전용사 보상법 (Honoring Our PACT Act; P.L. 117-168) 및 ▲참전용사 생활비 상향조정법 (Veterans' COLA Act of 2023; P.L. 118-6)의 입법에 따라 의무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2025회계연도 이후 재정지출 전망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명목 GDP 전망이 증가한데 기인
- (재정수입) 2023회계연도 수입은 GDP의 18.4%로 추정되며, 2053회계연도에는 GDP의 19.1%로 추정됨
 - 연방 재정수입은 2025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세제개편 및 개인소득세 증가로 인해 2053회계연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0년간(1973-2022회계연도) 평균 연방 재정수입은 GDP의 17.4%이며, 향후 30년간(2023-2053회계연도) 평균 연방 재정지출은 GDP의 18.4%로 추정됨
- 2023년도 전망을 2022년도 전망과 비교할 경우 2023년도 재정수입 전망은 2023-2052년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

- 재정수입 전망이 소폭 감소한 것은 개인소득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임
- 개인소득세 수입 감소가 전망되는 이유로 단기적으로는 최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양도소득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연금 및 개인 퇴직금 적립 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수익 배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의회예산처(CBO), 2023~2025 경제 수정 전망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보고서¹⁶⁵⁾ 발표(2023. 7. 26.)¹⁶⁶⁾

- * 2023년에 GDP 구성 주요 항목 대부분의 성장이 둔화되며, 주택 및 재고 투자는 감소하나 2024년부터는 다시 상승
 - (경제성장률) 2023년 실질성장률은 0.9%(하반기 0.4%)로 전망되며, 이후 통화정책 완화로 인해 2024년 1.5%, 2025년에는 2.4%로 증가할 전망
 - * 2023년에 GDP 구성 주요 항목 대부분의 성장이 둔화되며, 주택 및 재고 투자는 감소하나 2024년부터는 다시 상승
 - (개인소비) 금리 인상과 엄격한 신용시장 기준, 실업률 증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출 유보되었던 자금(저축 금액)의 감소로 2023년 하반기 개인소비지출은 약해지나, 2024년 말~2025년에 금리와 실업률의 하락으로 증가 전망
 - (민간투자) 장비(equipment), 비주택 구조물(structures), 지적재산권 투자 상품 수요 감소, 채무 증가, 신용 시장 경색 등으로 인해 2023년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2% 수준으로 증가
 - 주택투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2022년 18.8% 하락하였으나, 2024년에는 2.1%, 2025년에는 6.5% 증가 전망
 - (정부지출) 2023년 4분기 정부지출(고속도로, 군대 장비, 공공교육 서비스 등)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책임법에 의한 정부지출의 제한으로 인해 2023~2025년까지 연방정부의 연평균 지출은 0.7%¹⁶⁷⁾ 수준으로 증가 전망

165)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1974년에 제정된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경제 전망은 2023. 6. 22.까지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

166) CBO,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2023. 7. 26., <https://www.cbo.gov/publication/59258>, 검색일자: 2023. 8. 9.

167) 주/지방 정부 모두 합한 연평균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1.0% 전망

- (수출·입) GDP 대비 무역적자는 2024년 중반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축소 양상 전망
 - 2022년 말부터 하락했던 달러의 외환 가치 지속, 주요 교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출 수요 증대, 대내 수요 약화로 인한 수입 수요 감소 등과 맞물려 수출이 수입을 앞설 것으로 전망

표 3-I-4 미국 GDP 성장률 전망

(단위: %)

	2023년			2024년		2022	2023	2024	2025
	Q2	Q3	Q4	Q1	Q2				
	전망 (연평균)					실적	전망 (전년도 4분기 대비 4분기)		
GDP(실질)	1.4	0.6	0.3	0.9	1.4	0.9	0.9	1.5	2.4
개인소비 ¹⁾	1.1	0.6	-0.1	0.4	0.7	1.7	1.3	1.1	2.0
민간투자	-	-	-	-	-	-	-	-	-
기업고정투자 ²⁾	4.2	0.1	-0.8	0.2	1.7	4.5	1.2	1.9	3.5
주택투자	1.1	2.3	1.0	-0.9	1.1	-18.8	-0.3	2.1	6.5
정부지출	0.2	0.6	1.0	0.7	1.2	0.9	1.7	0.8	0.6
연방	-1.2	-0.6	0.2	-0.2	1.3	0.1	1.4	0.4	0.3
주·지방	1.1	1.3	1.5	1.3	1.1	1.3	1.9	1.0	0.7
무역(순수출)	-	-	-	-	-	-	-	-	-
수출	-0.3	0.5	0.5	2.0	2.1	4.6	1.4	2.1	2.8
수입	3.4	-0.9	-2.5	-2.4	-0.3	1.5	0.9	0.1	2.5

주: 1) PCE 값으로 적용

2) 비주택 투자(장비, 비주택 구조물, 지적재산권 상품) 포함

자료: CBO, "An Update to the Economic Outlook: 2023 to 2025," 2023. 7. 26., p. 3, Table 2.

- (물가) 2023년 물가상승률은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수요의 공급초과 현상 완화 등의 이유로 둔화 전망
 - 이와 함께 노동시장 완화(softening) 및 주택 가격 상승 둔화(일부 지역은 감소)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점차 감소 전망
 - 실업률 상승 및 고금리 또한 물가 상승 압력의 하락요인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3년 하반기 노동시장은 완화(slacken)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2024년 말까지 고용 성장이 둔화, 실업률 상승,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임금 급여 하락 등 악화 전망
 - 이후 2025년부터 실업률 하락과 고용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질성장률 상승에 기여

- (이자율) 2023년 중반에 정책금리 추가 인상 전망 → 2024년 상반기에 하락 전망
 - 정책금리는 2023년 4분기에 5.4%로 감소, 이후 2024년 4분기에 4.5%, 2025년 4분기에 3.6%로 감소세 전망

표 3-I-5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십억달러, %)

재정	2023 Q2	2023 Q3	2023 Q4	2022	2023	2024	2025	
	분기별 전망 ¹⁾			실적	연도별 전망 ²⁾			
실질성장률 ³⁾	1.4	0.6	0.3	0.9	0.9	1.5	2.4	
물가	CPI-U ¹⁾	2.8	3.2	3.3	7.1	3.3	2.7	2.2
	PCE	3.0	3.0	3.1	5.7	3.3	2.6	2.2
실업률 ⁴⁾	3.6	3.8	4.1	3.6	4.1	4.7	4.5	

주: 1) 연평균

2) 전년도 4분기 대비 당해 연도 4분기

3) 전년 대비 증가율

4) 4분기 평균

자료: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3 to 2033," 2023. 2. 15., p. 35, Table 1-1, 2-1.

나. 추경

-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추경 세출예산 요청서 의회 제출(2023. 10. 20.)¹⁶⁸⁾
 - (배경) 의회에서 2024회계연도에 대한 정규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원 등의 안보 이슈가 포함된 추경 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
 - (주요내용 및 규모¹⁶⁹⁾)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국경안보 등 총 1,058억달러 편성
 - 우크라이나의 군사·경제·인도적 지원에 614억달러, 이스라엘의 군사·인도적 지원에 143억달러, 국경안보에 136억달러, 기타 인도적 지원에 112억달러, 인도태평양 지역 지원 및 해당지역의 잠수함 건조 능력 지원

168) 백악관, "Letter Regarding Critical National Security Funding Needs for FY 2024," 2023. 10. 20.,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3/10/20/letter-regarding-critical-national-security-funding-needs-for-fy-2024/><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 검색일자: 2023. 10. 20.

169) CRFB, "What's in the White House's \$106 Billion Supplemental Request?," 2023. 10. 24., <https://www.crfb.org/blogs/whats-white-houses-106-billion-supplemental-request>, 검색일자: 2023. 11. 20.

표 3-I-6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항목

(단위: 십억달러)

구분	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경제, 인도적 지원	61.4
이스라엘 군사, 인도적 지원	14.3
국경 안보	13.6
기타 인도적 지원	11.2
인도-태평양 지역 지원(잠수함 건조 능력 지원 포함)	5.4
총계	105.8

자료: CRFB, "What's in the White House's \$106 Billion Supplemental Request?," 2023. 10. 24.

- (진행 과정)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 하원에서는 이스라엘 지원(우크라이나 지원 제외)만 포함된 143억달러 규모¹⁷⁰⁾의 추경 세출예산안(H.R. 6126)이 통과(11. 2.)되어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며 통과되지 못함¹⁷¹⁾
 - (정부입장) 정부는 정책 성명서(SAP¹⁷²⁾)를 통해 이스라엘 지원만 포함된 추경 세출예산안에 거부권(veto) 행사 입장을 발표¹⁷³⁾
- 의회 상원, "국가안보 및 국경지원"을 위한 추경 세출예산 법안(National Security and Border Bill) 추진(2023. 12.)¹⁷⁴⁾
- (배경)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2023년 10월에 요청한 내용¹⁷⁵⁾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추경세출 예산안 추진
 - (주요 내용) 해외 안보 지원, 국경 안보 및 마약성 진통제(fentanyl) 대응, 기타 등으로 구분

170) CBO, "Estimated Budgetary Effects of the Israel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4," 2023. 11. 1., https://www.cbo.gov/system/files/2023-11/CBO_Estimate_for_the_Israel_Security_Supp_AppropAct_2024.pdf, 검색일자: 2023. 11. 20.

171) 하원에서는 226:196의 표결로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는 절차 진행 투표에서 막혀 48:51로 통과 실패

172) SAP: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173) OMB,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 Israel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4," 2023. 10. 3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11/Israel-Security-Supplemental-Appropriations-Act-SAP.pdf>, 검색일자: 2023. 11. 14.

174)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Senator Murray urges senate Republicans to move forward on 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 2023. 12. 6.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murray-on-senate-republicans-blocking-security-supplemental>, 검색일자: 2023. 12. 15.

175)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11월호 재정동향」, 2023. 11." 참고

- (해외 안보 지원) 이스라엘·우크라이나·인도-태평양 지역 지원, 가자(Gaza)지구 인도적 지원 등
- (국경 안보 및 마약성 진통제 대응)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성 진통제 대응을 위해 탐지 능력 현대화 및 개선, 남부 국경지역의 운영 소요(operational needs) 대응 및 불법 마약 제조와 연관된 국제 범죄 집단 타진

표 3-I-7 국가안보 및 국경지원 추경 세출예산 주요 항목

구분	규모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998
남부 국경 안보 및 마약성 진통제 대응(Border Security and Combatting Fentanyl)	107
기타(Other Provisions)	23
총계	1,128

(단위: 억달러)

자료: CRFB, "What's in the Senate National Security and Border Security Supplemental," 2023. 12. 6.

- (총 규모) CBO에서 비용추계 발표¹⁷⁶⁾한 동 법안의 예산 규모는 약 1,128억달러로 추산되며, 지난 10월에 정부가 요청한 규모(1,058억달러) 대비 6.8% 증가
 -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후 미 의회를 통과(2022. 5. 19.)한 첫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위한 추경 세출예산(P.L. 117-128) 규모는 408억달러로 추산(CBO 비용추계서¹⁷⁷⁾ outlays 기준)
- (법안 진행 현황) 동 법안은 이스라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정책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¹⁷⁸⁾
 - 이에 상원 세출위원장인 Patty Murray 민주당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법안의 지연은 푸틴에게 선물을 안겨주는 격이라며 비판¹⁷⁹⁾

176) CBO, "CBO Estimate of Senate Amendment 1371, the National Security and Border Act, 2024," 2023. 12. 6., <https://www.cbo.gov/publication/59817>, 검색일자: 2023. 12. 15.

177) CBO, "CBO Estimate for H.R. 7691, Additional Ukrain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2," 2022. 5. 11.,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5/hr7691_passed.pdf, 검색일자: 2023. 12. 20.

178)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Senator Murray on Republican Attempt to Pass Israel-Only Aid Bill, Urges Colleagues to Support Aid for Ukraine," 2023. 12. 6.,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senator-murray-on-republican-attempt-to-pass-israel-only-aid-bill-urges-colleagues-to-support-aid-for-ukraine>, 검색일자: 2023. 12. 15.

179)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Senator Murray Statement Following All-Senators Meeting with President Zelensky," 2023. 12. 12.,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senator-murray->

- (정부 입장) 정부는 정책성명서¹⁸⁰(SOP)를 통해 동 법안(H.R. 815)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동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이 연말에 고갈될 것이란 우려를 보임

다. 결산

- CBO(의회예산처), 2023회계연도(2022. 10. 1.~2023. 9. 30.)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3. 10. 10.)¹⁸¹
 - (세입) 2023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9.3% 감소한 4조 4,410억달러 예비 추정
 - 세입 감소분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득세¹⁸²는 전년 대비 17.3%(4,560억달러) 감소한 약 2조 1,770억달러로 예상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CBO는 향후 추가적인 정보가 수집되면 세부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언급
 - 한편 CBO는 개인소득세의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자본소득세(capital gains tax)가 덜 걸렸거나 예상보다 높았던 고용유지 세액 공제(ERTC¹⁸³) 청구 건수 및 자연 재해로 인한 캘리포니아 지역 등의 세금 납부(tax filing) 기한 연장에 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사회보험급여에는 전년 대비 8.7%(1,290억달러) 증가한 1조 6,130억달러
 - 법인세는 전년 대비 1.2%(50억달러) 감소한 4,200억달러

statement-following-all-senators-meeting-with-president-zelenskyy, 검색일자: 2023. 12. 15.

180) 백악관,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Senate Amendment to H.R. 815 – National Security and Border Act, 202," 2023. 12. 6.,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12/Senate-Amendment-to-H.R.-815-%E2%80%93-National-Security-and-Border-Act-2024-SAP.pdf>, 검색일자: 2023. 12. 15.

181)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3," 2023. 10. 10., <https://www.cbo.gov/publication/59544>, 검색일자: 2023. 10. 18.

182) 개인소득세의 경우, 환급(tax refunds) 규모가 전년 대비 52%(1조 2,900억달러)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입 감소에 기인

183) ERTC(Employee Retention Tax Credit)는 지출로 기록되지 않고 수입에 상쇄되어 기록되기에 ERTC가 증가하면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침(환급형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지출에 영향을 미침)

- 기타 주요 수입 중 관세수입은 수입 감소로 인해 20%(200억달러) 감소하였으며, 연준으로부터 전출된 잉여금¹⁸⁴⁾ 수입은 단기 이자율의 상승으로 연준의 이자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1,070억달러(전년도) → 10억달러 미만으로 감소

표 3-I-8 미국 FY2022 & FY2023 수입 결산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22 실적(A)	FY2023 예비결산(B)	증감(B-A)	증감율(B-A)/A
개인소득세	2,632	2,177	-456	-17
사회보험급여세	1,484	1,613	129	9
법인세	425	420	-5	-1
기타 소득	356	232	-124	-35
총계	4,896	4,441	-455	9.3

자료: CBO, "Monthly Budget review: September 2023," 2023. 10. 10., p. 1, Table 1를 재구성하여 작성

- (세출) 2023회계연도 세출은 전년 대비 2.2% 감소한 6조 1,310억달러 예비 추정
 - * timing shifts¹⁸⁵⁾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6조 1,220억달러
 - (주요 감소 분야) 아동 세액공제(CTC) 확대 조항 만료로 인한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s¹⁸⁶⁾)의 감소(41.4%)와 함께 주·지방·지역 정부 등에 지원한 코로나 재정지원금¹⁸⁷⁾(99.1%), 공중보건·긴급사회복지자금(PHSSEF¹⁸⁸⁾(69.6%) 등 감소
 - (주요 증가 분야) 주요 의무지출(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자지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산도 증가
 - 사회보장지출은 수혜자와 생계비(cost of living) 조정에 따른 평균지급금액(average benefit payment)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3%(1,350억달러) 증가

184) FAS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P.L. 114-94)법은 연방준비은행(FRB)의 잉여금이 100억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재무부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5) 지급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의 이동이 직전 회계연도로 잡히는 경우

186) Refundable Tax Credits는 recovery rebates(재난지원금)를 포함하여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Tax Credit, Premium Tax Credits(의료보험 관련 세액공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교육세액 공제) 등을 포함

187) 주/지방 정부 재정지원금은 1,060억달러(FY2022) → 10억달러(FY2023)로 감소

188) PHSSEF =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Emergency Fund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년 대비 각각 12.6%(960억달러), 4.1%(240억달러) 증가
 - * 메디케이드의 경우 코로나 대유행 대응 입법¹⁸⁹⁾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시까지 대상 자격을 확대한 규정에 기인하여 증가
 - 이자지출은 7,110억달러로 금리 인상에 주로 기인하여 전년 대비 33.1%(1,770억달러) 증가
 - 연방예금보험공사 예산¹⁹⁰⁾은 2023년 봄에 발생한 은행 파산¹⁹¹⁾ 사태로 인해 전년 대비 1,010억달러 증가
- (재정수지)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조 6,900억달러 예비 추정
- * timing shifts 조정할 경우, 전년 대비 28.0% 증가한 1조 6,810억달러
 - 2023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수정예산안(MSR; 2023년 7월 발표) 전망 수치(1조 5,430억달러) 대비 9.5% 확대
 - 2022년에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2022회계연도에 3,79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했으나,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¹⁹²⁾로 동 정책이 실제 이행 되지 않아 3,330억달러의 지출 감축¹⁹³⁾(outlay savings) 발생

189)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lief Act

190) FDIC 예산 비교: (FY2022) -90억달러 → (FY2023) 920억달러

191)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3월호 재정동향」, 2023. 3.” 참고

192)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7월호 재정동향」, 2023. 8.” 참고

193)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2023년 지출 감축분(3,330억달러)이 2022회계연도에 적자로 기록된 3,790억달러와 같지 않고 적은 이유는 2023년 6월에 최종 변경된 학자금 상환 정책(new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기인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재정 정책

1) 학자금 대출

■ 미국 대법원, 바이든 대통령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 위헌 판결(2023. 6. 30.)¹⁹⁴⁾¹⁹⁵⁾

- (배경) 2022년 8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1인당 최대 2만달러 한도에 대해 광범위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적용하는 행정조치 발표¹⁹⁶⁾
 - 2020년 혹은 2021년 개인소득이 12만 5천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만달러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¹⁹⁷⁾
 -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해당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채무자의 95%에게 적용되며, 4,300억달러의 대출원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됨¹⁹⁸⁾
 -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를 발동하기 위해 2003 고등교육 구제 기회법(HEROES Act: Higher Education Relief Opportunities for Students Act of 2003)의 학자금대출 관련 예외 조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다음 <참고> 참조)

194) 미국 대법원, "Syllabus- BIDE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v. NEBRASKA ET AL.," 대법원 판결문, 2023. 6. 30.,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2pdf/22-506_nmip.pdf, 검색일자: 2023. 7. 20.

19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upreme Court Invalidates Student Loan Cancellation Policy Under the HEROES Act," 2023. 7. 5.,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LSB/LSB10997>, 검색일자: 2023. 7. 5.

196) 미국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Biden Announces Student Loan Relief for Borrowers Who Need It Most," 보도자료, 2022. 8. 2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08/24/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student-loan-relief-for-borrowers-who-need-it-most/>, 검색일자: 2023. 7. 18.

197)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조치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3. 5. 31., <https://repository.kipf.re.kr/handle/201201/8748>, 검색일자: 2023. 7. 18. 참조

198) 미국 의회예산처, "Re: Costs of Suspending Loan Payments and Canceling Debt," 2022. 9. 26.,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9/58494-Student-Loans.pdf>, 검색일자: 2023. 7. 19.

〈참고〉

- 2003 HEROES Act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HEA: Higher Education Act) 4조 하의 연방정부 학자금대출에 적용되는 법적 혹은 규제 조항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waive or modify)**” 있음
 - 교육부 장관은 전쟁이나 다른 군사적 작전 혹은 국가적 위기사항 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개인이 금전적인 악화를 겪지 않도록 HEA 4조에 대해 철회 및 수정할 권한을 가짐
 - 영향을 받는 개인은 전쟁이나 군사작전 혹은 국가적 위기사항에 의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국가적 위기사항으로 선포된 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개인을 포함

- 학자금 대출 탕감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0월 21일 대법원은 판결 전 탕감 정책의 시행을 금지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이자 발생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며, 9월 1일부터 재개될 예정
- (판결) 미국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행정부가 HEROES Act를 근거로 4,300억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¹⁹⁹⁾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하에서 학자금대출이 무효화되는 조건을 제한하는 조항을 철회하고(waive), 소득요건에 따라 대출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수정했다고(modify) 주장
 - 그러나 대법원은 “수정(modification)”은 온건하게 혹은 사소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완전히 새롭고 근본적으로 다른 부채감면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것은 수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힘
 - 또한 과거 특정 요건이 “철회(waiver)”된 경우는 서류제출 면제 등 특정 법적 요건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는 정도였으며, 전면적 대출 무효화는 법적 혹은 규제 조항 철회의 범위를 극단적으로 넘어선 것으로 해석
 - 종합적으로,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이 가지는 규모와 범위를 고려했을 때, HEROES Act를 근거로 의회가 행정부에 해당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199) 9명의 대법관 중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3명의 진보성향 대법관들은 찬성하여 최종 위헌으로 판결

- 의회 하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자금 대출 상환 규칙 폐지(disapproval) 결의안(H.J.Res.88) 가결(2023. 12. 7.)²⁰⁰⁾
 - (배경) 기존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2022. 8. 24. 발표)²⁰¹⁾이 대법원의 위헌 판결²⁰²⁾(2023. 6. 30.)을 받게 되면서 정부는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IDR²⁰³⁾) 정책인 SAVE*(Save on a Valuable Education) 정책을 발표(2023. 8. 22.)²⁰⁴⁾
 - ※ (SAVE Plan) 대출자의 소득 및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된 상환 및 탕감 정책으로, 상환율 적용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연방빈곤선의 150%→225%²⁰⁵⁾로 변경, 상환율은 10%→5%로 하향 조정(=월 상환액 부담 경감)되었으며, 탕감 수혜를 받기 위한 대출금액(1만 2천달러 미만) 성실 상환 기간을 20년→10년으로 축소함
 - (결의안 주요 내용) 동 결의안은 정부의 신규 대출금 상환 정책(SAVE)을 폐지함과 동시에 향후 이와 비슷한 정책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제한
 - (재정 효과) CBO의 비용추계서²⁰⁶⁾에 따르면, 동 정책이 폐지되면 2023년에만 1,294억달러, 향후 10년 동안 2,607억달러의 의무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한편 CBO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학자금 탕감(최대 2만달러) 정책의 경우 총 4천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²⁰⁷⁾

200) 의회 하원, "FINAL VOTE RESULTS FOR ROLL CALL 705," 2023. 12. 7., <https://clerk.house.gov/evs/2023/roll705.xml>, 검색일자: 2023. 12. 20.

201) 요건에 따라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하는 정책

202)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7월호 재정동향」, 2023. 8." 참고

203) IDR: Income-Driven Repayment

204) 백악관, "FACT SHEET: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Launches the SAVE Plan, the Most Affordable Student Loan Repayment Plan Ever to Lower Monthly Payments for Millions of Borrowers," 2023. 8. 2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8/22/fact-sheet-the-biden-harris-administration-launches-the-save-plan-the-most-affordable-student-loan-repayment-plan-ever-to-lower-monthly-payments-for-millions-of-borrowers/>, 검색일자: 2023. 12. 20.

205) 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 빈곤선의 225%는 개인 기준 3만 2,805달러, 4인 가구 기준은 6만 7,500달러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 "How the New SAVE Plan Will Transform Loan Repayment and Protect Borrowers," 2023, <https://www2.ed.gov/policy/highered/reg/hearulemaking/2021/idrfactsheetfinal.pdf>, 검색일자: 2023. 12. 20.

206) CBO, "H.J. Res. 88, 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Congressional disapproval under chapter 8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f the rule submitt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lating to "Improving Income Driven Repayment for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and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Program," 2023. 9. 18., <https://www.cbo.gov/publication/59565>, 검색일자: 2023. 12. 15.

207) CBO, "Costs of Suspending Student Loan Payments and Canceling Debt," 2022. 9. 26., <https://www.cbo.gov/system/files/2022-09/58494-Student-Loans.pdf>, 검색일자: 2023. 9. 26.

- (정부 입장) 동 결의안은 중·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대출자 등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 회복을 위협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동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 표명²⁰⁸⁾

2) 재정지속가능성

■ 미국 의회 하원, 초당적 재정 포럼(BFF, Bipartisan Fiscal Forum) 출범(2023. 7. 13.)²⁰⁹⁾²¹⁰⁾

- (개요) BFF는 미국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급함을 알리고, 논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
 - 동 조직은 증가하는 채무 및 이자 비용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부터 비공식적인 활동 착수
- (조직 구성)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 1명씩 공동 의장²¹¹⁾을 맡고, 나머지 8명(공화당 4명, 민주당 4명)이 상임위원으로 활동
- (주요 원칙) ① 채무는 미래 재정과제에 대한 여력을 제한 ② 지속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 필요 ③ 상대에 대한 비난을 위한 공격이 아닌 해결책이 제시되는 비판 필요
- (향후 주요 논의 항목) BFF는 하원 의장(McCarthy)에게 전송한 서신²¹²⁾을 통해 국가채무, 높은 인플레이션, 이자지출, 기금 고갈(insolvency)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정위원회(fiscal commission) 설치 제안

208) 백악관, "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 H.J. Res. 88 – Providing for congressional disapproval under chapter 8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of the rule submitt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relating to "Improving Income Driven Repayment for the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 and the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FFEL) Program," 2023. 12. 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3/12/HJRes-88-SAP.pdf>, 검색일자: 2023. 12. 19.

209) CRFB, "Bipartisan Fiscal Forum Launched," 2023. 7. 13., <https://www.crfb.org/blogs/bipartisan-fiscal-forum-launched>, 검색일자: 2023. 8. 24.

210) The Hill, "An Effective fiscal commission must put taxes and entitlements on the table," 2023. 7. 18., <https://thehill.com/opinion/finance/4101474-an-effective-fiscal-commission-must-put-tax-cuts-and-entitlements-on-the-table/>, 검색일자: 2023. 8. 24.

211) Scott Peters(민주당 의원), Bill Huizenga(공화당)

212) Home page of Scott Peters, https://scottpeters.house.gov/_cache/files/5/d/5d9baf98-0742-4c7d-ade2-13e4bc096993/6BC17D4CF285D25793E717BE803A685C.7.13.23-bff-to-house-leadership-re-fiscal-commission.pdf, 검색일자: 2023. 8. 25.

3) 소득 분배

■ 의회예산처(CBO), 2020 가구소득 분배(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보고서 발표(2023. 11. 14.)²¹³⁾

- (개요) 본 보고서는 2020년의 가구 소득, 소득에 기반(자산조사)한 이전지출²¹⁴⁾ (means-tested transfers)(이하 이전지출), 연방세를 종합하여 2019년도(코로나19 이전)와 비교한 가구소득 분배 변화 제시

- 2020년 기준, 총 가구 수는 1억 2,900만 가구, 총소득 규모는 16조달러로 집계

[참고] 미국 가구 수 및 총소득 규모 변화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가율(B-A)/(A)
가구 수	1억 2,800만	1억 2,900만	0.8%
총소득 규모	\$15.4조달러	\$16조달러	3.9%

주: 가구 수 및 소득 규모의 실제 증가율은 각 항목의 시차 기준 단위 조정(반올림/내림)으로 인해 다를 수 있음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2023. 11. 14.

- (주요 소득 변화) 2020년 가구 소득 분배에 큰 영향을 주었던 대규모 정책은 재난 지원금²¹⁵⁾(recovery rebate credits)과 확대 실업수당으로 총소득을 8천억달러(가구당 6천달러) 증가시킴

- 2019년에는 총 5개 분위 중 상위 3개 분위가 이전지출의 23%만이 수혜를 입은 반면에 2020년에는 재난지원금과 확대 실업수당 지출만으로도 해당 지출의 반 이상을 지급 받음

- 2020년의 이전지출은 2019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연방세는 재난지원금(tax credits) 등의 영향으로 축소

- 이와 같은 변화는 재난 지원금 및 확대된 실업 수당과 같은 직접 지원금이 모든 분위에 걸쳐 적용된 것에 주로 기인

213)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2023. 11. 1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3-11/59509-household-income_2019-2020.pdf, 검색일자: 2023. 11. 20.

214) 자산조사 이전지출: 소액 자산 및 저소득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연방/주/지방정부의 현금(또는 현금에 준하는) 지원 지출(메디케이드 및 영양보조지원 프로그램(SNAP) 등)을 의미(참고 문헌 링크: <https://www.nber.org/system/files/chapters/c10253/c10253.pdf>)

215) 재난지원금은 현금형 세액공제, 확대된 실업수당은 이전지출로 분류

- 2020년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은 2019년 대비 상위 분위에 치우쳐졌으며, 최상위 분위(5분위; 35만 7,800달러)의 평균 소득은 최하위 분위(1분위; 2만 1,900달러)의 16배를 차지
-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상위 분위기를 제외한 하위 4개 분위 모두 소득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실현 자본 소득은 29% 증가
- (분위 전체 평균 소득) 2020년 모든 가구의 이전지출·연방세 전 평균 소득은 12만 3,400달러이나, 이전지출·연방세 후 평균 소득은 11만 2,700달러로 감소
- (최하위 분위 이전지출·연방세 전/후 비교) 2020년의 이전지출·연방세 소득 증가 영향은 110%로 2019년(64.9%) 대비 확대
- (최상위 분위 이전지출·연방세 전/후 비교) 2020년 이전지출·연방세 소득 감소 영향은 23%로 2019년 24%와 유사한 수치를 보임

표 3-I-9 이전지출·연방세 전/후 소득 증감 영향 비교(2019 vs 2020)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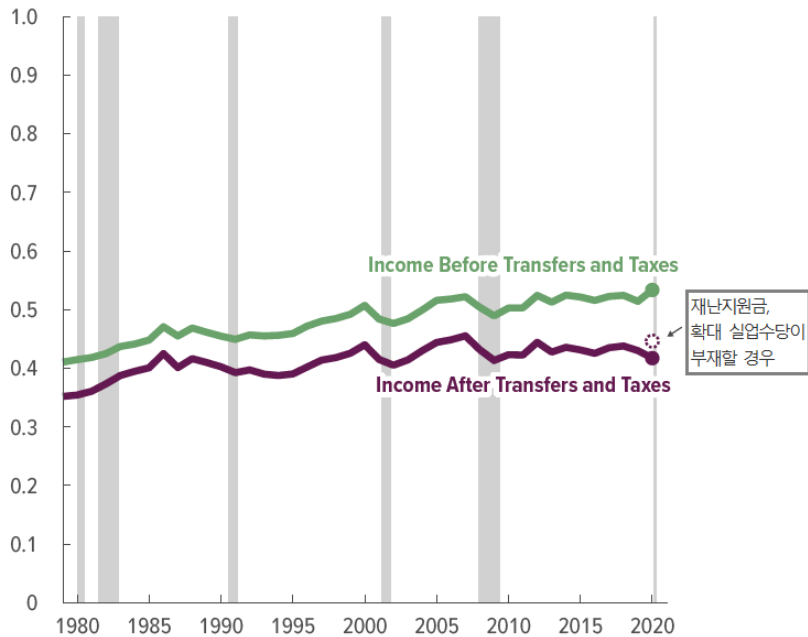
구분	연도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		(이전지출 및 연방세)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
분위 전체 (1~5분위) 평균 소득	2019년	121,500	-	17,300	=	104,200
	2020년	123,400	-	10,700	=	112,700
최하위 분위 (1분위) 평균 소득	2019년	24,200	+	15,700	=	39,900
	2020년	21,900	+	24,000	=	45,800
최상위 분위 (5분위) 평균 소득	2019년	337,400	-	81,000	=	256,500
	2020년	357,800	-	82,100	=	275,700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2023. 11. 14.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19," 2022. 11. 15.

- (소득 불평등 평가) 이전지출·연방세 후를 기준으로 한 2020년 소득 지니계수는 2019년 대비 0.013 개선되나, 연방세 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0.019 악화
 - 이전지출·연방세 후 소득은 이전지출·연방세 전 소득 대비 더 균등하게 분포
 - 이전지출·연방세 전을 기준으로 한 2020년 소득불평등도는 197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0.533이며, 이전지출·연방세 후를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는 2009년 (0.413)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0.417로 나타남

그림 3-I-4 1980~2020년 소득 지니계수 추이



자료: CBO,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2020," 2023. 11. 14., p. 16.

4) 기타

■ 의회예산처(CBO), 2024 연방 신용 프로그램(Federal Credit Programs) 비용 추정 보고서 발표(2023. 8. 16.)²¹⁶⁾

- (프로그램 구분) 2024 회계연도의 연방 신용(대출 및 대출보증) 프로그램은 총 131개²¹⁷⁾로 세분화될 전망이며, 이 중 CBO에서 분석 편의를 위해 크게 4개(① 주택·부동산 대출 ② 상업 대출 ③ 학자금 대출 ④ 소비자 대출) 프로그램으로 구분
- (총 신용 규모) 2024 회계연도에 이행될 대출 및 대출보증 총 규모는 약 1.6조달러로 추정
 - 대출 총 규모(1.6조달러)에서 직접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210억달러), 대출보장은 86%(1.3조달러)

216)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4," <https://www.cbo.gov/publication/59232>, 검색일자: 2023. 9. 12.

217) 131개 프로그램 중 112개 프로그램은 세출예산을 통해 재원이 배정되는 재량지출 프로그램이며, 나머지 19개 프로그램은 의무지출 프로그램으로 구성

표 3-I-10 FY2023 연방 신용 프로그램 추정

(단위: 십억달러)

구분	프로그램 수		규모		생애 비용			
	2023	2024	2023	2024	FCRA 방법	공정가치 방법	2023	2024
회계연도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2023	2024
종류별 구분								
주택·부동산 대출	40	41	1,915	1,233	-41.7	-13.7	27.6	26.2
상업 대출	71	83	173	231	2.1	5.3	15.7	25.1
학자금 대출	5	5	85	89	-1.4	19.3	7.7	25.4
소비자 대출 ¹⁾	2	2	*	*	*	*	*	*
총계	118	131	2,172	1,553	-41.1	10.9	51.1	76.7
부처 및 기관별 구분								
Fannie Mae and Freddie Mac	1	1	1,288	804	-33.8	-13.4	3.9	8.3
주택도시개발	21	22	327	247	-10.3	-2.2	12.4	11.4
재향군인	5	5	265	146	2.6	1.7	9.1	4.3
교육부	6	6	85	90	-1.4	19.4	7.8	25.5
농무부	45	48	66	74	-0.1	2.4	3.6	5.5
중소기업청	7	7	58	59	0.2	0.2	5.0	6.1
국제지원	11	6	30	46	0.3	2.8	2.2	7.7
에너지	3	14	18	44	2.0	*	4.4	3.2
수출입은행	5	5	16	12	-0.6	-0.6	0.2	-0.2
교통	3	3	12	5	*	0.1	1.6	0.7
기타	11	14	8	26	0.1	0.6	0.9	4.1
모든 부처/기관 총계	118	131	2,172	1,553	-41.1	10.9	51.1	76.7

주: 1) 재향군인의 직업 재활을 위한 대출(VA's vocational rehabilitation loans) 및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이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국무부에서 시행하는 본국 송환 대출(repatriation loans)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3," 2022. 6. 24., p. 4, Table 1.

CBO, "Estimates of the Cost of Federal Credit Programs in 2024," 2023. 9. 12., p. 5, Table 1.

- 분야별 기준으로는 주택·부동산* 신용 분야의 신용규모가 8,040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79%)을 차지

* 공공부문인 Fannie Mae and Freddie Mac의 수치를 제외할 경우 조정된 총 신용규모²¹⁸⁾(7,490억달러)의 주택·부동산 신용규모의 비중은 57%로 나타남²¹⁹⁾

218) 조정 후 총 신용규모(7,490억달러) = 조정 전 총 신용규모(Fannie Mae and Freddie Mac 포함)(1.6조달러) - 8,040억달러(GSEs; Fannie Mae and Freddie Mac)

219) 미 행정부는 총 신용추정 규모 중 Fannie Mae and Freddie Mac 소관의 신용 프로그램(8,040달러)은 연방 정부의 일반적인 정부 행위(governmental activities)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경우 총 연방신용 규모는 7,490억달러로 이에 따른 연방 신용규모에서 주택·부동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79% → 57%로 하

- (생애 비용) 2024 회계연도에 대출 및 대출보증의 생애비용(lifetime costs)은 연방 여신개혁법(FCRA²²⁰) 기준으로는 109억달러,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767억달러 발생
 - * 공정가치의 경우 시장위험(market risk; 생산성 및 고용 등 거시경제 상황 반영)이 적용된 수치로서 일반적으로 FCRA에 따른 비용보다 높은 비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공정가치로 측정한 총 신용규모 대비 신용 프로그램 비중(subsidy rate²²¹)은 연방 여신(FCRA) 기준 수치 대비 평균 4.2%p(658억달러) 높게 나타남²²²

나. 경제동향

1) 국가 신용등급 하락

-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미국 신용등급 AAA → AA+로 강등(2023. 8. 1.)²²³
 -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조정하며 그 이유로 i) 재정 거버넌스의 후퇴 ii) 일반정부 재정 악화 iii) 중기적 재정이슈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
 - (거버넌스의 후퇴) 지난 이십년 동안 채무한도 협상이 막판까지 교착상태에 머무르다가 한도를 넘기기 직전에 결의안이 도출되는 현상이 반복되어 옴
 - 지난 6월 채무한도가 2025년 1월까지 지연되도록 양당 간 합의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20년간 재정 및 부채 이슈에 대한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옴
 - 채무한도 협상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다가 막판에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재정운영의 신뢰성이 손상됨
 - (일반정부 재정 악화) 같은 등급의 다른 국가 대비 미국의 일반정부 채무의 수준은 높은 편이며 향후 3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향 조정됨 → 다만 CBO는 이 분야를 정부행위로 간주

220) Federal Credit Reform Act of 1990(FCRA)는 1990년에 도입된 연방여신개혁법으로 정책금융에 대한 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연방예산상의 신용 측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221)
$$\text{subsidy rate} = \frac{\text{cost}}{\text{amount disbursed}} \Rightarrow \text{subsidy rate이 양수일 경우는 적자(비용), 음수일 경우는 흑자 (savings)를 뜻함}$$

222) FCRA 비용 평균 비중: 0.7%/공정가치 비용 평균 비중: 4.9%

223)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 "Fitch Downgrades the United States' Long-Term Ratings to 'AA+' from 'AAA'; Outlook Stable," 논평자료, 2023. 8. 1., <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downgrades-united-states-long-term-ratings-to-aa-from-aaa-outlook-stable-01-08-2023>, 검색일자: 2023. 8. 4.

- 일반정부 적자는 2022년 GDP의 3.7%에서 2023년 6.3%, 2024년 6.6%, 2025년 6.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반정부 채무는 2025년 GDP의 118.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A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39.3%와 AA등급 국가의 중간값인 44.7%보다 두 배 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채무수준과 높은 이자율이 지속됨에 따라 2025년 수입 대비 이자비율은 (interest-to-revenue ratio)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2.8%와 A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1%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임
- (중기적 재정문제 대처 미흡) 미국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이 부재하며,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 및 메디케어의 비용 증가에 대해 중기적 관점에서의 대처에 미흡
 - AAA등급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중기재정계획이(Medium-Term Fiscal Framework)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절차가 복잡하여 지난 십년 동안 경제적 위기와 감세 및 새로운 지출의 증가로 인해 잇따른 채무 증가 발생
 - 이자율 증가와 채무 잔고 증가로 인해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며, 재정정책 개혁이 없다면 고령화와 보건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임
 - CBO는 미국의 공적연금이 2033년, 메디케어의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신탁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적시에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재정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에 미흡

〈참고〉

- 피치는(Fitch)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및 무디스(Moody's)와 함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힘
 - S&P는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고 있음
- 피치는 국가의 신용등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장기외화 발행자 디폴트 등급을(Long-Term Foreign-Currency Issuer Default Rating, IDR) 주로 사용하며, 이는 외화로 표시된 국채의 위험을 분석하여 국가의 채무상환 의지 및 역량을 평가
 - AAA → AA+ → AA → AA- → A+ → A → A- ... (이하 생략) 순으로 등급 설정
 - 피치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2023. 3.) 유지해 오고 있음

자료: Fitch Ratings, "Ratings Criteria-Sovereigns," <https://www.fitchratings.com/criteria/sovereigns>, 검색일자: 2023. 8. 22.

- 미국의 경제규모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경제는 불황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여건의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는 자금조달 면에서 매우 특별한 융통성을 가짐
 - 그러나 신용여건의 긴축, 기업투자의 악화, 소비의 둔화 등으로 미국의 경제는 2023년 4분기와 2024년 1분기에 약한 불황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
 - 더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연준은 미국 국채를 포함한 자산을 매각해 나갈 것이며, 정부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해당 결정이 임의적이며(arbitrary) 오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입장 표명²²⁴⁾
 - 옐런 장관은 피치의 양적 신용평가모형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은 2018~2020년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으나,
 - 이번 등급 강등 결정에 사용된 지표들은 현재 많이 개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표들의 값을 기반으로 발생한 등급의 변화를 현재 시점에서 발표했다고 지적
 - 피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적인 자산이며, 미국의 경제 기초여건이 강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
- 신용평가사 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Aaa 안정적 → Aaa 부정적으로 하향(2023. 11. 10.)²²⁵⁾
 - (하향 결정배경) 무디스(Moody's)의 신용평가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바뀐 주된 원인은 미국의 재정 여력(fiscal strength)의 하방위험이 미국만의 특별한 신용강점으로 더 이상 완전히 상쇄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
 - * 무디스²²⁶⁾와 함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올해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강등하였으며,²²⁷⁾ S&P는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 → AA+로 하향 조정

224) 미국 재무부, "Statement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보도자료, 2023. 8. 1.,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665>, 검색일자: 2023. 8. 23.

225) Moody's, "Moody's changes outlook on United States' ratings to negative, affirms Aaa ratings," 2023. 11. 10., https://www.moody's.com/research/Moodys-changes-outlook-on-United-States-ratings-to-negative-affirms-Rating-Action-PR_480815?cy=emea&lang=en, 검색일자: 2023. 11. 20.

226) 무디스는 Aaa>Aa1>Aa2>A1>A2>A3...순으로 등급 설정하며, 피치 및 S&P는 AAA → AA+ → AA → AA- → A+ → A → A- ...순으로 등급 설정

- 이자율이 높은 현재 배경하에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 없다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의회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은 부채 감당능력의 악화를 막기 위한 재정계획이 정권교체 때마다 일관되게 실행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
- (재정정책 부재) 미국 국채의 수익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채 감당능력(debt affordability)²²⁸에 대한 압력은 증가함
 - 추가적인 정책결정이 없다면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이자 지출은 2033년 GDP의 26%로(2022년 9.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적자는 2033년 GDP의 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 부채 부담(debt burden)보다 부채 감당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재정여력에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 (정치적 분열) 최근 채무 한도(debt limit)의 벼랑 끝 협상, 사상 최초의 하원의장 해임, 예산안 합의에 불발로 인한 섀도우 위험증가 등은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보여줌
 - 무디스는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지속될 것이며, 재정적자의 확대를 반전시키기 위한 다년간의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에는 중기적 재정계획이 법률적 재정준칙이나 양당 간 합의 등의 제도로 부재하다는 점은 미국이 Aaa 등급의 다른 국가들과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점임

2) 국채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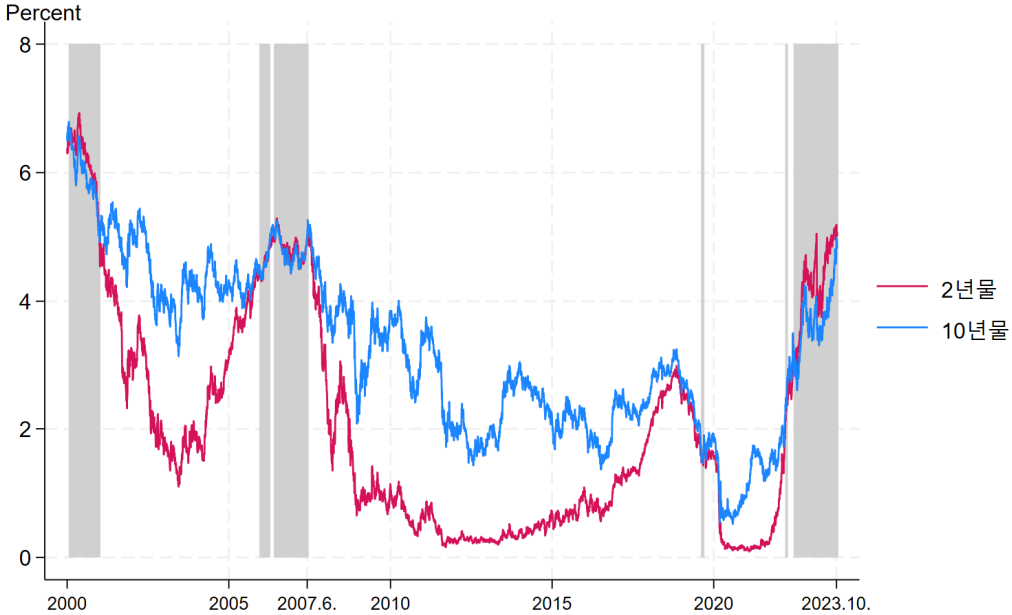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년래 최고치 기록(2023. 10. 19.)²²⁹
 -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19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98%를 기록하며, 2007년 6월 이후 16년래 최고치로 나타남

227)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관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8월 재정동향」, 2023. 9., https://www.kipf.re.kr/tmpl/skin/padata/popup_2.jsp?dataNo=6037&atchFileId=FILE_000000027930Sv1&fileSeq=0&downloadType=Overseas 참조

228) 수입 대비 이자지출 비중을 의미

229)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 https://home.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interest-rates/TextView?type=daily_treasury_yield_curve&field_tdr_date_value=2023, 검색일자: 2023. 10. 25.

그림 3-I-5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2000~2023년 10월)



주: 회색 음영부분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기간으로,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게 나타난 기간을 표시함
 자료: 미국 재무부, “Daily Treasury Par Yield Curve Rates(2000년~2023년 10월)” 자료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CRFB)²³⁰⁾ 성장률 기대치보다 이자율이 더 높아지면서 (R>G), 장기 채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²³¹⁾²³²⁾
 - 향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금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존의 채무규모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
 - 높은 금리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부채 스파이럴을(spiral) 야기할 가능성 제시

230)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초당적인 비영리단체로서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중에게 전달하며, 상원 및 하원 예산위원회, 의회예산처(CBO), 관리예산처(OMB), 감사원(GAO) 등에서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인 조직임

231)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Interest Rates Remain Near Record Highs,” 2023. 10. 6., <https://www.crfb.org/blogs/interest-rates-remain-near-record-highs>, 검색일자: 2023. 10. 25.

232) 반면 MIT 명예교수 Olivier Blanchard는 현재의 높은 이자율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상승률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준이 물가상승률을 조절한 후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낮아질 것이며 r<g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그는 현재도(2023년 1월 기준) r-g에서 중요한 실질 이자율은 낮은 편이며, 앞으로도 r-g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것으로 전망. 또한 코로나로 인한 재정적 대응으로 r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그 크기는 작을 것으로 추정(출처: Olivier Blanchard, “Secular Stagnation is Not Over,” 2023. 1. 24.,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secular-stagnation-not-over>, 검색일자: 2023. 10. 26.)

- 현재 국채금리 수준은 미국 의회예산처가(CBO) 올해 2월 전망기준선으로 제시한 10년물 국채금리(3.9%) 대비 1.0%p 높음
-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 이러한 격차를 향후 10년간 가정할 경우 2033년까지 채무는 의회예산처의 전망보다 2조 8천억달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 또한 2025년에는 이자비용이 국방지출을 넘어서고 2026년에는 메디케어(Medicare)의 순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책임연방예산위원회는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재정개혁을(fiscal reform) 통해 추가적인 차입을 제한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고, 더 강한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은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10월 25일 기준, 2년물 국채금리는 5.08%이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95%로 2년물 국채금리가 13bp 더 높음
 - 연준은 2022년 FEDS Notes에서 장단기 금리차는 단기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며, 장단기 금리차의 예측력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기인한다고 분석²³³⁾
 - 2019년 경제성장이 느려지자 시장참여자들은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했고, 이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으며, 통화당국은 경제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
 - 2022년 1월 기준, 최근의 장단기 금리차 축소 현상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이 i) FOMC가 단기금리를 향후 6개 분기 이상으로 높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ii) 자연이자율이 역사적인 수준으로 낮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해석 제시

233) 미국 연방준비제도, “(Don't Fear) The Yield Curve, Reprise,” 2022. 3. 25.,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dont-fear-the-yield-curve-reprise-20220325.html>, 검색일자: 2023. 10. 25.

3) 통화정책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2023. 7. 26.)²³⁴⁾²³⁵⁾
 - 7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률(federal funds rate) 5.0-5.25% → 5.25-5.5%로 0.25%p 인상
 - (경제활동) 6월 FOMC 회의 정책결정문에서는 경제가 완만한(modest)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한 데 반해, 7월에는 중간의(moderate)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여 전달에 비해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 (고용 및 물가) 7월 FOMC 정책결정문에서 고용시장은 견조하며(robust),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전월의 정책결정문과 동일하게 언급
 - 기자회견문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는 여전히 장기목표인 2%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잘 안착되어 있다고 평가
 - 5월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상승률은 3.8%이며(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4.6%),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0%(근원 CPI 상승률은 4.8%)

표 3-I-11 미국 2023년 5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PCE 물가	5.4	5.1	4.2	4.4	3.8
재화	4.7	3.6	1.6	2.1	1.1
서비스	5.7	5.8	5.5	5.5	5.3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7	4.7	4.6	4.7	4.6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May 2023," Table 11, 2023. 6. 30.,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6/pi0523.pdf>, 검색일자: 2023. 7. 27.

234)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July 2023 FOMC Meeting Statement," 2023. 7. 2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726a1.pdf>, 검색일자: 2023. 7. 27.

235)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Opening Statement July 26, 2023," 2023. 7. 26.,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esconf20230726.htm>, 검색일자: 2023. 7. 27.

- 물가상승률은 작년 중반보다는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로 회귀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은 추세 이하의 성장과 노동시장 여건의 악화를 동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2%의 물가상승률로 회귀하는 목표에 대해 강력한 정책공약을(strongly committed) 피력
- 추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가 금리인상(additional policy firming)의 적절한 정도를 결정할 것을 밝힘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2023. 9. 20.)²³⁶⁾

- (결정배경)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활동은 지속적인(solid)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
 - (7월 표현) 보통의(moderate)²³⁷⁾ 속도로 성장 → (9월 표현) 지속적인(solid) 속도로 성장
 - 고용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7월 표현) 고용은 탄탄하며(robust) → (9월 표현) 고용은 둔화되었으며(slowed)
 - 물가인상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자구 변화 없음

236)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0920a1.pdf>, 검색일자: 2023. 9. 22.

237) 연준이 경제상황을 표현할 때 "건조한(solid)"이 "보통의(moderate)"보다 더 좋은 상황이며, "보통의(moderate)"는 "완만한(modest)"보다 더 나은 상황이다.(출처: WSJ,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moderate' and 'modest' growth in the Fed's beige book? Which is better?," 2016. 1. 19., <https://www.wsj.com/articles/whats-the-difference-between-moderate-and-modest-growth-in-the-feds-beige-book-which-is-better-1453217728>, 검색일자: 2023. 9. 22.)

표 3-I-12 미국 2023년 7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3년 3월	2023년 4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PCE 물가	4.2	4.3	3.8	3.0	3.3
재화	1.6	2.1	1.0	-0.6	-0.5
서비스	5.5	5.4	5.2	4.9	5.2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6	4.6	4.5	4.1	4.2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July 2023," Table 11, 2023. 8. 31.,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8/pi0723.pdf>, 검색일자: 2023. 9. 22.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³⁸⁾ 기준금리는 유지하되 연은의 자산보유는 지속해서 축소해 나갈 것이며, 연준의 강력한 목표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2%로 회귀하는 것임을 강조
 - 현재 연준은 추가적인 이자율 인상의 강화정도(firming)의 적절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밝힘
 - 연준은 현재의 통화정책이 통제적이며(restrictive) 경제활동, 고용, 물가상승률에 하방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현재까지 진행된 긴축적 통화정책의 정도를 고려하여, FOMC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
 -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준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의 중간값 전망치를 2.1%로 수정
 - 6월 전망치: 1.0% → 9월 전망치: 2.1%
 - 노동시장은 타이트한(tight)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현재 2% 보다 상당히 위에 있음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은 3.3%,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6%로 전망²³⁹⁾

238)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September 20, 2023," 기자회견문,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0920.pdf>, 검색일자: 2023.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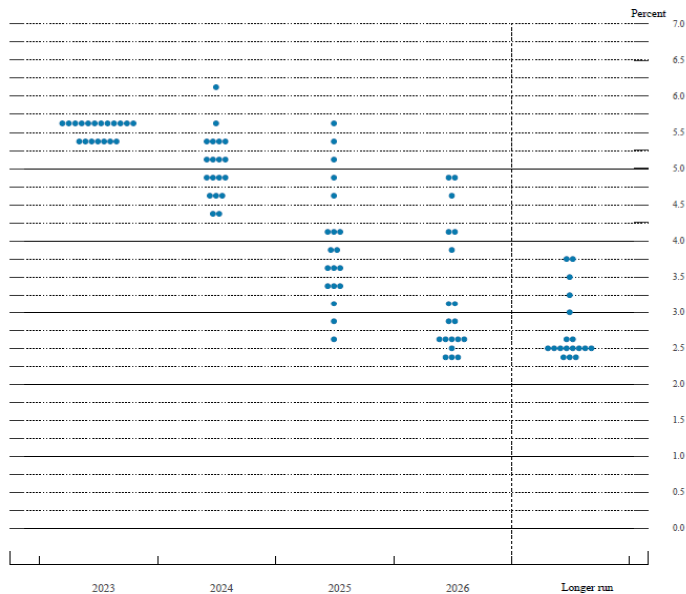
표 3-I-13 미국 2023년 9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1	1.5	1.8	1.8	1.8
- 6월 전망치	1.0	1.1	1.8		1.8
실업률	3.8	4.1	4.1	4.0	4.0
- 6월 전망치	4.1	4.5	4.5		4.0
PCE 물가상승률	3.3	2.5	2.2	2.0	2.0
- 6월 전망치	3.2	2.5	2.1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7	2.6	2.3	2.0	
- 6월 전망치	3.9	2.6	2.2		
기준금리 전망	5.6	5.1	3.9	2.9	2.5
- 6월 전망치	5.6	4.6	3.4		2.5

-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9. 20., p. 2, Table 1

그림 1-I-6 미국 2023년 9월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 주: 각 점은 각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목표 기준금리의 중간점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9. 20., p. 4, Figure 2

239)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jtabl20230920.pdf>, 검색일자: 2023. 9. 22.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2023. 11. 1.)²⁴⁰⁾

- (결정 배경) 1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활동은 3분기에 강세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음
 - (9월 표현) 견조한(solid) 속도로 성장 → (11월 표현) 강세(strong pace)를 보임
 - 고용 증가율은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하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9월 표현) 고용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slowed) → (11월 표현) 완화되었으며(moderated)
 -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지구 변화 없음

표 3-I-14 미국 2023년 9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PCE 물가	4.0	3.2	3.4	3.4	3.4
재화	1.2	-0.4	-0.2	0.7	0.9
서비스	5.4	5.1	5.3	4.9	4.7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7	4.3	4.3	3.8	3.7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september 2023," p. 9, Table 7, 2023. 8. 31.,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10/pi0923.pdf>, 검색일자: 2023. 11. 8.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⁴¹⁾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장기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으며, 물가가 2% 수준에서 유지되기까지는 전도요원하다고(long way to go) 발언
 -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이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40)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3. 11.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1101a1.pdf>, 검색일자: 2023. 11. 6.

241)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November 1, 2023," 기자회견문, 2023. 11. 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1101.pdf>, 검색일자: 2023. 11. 8.

- 노동시장은 타이트한(tight) 상태이나, 노동 참가율 상승 및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이민자 유입률로 인해 노동자들의 공급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은 더 나은 균형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
-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²⁴²⁾ 인해 금융시장 여건은 최근 몇 달간 상당히 경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 중
 - 장기 국채금리의 인상으로 신용여건에 영구적이며 주목할 만한(material) 영향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할 수 없음
 - 또한 단기에서 정책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장기 국채 금리의 증가를 야기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높은 국채 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차입비용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특히 모기지 금리는 8%선에 육박하여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현재의 통화정책이 물가상승률을 장기적으로 2%로 회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한적이라는(restrictive)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책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 (2023. 12. 13.)²⁴³⁾

- (결정배경)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은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지난 3분기에 강세를 보이던 성장은 둔화된 것으로 보임
 - (9월 표현) 강세(solid pace)를 보이며 성장 → (12월 표현) 경제성장은 둔화됨 (slowed)

2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10월호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6년래 최고치 기록」, https://www.kipf.re.kr/tmpl/skin/padata/popup_2.jsp?dataNo=6071&atchFileId=FILE_000000028289Ws7&fileSeq=0&downloadType=Overseas, 검색일자: 2024. 11. 6. 참조

243)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3. 9.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31213a1.pdf>, 검색일자: 2023. 12. 15.

- 고용증가율은 올해 초보다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 (9월 표현) 고용증가율은 둔화되었으며(slowed) → 고용증가율은 완화됨(moderated)
- 물가상승률은 작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9월 표현) 물가상승률은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 → (12월 표현) 물가상승률이 다소 감소하였다는 표현이 추가됨

표 3-I-15 미국 2023년 10월 물가상승률(PCE 물가)

(단위: %)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2023년 9월	2023년 10월
PCE 물가	3.2	3.4	3.4	3.4	3.0
재화	-0.4	-0.2	0.7	0.9	0.2
서비스	5.1	5.2	4.8	4.7	4.4
PCE 물가, 식품 및 에너지 제외	4.3	4.3	3.8	3.7	3.5

주: 물가상승률은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개인소비지출) 지표를 사용하여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계산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Personal Income and Outlays, October 2023," p. 9, Table 7, 2023. 11. 30.,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11/pi1023.pdf>, 검색일자: 2023. 12. 15.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²⁴⁴⁾ 물가상승률은 고점에서 낮아졌으며, 이러한 물가상승률 하락에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너무 높은 상태이며, 향후 물가상승률 하락의 성과나 전도가 불투명하다고 밝힘
 -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경제활동과 물가상승률에 하방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파월 의장은 연준은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을 2%로 회귀하는 것에 매진할 것이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은 강한 노동시장 여건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
 - 파월 의장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인한 비용 압력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층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 연준은 높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크게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힘

244)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December 13, 2023," 기자회견문, 2023. 12. 13.,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31213.pdf>, 검색일자: 2023. 12. 20.

-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tight) 상태이며, 강력한 고용창출과 노동 공급의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2%대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준은 내년 2024년 PCE 물가상승률을 2.4%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6년에서야 2%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다음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 참조)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2.6%, 물가상승률은 2.8%,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5.4%로 전망²⁴⁵⁾
 - 올해 9월 전망치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승하였으며 실업률 전망은 동일하고 PCE 물가상승률 전망은 하락하였으며 기준금리 전망은 하락

표 3-I-16 미국 2023년 12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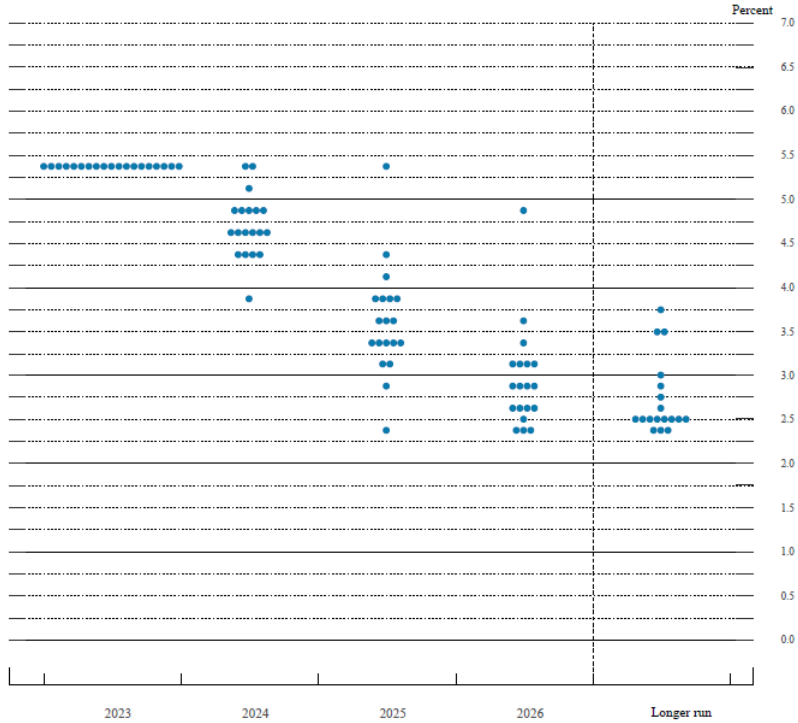
(단위: %)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6	1.4	1.8	1.9	1.8
- 9월 전망치	2.1	1.5	1.8	1.8	1.8
실업률	3.8	4.1	4.1	4.1	4.1
- 9월 전망치	3.8	4.1	4.1	4.0	4.0
PCE 물가상승률	2.8	2.4	2.1	2.0	2.0
- 9월 전망치	3.3	2.5	2.2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3.2	2.4	2.2	2.0	
- 9월 전망치	3.7	2.6	2.3	2.0	
기준금리 전망	5.4	4.6	3.6	2.9	2.5
- 9월 전망치	5.6	5.1	3.9	2.9	2.5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12. 13., p. 2, Table 1

245)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12. 13.,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ptabl20231213.pdf>, 검색일자: 2023. 12. 15.

그림 1-I-7 미국 2023년 12월 FOMC 기준금리 전망 점도표



주: 각 점은 각 FOMC 위원들이 전망하는 목표 기준금리의 중간점을 나타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3. 12. 13., p. 4, Figure 2

4) 베이지북에 나타난 경제동향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7. 12.)²⁴⁶⁾²⁴⁷⁾

- (경제활동) 5월 하순 이후 전반적인 경제활동은 약간 증가되었다고 보고됨
 - 5개의 지역에서는 약간 혹은 보통수준(moderate)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으며, 2개 지역에서는 약간 혹은 완만하게(modest)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서비스 소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관찰된 반면, 몇몇 판매업자들은 변동지출이(discretionary spending)²⁴⁸⁾ 약화된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

246)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5. 23.~2023. 6. 29. 동안의 데이터 반영.

247)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7. 12.,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712.pdf, 검색일자: 2023. 7. 14.

248) 변동지출은 가계의 필수재 구매를 위한 기초생활비를 제외한 지출을 의미

- 관광과 여행부문의 경제활동은 견조했으며(robust), 외식숙박업 부문의 응답자들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호황을 예상
-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는 변화가 없거나 보통의 성장세를 보임
- 제조업 부문 활동은 절반의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다른 절반의 지역에서는 감소
- 운송 부문 활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이거나 보합세를 보임
- 은행들의 대출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은행권은 대부분 침체된 상황에 있음
-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는 꾸준히 존재
- 종합적으로 주거용 및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은 약간 감소
- 에너지 부문 활동은 감소
- 전반적으로 향후 몇 달간 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저성장을 기대
- (노동시장)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자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노동 수요는 건재하였으나(healthy), 일부 서베이 응답자들은 고용이 특정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응답
 - 고용주들은 구직자를 구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특징은 특히 보건, 운송, 여행숙박업과 고속철 일자리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응답
 - 많은 지역에서 노동 가용성이(labor availability) 증가하였으며, 고용주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높아진 이직률이(turnover rate)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보고
 -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인상속도가 다소 진정되었으며, 서베이 응답자들은 임금 상승률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나 그와 근접한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응답
- (물가상승률) 물가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인상속도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보고됨
 - 소비자물가는 일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업이 투입 비용 증가를 전가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몇몇 지역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물가에 더 민감해짐에 따라 물가인상을 주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다른 기업들은 수요가 견고하여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 향후 몇 달 동안 물가는 일반적으로 변동이 없거나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됨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9. 6.)²⁴⁹⁾²⁵⁰⁾

- (경제활동) 7월과 8월 동안 경제성장은 완만하게(modest) 이루어졌다고 보고됨
 - (소비 및 저축)
 - 관광에 대한 소비지출은 기대보다 더 강세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관광 부문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이연된 소비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보고 있음
 - 다른 소매 지출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특히 비필수재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 몇몇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저축은 고갈되었으며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차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고 보고됨
 - (생산 및 판매)
 - 신차 판매가 많은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이는 수요 상승이 아닌 재고 수준이 향상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고됨
 - 일부 지역의 제조업 응답자들은 공급망 지연이 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으며, 기존의 주문을 더 잘 처리하게 되었다고 응답
 - 대부분 지역의 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주문들은 안정적이거나 줄어들었으며, 제조 물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자 주문 잔량도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택 판매재고의 물량은 제한적이었음
 - 에너지 부문 경제활동은 대부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됨
 - (금융 및 신용시장)

249)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6. 30.~2023. 8. 27. 동안의 데이터 반영. 각 지역 연준들은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250)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5.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531.pdf, 검색일자: 2023. 6. 26.

- 많은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 맞춘 주택의 건설은 자금조달 비용과 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대출 잔고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몇몇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용대출에 대해 채무불이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노동시장) 전지역에서 고용증가율은 대폭 하락(subdued)
-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의 구인 가능성과 제한적인 구직자들의 규모가 지속됨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됨
 - 몇몇 지역에서 노동자 유지율은(worker retention) 향상되었으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이나 운수업과 같은 특정부문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노동비용의 압박이 증가하였으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업들은 단기간 내에 임금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됨
- (물가상승률) 대부분의 지역에서 물가상승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 및 소비재 부문에서 감소율이 증가세를 보임
- 일부 지역의 서베이 응답자들은 손해보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강조
 - 일부 지역의 서베이 응답자들은 기업들이 비용 압력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투입요소 가격의 상승률이 판매가격 상승률보다 덜 하락하였다고 보고됨
 -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기업들의 이윤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됨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10. 18.)²⁵¹⁾²⁵²⁾
- (경제활동) 9월 동안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활동은 거의 변화가 없었음
- (소비 및 생산)
 - 소비자 지출은 혼조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가격 및 제품의 차이로 인해 일반 도매상들과 자동차 판매자들에게서 두드러짐

251)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8. 28.~2023. 10. 5. 동안의 데이터 반영. 각 지역 연준들은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252)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10. 18.,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1018.pdf: 2023. 10. 26.

- 관광 부문 경제활동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몇몇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여행 지출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부동산 시장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주택 재고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제조업 활동은 혼조세를 보였으나, 다수의 지역에서 제조업 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금융시장)
 - 은행부문 응답자들은 약간에서 완만한(slight to modest) 정도의 대출수요 하락이 나타났다고 응답
 - 소비자들의 신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됨
- (경제전망)
 - 가까운 기간에 경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거나 약간 약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판매에 중요한 요소인 휴가철 쇼핑 시즌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는 엇갈리게 나타남
- (노동시장) 전국적으로 노동시장 타이트함은(tightness) 지속적으로 완화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반적인 고용이 약간에서 완만한 정도로 향상되었으며, 기업들의 긴급구인 현상은 약해졌다고 보고됨
 - 몇몇 지역에서는 구인자 후보군이 확대되면서 근로조건 협상 경향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 및 노동 유지가 향상되었다고 보고됨
 - 임금 상승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완만에서 보통 정도로(modest to moderate) 유지되었다고 보고됨
 - 많은 지역의 응답자들은 임금 제안에 대한 거절이 적어졌다고 응답함
 - 다수의 기업응답자들은 높은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상을(compensation) 줄이고 있으며, 성과기반 보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응답
 - 예를 들어 높은 임금 대신 원격근무를 허용하거나 신입사원 상여금(sign-on bonuses) 축소
 - 건강보험 등 기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피고용자에게 전가
-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물가의 완만한(modest) 상승이 지속됨
 - 제조업자들의 경우 투입비용증가는 약해지거나 안정화되었으나, 서비스부문 기업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연료비용, 임금, 보험비용 상승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 판매가격은 투입비용보다 더 느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물가 민감도가 상승하며 기업들이 비용압력을 전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목표로 하는 이윤 마진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전반적으로 기업들은 향후 수 분기 동안 가격은 상승하나, 지난 수 분기보다는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표 3-I-17 연준의 베이지북 자구 변화(2023년 4월~2023년 9월)

대상 기간	6월 (7월 발표)	7, 8월 (9월 발표)	9월 (10월 발표)
경제활동	약간 증가	완만하게 성장	거의 변화 없음
제조업	소폭 상승하거나 감소	새로운 주문 안정적이거나 감소	혼조세
소비 지출	변동지출 감소	약세를 보임	혼조세
부동산	건물의 건축 감소	제한적 주택 재고	거의 변화 없음
노동시장	고용 완만하게 증가	고용증가율 대폭 하락(subdued)	고용이 약간에서 완만한 정도로 상승
임금	지속적으로 상승	노동비용 압박 증가	임금 상승률이 완만에서 보통정도로 유지됨
물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하락	완만한 상승

주: 완만한(modest) 것은 보통수준(moderate)보다 더 낮은 강도를 의미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년 7월, 9월, 10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표(2023. 11. 29.)²⁵³⁾²⁵⁴⁾

- (경제활동) 종합적으로 경제활동은 지난 보고기간보다 둔화됨(slowed)
 - (소비 및 생산)
 - 소매판매는 혼조세가 유지되었으며,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재량지출 품목과 내구재들의 판매는 감소

253) 베이지북은 12개 지역연방준비은행이 지역별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보고서로 연 8회, 통상 연방 공개시장조작위원회 회의 2주 전 발표. 금번 보고서는 2023. 10. 6.~2023. 11. 16. 동안의 데이터 반영. 각 지역 연준들은 금융기관들의 보고서 및 기업, 지역사회, 경제학자, 시장전문가 등으로부터 인터뷰와 설문지를 받아 정보를 수집.

254)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 10. 29.,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1129.pdf, 검색일자: 2023. 12. 15.

- 여행 및 관광 부문의 경제활동은 견조하게 나타났으며, 운송 서비스 부문의 수요는 부진하게 나타남
 - 제조업 부문 경제 활동은 혼조세를 보이며, 해당부문에 대한 제조업자들의 낙관적 전망은 약화됨
 - 상업용 부동산 부문의 경제활동 둔화는 지속되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가 약간 감소하였으며 주택의 재고수준이 높아졌다고 보고됨
- (금융시장)
- 기업대출의 수요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부동산 대출 부문에서 두드러짐
 - 소비자들의 신용은 상당히 양호하게 유지되었으나, 몇몇 은행들에서 개인 채무 불이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경제전망)
- 향후 6~12개월 동안 경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 (노동시장) 노동수요는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 내지 완만한(flat to modest) 고용의 상승이 보고됨
- 다수의 지역에서 구직자들이 증가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고용유지율도 개선되었다고 보고됨
 - 해고나 자연감축을 통한 현원 감소가 보고되었으며, 일부 고용주들은 저성과자들을 방출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이 없다고 밝힘
 -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공급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고(tight) 보고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금은 완만 내지 보통 정도의(modest to moderate) 상승세가 유지됨
 - 많은 지역에서 임금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초임의 감소가 보고됨
 - 그러나 일부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성과자들과 전문기술 노동자들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됨
-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은 완화되었으나,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화물 및 선박 운송비용은 많은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나, 식료품 지출비용은 증가하였다고 보고됨
- 몇몇 지역에서는 철과 목재와 같은 건설부문에서의 투입비용이 안정되거나 감소하였다고 보고됨
- 수도·전기·가스(utilities)와 보험 비용이 상당히 증가
-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조업자들보다 더 수월하게 물가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통(moderate) 정도의 물가상승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3-I-18 연준의 베이지북 자구 변화(2023년 6월~2023년 11월)

대상 기간	6~8월 (9월 발표)	9월 (10월 발표)	10월~11월 중순 (11월 발표)
경제활동	완만하게 성장	거의 변화 없음	둔화됨
제조업	새로운 주문 안정적이거나 감소	혼조세	혼조세
소비 지출	약세를 보임	혼조세	혼조세
부동산	제한적 주택 재고	거의 변화 없음	주택 재고 증가
노동시장	고용증가율 대폭 하락(subdued)	고용이 약간에서 완만한 정도로 상승	고용이 포함 내지 완만하게 상승
임금	노동비용 압박 증가	임금 상승률이 완만에서 보통 정도로 유지됨	임금상승률이 완만 내지 보통 정도로 유지됨
물가	물가상승률 전반적으로 하락	완만한 상승	물가상승이 완화됨

주: 완만한(modest) 것은 보통수준(moderate) 보다 더 낮은 강도를 의미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 "The Beige Book," 2023년 9월, 10월, 11월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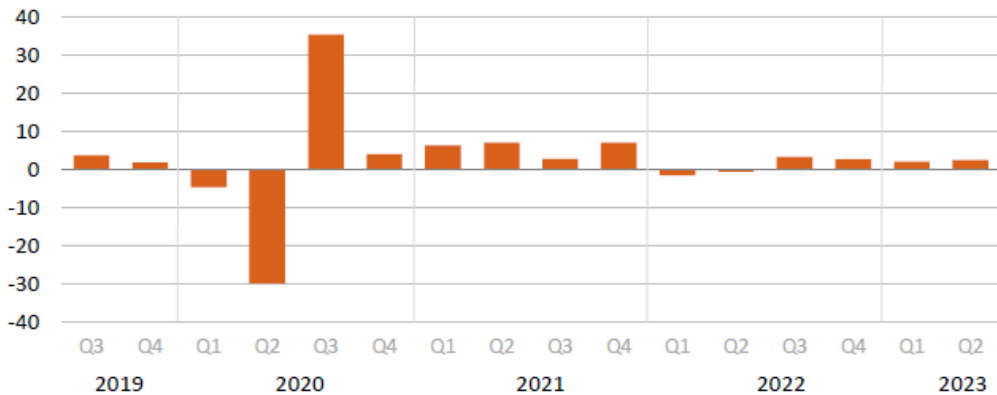
5) 주요 경제지표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2분기 GDP(속보) 발표(2023. 7. 27.)²⁵⁵⁾

- 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4%를(연율 기준) 기록하여 전 분기(2.0%) 대비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6%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1.8%)에 비해 상승
 - 전기 대비 2023년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4.7%이며, 명목 GDP 규모는 26조 8,350억달러로(계절조정된 연율 기준) 집계됨

그림 3-I-8 미국 분기별 실질 성장률(2019년 3분기 ~ 2023년 2분기)

(단위: 전기 대비 연율, %)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2023. 7., p. 1

- 2023년 2분기 실질 GDP의 증가에는 개인소비, 비주택 고정투자, 정부지출, 민간 재고투자의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증가폭은 수출 및 주택 고정투자의 감소로 인해 일부 상쇄됨
 -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개인소비 성장률 기여도: 1.12%p(재화: 0.16%p, 서비스: 0.95%p)

255) 미국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2023(Advance Estimate)," 2023. 7. 27.,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07/gdp2q23_adv.pdf, 검색일자: 2023. 8. 1.

- 비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83%p
- 정부지출 성장률 기여도: 0.45%p(연방정부: 0.06%p, 주·지방정부: 0.39%p)
- 민간 재고투자 성장률 기여도: 0.14%p
- 수출 성장률 기여도: -1.28%p
- 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16%p
- 개인소비 지출의 증가에는 재화와 서비스 부문 모두의 지출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서비스 부문 내에서 증가율 기여가 가장 큰 부분은 주택, 보건, 금융 서비스, 보험, 교통서비스 부문으로 나타남
- 재화지출의 증가는 여가관련 제품, 교통수단, 휘발유 및 기타 에너지재 지출의 증가에 기인
- 비주택 고정투자의 증가에는 기자재, 건축물 및 지적재산물의 증가가 반영됨
- 주·지방 정부의 지출 증가에는 주·지방 정부 피고용인의 보수 인상과 건축물에 대한 총투자 인상이 반영됨
- 2023년 1분기 대비 2분기의 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민간 재고투자의 호전(upturn) 및 비주택 고정투자 증가율의 상승이(0.6% → 7.7%) 주로 반영됨
 - 전분기 대비 민간 재고투자 성장률 기여도 변화: -2.14%p → 0.14%p
 - 전분기 대비 비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변화: 0.08%p → 0.99%p
- 이러한 GDP의 상승추세는 수출의 감소(7.8% → -10.8%), 개인소비 증가율의 감소(4.2% → 1.6%), 정부지출 증가율의 감소(5.0% → 2.6%)로 인해 상쇄됨
 - 전분기 대비 수출 성장률 기여도 변화: -0.86%p → -1.28%p
 - 전분기 대비 개인소비 성장률 기여도 변화: 2.79%p → 1.12%p
 - 전분기 대비 정부지출 성장률 기여도 변화: 0.85%p → 0.45%p

표 3-I-19 미국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2년			2023년		
	2022년	Q1	Q2	Q3	Q4	Q1	Q2
GDP(실질)	2.1	-1.6	-0.6	3.2	2.6	2.0	2.4
개인소비	2.7	1.3	2.0	2.3	1.0	4.2	1.6
재화	-0.5	-0.1	-2.6	-0.4	-0.1	6.0	0.7
서비스	4.5	2.1	4.6	3.7	1.6	3.2	2.1
민간투자	4.0	5.4	-14.1	-9.6	4.5	-11.9	5.7
고정투자	-0.2	4.8	-5.0	-3.5	-3.8	-0.4	4.9
비주택	3.9	7.9	0.1	6.2	4.0	0.6	7.7
주택	-10.6	-3.1	-17.8	-27.1	-25.1	-4.0	-4.2
민간 재고투자	-	-	-	-	-	-	-
순수출	-	-	-	-	-	-	-
수출	7.1	-4.6	13.8	14.6	-3.7	7.8	-10.8
수입	8.1	18.4	2.2	-7.3	-5.5	2.0	-7.8
정부지출	-0.6	-2.3	-1.6	3.7	3.8	5.0	2.6
연방	-2.5	-5.3	-3.4	3.7	5.8	6.0	0.9
주·지방	0.7	-0.4	-0.6	3.7	2.6	4.4	3.6
GDP(명목)	9.2	6.6	8.5	7.7	6.6	6.1	4.7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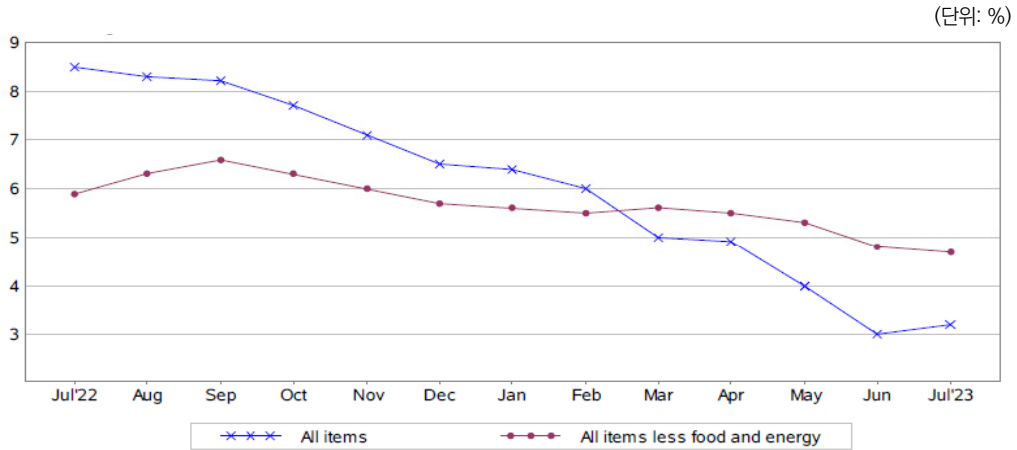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Secon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p. 7, Table 1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7월 CPI 발표(2023. 8. 10.)²⁵⁶⁾

- 미국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조정) 0.2%이며, 전년 동월 대비 3.2%를 기록
 -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은 전월 대비(계절조정) 0.2%이며, 전년 동월 대비 4.7% 기록
 - CPI 상승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문은 주거부문의 물가지수 상승이며, 전월 대비 0.4% 증가

256) 미국 노동통계국(BLS), "Consumer Price Index- July 2023," 보도자료, 2023. 8. 10., <https://www.bls.gov/news.release/pdf/cpi.pdf>, 검색일자: 2023. 8. 16.

그림 3-I-9 미국 CPI 상승률(2022년 7월 ~ 2023년 7월)



주: 1.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로 계절조정되지 않은 수치임
 2. All items는 CPI 상승률을 의미하며, All itmes less food and energy 는 식료품 에너지 제외 CPI 상승률(근원 CPI 상승률) 의미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BLS), "Consumer Price Index - July 2023," 보도자료, 2023. 8. 10., p.2, Chart2

표 3-I-20 미국 2023년 7월 CPI 상승률

(단위: %)

	가중치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5월	6월	7월	6월	7월
CPI	100.0	0.1	0.2	0.2	0.2	3.2
식료품	13.4	0.2	0.1	0.2	0.3	4.9
가정식	8.6	0.1	0.0	0.3	0.4	3.6
외식	4.8	0.5	0.4	0.2	0.2	7.1
에너지	7.0	-3.6	0.6	0.1	0.3	-12.5
에너지 상품	3.7	-5.6	0.8	0.3	0.6	-20.3
연료유	0.1	7.7	-0.4	3.0	3.0	-26.5
자동차 연료	3.5	-5.6	0.9	0.2	0.5	-20.2
에너지 서비스	3.3	-1.4	0.4	-0.1	0.6	-19.9
식료품·에너지 제외	79.6	0.4	0.2	0.2	0.2	4.7
상품	21.3	0.6	-0.1	-0.3	-0.3	0.8
서비스	58.3	0.4	0.3	0.4	0.3	6.1
주거	34.7	0.6	0.4	0.4	0.4	7.7
의료	6.4	-0.1	0.0	-0.4	-0.3	-0.1
교통	5.9	0.8	0.1	0.3	0.2	9.0

주: 1.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계절조정된 변화율이며,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계절조정되지 않음.

2. 가중치는(relative importance) 2023년 6월 기준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Consumer Price Index - July 2023," 보도자료, 2023. 8. 10., p. 9, Table 1

■ 미국 노동통계국(BLS), 2023년 8월 고용통계 발표(2023. 9. 1.)²⁵⁷⁾

- 2023년 8월 미국의 실업률은 3.8%, 경제활동 참가율은 62.8%로 나타남
 - 실업률은 2022년 2월 이래 최고치 기록하였으며, 지난 19개월 동안 4% 미만으로 유지되어 왔음²⁵⁸⁾

표 3-I-21 미국 2023년 8월 고용통계

(단위: 천명)

	2022년 8월	2023년 6월	2023년 7월	2023년 8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생산가능인구 ¹⁾	264,184	266,801	267,002	267,213	211
경제활동인구	164,714	166,951	167,103	167,839	739
경제활동참가율(%)	62.3	62.6	62.6	62.8	0.2%p
취업자 수	158,694	160,994	161,262	161,484	222
인구 대비 취업률(%) ²⁾	60.1	60.3	60.4	60.4	0.0%p
실업자 수	3,021	5,957	5,841	6,355	514
실업률(%)	3.7	3.6	3.5	3.8	0.3%p

주: 1. 월별 실업률은 계절조정된 수치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생산가능인구는 비기관인구(civilian noninstitutional population)로, 기관(감옥, 노인보호소 등)에서 생활하지 않고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 16살 이상의 사람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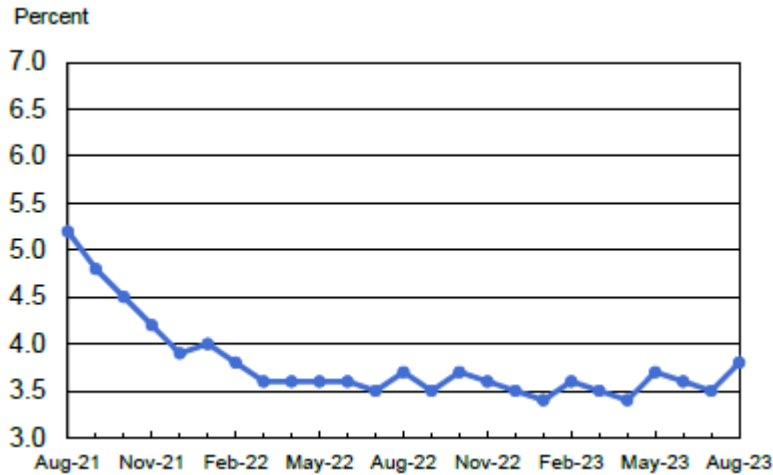
2) 인구 대비 취업률(employment-population ratio)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News Releas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보도자료, 2023. 9. 1., p. 7, Summary table A, 검색일자: 2023. 9. 22.

257) 미국 노동통계국, "The Employment Situation," 2023. 9. 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BeigeBook_20230531.pdf, 검색일자: 2023. 6. 26.

258) 미국 백악관, "Remarks by President Biden on the August Jobs Report," 2023. 9.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peeches-remarks/2023/09/01/remarks-by-president-biden-on-the-august-jobs-report-2/>, 검색일자: 2023. 9. 22.

그림 3-I-10 미국 실업률(2021년 8월~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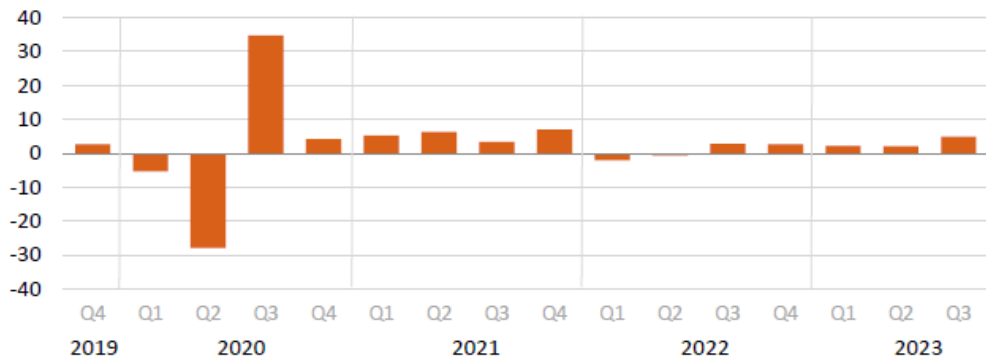
주: 월별 실업률은 계절조정된 수치로 가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 "News Release Employment Situation – January 2023," 보도자료, 2023. 9. 1., p. 1, Chart1,
 검색일자: 2023. 9. 22.

- 미국 경제분석국(BEA), 2023년 3분기 GDP(속보) 발표(2023. 10. 26.)²⁵⁹⁾
 - 2023년 3분기 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4.9%(연율 기준)를 기록하여 전 분기(2.1%) 대비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전년 동기 대비 2022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1.7%)에 비해 상승
 - 2023년 3분기 전기 대비 명목 GDP 성장률은 8.5%이며, 명목 GDP 규모는 27조 6,235억달러(계절조정된 연율 기준)로 집계됨

259) 미국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23(Advance Estimate)," 2023. 10. 26., https://www.bea.gov/sites/default/files/2023-10/gdp3q23_adv.pdf, 검색일자: 2023. 11. 1.

그림 3-I-11 미국 분기별 실질 성장률(2019년 4분기~2023년 3분기)

(단위: 전기 대비 연율, %)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2023. 10. 26., p. 1

- 2023년 3분기 실질 GDP의 증가에는 개인소비, 민간 재고투자, 수출, 정부지출, 주택 고정투자의 증가가 반영되었으며, 증가세는 비주택고정투자의 감소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해 상쇄됨
 - 부문별 GDP 성장률 기여도는 다음과 같음
 - 개인소비 성장률 기여도: 2.69%p(재화: 1.08%p, 서비스: 1.62%p)
 - 비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00%p
 - 주택 고정투자 성장률 기여도: 0.15%p
 - 민간 재고투자 성장률 기여도: 1.32%p
 - 정부지출 성장률 기여도: 0.79%p(연방정부: 0.39%p, 주·지방정부: 0.40%p)
 - 순수출 성장률 기여도: -0.08%p(수출: 0.68%p, 수입: -0.75%p)
 - 개인소비 지출의 증가에는 재화 및 서비스 부문 모두에서의 지출 증가가 반영됨
 - 재화지출의 증가에는 비내구재 지출과(주로 처방약) 여가재와 운송수단에 대한 지출이 중점적으로 기여
 - 서비스 부문 내에서 증가율 기여가 가장 큰 부분은 주택, 공과금, 보건, 금융, 보험, 음식 및 숙박업 부문으로 나타남
 - 2023년 2분기 대비 3분기의 GDP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개인소비(0.8% → 4.0%), 민간 재고투자, 연방 정부지출(1.1%→6.2%) 증가율의 상승, 수출(-9.3%→6.2%) 및 주택 고정투자(-2.2% → 3.9%)의 호전(upturn)이 반영됨

- 전분기 대비 민간 재고투자 성장률 기여도 변화: 0.00%p → 1.32%p
- 이러한 GDP의 상승추세는 비주택 고정투자(7.1% → -0.1%), 주·지방정부 지출 증가율의 감소(4.7% → 3.7%), 수입 증가율의 증가(-7.6% → 5.7%)로 인해 상쇄됨

표 3-I-22 미국 2023년 3분기 경제성장률

(단위: %)

	연간 성장률	분기별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						
		2022년				2023년		
		2022년	Q1	Q2	Q3	Q4	Q1	Q2
GDP(실질)	1.9	-2.0	-0.6	2.7	2.6	2.2	2.1	4.9
개인소비	2.5	0.0	2.0	1.6	1.2	3.8	0.8	4.0
재화	0.3	-1.2	-0.3	-0.7	0.0	5.1	0.5	4.8
서비스	3.7	-2.7	0.0	-1.6	0.5	0.5	0.9	3.3
민간투자	4.8	6.2	-10.6	-7.6	3.4	-9.0	5.2	8.4
고정투자	1.3	7.2	-0.2	-4.3	-5.4	3.1	5.2	0.8
비주택	5.2	10.7	5.3	4.7	1.7	5.7	7.1	-0.1
주택	-9.0	-1.8	-14.1	-26.4	-24.9	-5.3	-2.2	3.9
민간 재고투자	-	-	-	-	-	-	-	-
순수출	-	-	-	-	-	-	-	-
수출	7.0	-4.6	10.6	16.2	-3.5	6.8	-9.3	6.2
수입	8.6	14.7	4.1	-4.8	-4.3	1.3	-7.6	5.7
정부지출	-0.9	-2.9	-1.9	2.9	5.3	4.8	3.3	4.6
연방	-2.8	-6.9	-3.9	1.2	9.8	5.2	1.1	6.2
주·지방	0.2	-0.4	-0.8	3.8	2.8	4.6	4.7	3.7
GDP(명목)	9.1	6.2	8.5	7.0	6.5	6.3	3.8	8.5

주: 1. 분기별 성장률은 계절조정된 전기 대비 연율로 나타냄

2. 연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성장률 의미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Year 2023(Advance Estimate)," p. 7, Table 1

II 일본²⁶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3년 4월 1일~2024년 3월 30일

표 3-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내용
2023. 7. 20.	일본 내각부, 연중전망 발표
2023. 7. 25.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 발표
2023. 7. 25.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
2023. 7. 31.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
2023. 7. 3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3. 9. 1.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1분기 예산사용현황 발표
2023. 9. 5.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 발표
2023. 9. 8.	일본 내각부, 2023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3. 10. 31.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
2023. 10. 31.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발표
2023. 11. 2.	일본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
2023. 11. 10.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
2023. 12. 5.	일본 내각부,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
2023. 12. 5.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2분기 예산사용현황 발표
2023. 12. 8.	일본 내각부, 2023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
2023. 12. 22.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26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은 선임연구원(jeunlee@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²⁶¹⁾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²⁶²⁾ 발표(2023. 7. 25.)²⁶³⁾
 - 2024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²⁶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1」을 바탕으로 경제·재정의 일체적인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 세출 전반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낭비를 철저히 배제하면서 중요 정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
 - 각 부처는 이하 기준에 따라 개산 요구를 시행하며, 제출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함
 - (연금·의료 등 관련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에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5,200억엔)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요구
 -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 「일본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제3항²⁶⁵⁾에서 규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는 「방위력

261) 일본의 2024회계연도는 2024년 4월~2025년 3월.

262)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하며,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의에서 사전에 개산 요구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개산 요구를 하도록 함.

출처: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263)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3. 7.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sy230725c.pdf>, 검색일자: 2023. 8. 3.

264)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구조적인 변화 및 과제 극복을 위해,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혹 증가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6월 16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6월 재정동향」, p.27을 참조,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67>, 검색일자: 2023. 8. 7.

265) 방위력정비계획 대상 경비란 자위대의 관리 및 운영, 이에 관한 사무와 조약에 따른 외국군대 주둔 및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에 기초한 미국 정부 책무 수행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것으로 각 연도의 일반회계 예산(방위성 소관에 한정)에 계상되는 경비(방위성이 실시하는 정보 시스템의 정비 및 관리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디지털정 설치법 경비를 포함)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미일안전보장협약위원회 아래에 설치된 오키나와현에 소재한 주둔군(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 군대)의 시설 및 구역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특별행동위원회가 정리하고 협의위원회가 승인한 오키나와현 주둔군의 시설 및 구역 정리, 통합 및 축소, 오키나와현 주둔군 운용방법 조정 방안과 관련된

정비계획」²⁶⁶⁾을 바탕으로 소요 비용을 요구

-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교부세·교부금 및 지방특례교부금 합계는 「신경제·재정재생계획」²⁶⁷⁾과의 정합성에 유의하여 요구
- (의무적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하며, 의무적 경비를 삭감한 경우 동일한 금액을 재량적 경비로 요구 가능, 2024년도 경제총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가감산
- (동일본 대지진 부흥 대책 관련 경비) 기존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면서 재해 지역 부흥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기타 경비)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의 90%(요구 기초 금액) 범위 내에서 요구
- (주요 정책 추진 범위) 구조적 임금인상 실현, 민관(官民) 제휴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빠른 실현과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주요 정책 추진 범위’를 설정
- 각 성장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요구 기초 금액의 차액(〈그림 3-II-1〉의 (A)의 3배’, ‘의무적 경비가 전년도 당초 예산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의 해당 차액(〈그림 3-II-1〉의 (B)의 3배’의 합계 금액 범위 내에서 주요 정책 추진 관련 예산을 요구

계획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2. 2006년 5월 1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협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주둔군 또는 자위대 부대나 기관의 편성, 배치 또는 운용 형태 변경에 관하여 정부가 강구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

3. ‘자위대법 제 100조의 5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주로 국민 등 수송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항공기 취득에 필요한 경비
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069_20230623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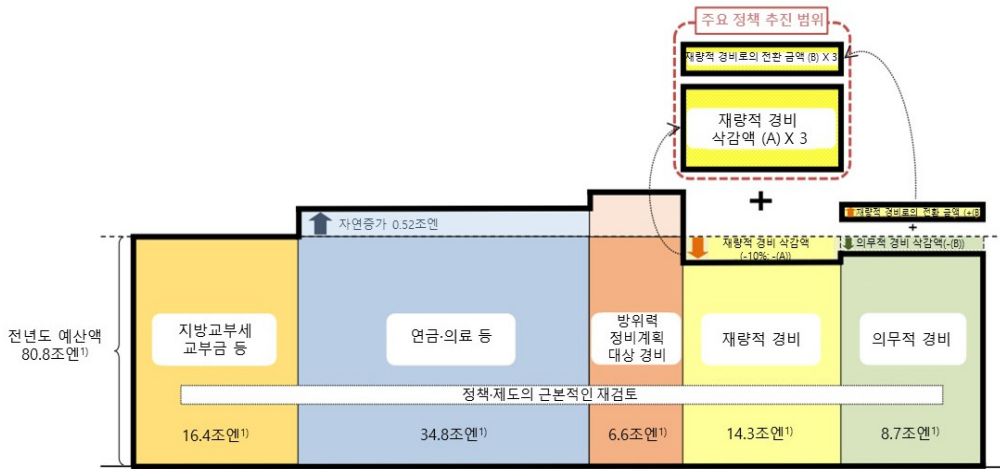
266) 「국가방위전략」(2022년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결정 및 각의결정)에 따라 「방위력정비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방위력 정비, 유지 및 운용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실시. 출처: 일본 방위성, 「防衛力整備計画」, 2022. 12. 16.

267)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18」에서 책정된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은 ‘경제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디플레이션 탈출·경제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의 세 가지 주요 개혁을 가속 및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5년도까지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고 GDP 대비 채무잔고를 안정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로 설정. 새로운 재정건전화 목표와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을 전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실질적으로 동일수준) 확보하는 것을 지방세출 수준 목표로 설정.

출처: 일본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 2018 について」, 2018. 6. 1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18/2018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8. 16.

- 정책·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각 경비 간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필요 사항에 대처하도록 하며, 고물가 대책 등 중요한 정책은 필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 범위’ 등에 포함하여 적절한 요구를 실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시행
 - 또한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²⁶⁸⁾에서 제시한 「어린이·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의 구체화에 대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를 시행

그림 3-II-1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방위력 강화자금으로의 편입, 코로나19 및 원유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를 제외한 금액. 해당 경비를 포함한 전년도 예산액은 89.1조엔, 의무적 경비는 17.1조엔.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イメージ)」, 2023. 7.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sy230725a.pdf>, 검색일자: 2023. 8. 3.

268) 젊은 세대가 희망에 따라 결혼하여 희망하는 누구나 아이를 갖고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이나 가정 상황에 있어도 분리되지 않고 소중하게 성장하여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사회 실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어린이·육아 정책 강화를 위한 방침으로 2023년 6월 13일 각의결정. 「어린이·육아지원 가속화 플랜」을 통해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어린이·육아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젊은 세대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모든 어린이·양육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확충, 맞벌이·공동 육아 추진, 아동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만들기를 위한 의식 개혁 등이 있음.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こども未来戦略方針」, 2023. 6. 13., <https://www.mhlw.go.jp/content/12601000/001112705.pdf>, 검색일자: 2023. 8. 16.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²⁶⁹⁾ 발표(2023. 9. 5.)²⁷⁰⁾

-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은 전년 대비 8조 3,845억엔(7.9%) 증가한 114조 3,852억엔 규모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총액이 10년 연속 100조엔을 초과
- 일반회계 세출총액 중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인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4조 5,033억엔(7.0%) 증가한 68조 8,544억엔 규모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 대비 9,891억엔(6.0%) 증가한 17조 3,883억엔 규모
 - 국채 상환 및 이자 지불에 소요되는 비용인 국채비는 전년 대비 2조 8,291억엔(11.5%) 증가한 28조 1,424억엔 규모

표 3-II-2 일본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단위: 억엔, %)

구분	전년도 예산액 ¹⁾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개산요구액 ²⁾	요망액 ³⁾	합계	증감액	증감률(%) ⁴⁾
일반세출 ⁵⁾	643,511	646,990	41,554	688,544	45,033	7.0(5.8)
지방교부세·교부금	163,992	173,883	-	173,883	9,891	6.0(7.5)
국채비	252,503	281,424	-	281,424	28,921	11.5(10.9)
합계	1,060,006	1,102,298	41,554	1,143,852	83,845	7.9(7.3)

주: 1) 전년도 예산액은 방위력 강화자금으로의 편입 3조 3,806억엔, 코로나19 및 원유가격·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4조 엔,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경제 긴급 대응 예비비 1조엔을 제외한 금액. 2024회계연도 예산요구액에서 이와 관련된 금액은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개산 요구 기본방침」(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概算要求に当たっての基本的な方針について」, 2023. 7. 25., <https://www.mof.go.jp/policy/budget/sy230725c.pdf>, 검색일자: 2023. 8. 3.)을 바탕으로 요구함. 또한 전년도 예산액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과의 비교·대조를 위해 재조합함.

2) 일본은 예산 편성 시 전년 8월 말까지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데 이를 '개산 요구'라고 함

출처: 藤井 亮二, 「予算編成過程における「概算要求基準」~実効性が弱まるシーリング効果~, 『経済のプリズム』, 第179号, 일본 상의원, 2019. 8., p. 2.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keizai_prism/backnumber/h31pdf/201917901s.pdf, 검색일자: 2023. 8. 14.

3) 요망액은 예산요구액 중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

4) 괄호안의 수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의 증감률

5)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3. 9. 5., p. 1 을 바탕으로 재구성

269) 예산 편성 시 각 성에서 다음 회계연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 요구를 재정당국에 제출하는 '개산요구액'과 주요 정책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인 '주요 정책 추진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요망액'의 합계를 의미

270)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一般会計概算要求・要望額」, 2023. 9. 5.,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y050905.pdf, 검색일자: 2023. 9. 6.

■ 일본 내각부, 2024회계연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2023. 12. 5.)²⁷¹⁾

- 2024회계연도 예산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²⁷²⁾에 따라 편성하며, 고물가 대응,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임금 인상,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 탈피, 민간 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
 - 인적 투자, 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 촉진, GX(Green Transformation), DX(Digital Transformation), 반도체, AI 등의 분야에서의 국내 투자 촉진, 해양, 우주 등 프론티어 개척, 스타트업 지원,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강화를 포함한 포용적인 사회 실현 등 새로운 자본주의²⁷³⁾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
 -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²⁷⁴⁾ 등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를 포함한 외교·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같은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필요한 예산 조치를 강구하는 등 탄력적인 예산 편성을 실시
- 2024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2」,²⁷⁵⁾ 2021년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경제·재정 일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나 중요한 정책에 대한 ‘선택의 폭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지속

271) 일본 내각부, 「令和6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23.12.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2023/r6_yosanhensei.pdf, 검색일자: 2023. 12. 11.

272)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방침 2023」은 일본이 직면한 역사적·구조적인 변화 및 과제 극복을 위해, 30년 만의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욕 증가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23년 6월 16일 각의 결정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6월 재정동향」, p. 27을 참조,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67>, 검색일자: 2023. 8. 7.

273) ① 성장전략 ② 분배전략 ③ 포용적 사회 실현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은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원 도시국가구상 등 지방활성화, 탄소중립 실현, 경제안보 정책이 있으며, 분배 전략으로는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는 임금 인상, 인적 투자 강화, 차세대 중산층의 유지가 있고, 포용적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 및 여성 참여 증대, 고독·고립 대책, 저출산 대책·어린이 정책, 소비자 보호로 구성되어 있음

274)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관련 정책은 대규모 재해를 비롯한 자연 재해 대응, 인프라 노후화 대책 등 국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의미.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기상재해 극심화 및 빈발화,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사회 경제 시스템 기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 주요 기능 유지를 위해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를 위한 5개년 가속화 정책」(2020. 12. 11.)을 발표하여 시행 중. 출처: 일본 내각관방, 「防災・減災、国土強靱化のための5か年加速化対策」, 2020. 12. 11., https://www.cas.go.jp/jp/seisaku/kokudo_kyujinka/5kanenkasokuka/pdf/taisaku.pdf, 검색일자: 2023. 12. 20.

275) 2022년 6월 7일 각의 결정되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개혁,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중장기경제·재정운용 및 2023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 상반기 KIPF 재정동향」 및 원문 참조.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7.,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10>, 검색일자: 2023. 2. 1.

내각부, 「経済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22について」, 2022. 6. 7.,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22/2022_basic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6. 27.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을 바탕으로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의 개혁 공정표²⁷⁶⁾를 개정하여 증거기반정책수립(EBPM),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등을 통해 지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2023. 12. 22.)²⁷⁷⁾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3,095억엔 감소(-2.0%)한 112조 717억엔 규모
 - (세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 감소한 112조 717억엔으로, 일반세출은 전년 대비 7.5% 감소한 67조 2,764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7조 7,863억엔, 국채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27조 90억엔
 - (세입)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 감소한 112조 717억엔으로, 세수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69조 6,080억엔, 기타 수입은 전년 대비 19.4% 감소한 7조 5,147억엔, 공채금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34조 9,490억엔
 - (국채) 2024회계연도 국채의존도²⁷⁸⁾는 전년 당초 예산 대비 0.1%p 증가한 31.2%
 - 2024회계연도 예산은 ‘역사의 전환점 속에서 시대 변화에 따른 과제에 도전하고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예산’으로 편성
 - (경제) 30년 만의 경제 부문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물가에 지지 않는 임금인상 실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의료·복지 분야에서의 임금 인상을 먼저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진료, 개호, 장애복지서비스 등 보수 개정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임금 인상률(베이스업)을 2024년도 2.5%, 2025년도 2.0%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

276) 신경제·재정재생계획이란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18」(2018. 6. 15. 각의결정)에서 발표된 계획으로, ‘경제 재생 없이는 재정건전화도 없다’는 기본 방침 아래 디플레이션 탈피·경제 재생, 세출 개혁, 세입 개혁의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는 개혁의 가속 및 확대를 목표로 함. 개혁공정표란 주요 분야별 중요 과제에 대한 대응과 핵심성과지표(KPI), 각각의 정책 목표와의 연결을 명시하는 것으로, 각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을 나타냄. 출처: 내각부, 「經濟財政運営と改革の基本方針2018」, 2018. 6. 1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cabinet/honebuto/2018/2018_basicipolicies_ja.pdf, 검색일자: 2023. 12. 19.

277)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3.12.2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seifuan2024/01.pdf, 검색일자: 2023. 12. 27.

278) 국채의존도는 국채발행액을 일반회계 세출총액으로 나누어서 산출

-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강화와 함께 공적 가격 재검토, 처우개선 수당 구조 확충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에 구조적으로 연결되는 제도를 구축
- (사회) 구조적 변화와 사회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정책, 디지털·GX 정책 등을 시행
 - (어린이 정책) 아동수당 확충,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 강화, 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 빈곤·학대 방지, 장애 아동 등을 위한 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의 재정기반 강화, 재원확보를 위해 진료 보수 개정, 약가제도 재검토, 개호 보험 제도 개혁 시행
 - (디지털·GX)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 공적 서비스 효율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²⁷⁹⁾으로 디지털 행·재정 개혁, 관광·농림수산업 진흥 등을 지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의 GX 투자 촉진
- (외교·안전보장)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과 우크라이나 침략, 중동 상황 등 격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분야에서 안전보장 대응, 자국민 보호·위기 관리 기반 대폭 강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위, 기동 전개 능력 향상 등 방위력을 꾸준히 강화(전년 대비 +1.1조엔)
- (세출의 효율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3」를 바탕으로 세출 개혁을 계속 시행하여 세출 구조를 회복하고 신규 국채발행을 감액(2023회계연도(당초): 35.6조엔→2024회계연도: 34.9조엔)

279)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사회 과제 해결·매력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 구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교부금'을 창설. 출처: 일본 내각부,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交付金について」, 2022. 12., https://www.chisou.go.jp/sousei/about/kouhukin/pdf/denenkohukin_2023_gaiyou.pdf, 검색일자: 2023. 12. 28.

〈표 3-11-3〉 일본의 2024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3회계연도 당초(A) ¹⁾	2024회계연도 정부안(B)	증감액 (B-A)	증감율
세 출	일반세출 ²⁾	727,317	672,764	-54,554	-7.5
	사회보장관계비	368,687	377,193	8,506	2.3
	사회보장관계비 외 ³⁾	308,630	285,571	-23,060	-7.5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 ⁴⁾	50,000	10,000	-40,000	-80.0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3,992	177,863	13,871	8.5
	국채비	252,503	270,090	17,587	7.0
합계	1,143,812	1,120,717	-23,095	-2.0	
세 입	세수	694,400	696,080	1,680	0.2
	기타 수입	93,182	75,147	-18,035	-19.4
	공채금	356,230	349,490	-6,740	-1.9
	건설공채	65,580	65,790	210	0.3
	특례공채	290,650	283,700	-6,950	-2.4
	합계	1,143,812	1,120,717	-23,095	-2.0

주: 1) 2023회계연도 예산은 2024회계연도 예산과 비교대조를 위해 재계산

2) 일반세출은 '일반회계 세출총액'에서 '국채비'와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것을 의미

3) 2023회계연도 예산에는 방위력강화자금 편입 33,806억엔을 포함

4) '물가임금 인상 촉진 예비비'는 '원유가격·물가상승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의 약칭으로, 2023년도의 금액은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의 합계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23. 12. 22., p. 2 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추경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발표(2023. 11. 10.)²⁸⁰⁾

- 2023년 11월 2일 발표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시행 관련 경비 추가 등을 위해 13조 1,992억엔 규모의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세출) 이번 추경예산으로 인한 추가 세출은 경제대책 관계경비 13조 1,272억엔, 기타 경비 1조 4,851억엔,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²⁸¹⁾ 전출 1조 3,147억엔, 지방교부세·교부금 7,820억엔이며, 3조 5,098억엔 규모의 기존 경비가 감액

280)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補正予算」, 2023. 11. 2.,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20231110071409.html, 검색일자: 2023. 11. 14.

28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채, 차입금 등의 상환 및 이자 등 지불을 시행하는 회계 처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 출처: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about_mof/mof_budget/special_account/kokusaiseiri/kokusaiseiri.htm, 검색일자: 2023. 11. 15.

- (세입) 공채금 8조 8,750억엔(건설국채 2조 5,100억엔, 특례국채 6조 3,650억엔)을 증액할 예정이며, 최근 수입 실적 등을 감안하여 조세 및 인지도입 1,710억엔, 세외 수입 7,621억엔 전년도잉여금 수입 33,911억엔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27조 5,804억 엔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국채의존도는 당초 예산 대비 3.8%p 증가한 34.9%

표 3-II-4 일본의 2023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개요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고물가 대책	27,363	1. 세수	1,710
2.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13,303		
3.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34,375		
4.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13,403	2. 세외수입	7,621
5. 국민 안전·안심 확보	42,807	1)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응	2,222
소계(경제대책 관계경비 ¹⁾)	131,272	2) 기타	5,399
6. 기타 경비	14,851	3. 전년도잉여금 수입	33,911
1) 방위력강화자금 ²⁾ 편입	10,390		
2) 기타	4,460		
7. 국채정리기금특별회계 전출	13,147		
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7,820	4. 공채금	88,750
9. 기존 경비 감액	-35,098	1) 건설국채	25,100
1)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 ³⁾	-20,000	2) 특례국채	63,650
2)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제비상대응 예비비	-5,000		
3) 기타	-10,098		
합계	131,992	합계	131,992

주: 1) 경제대책관계경비는 소득세 등 정액 감세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하여 약 17조엔으로 전망
 2)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및 강화된 방위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확보하는 재원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69>, 검색일자: 2023. 11. 15.
 3) '신종 코로나19 및 유가·물가 급등 대책 예비비'는 용도를 변경하고 '유가·물가 급등 대책 및 임금 인상 촉진 환경 정비 대응 예비비'로 재검토함.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一般会計補正予算(第1号) フレーム」, 2023. 11. 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t_workflow/budget/fy2023/hosei231110a.pdf, 검색일자: 2023. 11. 14.

표 3-II-5 일본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 후 2023회계연도 예산 개요

(단위: 억엔, %)

구분		2023회계연도 예산(당초)	2023회계연도 예산(추경 후)	증감액	증감율
세출	일반세출	727,317	847,245	119,928	16.5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3,992	171,812	7,820	4.8
	국채비	252,503	256,748	4,244	1.7
	채무상환비(교부 국채 제외)	163,895	177,042	13,147	8.0
	이자지급비용	84,723	75,820	-8,903	-10.5
	합계	1,143,812	1,275,804	131,992	11.5
세입	조세 및 인지수입	694,400	696,110	1,710	0.2
	기타 수입	93,182	134,714	41,532	44.6
	공채금(세출과 세수등과의 차이)	356,230	444,980	88,750	24.9
	채무상환비 상당분(교부 국채 제외)	163,895	177,042	13,147	8.0
	이자지급비용 상당분	84,723	75,820	-8,903	-10.5
	정책적지출에 의한 적자 상당분(기초재정수지적자)	107,613	192,118	84,506	78.5
	합계	1,143,812	1,275,804	131,992	11.5

주: 1. 공채금 분류는 기초재정수지 및 재정수지 관점으로 분류한 것으로, 공채금에 의한 수입이 직접 채무상환비 및 이자지급 비용에 총당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분'으로 표현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補正後予算フレーム」, 2023. 11. 10.,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3/hosei231110d.pdf, 검색일자: 2023. 11. 14.를 참고하여 작성.

다. 결산

■ 일본 재무성,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발표(2023. 7. 31.)²⁸²⁾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액은 153조 7,294억엔, 세출결산총액은 132조 3,855억엔으로, 재정법 제41조²⁸³⁾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된 잉여금은 21조 3,439억엔

282)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年度決算概要」, 2023. 7. 31.,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account/fy2022/ke050731.pdf, 검색일자: 2023. 8. 8.

283) 재정법 제41조: 매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시킨다.

표 3-II-6 일본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개요

(단위: 억엔)

구분	금액	비고
1. 세입 결산총액	1,537,294	
2. 세출 결산총액	1,323,855	
3. 재정법 제41조 잉여금	213,439	(1-2)
4. 2021년도까지 발생한 잉여금의 사용 잔액	0	
5. 2022년도 신규발생잉여금	213,439	(3-4)
6. 2023년도 이월 세출예산재원 순잉여금의 계산상 공제액	179,528	
7. 이월 세출예산 공제 후 신규발생 잉여금	33,910	(5-6)
(1) 세입 순 증가액	-79,173	
① 세수	27,783	
② 세외수입	13,042	
③ 공채금	-120,000	
(2) 세출 불용액	113,084	
8.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의 순잉여금 계산상 공제액	7,616	
(1) 지방교부세교부금 재원(지방교부세 정산액분)	7,568	
(2) 공항정비 사업비 등 재원(항공기연료세 정산액분)	-	
(3) 부흥 비용 및 부흥채 ¹⁾ 상환 비용 재원(부흥분(2011년도 제3차 추경예산 이월분 및 2022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47	
(4)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²⁾ 이행 비용 재원(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비용분(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잉여금))	0	
9. 재정법 제6조 ³⁾ 에 의한 순 잉여금	26,294	(7-8)

주: 1) 부흥채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위한 정책 실시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실시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복구·부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 범위 내에서 발행됨.

출처: 재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go.jp/faq/budget/01aa.htm>, 검색일자: 2023. 8. 14.

2)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란 산업 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에 관련된 이산화탄소를 원칙적으로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를 의미함.

출처: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32_20240218_0000000000000000, 검색일자: 2023. 8. 14.

3) 재정법 제6조: 각 회계연도에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금 중 1/2를 하회하지 않는 금액은 다른 법률에 의한 것 이외에 이를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다음연도까지 공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1. 세외수입에는 부흥분(2011년도 제1·2차 추경예산 이월분) 16억엔 포함

2. 단위 미만 절사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4年度第年度決算概要」, 2023. 7. 31., p. 2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1분기²⁸⁴⁾ 예산사용현황 발표(2023. 9. 1.)²⁸⁵⁾

- 2023회계연도 1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1조 5,186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34조 2,533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32조 7,347억엔 초과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4조 3,812억엔 대비 1분기 수입비율은 1.3%로 전년 동기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자산정리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에 기인
 -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5.8%로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지방창생²⁸⁶⁾ 추진비의 감소 등에 기인
- 2023회계연도 1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32.9%로 전년 동기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31.5%를 기록

표 3-II-7 일본의 2023회계연도 1분기 예산사용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143,812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¹⁾ (D)	1,323,340	세입예산액(A)	4,445,978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¹⁾ (D)	4,470,656
1분기 국가 수납금액(B)	15,186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342,533	1분기 국가 수납금액(B)	1,465,260	1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409,405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3% (0.7%)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5.8% (26.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32.9% (30.8%)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31.5% (31.5%)
1분기 누계(C)	15,186	1분기 누계(F)	342,533	1분기 누계(C)	1,465,260	1분기 누계(F)	1,409,405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1.3% (0.7%)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비율(F/D)	25.8% (26.3%)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32.9% (30.8%)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비율(F/D)	31.5% (31.5%)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9. 1.

284)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2024. 3. 31.로, 2023회계연도 1분기는 2023. 4. 1.~2023. 6. 30.을 의미

285)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1·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3/05_1gai.html, 검색일자: 2023. 9. 7.

286) 코로나19 확대 방지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고 지방창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 출처: 일본 내각관방·내각부 지방창생 홈페이지, <https://www.chisou.go.jp/tiiki/rinjikoufukin/index.html>, 검색일자: 2023. 7. 20.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2분기²⁸⁷⁾ 예산사용현황 발표(2023. 12. 5.)²⁸⁸⁾

- 2023회계연도 2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21조 9,276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8조 972억엔으로 세출액이 세입액을 6조 1,696억엔 초과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14조 3,812억엔 대비 2분기 수입비율은 19.1%로 전년 동기 대비 0.5%p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채금 등의 감소에 기인
 -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1.2%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하였으며, 이는 방위력강화자금²⁸⁹⁾ 편입, 에너지 수급 구조 고도화 대책비²⁹⁰⁾ 등의 증가에 기인
- 2023회계연도 2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2.6%로 전년 동기 대비 0.3%p 감소하였으며,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24.8%로 전년 동기 대비 1.6%p 증가

표 3-II-8 일본의 2023회계연도 2분기 예산사용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143,812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¹⁾ (D)	1,323,340	세입예산액(A)	4,445,978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¹⁾ (D)	4,470,656
2분기 국가 수납금액(B)	219,276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80,972	2분기 국가 수납금액(B)	1,007,408	2분기 국가 지출 금액(E)	1,110,872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19.1% (19.6%)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1.2% (19.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2.6% (22.9%)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24.8% (23.2%)
2분기 누계(C)	234,463	2분기 누계(F)	623,506	2분기 누계(C)	2,472,669	2분기 누계(F)	2,520,278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20.4% (20.4%)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비율(F/D)	47.1% (45.6%)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55.6% (53.7%)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 대비 비율(F/D)	56.3% (54.8%)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1) 이번연도 사용가능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증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자료: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12. 5.

287)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2024. 3. 31.로, 2023회계연도 2분기는 2023. 7. 1.~2023. 9. 30.을 의미

288)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2・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3. 12. 5.,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3/05_2gai.html, 검색일자: 2023. 12. 11.

289)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및 강화된 방위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확보하는 재원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출처: 일본 법령검색 홈페이지, 令和五年法律第六十九号 「我が国の防衛力の抜本的な強化等のために必要な財源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505AC0000000069>, 검색일자: 2023. 11. 15.

290)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과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을 지원하는 대책. 출처: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https://www.env.go.jp/earth/earth/ondanka/enetoku/about/>, 검색일자: 2023. 12. 12.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및 재정 전망

■ 일본 내각부, 연중전망²⁹¹⁾ 발표(2023. 7. 20.)²⁹²⁾

- 2023년도의 경우 수출 둔화 등은 경기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비스 소비를 비롯한 개인 소비의 회복과 기업 설비 투자 증가로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3%, 명목 GDP 성장률은 약 4.4%로 전망
 - 2023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2.6%로 전망
- 2024년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약 1.2%, 명목 GDP 성장률은 약 2.5%로 민간수요 주도의 완만한 성장이 전망
 - 2024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1.9%로 전망

표 II-2-9 일본의 연중전망 주요 경제지표

(단위: %, %p)

구분	2022	2023		2024
	실적	12월 정부경제전망 ¹⁾	연중 전망	연중 전망
실질 GDP	1.4	1.5	1.3	1.2
민간최종소비지출	2.4	2.2	1.6	1.3
민간주택	-4.4	1.1	0.3	0.2
민간기업설비	3.1	5.0	3.0	3.0
내수기여도	2.0	1.6	1.6	1.3
외수기여도	-0.6	-0.1	-0.3	-0.1
실질 국민총소득	0.5	1.8	2.1	1.3
명목 GDP	2.0	2.1	4.4	2.5
완전실업률	2.6	2.4	2.5	2.4
고용자수	0.6	0.2	0.5	0.3
생산자물가지수	9.4	1.4	2.6	0.6
소비자물가지수	3.2	1.7	2.6	1.9
GDP 디플레이터	0.6	0.6	3.0	1.3

주: 1. 기여도와 완전실업률 이외 수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 1) 12월 정부경제전망은 2022년 12월 내각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2023. 1. 23. 각의결정)에 나타난 수치.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요국 예산안-일본」 p. 2, 표 1을 참조.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979>, 검색일자: 2023. 7. 21.)

자료: 일본 내각부, 「令和5(2023)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23. 7. 20., pp. 2~3 재구성.

291) 연중전망이란 연중 시점에서의 최신 경제 동향을 근거로 내각부에서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경제를 전망하여 발표하는 것.

292) 일본 내각부, 「令和5(2023)年度 内閣府年央試算」, 2023. 7. 20.,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3/r050720shisan.pdf>, 검색일자: 2023. 7. 21.

■ 일본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전망」 발표(2023. 7. 25.)²⁹³⁾

- ※ (목적) 본 전망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 검토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재정자문회의에 기여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가정) 본 전망은 2024년도까지의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각종 통계의 실적치와 내각부 연중 전망²⁹⁴⁾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며, 2025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의 전망을 제시
 - (기준선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최근 경기 순환²⁹⁵⁾의 평균 수준인 약 0.5%로 유지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상승(2032년도 63.8%)한다고 가정
 - (성장실현 시나리오) 총요소생산성(TFP) 상승률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가기 전 기간의 평균인 1.4%²⁹⁶⁾까지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성과 고령자를 중심으로 기준선 시나리오보다 상승(2032년도 65.0%)한다고 가정
 - (경제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202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0.8%, 명목 GDP 성장률은 1.4%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2024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1.3%, 명목 GDP 성장률은 2.5%로 전망
 - 중장기적으로 기준선 시나리오의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은 0%대 증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며,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 성장률은 약 2%, 명목 GDP 성장률은 약 3%를 나타낼 전망
 - (재정전망) 기준선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도 -0.4%, 2026~2027년도에는 0%로 개선된 이후 완만하게 악화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2028년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망 기간 후반에 다시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
 - 성장실현 시나리오에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2025년도 -0.2%, 2026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된 후 전망 기간 내 흑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GDP 대비 채무잔고는 명목 GDP 증가, 재정수지 개선 등으로 인해 전망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하락할 전망

293)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https://www5.cao.go.jp/keizai-shimon/kaigi/minutes/2023/0725/shiryō_01-2.pdf, 검색일자: 2023. 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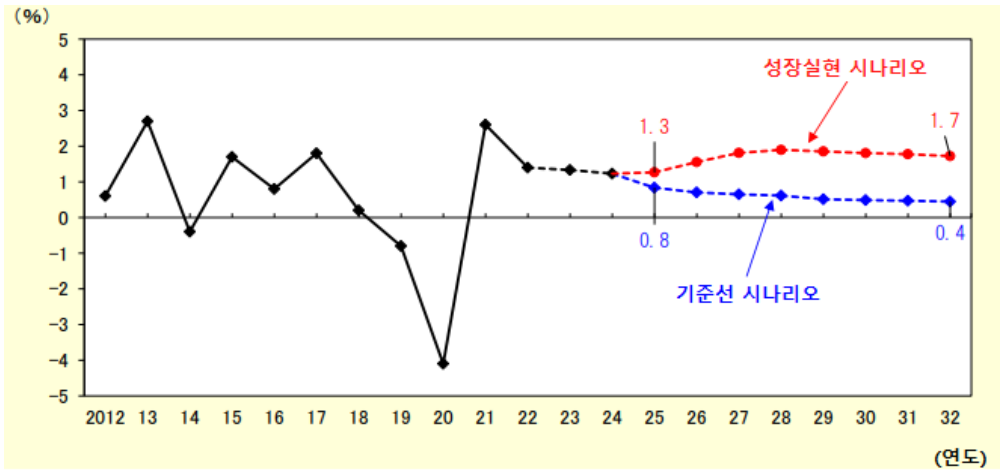
294)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원문(일본 내각부, 「令和5(2023)年度 内閣府年央試算」, <https://www5.cao.go.jp/keizai1/mitoshi/2023/r050720shisan.pdf>, 검색일자: 2023. 7. 21.)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7월 재정동향」 p. 34(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7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96>, 검색일자: 2023. 8. 21.)를 참고

295) 제16순환(2012년 10~12월부터 2020년 4~6월까지)

296) 과거부터 제12순환(1980년 4~6월부터 1999년 1~3월까지)까지의 평균

그림 3-II-2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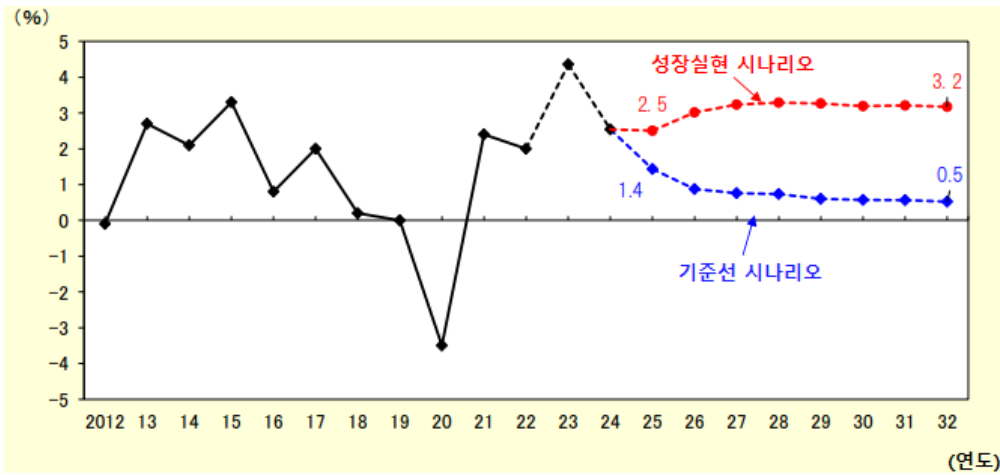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7. 25., p. 4, 그림3

그림 3-II-3 일본의 중장기 실질 GDP 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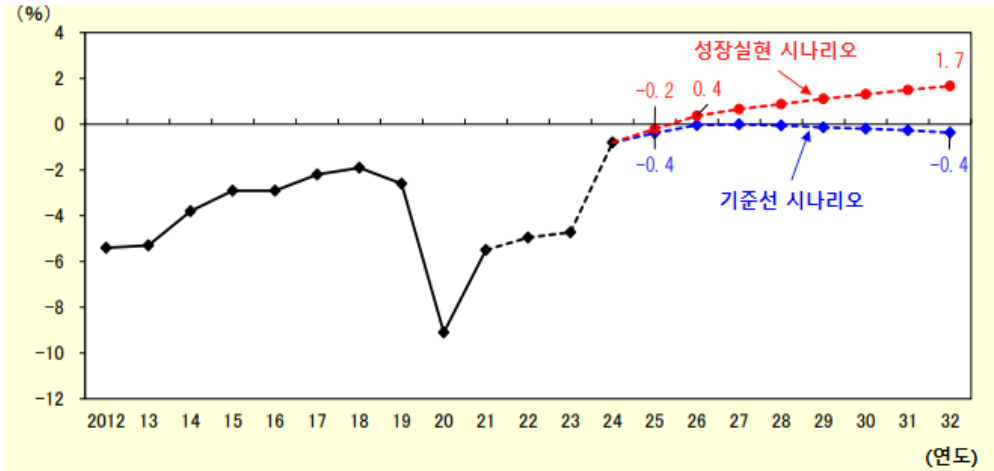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23. 7. 25., p. 5, 그림4

그림 3-II-4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전망(GDP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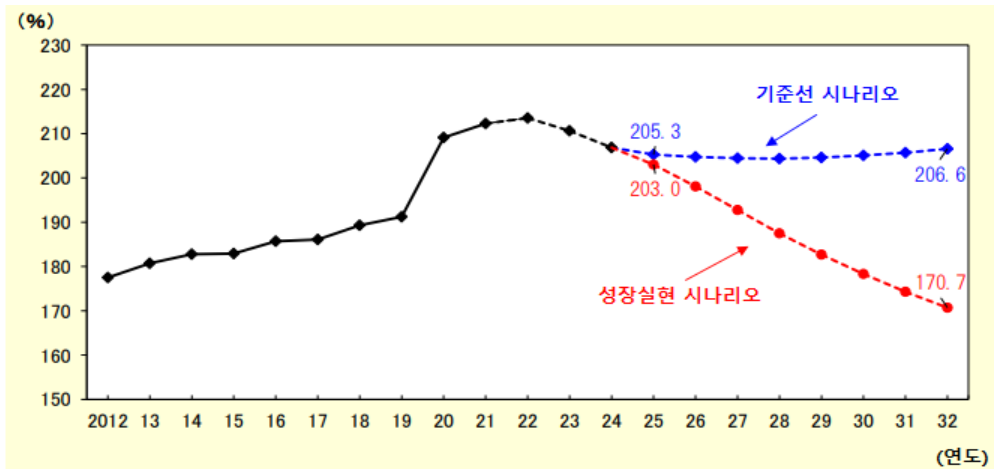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p. 9, 그림9

그림 3-II-5 일본의 중장기 국가 및 지방의 채무잔고 전망(GDP 대비)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令和5年7月25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23. 7. 25., p. 10, 그림11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7. 31.)²⁹⁷⁾

- (경제) 해외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이 있으나 보복소비 수요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단 전망기간 후반에 보복소비 수요 및 경제 정책의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되어 2023회계연도에 2.5%를 기록한 이후, 2024~2025회계연도에는 1%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
 - 이후 거시적 수급 격차 개선,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에 기인하여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상승폭이 다시 완만하게 확대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경제) 2023회계연도는 하방위험이 우세하나 이후에는 대체로 상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룰 전망
 - (물가) 2023~2024회계연도는 상방위험이 우세할 전망
- (2023년 4월 전망과 비교)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기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2023회계연도에는 상향 조정되었고 2024~2025회계연도는 기존과 큰 차이 없음

297)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7月)」, 2023. 7.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07b.pdf>, 검색일자: 2023. 8. 22.

표 3-II-10 2023~2025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회계연도	1.2~1.5 <1.3>	2.4~2.7 <2.5>
2023년 4월 전망	1.1~1.5 <1.4>	1.7~2.0 <1.8>
2024회계연도	1.0~1.3 <1.2>	1.8~2.2 <1.9>
2023년 4월 전망	1.0~1.3 <1.2>	1.8~2.1 <2.0>
2025회계연도	1.0~1.2 <1.0>	1.6~2.0 <1.6>
2023년 4월 전망	1.0~1.1 <1.0>	1.6~1.9 <1.6>

-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7月), p. 10, 2023. 7. 31., 일부 발췌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3. 10. 31.)²⁹⁸⁾

- (경제) 해외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한 하방압력이 있으나 보복소비 수요, 완화적인 금융환경, 경제대책 효과 등으로 인해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며, 이후 소득에서 지출로의 선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잠재성장률은 디지털화 및 인적자본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증가에 의한 자본 스톡 증가 등을 배경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와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4회계연도에는 2.8%를 나타낼 전망이며, 2025회계연도에는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전망

298) 일본은행, 「經濟·物価情勢の展望」(2023年 10月), 2023. 10. 31.,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310b.pdf>, 검색일자: 2023. 11. 2.

- 전망기간 동안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거시적 수급 격차 개선, 중장기 예상 물가상승률 및 임금상승률 증가에 기인하여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할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경제) 2023~2024회계연도는 대체로 상하방위험이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2025회계연도는 하방위험이 우세할 전망
 - (물가) 2023회계연도는 상방위험이 우세할 전망으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의 움직임에 주시할 필요
- (2023년 7월 전망과 비교) 2023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3~2024회계연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전가의 영향, 원유 가격 상승 등에 의해 기존 전망 대비 상향 조정

〈표 3-11-11〉 2023~2025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회계연도	1.8~2.0 <2.0>	2.7~3.0 <2.8>
2023년 7월 전망	1.2~1.5 <1.3>	2.4~2.7 <2.5>
2024회계연도	0.9~1.4 <1.0>	2.7~3.1 <2.8>
2023년 7월 전망	1.0~1.3 <1.2>	1.8~2.2 <1.9>
2025회계연도	0.8~1.2 <1.0>	1.6~2.0 <1.7>
2023년 7월 전망	1.0~1.2 <1.0>	1.6~2.0 <1.6>

- 주: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다음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자료: 일본은행, 「經濟·物價情勢の展望,(2023年10月)」, p. 10, 2023. 10. 31., 일부 발췌

나. 경제 및 재정정책

■ 일본 내각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발표(2023. 11. 2.)²⁹⁹⁾

- (배경) 일본은 현재 30년 만에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기업의 높은 투자 의욕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오래 지속된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에서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짐
- (주요 내용) 종합경제대책의 주요 내용은 고물가 대책,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국내 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국민 안전·안심 확보
 - (고물가 대책)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사업자 지원,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사업자 지원) 소득세·개인주민세 정액 감세 실시(납세자 및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1명당 2024년분 소득세 3만엔, 개인주민세 1만엔 감세), 저소득가구 지원, 연료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³⁰⁰⁾ 2024년 4월 말까지 연장 등
 - (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기업 및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 촉진, 재생에너지 지원, 원자력 활용 등
 -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임금 인상 촉진 세제 강화 등 중견·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환경 정비, 인력 부족 대응,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 인상 지원 지속, 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삼위일체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지방 경제 회복 지원 및 경제 교류 확대
 -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 촉진, 프린티어 개척, GX(Green Transformation)·DX(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등 생산성 향상·공급력 강화를 통한 국내 투자 확대, 혁신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등 지원

299) 일본 내각부,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日本経済の新たなステージにむけて~」, 2023. 11. 2., https://www5.cao.go.jp/keizai1/keizaitaisaku/2023/20231102_taisaku.pdf, 검색일자: 2023. 11. 14.

300) 2022년 4월 26일 각의 결정된 「원유 가격·물가 상승 등 종합 긴급대책」에서 발표한 정책. 원유가격 상승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제 정세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료유 도매가격 억제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여 소매가격 급등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존에는 연료유 가격 급등 완화 조치를 2023년 9월까지 실시 예정이었음. 출처: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홈페이지, <https://nenryo-gekihenkanwa.jp/>, 검색일자: 2023. 11. 17.

-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방 활성화,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 공적 부문 개혁,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제도·규제 개혁
- (국민 안전·안심 확보) 자연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의 가속,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의 추진, 국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및 외교·안보 환경의 변화에의 대응, 저출산 대책, 공교육 지원, 여성 및 노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인 사회 실현
- (규모) 이번 경제대책에 필요한 경비는 소득세 등 정액 감세 및 관련 경비를 포함하여 약 17조엔으로 전망되며,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일반회계 추가 금액은 약 13.1조엔 규모
- 이번 경제대책으로 인한 총 재정지출은 21.8조엔, 총 사업 규모는 37.4조엔으로 예상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외에 특별회계 추가 금액 1.2조엔, 기존경비 활용, 지방 세출, 재정투융자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
- (경제효과) 이번 경제대책을 통해 실질 GDP 약 19조엔(연성장률 환산 약 1.2%, 향후 3년간 효과가 발현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순 평균) 규모의 경기부양 효과가 전망되며,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약 0.1%p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

표 3-II-12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종합 경제대책」 재정지출 및 사업규모 내역

(단위: 조엔)

구분	재정지출			사업규모
	합계	국가 및 지방의 세출	재정투융자	
고물가 대책	6.3	6.3	-	12.8
지방·중소기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 인상, 소득 향상, 지방 성장 실현	3.0	3.0	-	9.1
국내투자 촉진을 통한 성장력 강화	4.7	4.5	0.2	7.5
인구감소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사회 변혁 추진	1.6	1.6	0.0	1.7
국민 안전·안심 확보	6.1	5.4	0.7	6.3
합계	21.8	20.9	0.9	37.4

자료: 일본 내각부, 「デフレ完全脱却のための総合経済対策~日本経済の新たなステージにむけて~」, 2023. 11. 2., p. 75.

다. 금융정책

■ 일본은행, 금융정책운영방침 발표(2023. 10. 31.)³⁰¹⁾

- 일본은행은 10월 30~31일 개최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 장기금리 목표는 기존 0%로 유지하면서 장기금리 상한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할 방침
 - (금융시장 조절방침) 12월에 개최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기존 장·단기 금리 수준과 장·단기 금리 운용을 유지
 - (장단기 금리) 단기 금리는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 대상 -0.1% 금리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 정도로 유지되도록 운용
 - *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0.756%(11/20 기준)³⁰²⁾
 - (금리 운용) 장기금리의 상한을 1.0%로 조정
 - (자산매입 방침) ETF 및 J-REIT³⁰³⁾ 자산은 각각 연간 약 12조엔, 약 1,800억엔을 상한으로 필요에 따라 매입하고, CP 등은 약 2조엔의 잔고를 유지
 - 회사채 등은 코로나19 확대 전과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엔으로 매입 잔고를 서서히 조정할 것이며, 매입 잔고의 조정은 회사채 발행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할 예정
 - * 현재 일본은행의 CP 등 잔고는 2.3조엔, 사채 잔고는 6.4조엔(11/10 기준)³⁰⁴⁾
-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일본은행은 2%의 물가안정 실현을 목표로 장·단기금리를 조절하는 양적·질적금융 완화를 지속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임금 인상이 쉬운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

301) 일본은행, 「当面の金融政策運営について」, 2023. 10. 31.,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3/k231031a.pdf, 검색일자: 2023. 11. 2.

302) 일본 재무성, 国債金利情報(令和5年11月20日), <https://www.mof.go.jp/>, 검색일자: 2023. 11. 21.

303) J-REIT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빌딩, 상업시설,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 수입이나 매매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법률상 투자신탁의 일종.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REIT라는 구조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REIT라고 지칭하며, 일본에서는 앞에서 J를 붙인 J-REIT라고 지칭. J-REIT는 투자신탁의 일종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01년 9월에 처음 상장.(출처: 사단법인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 <https://www.toushin.or.jp/rei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23. 1. 26.)

304) 일본은행, 営業毎旬報告(令和5年11月10日現在), <https://www.boj.or.jp/statistics/boj/other/acmai/release/2023/ac231110.htm>, 검색일자: 2023. 11. 21.

- 본원통화(monetary base)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실적치가 안정적으로 2%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지속
-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논의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성장률 동향

■ 일본 내각부, 2023년 2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3. 9. 8.)³⁰⁵⁾

- 전 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2%(연율 4.8%), 명목 GDP 성장률은 2.7%(연율 11.4%)로 실질성장률, 명목성장률 모두 1차 속보치³⁰⁶⁾에서 하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6%p로 민간기업설비, 민간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형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0.3%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1.8%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전 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8%로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6%로 숙박 등 서비스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1.9%)에서 상향 조정된 2.0%,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0%)에서 하향 조정된 -1.0%를 기록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305) 일본 내각부, 「2023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9. 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3. 9. 19.

306)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 분기 대비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5%(연율 6.0%), 명목 GDP 성장률은 2.9%(연율 12.0%).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8월 재정동향」 p. 33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8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947>, 검색일자: 2023. 9. 20.)

- (공적수요) 전 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0.3%)에서 하향 조정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0%, 공적자본형성 증가율은 0.2%로, 각종 기초통계의 반영으로 인해 1차 속보치(0.1%, 1.2%)에서 하향 조정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³⁰⁷⁾로 1차 속보치(0.0%)에서 하향 조정
- (수출입) 전 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3.1%, -4.4%로 수출입 디플레이터 상향 조정으로 인해 1차 속보치(3.2%, -4.3%)에서 하향 조정

표 3-II-13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			2023		2023 ¹⁾
	Q2	Q3	Q4	Q1	Q2	Q2
실질 GDP	1.3	-0.3	0.1	0.8	1.2	4.8
국내수요	1.1	0.3	-0.3	1.0	-0.6	-2.2
민간수요	1.4	0.4	-0.5	1.3	-0.8	-3.1
민간최종소비지출	1.8	-0.0	0.3	0.6	-0.6	-2.5
민간주택	-1.8	-0.1	1.0	0.7	2.0	8.1
민간기업설비	2.0	1.5	-0.7	1.6	-1.0	-4.0
민간재고변동	(-0.2)	(0.1)	(-0.4)	(0.3)	(-0.2)	-
공적수요	0.5	-0.0	0.3	0.3	0.1	0.3
정부최종소비지출	0.5	-0.1	0.2	0.1	0.0	0.1
공적고정자본형성	0.6	1.0	0.1	1.4	0.2	1.0
공적재고변동	(-0.0)	(-0.0)	(0.1)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1)	(-0.6)	(0.3)	(-0.3)	(1.8)	-
재화·서비스 수출	1.9	2.4	1.5	-3.8	3.1	12.9
재화·서비스 수입	1.1	5.5	-0.1	-2.3	-4.4	-16.5
명목 GDP	1.1	-0.9	1.2	2.2	2.7	11.4
GDP 디플레이터	-0.1	-0.6	1.2	1.4	1.6	-

주: 1.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1)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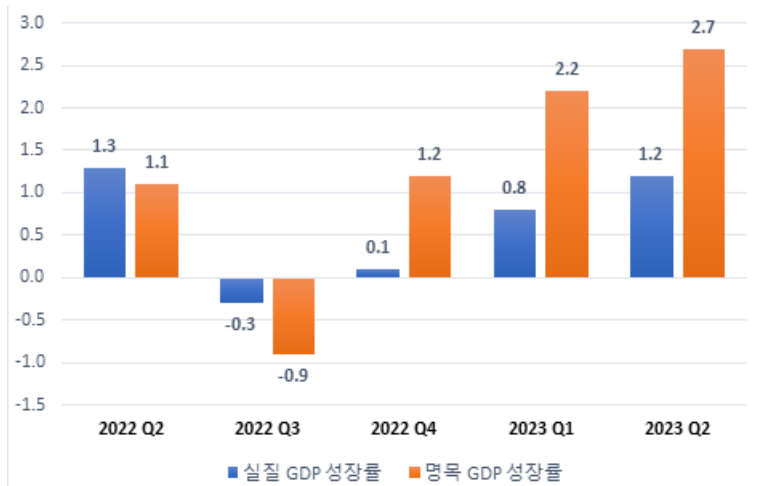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일본 내각부, 「2023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9. 8.,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307) 정확한 수치는-0.000000001%p(출처: 일본 정부통계 통합창구 e-Stat 홈페이지, <https://www.e-stat.go.jp/dbview?sid=0003113542>, 검색일자: 2023. 9. 20.)

그림 3-II-6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3년4~6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9. 8., p. 5 표3-1 및 p. 7 표3-3을 참고하여 작성

■ 일본 내각부, 2023년 3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3. 12. 8.)³⁰⁸⁾

- 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연율 -2.9%)로 1차 속보치³⁰⁹⁾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0%(연율 -0.0%)로 1차 속보치에서 상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6%p로 민간 재고변동, 민간최종소비지출 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0.4%p)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재화 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1%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전 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9%로 1차 속보치(-0.6%)에서 하향 조정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2%로 식료품 및 의복 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0.0%)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0.1%)에서 하향 조정된 -0.5%, 민간기업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6%)에서 상향 조정된 -0.4%를 기록

308) 일본 내각부, 「2023년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12. 8.,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3. 12. 12.

309)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5%(연율 -2.1%), 명목 GDP 성장률은 -0.0%(연율 -0.2%).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11월 재정동향」 p. 37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11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3>, 검색일자: 2023. 12. 12.)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5%p로 1차 속보치(-0.3%p)에서 하향 조정
- (공적수요) 전 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1%로 1차 속보치(0.2%)에서 하향 조정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3%로 1차 속보치와 동일하며, 공적 자본형성 증가율은 -0.8% 1차 속보치(-0.5%)에서 하향 조정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수출입) 전 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0.4%, 0.8%로 계절조정 방법의 변경 등에 인해 1차 속보치(0.5%, 1.0%)에서 하향 조정

표 3-II-14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		2023				2023 ¹⁾
	Q3	Q4	Q1	Q2	Q3 (1차 속보치)	Q3 (2차 속보치)	Q3
실질 GDP	-0.1	0.2	1.2	0.9	-0.5	-0.7	-2.9
국내수요	0.4	-0.2	1.6	-0.7	-0.4	-0.6	-2.4
민간수요	0.5	-0.5	1.9	-1.0	-0.6	-0.9	-3.4
민간최종소비지출	0.1	-0.0	0.9	-0.6	-0.0	-0.2	-0.6
민간주택	0.4	0.7	0.3	1.7	-0.1	-0.5	-2.1
민간기업설비	1.8	-0.8	1.8	-1.3	-0.6	-0.4	-1.8
민간재고변동	(0.0)	(-0.2)	(0.7)	(-0.3)	(-0.3)	(-0.5)	-
공적수요	0.1	0.7	0.5	0.1	0.2	0.1	0.4
정부최종소비지출	0.2	0.5	0.2	-0.1	0.3	0.3	1.3
공적고정자본형성	1.1	-0.1	1.9	1.5	-0.5	-0.8	-3.1
공적재고변동	(-0.1)	(0.1)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5)	(0.4)	(-0.4)	(1.6)	(-0.1)	(-0.1)	-
재화·서비스 수출	2.2	1.5	-3.6	3.8	0.5	0.4	1.5
재화·서비스 수입	4.9	-0.7	-1.5	-3.3	1.0	0.8	3.2
명목 GDP	-0.3	1.7	2.2	2.6	-0.0	-0.0	-0.0
GDP 디플레이터	-0.2	1.5	1.0	1.7	0.5	0.7	-

주: 1.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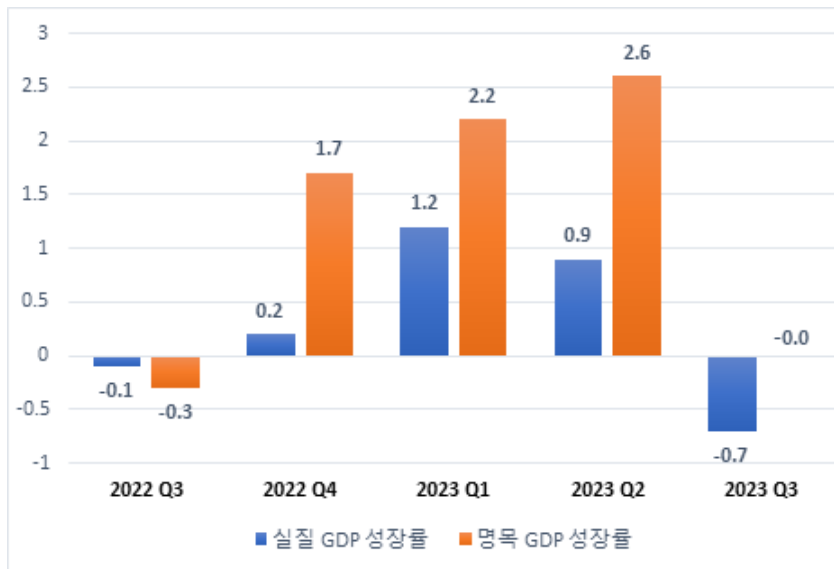
1)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자료: 일본 내각부, 「2023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12. 8.,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그림 3-II-7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2023年7-9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3. 12. 8., p. 5 표3-1 및 p. 7 표3-3을 참고하여 작성

III 독일³¹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표 3-III-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7. 5.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안 채택
2023. 8. 9.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기후변화기금 계획안 승인
2023. 8. 16.	독일 연방 내각, 예산 자금 조달법안 승인
2023. 8. 30.	독일 연방 내각, 성장기회법안 승인
2023. 8. 30.	독일 연방 내각, 제29차 보조금 보고서 승인
2023. 10. 11.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
2023. 9. 28.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3년 가을 공동 경제전망' 발표
2023. 10. 15.	독일 연방 재무부, '2024년 독일 재정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발표
2023. 11. 15.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에 대해 위헌 판결
2023. 10. 26.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5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
2023. 11. 27.	독일 연방내각, 2023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안 채택
2023. 12. 15.	독일 연방의회, 2023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법 최종 의결
2023. 12. 13.	독일 연방정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 도출
2023. 12. 18.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 제28차 회의 개최

자료: 저자 작성

31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혜란 선임연구원(hrha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1) 2024회계연도 예산안

※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 7월에 2024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연방 헌법재판소의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11월) 이후 정부 예산안을 조정해 12월에 정치적 합의안을 제시함

가) 당초 정부 예산안(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 이전 발표)

-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중기재정계획안 채택(2023. 7. 5.)³¹¹⁾³¹²⁾
 - (방향)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정책을 위해 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를 강화
 - (지출 우선순위) 안보 및 국방 분야 강화, 사회적 결속력 제고, 에너지 공급 보장 및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 추진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
 - (투자 강화) 자본지출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디지털화, 모빌리티, 교육 및 연구 등에 투자 예정
 - 2024년 자본지출은 총 542억유로로 계획되어 위기 이전인 2019년(381억유로) 대비 크게 상승
 - 2024~2027년 자본지출 계획은 기존 계획 대비 약 232억유로 높은 수준
 - (재정 건전화)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부채제한 규정의 차입한도를 준수할 것이며 향후에도 기존 지출과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계속 필요
 - 이번 예산안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해 연방 예산의 모든 지출을 점검하여 절감 예산을 활용하고 과거 과소 지출이 나타난 예산은 축소하였음

311)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 이전에 발표된 정부 예산안으로 위헌 판결 이후 조정된 수정 정부 예산안과 차이가 있음

312)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4 und Finanzplan bis 2027," 보도 자료, 2023. 7.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7/2023-07-05-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4.html>, 검색일자: 2023. 7. 6.
독일 연방 재무부, "Zusätzliche Informationen zum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4," 2023. 7.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anzen/Bundeshaushalt/kabinetttvorlage-regierungsentwurf-2024.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7. 6.

- 국방부를 제외한 각 부처는 2024년과 2025년에 연간 약 35억유로의 예산 절감을 통해 부채제한 규정 준수에 기여
- 2025년부터 연간 약 50억유로 규모의 재정조치가 필요하므로 계속해서 지출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³¹³⁾
- 린드너 재무장관은 지출 및 부채가 증가했던 위기 기간 이후에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증세 없이 부채제한 규정(debt brake)을 준수하고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 (경제전망) 2023년 독일은 물가상승률 하락, 공급 병목 현상 완화, 세계경제 회복 등으로 경제 회복이 예상되나 최신 심리 지표상 기존 하방 위험이 존재
 - 연방정부 봄 전망에 따르면 2023년 GDP 성장률은 0.4%, 물가상승률은 5.9%, 실업률은 5.4%로 예상
 - 2023년에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으로 민간소비는 0.1% 감소하고, 설비 투자와 기타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은 1.0% 증가할 전망
 - 수출은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입 증가율은 국내 경제 모멘텀 약화를 반영해 0.6%로 전년보다 낮아질 전망
 - 연방정부는 2024년 GDP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2025~2027년 중기 전망에서 연평균 0.8%의 성장률을 가정
- (재정전망) 전망기간 내 모든 연도의 재정지출이 2023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제한 규정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차입을 크게 축소할 예정
 - (경제·재정 여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물가 및 금리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기후 변화,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변화 등의 과제에 직면
 - (재정지출) 2024년 연방예산의 총지출은 2023년 대비 약 310억유로 감소한 4,457억유로이며 이는 위기 이전인 2019년보다 25% 높은 수준임
 - (신규 차입) 신규차입은 2024년에 166억유로로 전년 대비 약 290억유로 감소하고, 향후 전망기간 동안 추가로 감소해 2027년에 150억유로로 전망
 - (정부 부채) '2023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3년에 약 67.75%로 전년보다 상승한 후, 2026년까지 약 65.5%로 점차 감소할 전망

313) 사회 지출 증가, 위기 기간 발생한 차입금 상환, 연방군 강화 등을 위한 재정 부담 예상 규모가 상당함

표 3-III-2 독일의 202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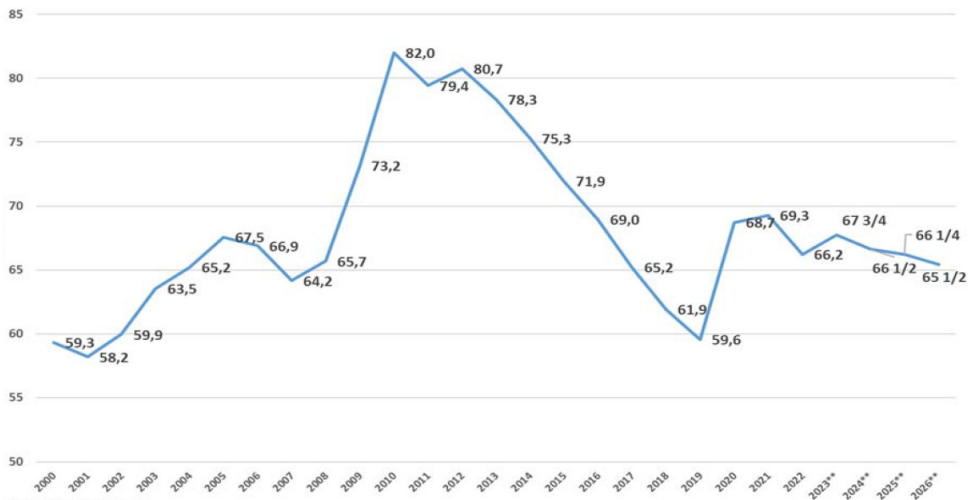
(단위: 억유로, %)

구분	2023 예산	2024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2025	2026	2027
재정지출	4,763	4,457	4,518	4,603	4,672
전년 대비 변화율	-0.9	-6.4	1.4	1.9	1.5
재정수입	4,763	4,457	4,518	4,603	4,672
조세수입	3,581	3,753	3,946	4,091	4,213
신규차입	456	166	160	154	150
정보: 투자지출	715	542	602	591	572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4 und Finanzplan bis 2027," 보도자료, 2023. 7.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7/2023-07-05-regierungsentwurf-bundeshaushalt-2024.html>, 검색일자: 2023. 7. 6.

그림 3-III-1 독일 일반정부 부채 추이

(단위: GDP 대비 %)



-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부채
- 2. 2023년 5월 독일 안정화위원회 전망치 기준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Zusätzliche Informationen zum Regierungsentwurf für den Bundeshaushalt 2024," 2023. 7. 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Oeffentliche-Finzen/Bundeshaushalt/kabinettvorlage-regierungsentwurf-2024.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7. 6.

- (주요 정책) 정부는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별 주요 정책을 제시
 - (평화 및 안보 보장) 2024년 예산안, 중기재정계획, 연방군 특별기금을 통해 정부는 2024년부터 NATO 방위비 목표인 GDP의 2%를 달성하고, 개발 협력 등 국제적 책임을 이행
 - (사회적 결속력)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합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2027년까지 자금을 보장
 - 시민수당 도입과 주거급여 개혁은 사회 통합 촉진, 가족 친화적인 주거 보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임
 - ‘아동 기초생활보장’ 시행으로 다양한 가족수당을 통합하고 적용을 간소화해 빈곤 위험 아동 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가족수당에 2025년부터 연간 20억유로의 자금을 계획
 - 교육 기회 개선 프로그램(Startchancen-Programm)³¹⁴⁾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기간에 35억유로의 자금 배정
 - (에너지 공급 위기 방지 및 전환) 에너지 공급의 보장·전환을 위해 자금 제공
 - 에너지 공급 의존도 완화를 위해 LNG 터미널 구축·운영에 자금 지원
 - 기후변화기금³¹⁵⁾은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적 건물 개보수, 산업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충전 인프라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핵심 과제
 - 기후변화기금 용도를 확장해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도 동 기금을 활용

314) 취약 계층 비중이 높은 학교에 특별 지원, 추가 사회 복지사 배정 등을 통해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지원

315) 기후변화기금의 2024년 운용 계획은 향후 확정될 예정

■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기후변화기금 계획안 승인(2023. 8. 9.)³¹⁶⁾³¹⁷⁾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2024년도 재정계획안과 2024~2027년의 중기계획안을 승인함
 - 기후변화기금은 독일의 에너지 및 기후 정책 목표 달성, 미래 기술 개발, 지속가능하고 기후중립적인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특별 기금임
 -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탈탄소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기후변화기금의 우선순위이며 향후 수소경제 발전에도 자금을 지원할 예정
 - 또한 기후변화기금에 반도체 분야 지원 자금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이 확대
- (2024년 계획 규모) 2024년 기후변화기금 계획의 프로그램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216억유로 증가한 576억유로임
 - 건물 부문(신축 및 개축)에 189억유로
 - 재생에너지법(EEG) 관련 자금 조달에 126억유로
 - 충전 인프라 확장을 포함한 전기차 발전에 47억유로
 - 철도 인프라 투자에 40억유로
 -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40억유로
 - 수소 산업 발전 지원에 약 38억유로
 - 에너지 집약적 기업 지원(전기 요금 보상)에 26억유로 등을 배정
- (중기계획 규모) 2024~2027년 기후변화기금의 투자 규모는 총 2,118억유로로 계획
- (재원 조달) 2024년 기후변화기금의 자금은 유럽 및 국내 배출권 거래를 통한 자체 수입 191억유로, 초과 수입³¹⁸⁾ 93억유로, 적립금 707억유로 등을 통해 조달

316)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한 판결 이전에 발표된 계획안으로 인한 판결 이후 조정된 수정 계획안과 차이가 있음

317) 독일 연방정부,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Gezielt und technologieoffen in die Transformation unseres Landes investieren," 2023. 8.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09-klima-und-transformationsfonds.html>, 검색일자: 2023. 8. 22.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Wirtschaftsplan des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KTF)," 2023. 8. 9.,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08/20230809-bundeskabinett-beschliesst-wirtschaftsplan-des-ktf.html>, 검색일자: 2023. 8. 22.

318) 2023년의 예상 초과 수입과 과소 지출로 발생

표 3-III-3 독일 기후변화기금 재정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	2024
수입	100.8	99.1
ETS 배출권 거래 관련 수입	7.3	8.2
국내 탄소 가격 책정 관련 수입	8.6	10.9
초과 수입	6.0	9.3
적립금 인출	78.9	70.7
지출	100.8	99.1
프로그램 지출	36.0	57.6
적립금 배정	64.8	41.5

자료: 독일 연방 정부, "Klima- und Transformationsfonds: Gezielt und technologieoffen in die Transformation unseres Landes investieren," 2023. 8.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09-klima-und-transformationsfonds.html>, 검색일자: 2023. 8. 22.

■ 독일 연방 내각, 예산 자금 조달법안 승인(2023. 8. 16.)³¹⁹⁾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8월 16일, 2024년 연방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입법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자금 조달법(Haushaltsfinanzierungsgesetz) 안을 승인함
 - 독일 연방 정부는 2024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7월 5일 발표)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포함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
 - 동 법안은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안과 함께 의회 심의를 위해 연방하원 및 상원에 제출
- (주요 내용) 예산 자금 조달법안에 따른 주요 정책 변경은 다음과 같음
 - (부모수당 및 육아휴직법) 부모 수당 수급 자격의 소득 기준을 15만유로로 하향 조정³²⁰⁾

319) 독일 연방 정부, "Bundeskabinett bringt Sparvorhaben auf den Weg," 2023. 8. 1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haushaltsfinanzierungsgesetz-kabinett-2213080>, 검색일자: 2023. 8. 23.

독일 연방 재무부, "Pressemitteilung zum Haushaltsfinanzierungsgesetz," 2023. 8. 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16-haushaltsfinanzierungsgesetz.html>, 검색일자: 2023. 8. 23.

320) 기존 부부 소득 한도는 30만유로, 편부모 소득 한도는 25만유로였으나 개정안은 구분 없이 15만유로로 설정

- (디지털 인프라 기금법) 기존의 디지털 인프라 특별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 예산으로 편입
- (기후변화기금법) 마이크로 전자 기술 지원 자금과 연방 철도 관련 자금 조달도 기후변화기금 목적에 포함
- (배출권 거래법) 톤당 탄소배출권 가격을 2024년에 35유로에서 40유로로, 2025년에 45유로에서 50유로로 인상
- (독일 사회법전 제2권, 제3권) 기존에 사회법전 제2권(구직자 기초보장)을 근거로 지역 일자리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25세 미만의 경제활동가능한 수급자는 2025년부터 사회법전 제3권(고용 촉진)에 근거해 연방 고용공단을 통해 구직 지원을 받을 예정
 - 이를 통해 일자리 센터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중복 수혜를 방지
- (독일 사회법전 제6권) 법정 연금 관련 추가 연방 보조금의 연간 인상액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간 6억유로씩 축소하고, 기여율을 2026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
- (독일 사회법전 제11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간 10억유로의 연방 보조금 지원을 2024~2027년에 중단(2028년부터 지원 재개)하고, 이로 인한 수입 감소를 반영해 장기요양 예비기금 이전액도 2024~2027년에 축소
- (연방군 자금 및 특별기금법) 연방군 특별기금 사용 목적을 관련 연구 및 인프라 프로젝트, 군수품 지출 등으로 확대

■ 독일 연방 재무부, '2024년 독일 재정계획안(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발표 (2023. 10. 15.)³²¹⁾

- (개요) 독일 연방 재무부는 10월 15일에 '독일 재정계획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함
 - EU 규정에 따라 유로화 도입 국가들은 매년 EU 집행위원회에 차년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을 제출
 - '독일 재정계획안'은 연방정부의 2024년 예산안과 2027년까지의 중기 재정계획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업데이트 된 주요 변화와 계획을 반영

321)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2023. 1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 검색일자: 2023. 10. 18.

-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예산의 재정전망을 포함
- (재정전망) 전망기간 동안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점차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전년과 동일한 2.5%로 예상되며 이후 재정적자가 점차 감소하여 2027년에 1.25%를 기록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해 2023년 재정적자 전망은 지난 4월 전망치(4.25%) 대비 크게 개선
 - 또한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약 2%로 전년 대비 다소 악화되지만 2024년에 1.75%로 개선되어 이후에도 꾸준히 적자 폭이 감소할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비율은 독일의 재정 정상화가 반영되어 2022년에 66.1%에서 2023년에 65.25%, 2024년에 64.75%로 감소 후 거의 평탄하게 유지될 전망
- (안정성장협약 준수) 보고서는 독일이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
 -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2024년에 구조적 재정적자가 GDP의 0.25%p 감소해 감축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EU 집행위원회는 독일이 구조적 재정수지를 GDP의 0.3%만큼 감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 (지출 증가율 기준) 2024년의 순기초지출 증가율은 2.25%로 예상되어 목표 요건³²²⁾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음
 - 국가별 권고에 의하면 전년 대비 2024년 순기초지출 명목 증가율이 2.5%를 상회할 수 없음
- (투자) 2022년에 전년 대비 8.5% 증가했던 정부 총고정자본형성은 향후에도 증가하여 2022~2027년에 연평균(기하평균) 약 6% 증가할 전망
 -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정부 투자 보조금은 향후 연간 5% 이상의 증가가 예상

322) 구조적 재정수지 개선 목표를 기반으로 계산된 순기초지출 증가율 상한 목표로 순기초지출은 이자지출, 재정적 수입 조치 등을 조정한 지출임

표 3-III-4 2024 독일 재정계획안의 주요 지표

(단위: GDP 대비 %,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일반정부 재정수지	-2.5	-2.5	-2.0	-1.5	-1.25	-1.25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1.8	-2.0	-1.75	-1.5	-1.25	-1.25
일반정부 국가채무	66.1	65.25	64.75	64.75	64.75	64.25
순기초지출 증가율	NA	5.75	2.25	2.25	2.75	2.75

주: 0.25%p를 기준으로 반올림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 Haushaltsplanung 2024*, 2023. 10. 16., p. 4, table 1, p.5, table 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deutsche-haushaltsplanung-2024.html, 검색일자: 2023. 10. 18.

나) 수정 정부 예산안(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 이후 발표)

■ 독일 연방정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정치적 합의 도출(2023. 12. 13.)³²³⁾

- (개요) 독일의 솔츠 총리, 하벡 부총리, 린드너 재무장관은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 언론 성명을 발표
 -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 2023년 7월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으나 독일 헌법재판소의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 위헌 판결(2023. 11.) 이후 의회의 예산 심의가 중단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정하고 있음
- (우선순위) 기후중립적 전환 지속 추진, 사회적 결속 강화 등 당초 발표했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도 추진
 - 또한 린드너 재무장관은 2024년에도 재정건전화에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 독일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4년에 64%로, 재정적자 비율은 2021년 3.6%에서 2024년에 1.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323) 독일 연방정부, "Einigung zum Haushalt 2024," 2023. 12.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einigung-haushalt-scholz-lindner-habeck-2249182>, 검색일자: 2023. 12. 18.

독일 연방정부, "Bundshaushalt: Wie geht es weiter?," 2023. 12. 15.,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faq-zum-bundshaushalt-2244536>, 검색일자: 2023. 12. 18.

독일 연방정부, "Pressestatements von Bundeskanzler Scholz, Bundesminister Habeck und Bundesminister Linder am 13. Dezember 2023 in Berlin," 2023. 12.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pressestatements-von-bundeskanzler-scholz-bundesminister-habeck-und-bundesminister-linder-am-13-dezember-2023-in-berlin-2249174>, 검색일자: 2023. 12. 18.

- (예산 조정) 2024년 핵심 예산에서 약 170억유로를 절감 예정
 - 또한 기후변화기금에서 2024년에 약 120억유로를 삭감하고 2027년까지 약 450억유로의 지출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
 -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 친환경 난방 시스템 교체 지원 등의 지원과 기금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속될 예정
 - 다만 전기차 지원금 조기 종료(12월 17일), 태양광 산업 등 일부 프로그램 삭감 등이 예상
 - 기후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폐지, 개별 부처 지출 일부 축소,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 개선, 연방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
 - 일반 세수에서 EU로 이전되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플라스틱 유통 업체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자금 조달
 - 전력세 감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기후 친화적 기술 투자를 위한 세계 혜택을 담은 성장기회법 등은 유지 예정
-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계획대로 정규 예산에서 지원 예정
 - 무기 공급 지원(80억유로), 우크라이나 예산에 대한 재정 지원(EU를 통한 지원 포함),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60억유로 이상) 등 포함
 - 전쟁 상황 심화, 다른 국가의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서 차입 한도 초과를 허용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합의
- (재정준칙 준수) 기본법의 부채제동장치 규정은 2024년에 준수할 예정
 - 다만 2021년 수해 피해 복구 지원이나 우크라이나 정세 악화 시 대응을 위해 부채제동장치의 예외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
- (향후 일정) 향후 세부 예산안을 독일 연방 내각에서 확정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하고, 이후 의회 입법 절차를 2024년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
 - 예산안 최종 승인 전까지 잠정 예산 운용 규정을 적용

표 3-III-5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합의안

구분	주요 내용
주요 투자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 보상법에 의해 약 150억유로의 조세 부담 완화 2024년 연방정부 공공투자 규모는 540억유로로 인프라, 디지털화, 기후변화 대응 등에 투자 2024년에 전기 가격 지원 패키지(약 71억유로) 시행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발표된 제조업 전력세 감면, 전기 요금 보전 제도 유지 및 개선, 에너지 집약적 기업 지원 등은 포함되지만 전력망 요금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
부처 예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협력 관련 지출 8억유로 축소(외교부, 경제기후보호부 각각 2억유로, 경제협력개발부 4억유로 축소) 디지털교통부 예산 3.8억유로 축소 교육연구부 예산 2억유로 축소 법정 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 6억유로 축소 해상 풍력 관련 토지 경매의 초과 수익을 환경·소비자보호부와 식품농업부가 사용 공무원 급여 개혁 법안 개정
기후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용 자동차세 특례 폐지, 농업용 디젤에 대한 조세 감면 폐지로 각각 4.8억유로, 4.4억유로의 추가 수입 확보 항공세 인하 제도 폐지로 2024년에 7천만유로(2025년부터 최대 3억유로) 추가 수입 확보 EU에 이전하는 플라스틱 부담금을 일반 조세수입이 아닌 원인자 부담으로 조달
노동시장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 강화를 통해 복지수당 지출 부담 완화 직업교육 참여 시 받는 시민수당 보너스 폐지, 구직 노력 의무 미이행 수급자 제재 등 시민수당 제도 개선(2.5억유로 확보)
기후변화기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의 프로그램 지출 127억유로 축소 탄소 배출권 고정 가격 2024년에 45유로로 인상

주: 독일 연방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도자료를 참고 바람
 자료: 독일 연방정부, "Zum Haushalt 2024," 보도자료, 2023. 12. 1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zum-haushalt-2024-2250336>, 검색일자: 2023. 12. 21.

2) 세수추계

- 독일 연방 재무부, 제165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 결과 발표(2023. 10. 26.)³²⁴⁾
 - (개요) 독일은 연 2회 세수추계 결과³²⁵⁾를 발표하며 이번 세수추계는 2023년 연방 정부 가을 경제전망의 주요 거시경제 전망치를 기준으로 추계
 - 가을 경제전망과 제165차 세수추계는 2024년 연방 예산안에 대한 의회 심의에서 고려
 - (총 세입) 독일의 총 세입은 2023년에 9,161억유로, 2024년에 9,641억유로로 추계
 - 직전 추계(2023년 5월)와 비교해 2023년은 주로 경제성장 약세의 영향으로 45억 유로 하향조정, 2024년은 경기회복 전망을 반영해 19억유로 상향조정
 - 특히 법인세 및 부과과세 방식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경기 둔화가 반영되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직전 추계 대비 약세가 나타남
 - 2027년까지의 총 세입 조정 규모 합계는 직전 추계 대비 233억유로 상향 조정
 - 다만 이번 추계에 성장기회법, 전기요금 지원 등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분은 미반영
 - (부문별 세입) 2023년에 연방정부 세입은 직전 추계 대비 36억유로 낮아질 전망이나 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각각 27억유로, 1억유로 늘어날 전망
 - 돌봄 서비스 개선법, 지방정부의 난민 관련 비용 지원법 등 일부 세법 개정은 주 정부에 유리하도록 세입을 재배분
 - EU 관련 이전 세액³²⁶⁾ 규모는 2023~2025년에는 직전 추계보다 낮아졌으나 2026년과 2027년에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EU 구조기금의 후속 자금 이전의 영향임

324)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Es ergeben sich keine neuen Verteilungsspielräume," 보도자료,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10/2023-10-26-ergebnisse-der-165-steuerschaetzung.html>,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정부, "Keine neuen Verteilungsspielräume," 2023. 10. 26.,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165-steuerschaetzung-2233082>, 검색일자: 2023. 11. 17.

325) 재무부를 비롯해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5개 경제연구소, 연방 통계청, 연방 중앙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 정부 재무부, 지방자치단체 연합회가 참여하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세수추계를 담당

326) EU 귀속 세수는 연방 세수에서 조달하는 부분(부가가치세 기반 자원, 국민총소득 기반 분담금, EU 플라스틱세 등)과 관세를 포함

- 린드너 재무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응,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변화를 추진해야 하며,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표 3-III-6 독일의 제165차 세수추계 결과

(단위: 십억유로,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연방 정부	금액	337.2	356.3	381.2	399.9	408.8	422.5	437.2
	전년 대비 증감률	8.0	5.7	7.0	4.9	2.2	3.3	3.5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6	3.8	5.3	-0.3	1.2	.
주 정부	금액	384.5	383.4	399.9	419.6	434.5	449.4	465.5
	전년 대비 증감률	8.3	-0.3	4.3	4.9	3.5	3.4	3.6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2.7	1.6	2.4	2.7	3.6	.
지방 자치 단체	금액	135.4	139.3	145.9	154.6	161.4	166.9	172.3
	전년 대비 증감률	7.3	2.8	4.8	6.0	4.4	3.4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0.1	1.5	1.7	1.6	1.9	.
EU	금액	38.6	37.1	37.2	42.9	49.9	49.5	49.0
	전년 대비 증감률	-2.5	-4.0	0.3	15.5	16.2	-0.7	-1.0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3.7	-5.1	-1.6	4.3	3.2	.
총 세수	금액	895.7	916.1	964.1	1,017.1	1,054.5	1,088.3	1,124.0
	전년 대비 증감률	7.5	2.3	5.2	5.5	3.7	3.2	3.3
	직전 추계 대비 증감	.	-4.5	1.9	7.8	8.3	9.8	.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Ergebnis der 165.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5-steuerschaetzung-01.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 재무부, "Abweichungen des Ergebnisses der Steuerschätzung Oktober 2023 vom Ergebnis der Steuerschätzung Mai 2023," 2023. 10. 2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Steuern/ergebnis-sitzung-arbeitskreis-165-steuerschaetzung-02.pdf?__blob=publicationFile&v=4, 검색일자: 2023. 11. 17.

나. 추가경정예산

- 독일 연방 내각, 2023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안 채택(2023. 11. 27.)³²⁷⁾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11월 27일에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채택함
 - (편성 배경) 2021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2023. 11.)을 연방예산에 반영
 - 2021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일부 차입 자금이 이전된 기후변화기금이 판결의 직접적 영향을 받음
 - 또한 해당 원칙이 다른 특별기금에도 적용될 경우 경제안정화기금과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2021)도 간접적 영향을 받음
 - (예산 규모) 2023년 추경예산안의 지출은 당초 예산 계획 대비 151억유로 감소한 4,612억유로로 계획
 - 또한 연방정부 핵심 예산의 신규차입은 당초 예산 계획 대비 182억유로 감소한 274억유로로, 이는 부채제동장치³²⁸⁾ 규정하에 허용된 순차입(약 258억유로)을 초과한 것임

표 3-III-7 2023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구분	2023 본예산	2023 추경예산안	변화
재정지출	4,763	4,612	-151
재정수입(신규차입 제외)	4,307	4,338	+31
조세수입	3,581	3,563	-18
신규차입	456	274	-182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verfassungsgerichtsurteil: Bundesregierung zieht Konsequenzen und beschließt Nachtragshaushalt 2023," 보도자료, 2023. 11.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11/2023-11-27-entwurf-nachtragshaushalt-2023-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3. 12. 4.

327)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verfassungsgerichtsurteil: Bundesregierung zieht Konsequenzen und beschließt Nachtragshaushalt 2023," 보도자료, 2023. 11. 2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11/2023-11-27-entwurf-nachtragshaushalt-2023-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3. 12. 4.

328) 독일 기본법 109조에 따라 연방 및 주정부는 차입 수입 없이 예산의 균형을 이뤄야 하며, 기본법 115조는 신규 차입을 명목 GDP의 최대 0.35%로 제한

- (주요 내용)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후변화기금) 기후변화기금 계획의 준비금(Rücklage)을 600억유로 감액
 - 이는 2021년 2차 추경예산법에서 신용차입 형식으로 해당 기금에 이전하기로 한 금액에 해당
 - (경제안정화기금) 경제안정화기금에서 2023년에 432억유로의 차입을 계획
 - 당초 2022년 기금 개시 당시 총 2천억유로의 차입수권³²⁹⁾을 받아 2024년 6월 말 까지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로 2023년부터 이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2023년에 기금에서 신규 차입을 계상하고 이를 부채제동장치 규정의 차입 한도에 포함
 - 경제안정화기금은 2023년 말에 조기 폐지될 예정
 -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2021년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조성된 특별기금도 조정되어 2023년 추경예산을 통해 연방 핵심 예산에서 16억유로를 배정
 - (기타 변경 사항) 2023년 10월 세수추계 기준 세수 부족액(18억유로), 이자 및 보증 관련 수입 증액(약 18억유로) 및 지출 감액(약 17억유로), 2023년 세대자본 관련 대출 철회로 인한 지출 감소(100억유로),³³⁰⁾ 준비금 인출 증액(33억유로) 등도 반영
- (부채제동장치의 예외 적용) 추경예산안에 따라 2023년 예산은 독일 기본법 제115조에 따른 차입한도³³¹⁾를 총 448억유로 초과하며, 정부는 재정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인 긴급 상황을 근거로 2023년에 부채제동장치 적용 면제를 위한 결의안을 마련³³²⁾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에 따른 에너지 가격 위기의 여파가 계속되어 연방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고, 2021년 독일 대홍수 관련 복구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일부 주정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초과 차입 중 16억유로는 홍수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기금 관련 예산, 432억유로는 경제안정화기금에 해당

329)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

330) 세대자본이란 법정 연금 기여율 추세 안정화를 위해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통해 법정 연금의 자금을 일부 조달하는 것임. 이번 지출 감액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반영이 아닌 세대자본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조정임

331) 연방 핵심 예산의 순차입 한도와 자체 차입이 가능한 특별기금의 순차입 한도를 포함

332) 자연재해나 정부 통제가 불가능하고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에서 부채제동장치의 차입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

- 독일 연방의회, 2023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법 최종 의결(2023. 12. 15.)³³³⁾
 - 독일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은 2023년 12월 15일에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법과 예산 자금 조달법을 최종 승인함
 - (추경예산법) 연방 의회는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법의 정부안을 승인
 - (차입 한도 초과를 위한 결의안) 2023년에 부채제동장치의 차입 한도 초과를 허용 하기 위한 결의안도 연방하원에서 승인
 - 이에 따라 독일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차입 한도 규정 적용을 중단
 - (예산 자금 조달법) 2023년 8월에 정부가 제시한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2023년 및 2024년 예산 자금 조달법을 연방의회가 최종 승인
 - 당초 정부안은 부모수당 수급 소득 한도를 유형 구분 없이 15만유로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부부 소득 한도는 2024년 4월부터 20만유로, 2025년 4월부터 17만 5천유로로, 편부모 소득 한도는 15만유로로 하향 조정하도록 최종 확정
 - 당초 정부안은 탄소 배출권 고정가격을 2024년에 40유로, 2050년에 5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24년에 톤당 30유로에서 45유로로, 2025년에 45유로에서 55유로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

다. 결산

- 독일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3 상반기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라.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대한 위헌 판결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에 대해 위헌 판결(2023. 11. 15.)³³⁴⁾

333) 독일 연방 의회, "Bundestag beschließt Nachtragshaushalt für 2023," 2023. 12. 15., <https://www.bundestag.de/dokumente/textarchiv/2023/kw50-de-nachtragshaushalt-980612>, 검색일자: 2023. 12. 18.
 독일 Bundesrat, "Nachtragshaushalt," 2023. 12. 15., <https://www.bundesrat.de/DE/plenum/bundesrat-kompakt/23/1040/59.html?nn=20774404#top-59>, 검색일자: 2023. 12. 18.

334)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Zweites Nachtragshaushaltsgesetz 2021 ist nichtig," 보도자료, 2023. 11. 15.,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3/bvg23-101.html>,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정부, "Regierung wird Urteil genau beachten," 2023. 11. 15., <https://www.bundesregierung>

- (개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1회계연도 제2차 독일 추경예산법이 기본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
- (배경) 독일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법에서 당초 본예산 및 제1차 추경예산법을 통해 승인된 2,400억유로의 신규차입 중 사용하지 않은 600억유로를 에너지기후기금(현 기후변화기금)으로 이전하여 향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사용하도록 함
 - 2021년 연방 예산에서 1,800억유로의 신규차입을 승인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경예산법(2021. 4.)에서 신규차입이 약 600억유로 증액되었음
 - 이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예외적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여 부채제동장치(Debt brake) 규정의 예외로 인정
 - 제2차 추경예산법(2022. 2.)을 통해 예산 규모를 추가 증액(5,477억→5,727억유로)하고, 미사용 차입금 600억유로³³⁵⁾는 에너지기후기금으로 소급적으로 이전해 차후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함
 - 이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촉진할 계획

표 3-III-8 2021회계연도 독일 추경예산안

(단위: 억유로)

구분	2021 본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재정지출	4,986	5,477	5,727
에너지기후기금 배정	25	25	625
재정수입	4,986	5,477	5,727
신규차입	1,798	2,402	2,402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Lindner: Das ist ein Booster für die Volkswirtschaft," 2021. 12. 1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1/12/2021-12-13-zweiter-nachtragshaushalt-2021.html>, 검색일자: 2023. 11. 17.

- (판결) 2021회계연도 제2차 추경예산법이 독일 기본법 제109조 제3항, 제110조 제2항, 제115조 제2항³³⁶⁾에 합치하지 않아 무효로 판결

ung.de/breg-de/aktuelles/urteil-zum-nachtragshaushalt-2240768, 검색일자: 2023. 11. 17.

335) 독일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당 규모의 투자(특히 기후보호 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사용 자금이 발생

336) 독일 기본법 제109조 제3항: 연방과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주는 정상 국면을 벗어난 경기변동의 영향을 경기 호황 및 침체 시에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한 규정과 국가의 통

- 입법부가 긴급 상황(부채규정 한도의 초과 허용 요건)과 이에 대응한 위기관리 조치 사이에 필요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추경예산법은 기본법에서 규정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차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제115조 제2항 제6문에 따른 긴급 상황의 판정이 실제 차입수권³³⁷⁾의 사용과 연동되지 않는 것은 기본법이 규정한 단년도 예산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반
 - 기금 지출이 실제 발생하는 회계연도가 아닌 2021년의 채무로 반영하면서 긴급 상황의 차입수권을 차후 회계연도에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허용 불가
 - 2021회계연도 종료 후에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을 채택한 것은 기본법 제110조 제2항 제1문의 예산의 사전 원칙³³⁸⁾에 위반
- (영향) 이번 판결로 기후변화기금으로 이전된 600억유로를 기후보호 관련 지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기후변화기금의 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
- 연방정부는 판결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
 - 독일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당초 11월 23일에 예정된 2024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조정회의 표결 일정을 연기(2023. 11. 22.)

제를 벗어나고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상황 규정도 제정되어야 한다. 연방의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제1문에 부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제115조에서 정한다. 주의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떠한 차입수입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1문에 부합한다는 기준에 따라 주가 그 헌법적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다.

독일 기본법 제110조 제2항: 예산안은 그 연한에 따라 1년 또는 다년 회계연도로 나누며 제1차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예산법률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의 각 부분에 관하여 회계연도에 따라 분리되어 상이한 기간에 적용된다고 규정될 수 있다.

독일 기본법 제115조 제2항: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때 위 원칙에 부합한다. 정상국면을 벗어난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신용차입을 할 경우에는 경기호황 및 침체 시의 재정에 대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 이루어진 신용차입이 제1문부터 제3문까지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차입 상한에서 벗어나는 경우 이는 통제계정에서 관리된다. 명목 국내총생산의 1.5 퍼센트를 넘는 초과부담은 경기상황에 맞추어 상환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 특히 재정적 금융거래만큼의 수입 및 지출의 보정, 경기보정절차에 따른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순신용차입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실제 신용차입이 규정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 및 조정 등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고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 다수의 의결에 따라 이러한 신용차입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연방의회 의결 시 그 신용차입에 대한 상환계획도 함께 의결되어야 한다. 제6문에 따른 신용차입은 적절한 기간 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국회도서관,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번역본」, 2018.에서 해당 조항 발췌)

337)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

338) 예산 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 법률에 의해 확정

-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 재무부는 연방예산의 신규 지출부담승인³³⁹⁾ 예산 중단 조치를 단행³⁴⁰⁾
- 린드너 재무장관은 11월 23일 언론 성명에서 추후 2023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고 발표³⁴¹⁾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주요 경제·재정 전망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발표(2023. 10. 11.)³⁴²⁾
 - (개요) 독일의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10월 11일, '2023년 가을 경제전망'을 발표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는 매년 봄과 가을에 세수 추계, 예산 편성 관련 거시경제 지표 기준, EU 제출 보고서 등의 기초가 되는 경제전망을 발표
 - (경제전망) 독일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인플레이션 감소, 임금 인상, 안정적 수요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성장이 기대됨
 - (GDP)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4%로 전망되며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 2024년에 1.3%, 2025년에 1.5%의 성장이 예상됨

339) 향후 다년도 기간의 지출 집행을 위한 승인 한도(참고: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 재정법령 분석-독일 연방예산 규정』, 2017, p. 21)

340) tagesschau, "Finanzministerium weitet Haushaltssperre aus," 2023. 11. 21., <https://www.tagesschau.de/inland/haushaltssperre-koalition-schuldenbremse-100.html>, 검색일자: 2023. 11. 24.

341) 독일 연방 재무부, "Christian Lindner in einem Pressestatement zum Entwurf eines Nachtragshaushalts 2023," 2023. 11. 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Video/2023/2023-11-23-Pressestatement-Christian-Lindner/2023-11-23-pressestatement-christian-lindner.html>, 검색일자: 2023. 11. 24.

342) 독일 연방 정부, "Bruttoinlandsprodukt geht um 0,4 Prozent zurück – für 2024 Wachstum erwartet," 2023. 10. 1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herbstprojektion-2023-2229570>, 검색일자: 2023. 10. 1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abeck stellt Herbst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vor,"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10/20231011-habeck-stellt-herbstprojektion-vor.html>, 검색일자: 2023. 10. 1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3,"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10. 17.

- 로버트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제의 약세, 지정학적 갈등 등을 현재의 경제 회복 지연 요인으로 언급
-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임금 상승을 바탕으로 한 민간 소비 증가가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전망
- 기계·설비 투자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높은 투자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나 금리 인상폭 확대에 건설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물가) 독일의 소비자물가는 2023년에 6.1% 상승 후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2.6%, 2.0%로 상승률이 하락할 전망
- (노동시장) 단기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건(robust)하다고 평가
-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표 3-III-9 독일의 2023년 가을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

구분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 성장률	1.8	-0.4	1.3	1.5
가계최종소비	3.9	-0.5	1.8	1.7
정부최종소비	1.6	-2.2	1.3	1.1
총고정자본형성	0.1	0.4	0.4	2.0
설비	4.0	3.8	2.9	3.3
건설	-1.8	-1.3	-1.7	1.1
기타	-0.7	0.0	2.6	2.5
내수	3.2	-0.6	1.5	1.6
수출 증가율	3.3	-1.1	1.8	3.3
수입 증가율	6.6	-1.5	2.4	3.6
실업률(연방 고용청 기준)	5.3	5.7	5.7	5.5
고용	1.4	0.7	0.3	0.2
소비자물가상승률	6.9	6.1	2.6	2.0

자료: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Eckwerte der Herbstprojektion 2023," 2023. 10. 11.,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H/231011-eckwerte-der-herbstprojektion-2023.pdf?__blob=publicationFile&v=3, 검색일자: 2023. 10. 16.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3년 가을 공동 경제전망(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3)’³⁴³⁾ 발표(2023. 9. 28.)³⁴⁴⁾
 - (경제성장률)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에 -0.6%, 2024년에 1.3%로 전망
 - 2023년과 2024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023년 봄 경제전망 대비 각각 0.9%p, 0.2%p 하향 조정됨
 - 봄 경제전망 대비 산업 및 소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전망치를 하향 조정
 -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지연되었고, 고물가로 가계 구매력이 저하되었으며, 기준금리 인상은 건설 산업에 영향을 미침
 -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 심리가 악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 에너지 가격 하락, 수출기업의 비용 상승분 일부 전가 등으로 구매력이 회복되어 연말에 경기침체가 진정되고 향후 생산 가동률도 다시 상승할 전망
 -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중기적으로 잠재 성장 둔화가 뚜렷해질 것임
 - (물가)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은 2023년에 6.1%, 2024년에 2.6%로 하락할 전망
 -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3년에 6.1%, 2024년에 3.1%로 전망
 - (노동시장) 고용의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실업자 수는 2023년에 260만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2024년에는 소폭 감소할 전망
 - (재정수지) 2023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2%로 감소하고, 2024년에 1.6%, 2024년에 1.1%로 더욱 감소할 전망

343)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DIW), 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344) Gemeinschaftsdiagnose,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3: Kaufkraft kehrt zurück – Politische Unsicherheit hoch,” 2023. 9. 28., <https://gemeinschaftsdiagnose.de/2023/09/28/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3-kaufkraft-kehrt-zurueck-politische-unsicherheit-hoch/>, 검색일자: 2023. 10. 17.
 Gemeinschaftsdiagnose,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2/2023,” 보도자료, 2023. 9. 28.,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9/GD-2023-2-PM-DE.pdf>, 검색일자: 2023. 10. 17.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Herbst 2023: Kaufkraft kehrt zurück – Politische Unsicherheit hoch,” 2023. 9. 28., <https://www.ifo.de/fakten/2023-09-28/gemeinschaftsdiagnose-herbst-2023>, 검색일자: 2023. 10. 17.

- (리스크 요인) 예상을 상회한 독일 경제 성장(상방 리스크), 에너지 가격 추가 급등, 중국의 경제 상황, EU-중국 간 새로운 무역 갈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

표 3-III-10 2023년 가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천명,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질GDP성장률(%)	3.2	1.8	-0.6	1.3	1.5
취업자수(천명)	44,984	45,596	45,910	46,038	46,008
실업률(%)	5.7	5.3	5.6	5.6	5.3
소비자물가상승률(%)	3.1	6.9	6.1	2.6	1.9
일반정부 재정수지(십억유로) (GDP 대비 %)	-129.7	-96.9	-89.5	-68.4	-47.9
경상수지(십억유로) (GDP 대비 %)	278.7	162.0	268.6	300.3	307.7

자료: Gemeinschaftsdiagnose, "PRESSEMITTEILUNG DER GEMEINSCHAFTSDIAGNOSE 2/2023," 보도자료, 2023. 9. 28.,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3/09/GD-2023-2-PM-DE.pdf>, 검색일자: 2023. 10. 17.

나. 경제 및 재정정책

1) 정부 정책 방향

■ 독일 연방 총리, 하계 정례 기자회견 개최(2023. 7. 14.)³⁴⁵⁾

- 솔츠 총리는 하계 정례 기자회견에서 주요 정부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설명
 - (우크라이나 지원과 안보 정책)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인도주의적 지원과 무기 지원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의 자체 방어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약 170억 유로를 지출할 전망
 - 또한 독일의 안보 강화가 필요하며 내년에 예산과 특별기금을 통해 국방에 GDP의 2%를 지출하기로 결정

345) 독일 연방 정부, "Mehr Gelassenheit im Umgang miteinander," 2023. 7.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anzler-sommer-pressekonzferenz-2202502>, 검색일자: 2023. 7. 19.
독일 연방 정부, "Pressekonzferenz von Bundeskanzler Scholz zu aktuellen Themen der Innen- und Außenpolitik," 2023. 7.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pressekonzferenz-von-bundeskanzler-scholz-zu-aktuellen-themen-der-innen-und-aussenpolitik-2202682>, 검색일자: 2023. 7. 19.

- (독일의 현대화) 독일을 현대화하고 혁신을 추진해 최신 기술을 확보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
 - 독일 북부 해안에 가스 터미널 구축 가속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
 - 2030년까지 독일 전력의 80%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수소 네트워크 확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도 추진
 - 숙련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련 근로자 이민법 제정
- (사회 통합)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였고 중·저소득층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경감과 연금 제도 개선을 시행함
 - 또한 아동 빈곤 방지를 위해 향후 시행될 아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요성도 강조
- (재정 정상화) 정부는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급증했던 부채를 축소해 재정을 정상화하고 있으며 신규 차입은 부채제한 규정을 다시 준수할 전망

2)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한 정책

■ 독일 내각 회의, 독일 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계획 발표(2023. 8. 30.)³⁴⁶⁾

- (개요) 솔츠 독일 총리, 하벡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린드너 재무부 장관은 내각 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독일 경제 지원을 위한 10대 계획을 발표
 - 8월 29~30일에 개최된 내각 회의에서 독일 경제 성장 제고를 위한 성장기회법, 관료적 형식주의 완화, 디지털화 등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짐
 - 독일은 과도한 형식적 관료주의, 숙련 인력 부족, 디지털화 및 에너지 전환 지연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 둔화가 기업의 장기적 투자 위축이나 주택 건설 부진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성장 강화를 위한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 내용) 이번 계획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연간 70억유로의 지원, 관료적 형식주의 관련 비용 23억유로 절감 등이 포함

346) 독일 연방 정부, "Impulse für Wachstum in Deutschland,"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kabinettsklausur-august-2023-2216498>, 검색일자: 2023. 9. 7.

독일 연방 정부,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 fit für die Zukunft,"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irtschaftsstandort-deutschland-2204654>, 검색일자: 2023. 9. 7.

독일 연방 정부, "10 Punkte für den Wirtschaftsstandort Deutschland,"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resource/blob/975228/2216780/1ae3b55bae09c6cb62b1c225fb619a66/2023-07-29-10-punkte-fuer-den-wirtschaftsstandort-deutschland-data.pdf?download=1>, 검색일자: 2023. 9. 7.

- (성장기회법) 세제 혜택을 통해 독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제고
- (미래금융법) 미래금융법을 통해 스타트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민간 자금 동원을 용이하게 함
 - 우리사주 세금공제 인상, 기업공개에 필요한 최소 자본 기준 축소, 최대 10개의 결권을 갖는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 (기후변화기금)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2024년에 약 580억유로의 투자를 지원하며 2024~2027년에 총 2,118억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
 - 또한 연방 예산을 통해 철도, 도로, 교량,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고속 인터넷 회선 등에 540억유로의 투자를 추진해 내년에 독일 현대화에 1천억유로 이상이 투입 될 예정
- (계획 및 승인 절차 개선) 다수의 입법 패키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건설, 인프라 관련 계획 및 승인 속도 향상, 일부 주정부와 '계획, 승인, 이행 가속화를 위한 협약' 체결, 신청 및 승인 절차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활용 등
- (관료적 형식주의 철폐) 관료주의 완화법을 통해 규제 개선, 실지점검을 통해 철폐·개정할 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하여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 상법 및 세법상 문서 보존 기한 축소, 고용 계약 등의 서면 문서를 전자 문서로 대체 등
-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보장) 정부는 태양광, 풍력 발전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제 마련도 추진
- (디지털화 고도화) 신규 데이터 전략을 통해 데이터 활용, 접근, 보호 관련 여건 개선, AI 전략 이행, 행정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지원 등
- (숙련 인력 확보) 숙련 근로자 이민법을 통해 숙련 근로자의 이민 촉진, 직업 훈련 및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 지원 등
- (혁신 촉진) 2024년에 교육 및 연구에 200억유로 이상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종합 스타트업 전략 추진, 반도체 등 미래를 위한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을 독일에 유치
- (무역정책 의제 및 원자재 공급) 무역 및 투자 보호 협정 체결 지원, 원자재 수급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등

■ 독일 연방 내각, 성장기회법안 승인(2023. 8. 30.)³⁴⁷⁾

- 독일 연방 내각은 2023년 8월 30일,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안을 승인함³⁴⁸⁾
 - 동 법안은 독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
 - 성장의 기회, 투자, 혁신을 강화해 독일을 기후 중립적 경제로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
 -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을 제고
 - 성장기회법을 통해 2028년까지 연간 70억유로의 지원 효과가 예상됨
- 성장기회법안에 포함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경쟁력 강화)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
 - 기후 보호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법인세 부과 대상 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 관련 투자 지출의 15%를 직접적 재정 지원(direct financial support)을 통해 보조
 - 중소기업에 대해 인건비 외에 특정 자재비도 연구개발비 지원 범위에 포함, 연구개발 적격 비용의 기준 한도를 3배로 늘려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인상(25%→35%) 등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지원 강화
 - 2023년 9월 30일 이후부터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동산 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 주택 건설 촉진 및 건설 사업 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30일 이후부터 2029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취득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속 감가상각(6%) 적용
 - 이 외에도 결손금 공제 제도 개선, 소액 자산 즉시 상각제도 기준 상향 조정 등 추진

347) 독일 연방 정부, "Milliardenschwere Entlastungen für die deutsche Wirtschaft," 2023. 8. 30.,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achstumschancengesetz-2216866>, 검색일자: 2023. 9. 7.
 독일 연방 재무부, "Wachstumschancen schaffen," 2023. 8.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30-wachstumschancengesetz.html>, 검색일자: 2023. 9. 7.

348) 법안은 연내에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될 예정

- (배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축 자재비 증가, 고금리, 숙련 인력 부족 등으로 건설 경기 및 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건설, 주택 산업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동력이 필요
- (주요 내용) 저렴하고 기후 친화적인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건축 절차를 더욱 빠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14개 지원 조치를 발표
 - (가속상각 도입) 성장기회법³⁵¹의 일환으로 주거용 건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6%의 가속 상각을 도입해 건설 산업 안정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장려
 - (사회주택 자금 조달)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주정부에 총 181억 5천만유로 규모의 자금 제공
 -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자금 조달하여 2027년까지 약 450억유로의 자금 확보 예정
 - (상업용 부동산의 주거 시설 전환) 유휴 상업용 부동산을 기후 친화적 신규 주거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2년간 4억 8천만유로를 지원
 - (주택 마련 지원 강화) 기후변화기금 내 ‘가족을 위한 주택 마련 지원’ 프로그램³⁵²의 대출 한도를 3만유로 증액, 적격 가구소득 기준 상향 조정(6만→9만유로) 등
 - (새로운 주택 보유 지원 프로그램) 개조가 필요한 구축 건물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BEG³⁵³ 규정과 연계해 2024~2025년에 신규 주택 보유 지원 프로그램(Jung kauft Alt)을 도입
 - (EH40 표준³⁵⁴ 적용 보류) 건설 및 주택 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당초 신규 건축 주택에 적용 예정이던 EH40 표준 적용 계획을 무기한 보류
 - (기타) 이 외에도 기후 친화적 난방 시스템 설치 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건축 계획 및 승인 기간 단축 등의 조치 포함

Bau- und Immobilienwirtschaft,” <https://www.bmwsb.bund.de/SharedDocs/topthemen/Webs/BMWSB/DE/Massnahmenpaket-bauen/massnahmenpaket-artikel.html>, 검색일자: 2023. 10. 18.

351) 독일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친화적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연방 내각은 지난 8월에 성장기회법안을 승인하였음

352) Wohneigentum für Familien(WEF): 중 저소득 가구의 기후 친화적 자가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353) BEG(Bundesförderung für effiziente Gebäude): 효율적 건물을 위한 연방 지원

354) EH(Effizienzhaus)40은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슷한 신축 건물에 비해 에너지를 40%만 사용하도록 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해 온 EH55보다 기준을 강화

- 독일 연방정부, 제조업 부문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발표(2023. 11. 9.)³⁵⁵⁾
 - (개요) 독일 정부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에 직면한 제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세 (electricity tax) 인하, 기존 보조금 제도 연장·확대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패키지에 합의
 - 신규 법안을 통해 내년에 최대 120억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
 - (전력세 감면)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해 전력세를 EU 허용 최저 수준으로 인하
 - (세율) 기존 15.37유로/MWh(1.537센트/kWh)에서 0.5유로/MWh(0.05센트/kWh)로 전력세율을 대폭 인하
 - (지원 기간) 법률로 2024년과 2025년의 전력세율 감면을 규정하고, 추후 연방 예산에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추가 3년(2026~2028년)간 지원을 연장할 예정
 - (관련 제도 변경) 모든 제조 기업에 대해 전력세를 인하함에 따라 기존에 에너지 집약적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던 전력세 일부 감면 제도는 중단
 - 모든 기업을 지원함에 따라 기존 감면 제도의 신청 관련 행정비용도 절감 가능
 - (배출권 거래제 관련 보조금 확대) 전력 탄소 배출 비용 관련 정부 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혜택도 확대
 - 정부가 에너지 집약적 기업의 전력 탄소 배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³⁵⁶⁾을 추가 5년 연장하고 일정 규모의 자부담 공제 규정을 폐지해 지원 혜택을 강화
 - 현재 에너지 집약적 생산 공정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 생산 이전 및 탄소 배출 이동 가능성이 있는 기업(약 350개)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전력 집약적 기업(약 90개)에 제공하는 추가 지원(Super Cap) 또한 5년 연장하고 자부담 공제 규정을 폐지

355) 독일 연방정부, "Strompreispaket für produzierende Unternehmen – Bundesregierung entlastet stromintensive Unternehmen," 보도자료, 2023. 11. 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strompreispaket-fuer-produzierende-unternehmen-bundesregierung-entlastet-stromintensive-unternehmen-2235602>, 검색일자: 2023. 11. 17.

독일 연방정부, "Energie bezahlbar halten," 2023. 11. 9.,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strompreispaket-energieintensive-unternehmen-2235760>, 검색일자: 2023. 11. 17.

356) 기업의 국제 경쟁력 보장을 위해 특정 부문 기업에게 EU 배출권 거래제 관련 간접 탄소배출비용을 보상함. 전력 생산자가 전력 생산에 따른 탄소 배출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므로 전기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 집약적 기업의 간접 탄소배출비용도 상승하기 때문

- (기대 효과) 기존에 발표된 2024년 전력망 요금 안정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재생 에너지 부과금 폐지, 전기 및 가스 가격 상한제 연장 등과 함께 이번 지원 계획은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
- 독일 연방정부, 수소 네트워크 확대 및 자금 조달을 위한 법안 확정(2023. 11. 15.)³⁵⁷⁾
 - 독일 정부는 독일의 수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수소 저장시설, 발전소 등을 연결하는 수소 핵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안을 채택
 - (규모 및 기간) 수소 핵심 네트워크는 총 9,700km 규모로 2025~2032년에 점진적으로 구축 및 가동 예정
 - 네트워크의 60%는 기존 천연가스 네트워크에서 용도 변환, 40%는 신규 인프라에 할당
 - (자금 조달) 원칙적으로 수소 핵심 네트워크는 민간 부문 자금으로 조달
 - 수소 핵심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요금을 통해 전액 조달되고 민간 부문에서 구축
 - 구축 초기에 소수 사용자의 과도한 요금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상한을 적용하고, 향후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후속 추가 수익으로 초기 수익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상각 계정을 운영
 - 계획 대비 수소 네트워크 확대가 실패·지연되더라도 2055년까지 정부가 상각 계정의 부족분을 보전
 - (예상 비용) 독일의 가스 네트워크 사업자 협회(FNB GAS)는 수소 핵심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189억유로로 추정³⁵⁸⁾

357)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Gesetz zur Wasserstoff-Netzplanung und Kernnetz- Finanzierung beschlossen," 보도자료, 2023. 11. 15.,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3/11/20231115-gesetz-zur-wasserstoff-netzplanung-und-kernnetz-finanzierung-beschlossen.html>, 검색일자: 2023. 11. 20.

358) FNB GAS 홈페이지, "Wasserstoff-Kernnetz," <https://fnb-gas.de/wasserstoffnetz-wasserstoff-kernnetz/>, 검색일자: 2023. 11. 21.

4) 복지 정책

■ 독일 연방정부, 2024년 1월부터 국민수당 인상(2023. 9. 13.)³⁵⁹⁾

- 독일 정부는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국민수당³⁶⁰⁾의 기준급여액을 약 12% 인상 예정
 - 2024년 독신 성인의 기준급여액은 월 563유로로 전년 대비 월 61유로 인상
 - 기준급여액이 크게 인상된 것은 생활비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국민수당 도입 관련 개혁의 일환으로 기준급여액 산정 시 기존 방식보다 더 최신의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하는 신규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임³⁶¹⁾
- 또한 국민수당 수급 아동·청소년에게 지급되는 학용품 비용 지원도 2024년에 12% 인상 예정

표 3-III-11 독일 국민수당 기준 급여액

(단위: 유로/월)

구분	2023	2024	증가액
독신 성인/한부모	502	563	61
파트너와 함께 사는 성인	451	506	55
기관 및 특별시설의 성인	402	451	49
만 14~17세 청소년	420	471	51
만 6~13세 어린이	348	390	42
만 0~5세 어린이	318	357	39

자료: 독일 연방정부, "Regelsätze sollen deutlich steigen," 2023. 9.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arbeit-und-soziales/regelsaetze-erhoehung-2222924>, 검색일자: 2023. 9. 20.

359) 독일 연방정부, "Regelsätze sollen deutlich steigen," 2023. 9. 13.,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arbeit-und-soziales/regelsaetze-erhoehung-2222924>, 검색일자: 2023. 9. 20.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Höhere Regelbedarfe in der Sozialhilfe und beim Bürgergeld," 2023. 9. 13., <https://www.bmas.de/D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23/hoehere-regelbedarfe-in-der-sozialhilfe-und-beim-buergergeld.html>, 검색일자: 2023. 9. 20.

360) 국민수당(Bürgergeld)은 구직자들을 위한 기본 보장 혜택으로 구직자들이 최소 생활수준을 확보하며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존에 실업수당 II 또는 사회수당 수급자에게 혜택 제공(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2)

361) 기준급여액은 5년마다 시행하는 소득과 평균 소비지출 통계를 바탕으로 특정 물가지표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매년 업데이트함. 2023년부터 기준급여액은 2단계 기준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24년 적용을 위한 1단계 기본 업데이트는 2022년 7월~2023년 6월과 2021년 7월~2022년 6월 기간 간 특정 물가지표와 임금의 평균 변화율을 각각 70%, 30%씩 반영하여 산출하고, 2단계 보충 업데이트는 2023년 4~6월과 2022년 4~6월 기간 간 특정 물가지표 평균 변화율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 2024년 학용품 비용 지원(연 2회 정액 지원)은 상반기에 116유로에서 130유로로, 하반기에는 58유로에서 65유로로 인상

■ 독일 연방정부, 아동기초생활보장(Kindergrundsicherung) 계획안 발표(2023. 8. 28.)³⁶²⁾

- (목적) 독일 정부는 아동 빈곤을 예방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아동기초생활보장'을 도입할 예정
 - 빈곤 위험에 처한 56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
- (주요 내용) 기존 아동 관련 복지수당³⁶³⁾들을 하나의 '아동기초생활보장'으로 통합하고 온라인 신청, 청구 기관 단일화 등 청구 절차도 개선
 - (구조) 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는 표준 지급액과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추가 지급액으로 구성
 - (절차) 아동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절차를 단순화할 예정
 - 청구 기관을 연방 고용공단의 가족서비스 센터로 단일화
 - 추가 지급액의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공지하는 시스템 개발
 - (기타) 급여 현실화를 위해 사회문화적 최저생계비 수준을 조정할 예정
 -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해 추가 지급액 산정 시 다른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의 소득 반영 비율을 100%에서 45%로 조정
- (예산) 정부는 2025년 아동기초생활보장에 24억유로를 지출할 예정

362) 독일 연방정부, "Die Kindergrundsicherung kommt," 2023. 8. 28.,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ervice/newsletter-und-abos/newsletter-verbraucherschutz/kindergrundsicherung-2216540>, 검색일자: 2023. 9. 18.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Die neue Kindergrundsicherung kommt," 2023. 8. 29.,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die-neue-kindergrundsicherung-kommt-229760>, 검색일자: 2023. 9. 18.

363)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아동수당(2023년 기준 매월 1인당 최대 250유로),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아동보조금, 부모가 시민수당 또는 독일 사회법전 제2권, 제12권의 복지수당 수급자인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자녀 관련 기준급여액, 교육 및 참여 패키지 등 현재 다양한 아동 관련 복지수당들이 존재

다. 기타

■ 독일 연방 내각, 제29차 보조금 보고서 승인(2023. 8. 30.)³⁶⁴⁾

- (개요) 독일 연방 내각은 ‘2021~2024년 연방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 보고서’를 채택함
 - 독일 정부는 ‘경제 안정 및 성장증진법’에 근거해 격년마다 연방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의 개요를 포함한 연방 정부 보조금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문제에 대응, 인플레이션의 영향 완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고, 디지털 및 기후 정책 관련 지출도 반영됨
- (보조금 규모)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관련 보조금 규모는 2021년에 379억유로에서 2024년에 671억유로로 약 290억유로 증가
 - (재정 지원) 재정 지원 규모는 2021년에 184억유로에서 2024년에 487억유로로 약 300억유로 늘어날 전망이고 이러한 증가는 주로 기후변화기금에 편성된 프로그램에서 기인
 - 2023년 대비 2024년의 재정지원 예산은 35억유로 증액
 - 재정 지원의 비중은 2021년에 50.8%에서 2024년에 80.5%로 상승
 - 해당 기간 동안 총 25개의 새로운 재정지원이 도입되었고 이 중 주요 신규 보조금은 IPCEI³⁶⁵⁾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프로젝트와 IPCEI 수소 프로젝트 관련 조치임
 - (조세 감면) 연방정부의 조세 감면은 2021년 195억유로에서 2024년 184억유로로 다소 감소할 전망
- (지침 이행) 보조금 정책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보조금은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총 138개의 보조금 중 109개는 기한이 존재

364) 독일 연방 재무부, “Bundeskabinett beschließt 29. Subventionsbericht,” 2023. 8.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08/2023-08-30-subventionsbericht.html>, 검색일자: 2023. 9. 7.

독일 연방 재무부,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365) EU의 공동 이해관계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또한 보조금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2023년에 138개 재정지원 중 83개 (전체 재정지원 금액 중 86.3%)가 '독일 지속가능성 전략'에 근거한 환경 및 기후보호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III-12 독일의 2021~2024년 연방 보조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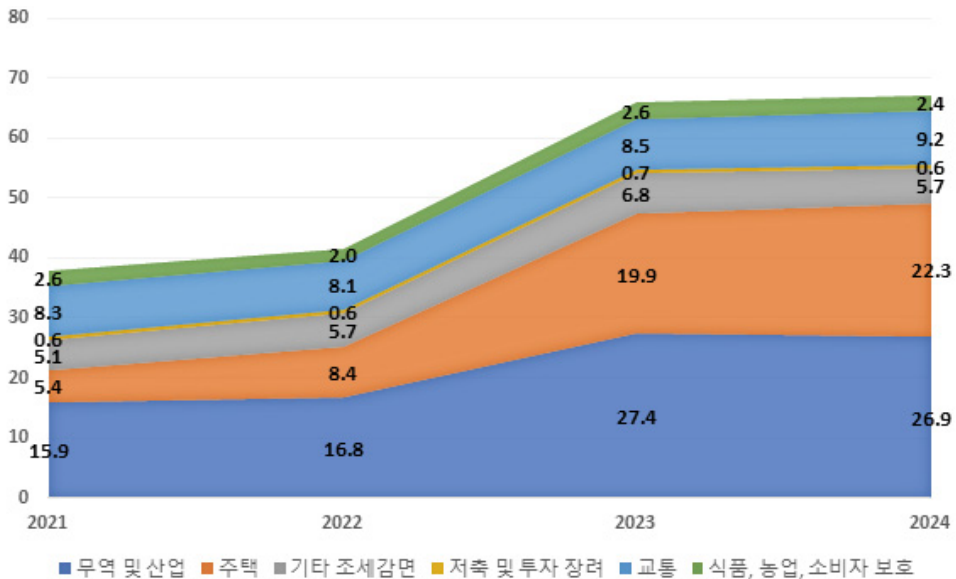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	2022	2023	2024
재정 지원	18,440	20,110	45,247	48,723
조세 감면	19,506	21,485	20,680	18,396
합계	37,946	41,595	65,927	67,119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Übersicht 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그림 3-III-2 독일의 경제부문별 연방 재정 지원 및 조세 감면 추이(2021~2024년)

(단위: 십억유로)



자료: 독일 연방 재무부, 29. *Subventionsbericht des Bundes*, 2023. 8. 30., Abbildung 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9-subventionsbericht.pdf?__blob=publicationFile&v=8, 검색일자: 2023. 9. 7.

■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³⁶⁶, 제28차 회의 개최(2023. 12. 18.)³⁶⁷

- (개요) 독일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법 위헌 판결을 고려해 심의 및 결정
 - 재정 안정화 위원회는 위헌 판결의 이행으로 향후 비상 상황에서 공공 예산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며 부채제동장치 적용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고했다고 평가
-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 모니터링) 2023년 봄에 위원회가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 모니터링 관련 1차 검토를 수행했으나, 예산 위헌 판결로 인한 정부의 예산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아 올해 추가 검토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다음 검토는 2024년 봄 재정 안정화 위원회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
- (부채제동장치 관련 모니터링) 위원회는 1개 주정부(2022년 튀링겐주)를 제외하면 연방 및 주정부가 제출한 안정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부채제동장치 준수 여부 결과에 대해 EU 요건에 따른 분석 체계의 결과와 이견이 없다고 결정
- (예산 비상상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위원회는 예산 비상상황이 우려(2022년 12월 평가)되는 브레멘주 관련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계속 조율하고 2024년에 업데이트된 예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조정안을 제시하도록 지시
 - 예산 위헌 판결 이후에 브레멘주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은 이미 가을에 제출된 브레멘주 구조조정 프로그램(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366) 독일의 재정 안정화 위원회(Stabilitätsrat)는 연방 재무장관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주 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되어 통상 연 2회 회의를 개최. 연방 및 주정부 예산을 정기 모니터링해 예산 비상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EU 안정성장협약의 구조적 재정수지 기준 준수를 파악해 필요시 건전화 방안을 권고

367) 독일 연방 재무부, “Stabilitätsrat: Umsetz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urteils stärkt Vergleichbarkeit und Transparenz der öffentlichen Haushalte,” 2023. 12. 18.,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3/12/2023-12-18-sitzung-des-stabilitaetsrats.html>, 검색일자: 2023. 12. 19.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 통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11. 24.)³⁶⁸⁾
 - (직전 분기 대비) 독일의 전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은 -0.1%를 기록
 - 직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최종소비지출은 다소 감소한 반면 총고정자본형성은 경제 생산에 긍정적으로 기여
 - 직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가계소비는 감소(-0.3%)한 반면 정부소비는 1년 여 만에 증가세(+0.2%)가 나타남
 - 직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총고정자본형성은 기계 및 설비에서 1.1%, 건설에서 0.4% 증가
 - 직전 분기 대비 2023년 3분기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0.8%, 수입은 1.3% 감소
 - 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 총부가가치는 2023년 3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0.1% 상승
 - 특히 에너지 공급 부문의 총부가가치가 상당히 감소했고, 자동차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제조업 총부가가치도 0.9% 감소
 - 반면 건설업(+0.4%)과 함께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부문 이외의 대부분 서비스의 총부가가치는 전분기 대비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3분기 가격조정 GDP 성장률은 -0.8%,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 GDP 성장률은 -0.4%를 기록
 - 2023년 3분기에 소비지출과 대외무역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
 - 고물가의 영향이 지속되어 식음료, 숙박, 의류 등의 지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2023년 3분기에 가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출 감소 등이 반영되어 정부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368)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3," 보도자료, 2023. 11.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1/PD23_451_811.html, 검색일자: 2023. 12. 12.

- 기계 및 설비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반면 건설 투자는 1.0% 감소
 -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3.8%, 수입은 5.7% 감소(특히 광물 연료 수입 급감 반영)해 대외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
- 2023년 3분기 가격 조정 총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
- 특히 건설업을 제외한 생산업의 경제 생산이 크게 감소(-3.8%)했고, 서비스 부문의 가격 조정 총부가가치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

표 3-III-13 독일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직전 분기 대비	1.0	-0.1	0.4	-0.4	0.0	0.1	-0.1
전년 동기 대비	4.3	1.6	1.2	0.2	0.2	-0.4	-0.8

주: 1.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계절 및 달력효과 조정 값
 2.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가격 조정 값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3," 보도자료, 2023. 11.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1/PD23_451_811.html, 검색일자: 2023. 12. 12.

표 3-III-14 독일 GDP의 요인별 변화

(단위: %)

구분	직전 분기 대비 변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	-0.8	0.2	-0.3	-0.2	-0.8	-2.0
정부 최종소비지출	-1.4	-0.4	0.2	-2.4	-3.2	-1.6
총고정자본형성	1.7	-0.3	0.6	0.2	0.4	-0.2
건설	2.7	-0.9	0.4	-3.3	-1.8	-1.0
기계 설비	2.1	0.7	1.1	7.2	4.6	1.1
기타	-1.6	0.0	0.3	-0.8	-0.8	-0.6
재고증감	-0.6	0.7	-0.4	0.3	0.7	-0.3
수출	-0.2	-0.9	-0.8	1.1	-2.0	-3.8
수입	-2.2	0.1	-1.3	0.5	-2.2	-5.7

표 3-III-14 의 계속

(단위: %)

구분	직전 분기 대비 변화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총부가가치	0.3	-0.2	0.1	0.8	-0.3	-0.7
농림어업	1.1	1.9	0.3	4.1	4.0	4.0
생산업(건설업 제외)	-0.5	-0.5	-1.3	0.3	-2.0	-3.8
제조업	-0.1	0.2	-0.9	2.1	0.1	-1.8
건설업	5.2	-0.7	0.4	-1.6	-1.0	1.2
도소매·교통·숙박·음식업	-0.4	0.1	1.7	0.6	-1.2	-0.4
정보·통신업	-0.2	1.8	0.9	2.6	3.0	2.1
금융 및 보험업	-2.0	-1.5	1.1	2.2	-0.7	-1.2
부동산업	0.8	0.3	0.4	0.8	0.4	1.0
사업서비스업	-0.2	0.4	0.1	-0.2	0.4	0.3
공공서비스·교육·보건업	0.9	-0.7	-0.2	2.7	0.7	-0.5
기타 서비스업	2.2	0.2	1.3	1.7	0.9	1.1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3. Quartal 2023," 보도자료, 2023. 11. 24.,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1/PD23_451_811.html, 검색일자: 2023. 12. 12.

나. 재정 통계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1분기 공공부채 통계 발표(2023. 6. 28.)³⁶⁹⁾

- 2023년 3월 말 기준, 독일의 공공부채 규모는 2조 4,066억유로를 기록
 - 이는 2022년 12월 말³⁷⁰⁾ 대비 389억유로(+1.6%) 증가, 2022년 3월 말 대비 876억유로(+3.8%) 증가한 수준임
- 2022년 말에 비해 2023년 1분기의 부채 수준이 연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승하였으나 주정부와 사회보장 부문은 소폭 감소

369) 독일 연방 통계청, "Öffentliche Schulden im 1. Quartal 2023 um 38,9 Milliarden Euro gestiegen," 보도자료, 2023. 6. 28.,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06/PD23_51_713.html, 검색일자: 2023. 7. 17.

370) 2022년 12월 말 공공부채는 2조 3,677억유로로 GDP의 약 61.2%(GDP 통계를 활용해 저자 계산) 수준임

- 2023년 1분기 연방정부 부채는 1조 6,596억유로로 2022년 말 대비 2.4%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
 - 특히 경제안정화기금(에너지 관련) 부채는 2022년 말 대비 73.3% 늘어난 524억 유로, 경제안정화기금(코로나19 관련) 부채는 1.2% 늘어난 530억유로로 나타났으며 연방군 특별기금의 부채(8억 200만유로)도 처음으로 기록됨
- 2023년 1분기 주정부 부채는 6,041억유로 수준으로 2022년 말 대비 0.5% 감소
 - 부채 감소율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채무 증권 발행 감소의 영향으로 부채가 축소
- 2023년 1분기 기초자치단체의 부채는 2022년 말 대비 1.9% 증가한 1,428억유로, 사회보장 부채는 2022년 말 대비 0.8% 감소한 3,610만 유로를 기록

표 3-III-15 독일의 2023년 1분기 공공부채

(단위: 백만유로, %)

구분	부채 규모			변화율	
	2023년 3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2년 3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대비	2022년 3월 31일 대비
합계	2,406,594	2,367,687	2,319,009	1.6	3.8
연방	1,659,608	1,620,357	1,546,852	2.4	7.3
주정부	604,141	607,177	636,765	-0.5	-5.1
기초자치단체	142,808	140,117	135,352	1.9	5.5
사회보장	36	36	41	-0.8	-11.2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Debt owed by the overall public budget to the non-public sector," 2023. 6. 28., <https://www.destatis.de/EN/Themes/Government/Public-Finance/Debt-Financial-Assets-Of-Public-Budgets/Tables/liste-tables-temporary-debts.html#649614>, 검색일자: 2023. 7. 17.

- 독일 연방 통계청, 2023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 발표(2023. 8. 25.)³⁷¹⁾
 - (재정수지) 독일의 2023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동기 대비 376억유로 증가한 421억유로(GDP 대비 2.1%)를 기록
 -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39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억유로 증가
 - 지난해 상반기에 재정흑자를 기록했던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부문은 각각 31억유로, 68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

371) 독일 연방 통계청, "General government deficit increased to 42.1 billion euros in the first half of 2023," 2023. 8. 25., https://www.destatis.de/EN/Press/2023/08/PE23_337_813.html, 검색일자: 2023. 8. 28.

- 사회보장부문은 70억유로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흑자 규모가 7억유로 감소
- (수입) 2023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수입은 9,17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 2023년 상반기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부가가치세는 0.5% 증가한 반면, 토지 및 건물 매매 부진으로 부동산 취득세는 33.5% 감소, 인플레이션 보상법의 기본 공제 인상으로 인한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소득세는 0.8% 감소
 - 사회보험료 부과 대상 고용의 견고한 추세, 보험료 산정 상한 기준 상향, 실업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인해 2023년 상반기 사회보험 기여금은 6.5% 증가
- (지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 조치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일반정부 재정 지출은 9,593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7.7% 급증
 - 2023년 상반기에 보조금은 전년 동기 대비 45.7%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을 반영
 - 주택수당 개혁, 아동수당 인상, 국민수당 및 법정 연금에 대한 추가 지출 등에 기인해 사회보장 수혜금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
 - 에너지 효율적 건물을 위한 정부 자금 개혁 등으로 정부의 투자 보조금도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
 - 정부 이자지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

표 3-III-16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간			반기	
	2020	2021	2022	2022 상반기	2023 상반기
일반정부 순융자(+)-순차입(-)	-147.7	-129.7	-96.9	-4.6	-42.1
일반정부 수입	1,569.9	1,712.9	1,821.2	886.2	917.2
일반정부 지출	1,717.6	1,842.6	1,918.1	890.8	959.3

자료: 독일 연방 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quarters," <https://www-genesis.destatis.de/>, 검색일자: 2023. 8. 25.

독일 연방 통계청, "National accounts – Revenue, expenditure, net lending/net borrowing of general government: Germany, years," <https://www-genesis.destatis.de/>, 검색일자: 2023. 8. 25.

- 연방 통계청, 2023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³⁷²⁾ 잠정실적 발표(2023. 10. 6.)³⁷³⁾
 - (지출) 2023년 상반기 지출은 9,65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금리 상승으로 타 분야에 대한 연방정부 이자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411.5% 증가한 293억유로를 기록
 - 2023년 상반기에도 기업 및 의료 부문에 대한 코로나 지원이 크게 감소해 교부금 및 보조금 지원도 계속하여 대폭 감소
 - 대중교통 회사들이 2023년 2분기부터 공공부문 예산 통계 산정에 포함³⁷⁴⁾되어 수수료, 요금 등 기타 경상수입 증가, 기초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출 증가 등의 영향 발생
 - (수입) 2023년 상반기 수입은 8,897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
 - 상반기 공공부문 전체의 조세수입³⁷⁵⁾은 7,573억유로를 기록해 전년 동기(7,442억 유로) 대비 소폭 증가
 - 다만 주정부 조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부동산 양도세 수입이 약 33.5% 감소했기 때문
 - (재정수지) 2023년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의 재정적자는 761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확대
 - 연방, 주,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 등 전 부문이 적자를 기록함
 - 2023년 상반기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642억유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기초자치단체 적자도 73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57억유로 증가
 - 주정부는 2022년 상반기 흑자에서 2023년 상반기에 균형에 근접한 소폭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사회보험부문 상반기 적자는 44억유로로 전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372) 공공부문 총예산은 연방,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법적 사회보험 부문이 통합된 개념임

373)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Halbjahr 2023 auf 76,1 Milliarden Euro," 2023. 10. 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0/PD23_396_711.html, 검색일자: 2023. 10. 19.

374) 정액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으로 대중교통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음

375) 조세 및 조세와 유사한 수입을 의미

표 3-III-17 독일의 상반기 공공부문 총예산

(단위: 십억유로)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	사회보험	합계
지출					
2023년 상반기	311.7	259.6	167.6	401.8	965.8
2022년 상반기	264.9	250.0	151.0	399.7	874.3
2021년 상반기	284.4	245.4	141.4	394.1	883.2
수입					
2023년 상반기	247.4	259.5	160.3	397.3	889.7
2022년 상반기	219.7	267.8	149.4	395.7	841.4
2021년 상반기	188.7	236.4	135.7	373.3	752.1
재정수지					
2023년 상반기	-64.2	-0.1	-7.3	-4.4	-76.1
2022년 상반기	-45.2	17.8	-1.6	-3.9	-32.9
2021년 상반기	-95.7	-9.0	-5.7	-20.7	-131.1

주: 2023년은 잠정치

자료: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steigt im 1. Halbjahr 2023 auf 76,1 Milliarden Euro," 2023. 10. 6.,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3/10/PD23_396_711.html, 검색일자: 2023. 10. 19.

IV 프랑스³⁷⁶⁾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회계연도: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표 3-I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7. 17.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안의 지출한도 보고서 발표
2023. 9. 26.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생태전환 로드맵 발표
2023. 9. 27.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안 발표
2023. 9. 27.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발표
2023. 9. 27.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4년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23. 10. 13.	프랑스 재무부, 2024년 녹색예산 발표
2023. 10. 13.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재정계획안 발표
2023. 10. 31.	프랑스 재무부, 2023년 예산종료법안 발표
2023. 12. 4.	프랑스 의회, 2024년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채택
2023. 12. 17.	프랑스 의회, 2024년도 예산법안 채택

자료: 저자 작성

3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인 선임연구원(leejungin@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안의 지출한도 보고서 발표(2023. 7. 17.)³⁷⁷⁾
 - 해당 보고서는 2024년 예산법안 발표 전 미션별 지출한도를 설정
 - 2024년 예산법안의 미션지출 총액은 3,560억유로로 2023년 예산법 대비 48억유로 감소
 - 2024년 예산법안은 재정의 점진적 회복과 친환경 부문 및 교육·연구 분야 투자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
 - 코로나19 관련 지출,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종료되며 공공재정을 회복하고자 함
 -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3년 4.9%에서 2024년 4.4%로 낮춤
 - 이후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2.7%로 낮추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생태학적 전환 관련 지출한도가 2023년 대비 70억 유로 증액
 - 친환경 부문에 투자하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금(fonds vert) 25억유로 증액
 - 건물 에너지 개선 지원 16억유로 증액
 -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지원 11억유로 증액 등
 - 학교 교육 미션 지출한도 39억유로, 대학교육 및 연구 미션 지출한도 10억유로 증액
 - 초중등 교육에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증액 계획
 - 재정보조 장학금을 인상하고 학생 기숙사 임대료 동결
 - 국방 미션 지출한도 33억유로 증액
 - 국방 인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 강화

377) 프랑스 재무부, "Publication des plafonds de dépens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LF) pour 2024," 2023. 7. 17.,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de-finances/articles/publication-des-plafonds-de-depenses-du-projet-de-loi-de-finances>, 검색일자: 2023. 7. 19.

표 3-IV-2 프랑스 2024년 미션별 지출한도

(단위: 십억유로)

미션	2023 본예산	2024 지출한도	증감액
외교(Action extérieure de l'Etat)	3.1	3.3	0.3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4.0	4.4	0.4
농업·임업·수산업(Agriculture, alimentation, forêt et affaires rurales)	4.1	5.0	0.9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6.6	6.6	-
퇴역군인지원(Anciens combattants, mémoire et liens avec la nation)	1.9	1.9	0.0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19.0	20.5	1.5
정부위원회 및 행정재판(Conseil et contrôle de l'Etat)	0.7	0.7	0.0
예비비(Crédits non répartis)	1.2	0.9	-0.3
문화(Culture)	3.5	3.7	0.2
국방(Défense)	43.9	47.2	3.3
국가정책방향(Direction de l'action du Gouvernement)	0.9	1.0	0.1
환경친화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	20.0	22.3	2.3
에너지 지원(« Service public de l'énergie »)	21.7	7.7	-14.0
경제(Économie)	8.8	5.2	-3.6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2.9	2.3	-0.6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60.3	64.2	3.9
공공재정 관리(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	8.0	8.3	0.3
이민 및 통합정책(Immigration, asile et intégration)	2.0	2.1	0.1
프랑스 2030 투자(Investir pour la France de 2030)	6.1	7.7	1.6
정의(Justice)	9.6	10.1	0.5
언론(Médias,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0.8	0.8	0.0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Outre-mer)	2.5	2.6	0.1
프랑스 활성화(plan de relance)	4.4	1.4	-3.0
의회·헌법위원회 등(Pouvoirs publics)	1.1	1.1	0.1
R&D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30.8	31.8	1.0
복지 및 은퇴자 지원(Régimes sociaux et de retraite)	6.1	6.2	0.1
지방재정지원(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5	4.3	-0.2
보건의료(Santé)	3.3	2.3	-1.0
치안(Sécurités)	15.8	16.3	0.5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29.4	30.7	1.4
체육 및 건강·청소년 지원(Sport, jeunesse et vie associative)	1.7	1.8	0.1
2024 파리 올림픽 관련 지원	0.3	0.1	-0.2
공공부문 개혁(Transformation et fonction publiques)	1.2	0.8	-0.3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30.7	30.5	-0.2
미션지출 합계	360.8	356.0	-4.8

자료: 프랑스 재무부, "Publication des plafonds de dépenses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7. 17., pp. 4~5.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PLF 2024) 발표 (2023. 9. 27.)³⁷⁸⁾³⁷⁹⁾³⁸⁰⁾
 - (경제 전망) 프랑스 경제는 2023년 성장세를 유지하다(1.0%) 2024년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전망(1.4%)
 - 2023년 원자재 가격이 크게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지나며 경기가 다소 회복
 - 2023년 2분기 실업률은 7.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보다 1%p 낮은 수준
 - 물가 안정화로 가계 소비가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4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장기 추세에 근접한 1.4%를 기록할 전망
 - 세계 무역의 반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
 - 다만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가 다소 둔화될 수 있음
 - (재정 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4.9%에서 2024년 4.4%로 다소 개선되고 2027년 3%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
 - 경제 회복과 더불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의 종료로 인해 2024년 재정수지는 2023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재정지출 비율은 2022년 57.7%를 기록한 이후 2023년 55.9%, 2024년 55.3%로 점차 하락할 전망
 - 2023~2027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0.6%로 이하로 유지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수지를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22년 111.8%에서 2023년과 2024년 109.7%로 다소 낮아진 이후 2025년 108.1%를 기록할 전망
 - 이후 재정지출 통제 노력의 영향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는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378)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https://www.economie.gouv.fr/projet-loi-de-finances-2024-plf>, 검색일자: 2023. 10. 4.

379)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PLF 2024)," 2023. 9. 27.,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309>, 검색일자: 2023. 10. 4.

380)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9., <https://www.vie-publique.fr/loi/291190-projet-de-loi-de-finances-2024-plf>, 검색일자: 2023. 10. 4.

표 3-IV-3 프랑스 2024년 예산법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9.0	-6.5	-4.8	-4.9	-4.4
재정지출 증가율(Croissance volume de la dépense publique, %)	6.7	2.6	-1.1	-1.3	0.5
총조세부담률(Taux de prélèvements obligatoires)	44.4	44.3	45.4	44.0	44.1
재정지출(Taux de dépenses publiques (hors CI))	60.7	58.4	57.7	55.9	55.3
공공채무(Dette publique)	115.0	112.8	111.8	109.7	109.7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p. 13

- (우선순위 정책) 생태학적 전환, 주권 강화, 교육 및 훈련 등 세 가지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중점적으로 지원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원
 - 공공 및 민간 부문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및 접근성 강화
 - 농업부문의 생태학적 전환 지원 및 산림 보호 강화
 -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노력
 - 녹색기금(fonds vert)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생태학적 전환 프로젝트 지원
 - 주권 강화를 위해 지원
 - 국방 미션 지출 확대를 통해 위협 및 분쟁에 대비하도록 함
 - 내무부와 법무부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 고용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개혁
 - 교육 부문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 직업 고등학교(lycée professionnel) 학생들의 인턴십 지원 확대
 -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친환경 산업 부문에 대한 교육 훈련 강화
- (기타 정책) 물가 상승으로부터 프랑스 국민들을 보호
 - 소득세 과세표준을 인플레이션에 연동해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

- 인플레이션에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연대 지원금 재평가를 통해 최저 소득 가구 지원

표 3-IV-4 프랑스 2024년 예산법안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3년 본예산	2023년 전망	2024년 예산법안	2023~20 24 차이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520.6	524.4	511.6	-12.9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50.0	455.5	445.1	-10.4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70.6	68.9	66.5	-2.5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5.6	44.5	44.8	0.3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5.0	24.4	21.6	-2.8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59.1	358.0	372.1	14.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8.2	332.1	349.4	17.3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7.3	90.7	94.1	3.5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55.3	61.3	72.2	10.9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6.6	16.4	16.4	0.0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94.7	96.3	100.4	4.1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74.3	67.4	66.3	-1.1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30.9	26.0	22.6	-3.3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3.6	-5.8	-5.1	0.7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1	0.1	0.2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64.9	-172.1	-144.5	27.6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24," 2023. 9. 27., pp. 14~16

■ 프랑스 재무부, FY2024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PLFSS 2023) 발표(2023. 9. 27.)³⁸¹⁾³⁸²⁾

- 사회보장부문 재정적자는 2024년 112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381) 프랑스 재무부, "Budget PLFSS 2024 : des mesures au service de la santé et des solidarités collectives," 2023. 9. 28., <https://www.economie.gouv.fr/budget-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2024-plfss>, 검색일자: 2023. 10. 5.

382)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vie publiqu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2023. 9. 28., <https://www.vie-publique.fr/loi/291211-plfss-2024-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 검색일자: 2023. 10. 5.

- 2020년 397억유로로 최저점에 도달한 이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영향으로 2023년 88억유로로 회복
- 중기적으로는 적자가 확대되어 2027년 175억유로를 기록할 전망

표 3-IV-5 프랑스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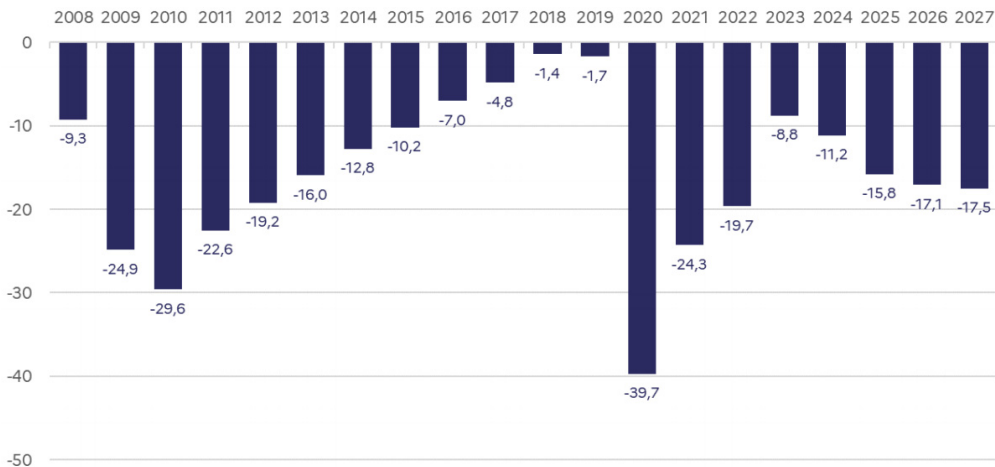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건강보험(CNAM Maladie)	-30.5	-26.1	-21.0	-9.5	-9.3	-10.0	-9.7	-9.6
산재보험(CNAM AT-MP)	-0.1	1.3	1.7	1.9	1.2	1.2	0.8	1.1
임금근로자 노령보험국가기금(CNAV)	-4.9	-1.1	-3.9	-1.9	-5.9	-9.3	-11.4	-14.0
가족수당국가기금(CNAF)	-1.8	2.9	1.9	1.0	0.8	0.5	0.9	1.7
자율연대국가기금(CNSA)	0.0	0.3	0.2	-1.1	1.3	1.0	0.7	0.4
일반체제(Régime Général; RG)	-37.3	-22.7	-21.0	-9.6	-11.9	-16.5	-18.7	-20.3
노령연대기금(Fonds de solidarité vieillesse: FSV)	-2.5	-1.5	1.3	0.8	0.8	0.8	1.6	2.8
사회보장부문 지출(RG+FSV)	-39.7	-24.3	-19.7	-8.8	-11.2	-15.8	-17.1	-17.5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2023. 9. 27., p. 40

그림 3-IV-1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재정수지 추이

(단위: 십억유로)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2023. 9. 27.

- 2024년 의료보험지출 증가율 목표치(ONDAM)³⁸³⁾는 2023년 대비 3.2% 증가한 2,549억유로로 전망
 - 2019년 대비 540억유로 높은 수준으로 의료 시스템 현대화 및 의료 전문가 지원에 대한 투자 의지를 반영
- 사회보장 부문 개선을 위한 정책 조치를 포함
 - 11세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등 백신 및 진료 접근성 강화
 - 공공 의료 부문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인상
 - 아동 보육 종사자의 급여 인상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녹색예산(budget vert) 발표(2023. 10. 13.)³⁸⁴⁾³⁸⁵⁾³⁸⁶⁾

- * 녹색예산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 기후 변화 대응,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및 위험 대비, 수자원 관리, 순환경제 및 폐기물,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및 보호 등 총 여섯 가지 환경 목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의 정책 등급 제시
- 2024년 예산법안에 포함된 총지출 5,697억유로 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559억유로에 대해 분석
 - 2024년 예산법안에서 여섯 가지 환경 목표 중 한 가지 이상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397억유로
 - 재생에너지, 에너지 분야 연구, 친환경 모빌리티, 건물 에너지 혁신, 생물다양성 관련 지원 등이 포함
 - 한 가지 이상의 환경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혼합비용은 31억유로
 - 새로운 철도 노선 및 운하 건설이 포함되는데, 이는 건설 과정에서 자연이 인공화

383)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d'assurance maladie. 1996년 지출 통제를 위해 제정된 제도로, 차년도 건강보험 지출 최대한도를 의미함

384) 프랑스 재무부, "Budget vert 2024 : 7 milliards d'euros de dépenses supplémentaires en faveur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10. 13., <https://www.economie.gouv.fr/budget-vert-2024>, 검색일자: 2023. 10. 19.

385) 프랑스 정부, "Le budget vert 2024 en hausse de 7 milliards d'euros," 2023. 10. 13.,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budget-vert-2024-en-hausse-de-7-milliards-deuros>, 검색일자: 2023. 10. 19.

386) 프랑스 환경부, "Le budget vert 2024 - Une hausse inédite de 7 Md€ des dépenses en faveur de la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10. 12., <https://www.ecologie.gouv.fr/budget-vert-2024-hausse-inedite-7-mdeu-des-depenses-en-faveur-planification-ecologique>, 검색일자: 2023. 10. 19.

되고 폐기물이 발생하나 중기적으로 오염이 적은 운송 방식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완화시키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

- 환경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출은 131억유로
 - 연료비 인하 지원, 도로 건설, 항공 운송 지원 등이 포함

■ 프랑스 의회, 2024년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2024)(2023. 12. 4.)³⁸⁷⁾ 및 예산법안(PLF 2024)(2023. 12. 17.)³⁸⁸⁾을 헌법 제49조 3항*에 따라 채택

*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총리가 지정하는 법률안이 하원에서 표결 없이 채택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해당 조항 발동 선언 이후 24시간 이내에 하원 재적 1/10 이상의 동의로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 후 48시간 이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³⁸⁹⁾

- 프랑스 정부는 2023년 12월 1일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 최종 심의에서 의회의 표결 없이 법안이 채택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발동해 2024년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³⁹⁰⁾

- 2023년 12월 1일 147명의 의원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³⁹¹⁾하였고, 2023년 12월 4일 부결³⁹²⁾되어 법안 통과

- 프랑스 정부는 예산법안 최종 심의에서 2023년 12월 17일 동일한 조항을 발동해 2024년 예산법안을 의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간주³⁹³⁾³⁹⁴⁾

387) 프랑스 의회, "Adop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4 (lecture définitive),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49.3)," 2023. 12. 4.,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adoption-du-projet-de-loi-de-financement-de-la-securite-sociale-pour-2024-lecture-definitive-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49.3>, 검색일자: 2023. 12. 19.

388) 프랑스 의회, "Adoption du PLF 2024 (2nde partie et ensemble), en nouvelle lecture, après le rejet d'une motion de censure (49.3)," 2023. 12. 1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actualites-accueil-hub/adoption-du-plf-2024-2nde-partie-et-ensemble-en-nouvelle-lecture-apres-le-rejet-d-une-motion-de-censure-49.3>, 검색일자: 2023. 12. 20.

389)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헌법」, 2022. 10. 5.

390) 프랑스 의회, "Déclaration engageant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Assemblée nationale sur le vote d'un texte," 2023. 12. 1.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1940-n0_rapport-fond, 검색일자: 2023. 12. 19.

391)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de l'article 49-3 de la Constitution," 2023. 12. 1., https://www2.assemblee-nationale.fr/static/16/motions_censure/20231201_Motion_de_censure_LFI-GDR-Ecolo-Socialistes.pdf, 검색일자: 2023. 12. 19.

392) 프랑스 의회, "Analyse du scrutin n° 3116 Première séance du 04/12/2023," 2023. 12. 4., [https://www.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3116](https://www.assemblee-nationale.fr/scrutins/detail/(legislature)/16/(num)/3116), 검색일자: 2023. 12. 19.

393) 프랑스 의회, "Déclaration engageant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Assemblée natio

- 2023년 12월 19일 149명의 의원은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³⁹⁵하였고, 48시간 내에 부결되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간주

나. 추경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예산종료법안(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LFG 2023) 발표(2023. 10. 31.)³⁹⁶

* 예산종료법(lois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LFG)은 2021년 공공재정 현대화에 관한 조직법(loi organique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 la gestion des finances publiques)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법의 범주로, 수정예산법과는 달리 새로운 지출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연말에 예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수치 조정을 제시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4년 예산법안 전망과 동일한 4.9%로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1.0%, GDP 대비 채무비율도 109.7%로 2024년 예산법안 전망 유지
- 2023년 재정적자는 1,714억유로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3년 예산법 대비 64억 높은 수치
 - 채무비용이 38억유로 증가했고, 기타세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0억유로, 44억유로 감소함
 - 법인세 수입, 소득세 수입, 부가가치세 수입은 각각 60억유로, 27억유로, 19억유로 증가하여 재정적자 증가 요인이 다소 상쇄됨
- 국가지출범위(PDE) 내에서 기존 지출 계획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52억유로를 편성
 -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관련 추가 비용 조달

nale sur le vote d'un texte," 2023. 12. 16.,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116b1985-n1_rapport-fond, 검색일자: 2023. 12. 18.

394) 프랑스 의회, "Projet de loi de finances n°219," 2023. 12. 18.,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116t0219_texte-adoptee-seance, 검색일자: 2023. 12. 19.

395) 프랑스 의회, "Motion de censure de l'article 49-3 de la Constitution,"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116b2009-n31_motion-censure, 2023. 12. 19., 검색일자: 2023. 12. 20.

396) 프랑스 예산국, "Présentation du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3 (PLFG 2023)," 2023. 10. 31.,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de-finances/articles/le-projet-de-loi-de-finances-de-fin-de-gestion-pour-2023>, 검색일자: 2023. 11. 16.

- 최근 다양한 농업 위기(조류 인플루엔자와 서리 등)에 대한 지원
- 50억유로 규모의 기존 지출 계획의 취소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편성
 - 과소 집행이 관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 계획이 취소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에너지 및 기후 프로그램(Programme n° 174 : Énergie, climat et après-mines)의 예산 취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23년 국가지출범위는 예산법(LFI) 기준 4,961억유로에서 4,953억유로로 9억유로 감소

표 3-IV-6 프랑스 2024년 예산종료법안 재정지표

(단위: 십억유로)

구 분	2022 실적	2023 예산법 (a)	2023 예산종료법안(b)	2023 차이 (b-a)
재정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et PSR)	505.4	520.6	523.2	2.7
세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438.2	450.0	453.8	3.8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67.3	70.6	69.5	-1.1
지방정부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43.0	45.0	45.6	0.0
EU보조금(Prélè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24.2	25.0	23.9	-1.1
재정수입(Recettes de l'Etat)	347.2	359.1	357.1	-2.0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nettes)	323.3	328.2	330.6	2.4
소득세(impôt net sur le revenu)	89.0	87.3	90.0	2.7
법인세(impôt net sur les sociétés)	62.1	55.3	61.3	6.0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	18.0	16.6	16.4	-0.2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 nette)	100.8	94.7	96.6	1.9
기타 세입(Autres recettes fiscales nettes)	53.4	74.3	66.3	-8.0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23.9	30.9	26.5	-4.4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 hors FMI)	6.7	-3.6	-5.4	-1.8
부속예산(Solde des budgets annexes)	0.0	0.1	0.1	0.0
총재정수지(Solde État - hors FMI)	-151.4	-164.9	-171.4	-6.4

자료: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finances de fin de gestion pour 2023," 2023. 10. 31., pp. 10~11.

다. 결산

- 관련 내용 없음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경제 지원 조치

- 프랑스 재무부,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초안 발표(2023. 7. 28.)³⁹⁷⁾
 - 현재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지만, 2024년부터는 전기자동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배출량 환경점수를 산출해 그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전기자동차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환경점수(*ECversion*)를 산출
 - *ECacier*: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철강 생산 관련 탄소발자국
 - *ECaluminium*: 차량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생산 관련 탄소발자국
 - *ECAM*: 배터리, 철강, 알루미늄 외 원자재 생산 관련 탄소발자국
 - *ECbatterie*: 배터리 생산 관련 탄소발자국
 - *ECATI*: 차량 조립 등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 *ECach eminent*: 차량 유통에 필요한 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
 - 위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가 60점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차 모델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이 경우 제조사는 산출된 환경점수보다 실제로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해당 초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새로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제도가 적용될 예정

397) 프랑스 재무부, "Bonus écologique : lancement d'une consultation publique sur l'acha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2023. 7. 28., <https://www.economie.gouv.fr/bonus-ecologique-lancement-consultation-publique-lachat-vehicules-electriques>, 검색일자: 2023. 8. 25.

- 올리비에 베슈트 프랑스 통상장관, 중소기업 수출 장려 지원 조치 발표(2023. 8. 31.)³⁹⁸⁾
 - 무역수지 적자 확대³⁹⁹⁾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1억 2,500만 유로 규모의 지원 조치 발표
 - 인력 양성, 수출 홍보 강화, 유망기업 지원 등 세 가지 지원 방향으로 구성
 - 수출 전문 인력 양성
 - 청년 수출 담당자 고용 지원
 - 수출 아카데미(Académie de l'export)의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해 기업 교육 강화
 - 낙후된 지역의 청년 고용 촉진
 - TFE(Team France Export)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프랑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할 때 현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수출 홍보 플랫폼 활성화
 - 프랑스 기업의 국제적인 박람회나 행사 참가 지원
 - 프랑스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개설
 - 프랑스 제품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하기 위해 프랑스 브랜드(La marque France) 인증 절차 개설
 - EU 무역 협정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
 - 수출 유망 중소기업 양성
 - 'France 2030' 계획이 지원하는 1천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수출 지원 제공
 - 환경기술, 농업기술, 딥테크, 헬스테크 분야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20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 지원
 - 무역 금융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무역에 소요되는 금융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 생태학적 전환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현대화

398) 프랑스 통상부, "Commerce extérieur - Lancement du plan « Osez l'export » (31 août 2023)," 2023. 8. 31., <https://www.diplomatie.gouv.fr/fr/politique-etrangere-de-la-france/diplomatie-economique-et-commerce-exterieur/actualites-liees-a-la-diplomatie-economique-et-au-commerce-exterieur/article/commerce-exterieur-lancement-du-plan-osez-l-export-31-08-23>, 검색일자: 2023. 9. 18.

399) 프랑스 무역수지 적자는 2021년 850억유로에서 2022년 1,640억유로로 증가

■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보건 분야 개선을 위한 조치 발표(2023. 9. 1.)⁴⁰⁰⁾

- 프랑스 보건 분야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발표
 - 야간 근무에 대해 기존에는 주간 근무 대비 시간당 1유로의 추가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해당 조치로 주간 근무 대비 25%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
 -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도 현재 수준보다 20% 인상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당직 근무에 대한 급여 50% 인상 검토
 -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빠른 진단 테스트 후 약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생태전환 로드맵 발표(2023. 9. 26.)⁴⁰¹⁾⁴⁰²⁾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생태계획위원회(Conseil de planification écologique)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태전환 로드맵(Planification écologique)을 발표
 -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함
 - 13개 대도시에 7억유로를 투자해 급행철도망 구축
 - 2024년부터 월 100유로의 전기자동차 임대제도 실시 계획
 - 주택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대체
 - 2027년까지 히트펌프 100만 대 생산 목표
 - 2027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
 - 산림을 보호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
 - 2025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환경적으로 더 유리한 소비 실현을 위해 노력

400) 프랑스 정부, “Des mesures pour améliorer le système de santé,” 2023. 9. 1.,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des-mesures-pour-ameliorer-le-systeme-de-sante>, 검색일자: 2023. 9. 14.

401) 프랑스 정부, “Planification écologique : ce qu'il faut retenir,” 2023. 9. 26.,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planification-ecologique-ce-qu'il-faut-retenir>, 검색일자: 2023. 10. 19.

402) 프랑스 대통령궁, “Conclusion du Conseil de planification écologique.,” 2023. 9. 25., <https://www.elysee.fr/emmanuel-macron/2023/09/25/conseil-de-planification-ecologique>, 검색일자: 2023. 10. 19.

-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 계획 발표(2023. 10. 31.)⁴⁰³⁾⁴⁰⁴⁾
 - 동 계획에 따르면, 생태학적 전환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2027년 2억유로를 추가 지원할 계획
 - 2030년까지 총 40만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표
 - 가정용 충전기, 전용 주차 공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 및 공공 토지의 충전소, 대형 화물 차량 전용 충전소 설치 가속화를 위해 지원

- 프랑스 재무부, 2024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에 따른 지급대상 차종 발표(2023. 12. 15.)⁴⁰⁵⁾
 - 프랑스 재무부는 2023년 7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⁴⁰⁶⁾해 기존 차량운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구매보조금을 2024년부터 전기자동차 제조부터 운송까지 모든 단계의 탄소배출량 환경점수를 산출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⁴⁰⁷⁾
 -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현재 4만 7천유로 이하 승용차에 대해 5천유로, 4만 7천~6만유로 승용차에 대해 2천유로
 - 4만 7천유로 이하 승용차의 경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2천유로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78종이 구매보조금 대상에 선정
 - 프랑스와 독일산 전기자동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프랑스산 차량은 스텔란티스 24종, 르노 5종 포함

403) 프랑스 정부, “200 million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les bornes de recharge.” 2023. 10. 31.,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acceleration-du-deploiement-des-bornes-de-recharge-electriques>, 검색일자: 2023. 11. 20.

404) 프랑스 에너지전환부, “Agnès Pannier-Runacher et Clément Beaune annoncent 200 millions d’euros supplémentaires pour accélérer le déploiement des bornes de recharge,” 2023. 10. 31., <https://www.ecologie.gouv.fr/agnes-pannier-runacher-et-clement-beaune-annoncent-200-millions-d-euros-supplementaires-accelerer>, 검색일자: 2023. 11. 20.

405) 프랑스 정부, “La liste des voitures éligibles au bonus écologique,” 2023. 12. 15.,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a-liste-des-voitures-eligibles-au-bonus-ecologique>, 검색일자: 2023. 12. 18.

406) 프랑스 재무부, “Bonus écologique : lancement d’une consultation publique sur l’achat des véhicules électriques,” 2023. 7. 28., <https://www.economie.gouv.fr/bonus-ecologique-lancement-consultation-publique-lachat-vehicules-electriques>, 검색일자: 2023. 8. 25.

407) 구매보조금 개편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3년 8월호」를 참고 바람

- 독일산 차량은 폭스바겐 18종, 메르세데스 벤츠 3종, BMW 4종 포함
- 일본산 차량은 도요타, 닛산, 마쓰다에서 총 6종이 포함되며 테슬라는 1종이 포함
- 국내 제조업체 브랜드의 차량으로는 체코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이 유일하게 선정
- 한편 프랑스의 구매보조금 개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⁴⁰⁸⁾

나. 기타 정책 및 보고서

- 프랑스 재무부, 시위로 인한 피해 재건 및 보수 지원 계획 발표(2023. 7. 18.)⁴⁰⁹⁾⁴¹⁰⁾
 -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발생한 시위⁴¹¹⁾로 피해를 입은 상업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 발표
 - 시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이 가능하고,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는 납부를 부분적 또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음
 -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재산 피해 행위(절도, 파손, 사기 등)를 신고할 수 있음
 - 자영업자보호이사회(Conseil de la Protection Sociale des Travailleurs Indépendants, CPSTI)에 요청하여 1인당 최대 6천유로의 특별 지원금 수급 가능
 - 해당 소상공인은 피해로 인해 최소 1일 이상 폐점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포함해 사회보장분담금 및 가족수당 징수조합(URSSAF)에 신청
 - 폐점 일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짐

408) 산업통상자원부, 「(참고자료)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2023. 12. 15.,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8338&bbs_cd_n=81¤tPage=3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검색일자: 2023. 12. 20.

409) 프랑스 정부, "Faire une demande d'indemnisation après des dégradations," 2023. 7. 5.,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faire-une-demande-dindemnisation-apres-des-degradations>, 검색일자: 2023. 7. 18.

410) 프랑스 재무부, "Commerces dégradés : les mesures destinées aux professionnels impactés," 2023. 7. 17., <https://www.economie.gouv.fr/commerces-degrades-mesures-destinees-professionnels-impactes>, 검색일자: 2023. 7. 18.

411) 2023년 6월 27일 교통 검문을 피해 도망치려던 10대가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다수 지역에서 폭동 수준의 소요가 발생. 출처: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전역 폭력시위 관련 안전유의 공지」, 2023. 6. 29.,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777&page=1, 검색일자: 2023. 7. 18.

-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자체 전문 상담원의 도움 제공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4년 예산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2023. 9. 27.)⁴¹²⁾

- 2024년 예산법안의 2023년 경제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1.0%)은 타당한 수준이라 평가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1.4%)은 다른 기관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치로, 수요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라 평가
 - 2024년 전망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
- 2024년 재정 안정화에 대한 기대는 낙관적 경제 전망에 기초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
 - 재정의 중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언급
 - 미래의 거시경제적 충격과 높은 공공 투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재정계획안(Draft budgetary plans 2024) 발표(2023. 10. 13.)⁴¹³⁾

- (경제전망) 프랑스는 2023년 1.0%, 2024년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2년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5%를 기록하여 경제 회복력을 유지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거시경제 충격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부문에서 긴장이 증가하며 불확실성이 확대
 -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
 - 2023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성장세 유지
 -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와 공급 부문 긴장의 해소로 인해 거시경제가 안정화
 -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

412)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HCFP), "AVIS RELATIF AUX PROJETS DE LOIS DE FINANCES 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ANNÉE 2024," 2023. 9. 27.,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3-8-lois-de-finances-2024>, 검색일자: 2023. 10. 19.

413)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4," 2023. 10. 1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system/files/2023-10/2024_dbp_fr_fr.pdf, 검색일자: 2023. 10. 16.

- 2024년 가계 소비와 무역 증가로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6%로 안정화

표 3-IV-7 프랑스 2024년 재정계획안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질 GDP 성장률	2.5	1.0	1.4
소비자물가지수(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 en France)	5.2	4.9	2.6
수출(Exportations)	7.4	2.1	3.5
수입(Importations)	8.8	0.3	3.1

자료: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4," 2023. 10. 13., p. 34, tableau 1.

- (재정전망)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4.9%, 2024년 4.4%로 전망
 - 2022~2023년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조치로 높은 재정적자가 유지
 - 2024년 물가 관련 임시 지원 조치의 종료로 재정수지가 다소 개선될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2년 111.8%에서 2024년 109.7%로 낮아질 전망

표 3-IV-8 프랑스 2024년 재정계획안 주요 재정지표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재정수지(Déficit public)	-4.8	-4.9	-4.4
구조적 재정수지(Solde structurel)	-4.2	-4.1	-3.7
공공채무(Dette publique)	111.8	109.7	109.7

자료: EU 집행위, "France draft budgetary plan 2024," 2023. 10. 13., p. 43, tableau 1~3.

- (정책 우선순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
 -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재산업화를 위해 노력
 - 기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
 - 생태학적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및 산업 부문 강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지원

- 미래 산업 강화를 위한 연구 및 혁신 지원
- 공공서비스 개선
 -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문화 배우처인 ‘문화 패스(Pass Culture)’를 확대해 청소년의 문화·예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
 - 모든 교사가 최소 월 2,100유로 이상의 보수를 받도록 교사 급여를 인상
 -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의료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 보건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인상
 - 공공 서비스 부문의 디지털화 및 현대화를 통한 효율성 강화
-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 철도 부문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 강화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 생물다양성 회복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
 -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투자 확대
 - 수소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 재정지출 증가율을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 지원의 점진적인 종료로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이 감소
 - 이후로도 모든 정부 부문에 대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랑스 보건부, 담배 통제 프로그램 발표(2023. 11. 28.)⁴¹⁴⁾⁴¹⁵⁾

- 프랑스에서 흡연으로 인해 연간 7만 5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2019년 기준 연간 1,560억유로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2032년 ‘담배 없는 세대’를

414) 프랑스 보건부, “Un nouveau Programme national de lutte contre le tabagisme 2023-2027,” 2023. 11. 28., <https://sante.gouv.fr/actualites/actualites-du-ministere/article/un-nouveau-programme-national-de-lutte-contre-le-tabagisme-2023-2027>, 검색일자: 2023. 12. 18.

415) 프랑스 정부, “Tabac : ce qui change avec le nouveau Programme national de lutte,” 2023. 11. 28.,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tabac-ce-qui-change-avec-le-programme-national-de-lutte-2023>, 검색일자: 2023. 12. 18.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담배의 매력을 낮춰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 현재 10~11유로인 담배 한 갑의 가격을 2025년 12유로, 2027년 13유로로 인상
 - 보건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일회용 전자담배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⁴¹⁶⁾
- 흡연을 중단하려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및 프로그램 제공
 - 니코틴 대체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금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
- 해변이나 공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가. 경제 통계

1) 경제성장률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7. 28.)⁴¹⁷⁾

- 2023년 2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
 - 식품 소비의 감소가 이어지고 에너지 소비가 둔화하여 가계 소비가 감소
 - 음식 및 숙박업과 운송 서비스의 주도로 가계 서비스 소비는 0.7% 증가
 - 운송 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총고정자본형성은 소폭 회복
 - 수출이 크게 반등하여 대외무역이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416)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interdire les dispositifs électroniques de vapotage à usage unique,” 2023. 12. 5., <https://www.vie-publique.fr/loi/292058-proposition-de-loi-interdiction-puffs-cigarettes-electroniques-jetables>, 검색일자: 2023. 12. 18.

417)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significantly in Q2 2023 (+0.5% after +0.1%),” 2023. 7. 28.,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655686>, 검색일자: 2023. 8. 23.

표 3-IV-9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2Q3	2022Q4	2023Q1	2023Q2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0.2	0.1	0.1	0.5	2.5	0.8
가계 소비		0.5	-0.8	0.0	-0.4	2.1	-0.4
정부 소비		0.3	0.7	-0.2	0.0	2.6	0.4
총고정자본형성 ²⁾		2.3	0.3	-0.4	0.1	2.3	1.2
수출		0.5	1.1	-0.8	2.6	7.3	2.3
수입		3.2	-0.5	-2.0	0.4	8.8	-0.3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9	-0.2	-0.1	-0.1	2.4	0.2
	재고투자	0.2	-0.3	-0.3	-0.1	0.7	-0.3
	대외무역	-0.9	0.5	0.5	0.7	-0.6	0.9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increased significantly in Q2 2023 (+0.5% after +0.1%)," 2023. 7. 28.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발표(2023. 10. 31.)⁴¹⁸⁾

- 2023년 3분기 프랑스의 실질 GDP 성장률은 0.1%를 기록
 - 가계 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증가로 국내수요가 GDP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 식품 소비가 8분기 연속으로 감소한 이후 2023년 3분기 다시 증가세(0.7%)를 보임
 - 반면 가계 서비스 소비 증가율이 2023년 2분기 0.8%에서 3분기 0.4%로 다소 둔화
 -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대외무역은 GDP 성장에 부정적으로 기여

표 3-IV-10 프랑스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¹⁾

(단위: 전분기 대비 %)

구분		2022Q4	2023Q1	2023Q2	2023Q3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0.0	0.1	0.6	0.1	2.5	0.9
가계 소비		-0.6	0.4	0.0	0.7	2.1	0.7
정부 소비		0.7	-0.3	0.2	0.4	2.6	0.6
총고정자본형성 ²⁾		0.2	-0.3	0.5	1.0	2.3	2.1
수출		0.8	-1.8	2.4	-1.4	7.4	1.1
수입		-0.8	-3.1	2.5	-0.5	8.8	0.2
GDP 기여도 (%p)	국내수요 ³⁾	-0.1	0.0	0.2	0.7	2.4	1.0
	재고투자	-0.5	-0.5	0.5	-0.3	0.7	-0.4
	대외무역	0.5	0.6	-0.1	-0.3	-0.6	0.3

주: 1) 계절조정 데이터

2)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GFCF)

3) 재고투자 제외

자료: 프랑스 통계청, "GDP grew modestly in Q3 2023 (+0.1% after +0.6%)," 2023. 10. 31.

418) 프랑스 통계청, "GDP grew modestly in Q3 2023 (+0.1% after +0.6%)," 2023. 10. 3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710176>, 검색일자: 2023. 11. 16.

2) 실업률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2분기 실업률 발표(2023. 8. 11.)⁴¹⁹⁾

- 프랑스의 2023년 2분기 실업률은 7.2%로 전 분기 대비 0.1%p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0.2%p 하락함
 - 15~24세 실업률은 16.7%로 전 분기 대비 0.1%p 상승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1%p 높은 6.5%, 50세 이상 실업률은 5.1%로 전 분기에 비해 0.1%p 하락
 - 고용률은 전 분기와 동일한 68.6%를 기록

표 3-IV-11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증감(%p)		2023년 2분기 실업자수(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1	7.2	0.1	-0.2	2,207
15-24세	16.6	16.7	0.1	-1.1	555
25-49세	6.4	6.5	0.1	-0.1	1,157
50세 이상	5.2	5.1	-0.1	0.0	495
남자	7.4	7.2	-0.2	-0.3	1,138
15-24세	17.8	17.5	-0.3	-1.0	308
25-49세	6.4	6.4	0.0	-0.2	584
50세 이상	5.4	5.0	-0.4	-0.2	246
여자	6.8	7.1	0.3	-0.1	1,069
15-24세	15.3	15.8	0.5	-1.3	247
25-49세	6.3	6.6	0.3	0.0	573
50세 이상	4.9	5.1	0.2	0.1	249
장기실업률	1.8	1.8	0.0	-0.2	564
고용률	68.6	68.6	0.0	0.5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3,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8. 11.

419) 프랑스 통계청, "In Q2 2023, the unemployment rate was virtually stable at 7.2%," 2023. 8. 11.,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659130>, 검색일자 : 2023. 8. 23.

■ 프랑스 통계청, 2023년 3분기 실업률 발표(2023. 11. 15.)⁴²⁰⁾

- 프랑스의 2023년 3분기 실업률은 7.4%로 전 분기 대비 0.2%p 상승
 - 15~24세 실업률은 17.6%로 전 분기 대비 0.7%p 상승
 - 25~49세 실업률은 전 분기 대비 0.2%p 높은 6.7%, 50세 이상 실업률은 5.1%로 전 분기와 동일
 - 고용률은 전 분기 대비 0.2%p 하락한 68.3%

표 3-IV-12 프랑스 분기별 실업률

(단위: %)

구분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증감(%p)		2023년 3분기 실업자수(천명)
			전분기 대비	전년 대비	
실업률 전체	7.2	7.4	0.2	0.2	2,285
15-24세	16.9	17.6	0.7	-0.1	598
25-49세	6.5	6.7	0.2	0.3	1,185
50세 이상	5.1	5.1	0.0	0.0	502
남자	7.3	7.4	0.1	-0.1	1,165
15-24세	17.8	18.7	0.9	-0.4	341
25-49세	6.4	6.4	0.0	-0.1	578
50세 이상	5.0	5.0	0.0	0.0	245
여자	7.1	7.4	0.3	0.4	1,120
15-24세	15.9	16.4	0.5	0.4	256
25-49세	6.7	7.0	0.3	0.7	607
50세 이상	5.2	5.3	0.1	0.0	257
장기실업률	1.8	1.8	0.0	-0.2	539
고용률	68.5	68.3	-0.2	0.0	-

자료: 프랑스 통계청, "In Q3 2023,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by 0.2 points," 2023. 11. 15.

420) 프랑스 통계청, "In Q3 2023, the unemployment rate increased by 0.2 points," 2023. 11. 15., <https://www.insee.fr/en/statistiques/7716045>, 검색일자: 2023. 11. 16.

나. 재정 통계

■ 프랑스 예산국, 2023년 2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2023. 8. 3.)⁴²¹⁾

- (재정수지) 2023년 2분기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16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01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23년 2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2,258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74억유로 증가
 -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한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의 영향 및 부채 상각을 위한 비용 증가
- (재정수입) 2023년 2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1,612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54억유로 감소
 -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경기 활동으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가 주요 요인
 - 기타 조세수입의 경우 양도세와 관세 수입의 영향으로 다소 증가

표 3-IV-13 프랑스 2023년 2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년 2분기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2분기/ 2022년 2분기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18,122	-61,328	-96,372	-
재정지출(Dépenses)	259,262	237,987	260,665	9.5%
재정수입(Recettes)	141,140	176,659	164,293	-7.0%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13,165	-14,756	-19,810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31,287	-76,084	-116,181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421)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1005>, 검색일자: 2023. 8. 22.

표 3-IV-14 프랑스 2023년 2분기 누적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2분기	2023년 2분기	증감률 (%)
총재정지출 (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237,987	260,665	9.5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205,988	225,840	9.6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48	1,077	2.8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68,5544	71,044	3.6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31,591	40,217	27.3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22,715	26,368	16.1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8,273	9,408	13.7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72,538	76,125	4.9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1,270	1,601	26.0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31,999	34,825	8.8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18,885	22,284	18.0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3,114	12,541	-4.4
총재정수입 (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	176,659	164,293	-7.0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174,092	161,246	-7.4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157,939	154,404	-2.2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40,333	41,656	3.3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31,832	27,265	-14.3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7,937	8,104	2.1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52,958	48,058	-9.3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24,879	29,321	17.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6,153	6,842	-57.6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¹⁾	2,567	3,047	18.7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 프랑스 예산국, 2023년 3분기 예산집행결과 발표(2023. 11. 16.)⁴²²⁾

- (재정수지) 2023년 3분기 프랑스 재정적자는 1,861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95억 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23년 3분기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3,357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45억유로 증가
 -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국가채무금고(Caisse de la dette publique, CDP) 지불금 증가,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증가의 영향
- (재정수입) 2023년 3분기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2,345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57억유로 감소
 - 기업부가가치분담세(Cotisation sur la Valeur Ajoutée des Entreprises, CVAE)의 점진적 폐지와 사회보장부문에 할당되는 수입 증가의 영향

표 3-IV-15 프랑스 2023년 3분기 예산집행 결과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1년 3분기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3분기/ 2022년 3분기
재정수지(Solde du budget général)	-152,193	-119,277	-148,684	-
재정지출(Dépenses)	367,291	374,001	388,275	3.8%
재정수입(Recettes)	215,098	254,724	239,591	-5.9%
특별회계(Solde des comptes spéciaux)	-22,926	-27,334	-37,439	-
총재정수지(Solde général d'exécution)	-175,119	-146,611	-186,123	-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septembre 2023," 2023. 11. 2.

422)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0 septembre 2023," 2023. 11. 2., <https://www.budget.gouv.fr/documentation/file-download/22164>, 검색일자: 2023. 11. 16.

표 3-IV-16 프랑스 2023년 3분기 누적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증감률 (%)
총재정지출 (Dépenses (budget général et prélèvements sur recettes))	374,001	388,275	3.8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	321,155	335,695	4.5
정부지원(Dotation des pouvoirs publics)	1,048	1,077	2.8
인건비(Dépenses de personne)	103,361	106,715	3.2
운영비(Dépenses de fonctionnement)	49,556	57,984	17.0
부채비용(Charges de la dette de l'État)	39,531	42,411	7.3
투자지출(Dépenses d'investissement)	12,735	13,929	9.4
정부개입지출(Dépenses d'intervention)	113,205	111,458	-1.5
금융활동(opérations financières)	1,719	2,122	23.5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52,847	52,580	-0.5
지방자치단체 이전(Prelevements au profit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33,152	34,112	2.9
EU 부담금(Prelevement au profit de l'Union européenne)	19,694	18,468	-6.2
총재정수입 (Recettes du budget général (avec fonds de concours))	254,724	239,591	-5.9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	250,183	234,507	-6.3
조세수입(Recettes fiscales)	231,690	224,939	-2.9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49,213	49,906	1.4
법인세(Impôt sur les sociétés)	43,972	39,001	-11.3
에너지제품소비세(Taxe intérieure de consommation sur les produits énergétiques(TICPE))	13,047	12,285	-5.8
부가가치세(Taxe sur la valeur ajoutée(TVA))	79,339	73,515	-7.3
기타 조세수입(Autres recettes fiscales)	46,119	50,232	8.9
세외수입(Recettes non fiscales)	18,493	9,568	-48.3
협력기금(Fonds de concours) ¹⁾	4,541	5,084	12.0

주: 1) 공익적 지출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납입하는 비조세적 성격의 기금으로 재정조직법(LOLF)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의 부담금

자료: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du budget de l'État au 30 juin 2023," 2023. 8. 3.

V 영국⁴²³⁾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2023-24회계연도: 2023년 4월 1일 ~ 2024년 3월 31일

표 3-V-1 주요 재정동향 일지

일자	주요 내용
2023. 7. 20.	영국 재무부, 『2020-21회계연도 공공부문 결산보고서』 발표
2023. 6. 30.	영국 정부, 『국가의료서비스(NHS) 장기 인력 계획』 발표
2023. 7. 13.	영국 정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발표
2023. 7. 13.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3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2023. 7. 18.	영국 통계청, '2021-22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
2023. 8. 2.	영국 재무부, 스코틀랜드 재정 프레임워크 업데이트에 합의
2023. 9. 21.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발표
2023. 9. 22.	영국 교육부, 「평생학습법」 제정 발표
2023. 10. 2.	영국 재무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수정
2023. 10. 4.	영국 총리실, '비흡연 세대' 만들기 추진
2023. 10. 19.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 평가 보고서』 발표
2023. 11. 22.	영국 재무부, 『가을 보고서』 발표
2023. 11. 1.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2023년 11월 1일부터 '환경원칙 의무' 발효
2023. 11. 13.	영국 공공부문 부정관리국, 2022-23회계연도 절감액 목표 초과 달성
2023. 12. 4.	영국 내무부, 이민 축소 계획 발표
2023. 12. 12.	영국 내각부, 정부 기능의 지역 이전에 대한 경과 발표 및 계획 수정
2023. 12. 14.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5.25%) 동결
2023. 12. 18.	영국 재무부, '탄소 국경 조정세' 도입 예정

자료: 저자 작성

4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김은숙 선임연구원(kesdww@kipf.re.kr)

01 예산 및 결산

가. 본예산

- 영국 재무부, 『가을 보고서』(*Autumn Statement*) 발표(2023. 11. 22.)⁴²⁴⁾
 - (배경) 영국은 가을 예산안과 봄 보고서를 통해 경제·재정 전망과 주요 정책을 발표하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를 유동적으로 적용
 - 2017년 이전에는 봄 예산안과 가을 보고서가 발표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가을 예산안과 봄 보고서로 변경이 이루어짐⁴²⁵⁾
 - 2019년 가을 예산안 발표는 10월 31일 EU 탈퇴 이후로 연기되었고, 2020년 3월에 봄 예산안이, 2021년 10월에 가을 예산안이 연달아 발표됨
 - 2022년 가을 예산안은 '2022년 상장계획' 발표 이후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해 발표 시기가 연기되었고, 2023년 3월에 봄 예산안이, 이번 11월에 가을 보고서가 발표됨
 - 가을 보고서에는 봄 예산안 발표 이후 수정된 예산책임청(OBR)의 경제·재정 전망과 이를 반영한 정부 정책 업데이트를 포함
 - (경제 전망) 영국 경제는 팬데믹과 에너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2023년에 봄 전망(-0.2%) 대비 높은 성장률(0.6%)이 기대되며, 이후 예측기간 동안 매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연간 GDP 성장률은 2022년 4.3%에서 2023년 0.6%, 2024년 0.7%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실질 임금의 상승 압력, 고금리, 정부 지원 축소 등에 기인
 - 실질 임금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생산량 갭이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2025년에는 최대 1.4%, 2026~2028년 동안 평균 1.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물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7.5%, 2024년 3.6%, 2025~2028년 동

424) HM Treasury, "Chancellor backs business and rewards workers to get Britain growing," News story, 2023. 11.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backs-business-and-rewards-workers-to-get-britain-growing>, 검색일자: 2023. 11. 23.

425) Committee Office Unit, *Financial scrutiny uncovered: How the Government Manages Its Finances and How Parliament Scrutinises Them*, A Guide for Member, 2007; Committee Office Unit, *Financial scrutiny uncovered: A Guide for Member*, 2017.

안 2%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22년 10월,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 10월에 4.6%로 절반 이상 감소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3년 4.2%에서 2024년과 2025년에 4.6%로 상승하나 2028년 4.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참여는 봄 전망 이후 개선되었으나, 장기 질병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은 증가

표 3-V-2 주요 경제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실질 GDP 성장률	4.3	0.6	0.7	1.4	2.0	2.0	1.7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9.1	7.5	3.6	1.8	1.4	1.7	2.0
실업률	3.7	4.2	4.6	4.6	4.4	4.2	4.1
고용자수	32.7	32.9	32.9	33.1	33.4	33.7	34.0

자료: HM Treasury, *Autumn Statement 2023*, 2023. 11., p. 152, p. 156, Table 1.3

- (재정 전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중기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봄 전망 대비 재정여력(headroom)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
 - (재정수지) 세수확대에 힘입어 2023-24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 비율은 봄 전망 대비 0.6%p 낮은 4.5%로 예측되고, 중기적으로 1.1%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채무) 2023-24회계연도의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봄 전망 대비 5.2%p 낮은 97.9%로 예측되고, 2025-26회계연도에 감소 전환되어 2028-29회계연도에는 94.1%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영국의 채무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일반정부 기준 총채무는 2022년에 G7 국가 중 독일(66.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101.9%)을 기록

표 3-V-3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2028-29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923.9	988.7	1,036	1,072	1,116	1,163	1,212
(GDP 대비 %)(a)	40.1	40.3	41.2	41.1	41.2	41.4	41.6
총관리지출(TME) ¹⁾	1,151	1,222	1,237	1,265	1,301	1,334	1,373
(GDP 대비 %)(b)	45.1	44.8	44.2	43.8	43.4	42.9	42.7
공공부문 경상지출(c)	41.0	40.0	39.4	39.3	39.1	38.7	38.6
공공부문 순투자(d)	1.9	2.6	2.5	2.2	2.1	1.9	1.8
감가상각(e)	2.2	2.2	2.3	2.3	2.3	2.3	2.3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5.0	4.5	3.0	2.7	2.3	1.6	1.1
경기조정 순차입	6.0	4.8	2.7	2.1	1.9	1.5	1.1
경상예산 적자(c+e-a)	3.2	1.9	0.5	0.5	0.2	-0.3	-0.7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²⁾	84.9	89	91.6	92.7	93.2	93.2	92.8
공공부문 순채무 ²⁾	95.8	97.9	98.6	96.3	95.5	95	94.1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3월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November 2023*, 2023. 11., Table A.5, Table A.9 발췌

- (주요 정책) 리시 수낙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큰 정부, 높은 지출, 높은 세금이 아닌 채무 감축, 세금 감면,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조
 - (조세) 물가상승률 하락과 채무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을 위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근로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금 감면을 계획
 - 2024년 1월부터 근로자국민보험(Employee National Insurance) 기본요율을 12%에서 10%로 2%p 인하하여 2,700만명의 근로자에게 조속히 경감 혜택을 제공할 예정
 - 이에 따라 기본요율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국민보험의 합산 세율은 32%에서 30%로 인하되는데, 이는 1980년대 이후 최저 합산 기본세율에 해당
 - (기업)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영국과 G7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향후 10년 동안 기업투자에 연간 200억파운드를 추가 지원)

- ‘영구적인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Permanent Full Expensing)’⁴²⁶를 통해 적격 주요 공장 및 기계 투자에 대해 100% 자본공제 혜택을 영구적으로 적용
 - 향후 5년 동안 43억파운드 규모의 ‘법인세 지원 패키지(business rates support package)’⁴²⁷를 통해 지역사회의 중추인 소기업을 보호
 - 영국 기업은행 내 ‘성장 기금(Growth Fund)’ 설립을 포함한 연금개혁을 실시하여 2030년까지 고성장 기업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명목으로 750억파운드를 확보
- (노동 및 복지개혁) 노동력 확대 및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근로에 대한 보상, 임금지급 지원, 복지개혁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 2024년 4월 1일부터 시간당 법정생활임금을 9.8% 인상하여 11.44파운드로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기존 23세 이상에서 21세와 22세도 포함)
 - 청년층과 견습생에 대한 시간당 법정최저임금 또한 대폭 인상할 예정(18~20세의 경우 14.8% 인상된 8.6파운드, 16~17세와 견습생의 경우 21.2% 인상된 6.4파운드 적용)
 - 근로능력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⁴²⁸를 개편하여 유연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근로 가능 인력이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의료서비스(NHS)의 대화 요법(Talking Therapies), 개별 배치 및 지원(Individual Placement and Support) 등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향후 5년 동안 최대 110만명에게 혜택을 제공
- (인프라 및 균형발전)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와 자금 지원 패키지를 통해 기업과 지역 사회에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청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Green Industries Growth Accelerator’에 할당된 9억 6천만파운드를 포함하여 미래 고성장 산업 중 영국 제조업체에 45억파운드의 자금을 지원

426) 2023년 3월 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3. 4. 1. ~ 2026. 3. 31. 동안 ‘투자비용 즉시 공제제도(full expensing)’를 통해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 해에 100% 자본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6%)이 적용되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50%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

427) 소기업 승수 동결, 소매업, 레저 및 접객업에 대한 감면 연장 등을 포함

428) 영국은 기존 장애 관련 급여와 소득보조를 받던 장애인에 대해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 적합과 근로 관련 활동 집단, 근로가 불가능한 지원 집단 등으로 분류

- Greater Manchester, East Midlands 및 West Midlands 지역에 3개의 첨단 제조 투자 구역을 설립(향후 10년 내에 34억파운드의 민간투자를 창출하고, 6만 5천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투자 구역 프로그램(Investment Zones programme)’과 자유항(Freeport)⁴²⁹⁾ 세금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억 5천만파운드의 ‘투자 기회 기금(Investment Opportunity Fund)’을 통해 투자 구역과 자유항을 지원

나. 결산

- 영국 재무부, 『2020-21회계연도 공공부문 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0-21*)⁴³⁰⁾ 발표(2023. 7. 20.)⁴³¹⁾
 - (당기 순지출) 2019-20회계연도에 1,918억파운드를 기록했던 당기 순지출은 2020년 3월 팬데믹 선포 이후 시행된 재정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2020-21회계연도에는 4,044억파운드로 크게 증가(〈표 3-V-4〉 참고)
 - (공공서비스 순지출) 2020-21회계연도의 순지출은 전년 대비 2,261억파운드 증가한 3,315억파운드를 기록(총지출은 전년 대비 1,443억파운드 증가, 총수입은 818억 파운드 감소)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연금 금융 비용 감소(177억파운드), 장기 충당금 할인율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2020-21회계연도 장기 부채 금융 비용은 전년 대비 103억 파운드 감소한 557억파운드를 기록
 - (순부채) 2020-21회계연도의 순부채는 전년 대비 4,921억파운드 증가한 3조 3,263억파운드를 기록(〈표 3-V-5〉 참고)
 - (총자산) 2020-21회계연도 총자산은 2조 2,067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682억파운드 증가
 - (총부채) 2020-21회계연도 총부채는 5조 5,330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5,603억 파운드 증가

429) 해외기업 유치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하는 영국 내 경제특구를 의미

430)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1만개 이상 기관에 대한 통합 감사 회계보고서

431)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0-21," Corporate report, 2023. 7.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0-21>, 검색일자: 2023. 7. 21.

표 3-V-4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항 목	2019-20	2020-21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	918.7	1,063.0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40.0	258.4
인건비(Staff costs)	235.3	253.5
재화, 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 (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23.6	258.7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62.2	197.2
감가상각 및 감손(Depreciation and impairment)	51.5	61.9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31.8	21.2
기타(Other)	74.3	32.1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b]	813.3	731.5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696.7	650.7
기타수입(Other revenue)	116.6	80.8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b]	105.4	331.5
장기 부채 금융 비용 (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c]	66.0	55.7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 (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d]	20.4	17.2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 [a-b+c+d]	191.8	404.4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0-21, 2023. 7.*, p. 110.

표 3-V-5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항 목	2019-20	2020-21
총자산(Total assets) [a]	2,138.5	2,206.7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13.3	1,270.3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516.2	605.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182.0	202.9
기타 자산(Other assets)	127.0	127.8
총부채(Total liabilities) [b]	4,972.7	5,533.0
공공부문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2,189.5	2,306.2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445.4	1,520.3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761.9	1,118.8
충당금(Provisions)	374.8	366.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201.1	221.3
순부채(Net liabilities) [b-a]	2,834.2	3,326.3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0-21, 2023. 7.*, pp. 112~113.

02 주요 정책 및 이슈

가. 보건·복지·노동 정책

- 영국 정부, 『국가의료서비스(NHS) 장기 인력 계획』(NHS Long Term Workforce Plan)⁴³²⁾ 발표(2023. 6. 30.)⁴³²⁾
 - (배경) 고령화가 심화되고 인구당 환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NHS 내 인력 부족과 장기 인력 계획의 부재로 어려움에 직면
 - 향후 15년 동안 영국 인구⁴³³⁾는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85세 이상 인구는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NHS 내 인력은 해외 채용 의존도가 높고(약 4분의 1), 상당수의 빈 일자리에 임시 직원을 채용
 -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의사, 간호사 임시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NHS 자체 ‘staff bank’의 직원보다 20%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주요 내용) NHS 교육을 확대하고, 향후 15년 동안 수십만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⁴³⁴⁾할 계획(2028-29회계연도까지 24억파운드 이상 지원)
 - (훈련과 채용) 교육 및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견습생 및 전문직으로의 대안적인 경로를 늘려 NHS 조직 내 의료 전문가 채용을 확충
 - 2031-32회계연도까지 의대 수련 장소를 두 배로 늘리고, 간호사와 조산사, 일반의(50%), 치과(50%) 교육 장소 확대
 - (인력 유지) 경력에 따른 지원과 문화·리더십·복지 개선, 근로 방식의 유연성 향상 등을 통해 이탈을 줄이고, NHS 조직 내에서 더 많은 직원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432)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What the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means for you,” Authored article, 2023. 6. 30.,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what-the-nhs-long-term-workforce-plan-means-for-you>, 검색일자: 2023. 7. 17.

NHS England, “NHS Long Term Workforce Plan,” Publications, 2023. 6. 30., <https://www.england.nhs.uk/publication/nhs-long-term-workforce-plan/>, 검색일자: 2023. 7. 17.

433)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702만 6,300명

434) 인력 장기 계획이 완전히 구현되면 정규 인력은 2021-22회계연도에 140만명에서 2036-37회계연도에 220만~230만명으로 확대(연간 약 2.6~2.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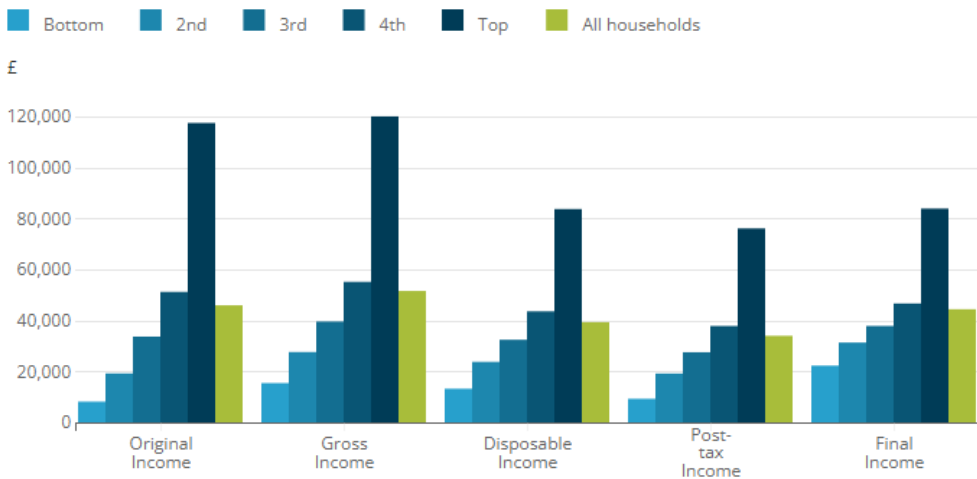
- 은퇴 유연성을 통해 NHS 연금 제도를 현대화⁴³⁵⁾하여 가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은퇴한 직원의 복귀를 유인
 -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보전서비스 및 추가 보육을 제공
 - (혁신) 디지털 및 기술 혁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훈련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유연한 기술을 갖춘 팀을 구성하는 등의 변화를 추진
 - 부간호사(nursing associate), 준의사(physician associate), 마취전문인력(anaesthesia associate)과 같은 새로운 역할에 대한 교육을 확대
 - 인공 지능 및 원격 모니터링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임상시간을 확보
- 영국 통계청, ‘2021-22회계연도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가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2023. 7. 18.)⁴³⁶⁾
- (배경) 영국 통계청은 매년 직·간접세, 현물·현금 급여 등이 소득 분위별 가구 소득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
 -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담배세, 주세, 유류세, 인지세와 같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현물 급여는 국가의료서비스(NHS), 교육, 무상보육 등의 비현금 급여를 의미
 - 최종소득은 모든 조세부담과 재정수혜 이후의 가구 소득을 의미
 - (주요 내용) 2021-22회계연도의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하였으나, 간접세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그림 3-V-1] 참고)
 - 현물·현금 급여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감소([그림 3-V-2] 참고)
 -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등은 현금 급여를 통해 9.3%p 감소(본원소득 기준 지니계수 50.2%→총소득 기준 지니계수 40.9%), 이는 이전 회계연도와 비슷한 수준
 - 현물 급여를 통해 지니계수는 9.3%p 감소(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 39.2%→최종소득 기준 지니계수 29.9%)하였는데,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8.3%p 감소와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을 낮추는 데 현물 급여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음을 시사

435) 부분적으로 은퇴하거나 퇴직 후에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하고 원하는 경우 연금을 계속 적립

43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People, population and community, 2023. 7. 18.,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personalandhouseholdfinances/incomeandwealth/bulletins/theeffectsoftaxesandbenefitsonhouseholdincome/financialyearending2022>, 검색일자: 2023. 8. 8.

- 간접세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증가
 - 직접세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4.8% 증가하였으나 간접세는 9.1% 증가,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완화됨에 따라 가구 지출이 증가한 데 기인
 - 가치분소득 상위 20% 가구의 간접세는 9천파운드로 하위 20% 가구의 4,800파운드 보다 1.9배 컸으나, 간접세 비율은 각각 가치분소득의 9.0%, 28.3%를 기록
- 순 수혜자(조세부담보다 재정수혜가 더 큰 개인)의 비율은 53.8%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1.2%p 감소
- 조세부담과 재정수혜는 가구 소득의 균등한 분배에 기여
 - 중위 본원소득은 3만 5천파운드였으나, 최종소득은 3만 8,100파운드로 증가
 - 상위 20%의 본원소득은 11만 7,500파운드로 하위 20%의 본원소득 8,200파운드 보다 14배 이상 컸으나, 최종소득⁴³⁷⁾에서는 그 비율이 3.8배로 감소

그림 3-V-1 2021-22회계연도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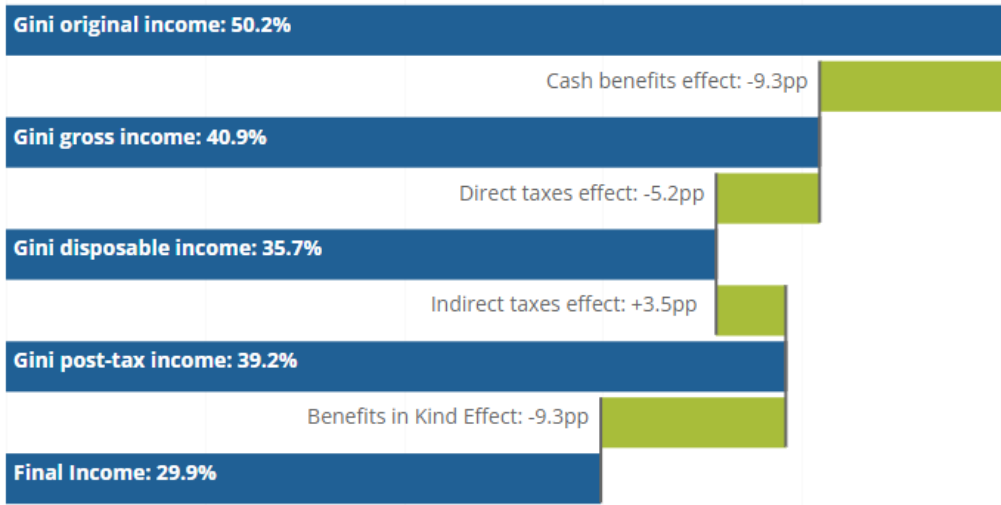


주: Original Income(본원소득): 근로, 개인연금, 투자, 기타 비정부 부문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Income(총소득): 본원소득과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Income(가치분소득): 총소득에서 직접세를 제외한 소득
 Tax Income(세후소득): 가치분소득에서 간접세를 제외한 소득
 Income(최종소득): 세후소득에 현금급여를 합한 소득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2023. 7. 18., Figure 1.

437) 상위 20%와 하위 20% 최종소득은 각각 8만 3,900파운드, 2만 2,300파운드

그림 3-V-2 2021-22회계연도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UK household income: financial year ending 2022," 2023. 7. 18., Figure 2.

■ 영국 재무부,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수정(2023. 10. 2.)⁴³⁸⁾

- (현황) 2019년에 정부는 2024년까지 시간당 법정생활임금을 중위소득(median) 3분의 2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지난 2023년 3월에 큰 폭으로 인상
- (수정) 정부는 11월에 발표될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2024년까지 시간당 법정생활임금을 기존 중위소득이 아닌 평균소득의 3분의 2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
 - 영국 통계청(ON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약 2,840만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8.49파운드, 중위임금은 15.05파운드
 - 최저임금위원회는 200만명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인상 혜택을 받게 되고, 내년 정규직(full-time) 근로자의 최저 연간소득이 1천파운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438) HM Treasury, "Chancellor announces major increase to National Living Wage," News story, 2023. 10.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ancellor-announces-major-increase-to-national-living-wage>, 검색일자: 2023. 10. 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EARN08: Distribution of gross hourly earnings of employees," Dataset, 2023. 9. 15.,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datasets/distributionofgrosshourlyearningsofemployeesearn08>, 검색일자: 2023. 10. 10.

표 3-V-6 영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단위: 파운드, %)

구분		2022-23회계연도	2023-24회계연도	증가율(%)
법정생활임금	23세 이상	9.50	10.42	9.7
	21~22세	9.18	10.18	10.9
법정최저임금	18~20세	6.83	7.49	9.7
	16~17세	4.81	5.28	9.7
견습생(Apprentice) 최저임금	16~18세	4.81	5.28	9.7
	19세 이상 1년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3년 4월호, 2023, p. 38, 표 1

■ 영국 총리실, ‘비흡연 세대(smokefree generation)’ 만들기 추진(2023. 10. 4.)⁴³⁹⁾

- (현황)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약 4분의 1이 흡연이 원인으로, 잉글랜드에서만 연간 6만 4천명의 사망자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매년 170억파운드의 손실⁴⁴⁰⁾ 발생
- (목적) 한 세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중 보건 개입을 통해 수만명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의료서비스(NHS) 비용 중 수십억파운드를 절약
- (주요 내용) 담배 판매 금지 법안 도입, 기존 흡연자 금연 지원, 전자담배 관련 제재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성인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균형있게 추진
 - 올해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여 영국 최초의 비흡연 세대를 추진⁴⁴¹⁾
 - 제안된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에 적용될 때까지 흡연 연령은 매년 1년씩 상향 조정
 - 기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금연 서비스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매년 추가로 7천만파운드를 투자하며, 매년 약 36만명의 금연 지원을 목표로 설정

439) Prime Minister's Office, "Prime Minister to create 'smokefree generation' by ending cigarette sales to those born on or after 1 January 2009," News story, 2023. 10.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prime-minister-to-create-smokefree-generation-by-ending-cigarette-sales-to-those-born-on-or-after-1-january-2009#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10. 5.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Stopping the start: our new plan to create a smokefree generation," Policy paper, 2023. 10.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topping-the-start-our-new-plan-to-create-a-smokefree-generation>, 검색일자: 2023. 10. 10.

440) 수입 손실, 실업, 조기 사망 등으로 인한 연간 생산성 손실, 국가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비용 등

441) 영국의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현재 18세

-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vape)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자담배의 가용성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 마련
- (효과) 2075년까지 흡연자 수가 최대 170만명 감소하고 수만명의 생명을 구하며,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850억파운드까지 절약할 것으로 예상

나. 환경·교육·이민 정책

-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자금 지원 발표 (2023. 9. 21.)⁴⁴²⁾
 - (주요 내용) 영국 정부는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목표 정상회의”⁴⁴³⁾에서 개발도상국의 배출량 감축과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1억 6천만파운드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
 - 영국은 2019년에 2021-22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 국제기후금융에 116억파운드 원조를 계획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영국의 국제적 노력의 일환
 - 그레이엄 스튜어트 장관은 이번 지원을 통해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영국의 리더십을 강조
 - 자금 조달 패키지는 철강 생산을 위한 청정 수소 기반 연료 배치, 바이오매스⁴⁴⁴⁾ 구동 냉동장치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여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
 - (평가) 이번 자금 지원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442)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UK government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to tackle climate change,” Press release, 2023. 9. 21., <https://www.gov.uk/government/news/uk-government-support-for-developing-countries-to-tackle-climate-change>, 검색일자: 2023. 9. 25.

443) UN Climate Ambitions Summit

444) biomass: 태양 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과 이들을 먹이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 유기체를 총칭

- 영국 교육부, 「평생학습법」(Lifelong Learning Act) 제정 발표(2023. 9. 22.)⁴⁴⁵⁾
 - (주요 내용) 학생 금융지원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 모든 성인은 평생학습 권리(Lifelong Learning Entitlement)로 2025년부터 최대 3만 7천파운드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직장생활 동안 기술 향상이나 재교육을 위해 유연하게 활용
 - 이는 대학 학위나 고등기술 자격(Higher technical qualification)과 같은 풀타임 과정뿐 아니라 일부 개별 과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대학이 다양한 과정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수업료 수준을 산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
 - 고등기술 자격 과정은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디지털, 건설, 보건 및 과학을 포함해 수요가 많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향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과목이 개설될 예정
 - (평가) 영국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토대를 마련
 - 동 법은 영국에 평생학습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단계로, 고용주가 요구하는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평생 동안 고품질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됨
-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2023년 11월 1일부터 ‘환경원칙 의무’ 발효(2023. 11. 1.)⁴⁴⁶⁾
 - (주요 내용) 정책 입안자는 새로운 정책 수립 시 다음 5가지 원칙에 따라 해당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환경법 2021」(Environment Act 2021))
 - (통합) 환경보호가 정책수립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 (환경 피해 예방) 정책 입안자들이 환경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445) Department for Education, “Transformative student finance bill becomes law,” Press release, 2023. 9. 22., <https://www.gov.uk/government/news/transformative-student-finance-bill-becomes-law#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3. 9. 25.

446)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Environmental principles duty comes into force,” News story, 2023. 11. 1., <https://www.gov.uk/government/news/environmental-principles-duty-comes-into-force>, 검색일자: 2023. 11. 14.

- (근원 교정) 정책은 파생되는 영향을 해결할 필요가 없도록 환경 피해를 근원부터 다루어야 한다는 원칙
- (오염자 부담) 가능한 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사람이 환경 피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 (사전 예방) 심각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환경 악화를 막을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인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적용) 환경원칙 의무는 군대, 국방 또는 국가안보, 정부 내 수입, 정부 내 지출 또는 정부 내 자원 배분 등을 제외하고 정부 전반에 걸쳐 수립되는 신규 또는 개정 정책에 적용

■ 영국 내무부, 이민 축소 계획 발표(2023. 12. 4.)⁴⁴⁷⁾

- (배경) 영국은 ‘근로 복귀 계획(Back to Work Plan)’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 문제, 장애 또는 장기 실업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국내 노동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설정
- (주요 내용) 비자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이민 수준을 낮추고 이민 시스템 남용을 억제하여 순 이민을 역대 최대 규모로 축소할 계획
 - 외국인 간병보호사와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보건 및 간병보호사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여 외국인 간병보호사 부양가족의 영국 유입을 제한
 - 올해(2023년 9월 말 기준) 외국인 간병보호사에게 10만 1천건, 부양가족에게는 12만 건의 비자가 발급되었는데, 부양가족 대다수는 일을 하지 않고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
 -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발급 시 요구되는 최저소득 기준을 현행 2만 6,200파운드에서 3만 8,700파운드로, 약 50% 인상하여 국내에서 먼저 인재를 찾고 투자하도록 장려
 - 이민 자문 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는 대학원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447) Home Office, "Home Secretary unveils plan to cut net migration," News story, 2023. 12.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me-secretary-unveils-plan-to-cut-net-migration>, 검색일자: 2023. 12. 5.

- 이민자들이 국가의료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서비스 혜택에 공정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간 이민자 건강보험료(Immigration Health Surcharge)를 624파운드에서 1,035파운드로 인상
 -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순 이민자 수가 약 3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기타) 정부는 영국에 정착하여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에 기여하며,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
- 영국 재무부, ‘탄소 국경 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예정 (2023. 12. 18.)⁴⁴⁸⁾
- (배경)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탄소중립 혁신 포트폴리오, 탄소 포집 및 저장 개발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내용) 탄소배출 가격이 낮거나 없는 국가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
 - 철, 강철, 알루미늄,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 및 시멘트 부문 등 해외에서 많이 거래되고 탄소 집약적인 제품에 적용
 - 영국의 탄소중립이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배출 가격이 책정
 - 수입 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의 양,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탄소 가격과 영국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탄소 가격 간 격차에 따라 다르게 부과
 - ‘탄소 국경 조정세’의 설계 및 규정, 적용 제품 목록 등 세부내용은 2024년에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

448) HM Treasury, “New UK levy to level carbon pricing,” News story, 2023. 12. 18.,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uk-levy-to-level-carbon-pricing>, 검색일자: 2023. 12. 19.

다. 공공부문 정책

■ 영국 정부, 공공부문 임금 인상 발표(2023. 7. 13.)⁴⁴⁹⁾

- (임금 인상) 리시 수낙 총리는 임금심의기구(pay review body)의 주요 권고안을 수용하여 국가의료서비스(NHS) 근로자, 교사, 경찰 등의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
 - 치과의를 포함한 의사의 임금은 최소 6%, 수련의(junior doctor) 임금은 수련 과정에 따라 8.1%~10.3%(평균 8.8%) 인상
 - 간호사와 구급대원을 포함한 100만명의 NHS 직원의 임금은 지난달 5% 인상되었고, 이번 임금 인상이 적용되는 수련의와 의사 규모는 약 13만명
 - 교사의 임금은 6.5% 인상되고, 신입 교사에게는 최소 3만파운드의 연봉을 지급
 - 가장 낮은 임금을 받았던 군대는 2천파운드 이상, 교도관은 7% 이상, 경찰(치안)은 7% 인상
- (자금 조달) 공공부문 임금 인상을 위한 추가 자금은 이민자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및 의료보험료(immigration health surcharge) 인상, 부처별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
 - 가계 생활비 압박과 높은 물가를 고려하여 증세나 차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
 - 이민자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및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약 10억파운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 (비자 신청 수수료) 취업 비자와 방문 비자 수수료는 15%, 학업 비자, 후원 증명서, 정착, 시민권, 입국 허가 연장, 체류 허가 등의 신청 비용은 20% 인상
 - (연간 의료보험료) 학생과 18세 미만의 경우 470파운드에서 776파운드로, 그 외 이민자의 경우는 624파운드에서 1,035파운드로 인상

449)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M statement on public sector pay review: 13 July 2023," Speech, 2023. 7. 13.,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on-public-sector-pay-review-13-july-2023>, 검색일자: 2023. 7. 17.

House of Commons, "Public Sector Pay," 영국 하원 본회의 회의록, 2023. 7. 13.,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23-07-13/debates/677D41A0-5A85-4869-8167-69044929D759/PublicSectorPay>, 검색일자: 2023. 7. 18.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NHS staff receive pay rise," Press release, 2023. 7.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nhs-staff-receive-pay-risem>, 검색일자: 2023. 7. 20.

〈참고〉 영국 공공부문의 임금 결정 메커니즘

- 군대, 경찰, 교사, 고위 공무원, 국가의료서비스(NHS)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임금은 8개의 “임금심의기구(pay review body)”¹⁾의 권고를 기반으로 정부부처 장관에 의해 결정
-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의 임금은 내각부에서 발표한 “소관지침(remit guidance)”을 기반으로 개별 부처에서 결정
- 지방 정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지방정부 서비스를 위한 국가공동위원회(National Joint Council for Local Government Services)”를 통해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 협상을 통해 결정
- 위임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임금은 위임된 행정부에서 결정

주: 1) Armed forces' pay review, Review body on doctors' and dentists' remuneration, NHS pay review body, Prison service pay review body, School teachers' review body, Review body on senior salaries, Police remuneration review body, National Crimes Agency remuneration review body

자료: House of Commons Library, “Public sector pay,” 2022, p. 4.

■ 영국 재무부, 스코틀랜드 재정 프레임워크(Fiscal Framework) 업데이트에 합의 (2023. 8. 2.)⁴⁵⁰⁾

- (배경) 영국 중앙정부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재정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2016년에 체결하였고, 이후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계획
 -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 분리독립 찬반투표⁴⁵¹⁾를 시행하는 등 역사적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으로, 영국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
- (주요 내용) 차입 한도의 상향 조정, 준비금 인출의 연간 한도 폐지 등을 통해 스코틀랜드 정부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확대
 - 2023-24회계연도 이후 자본지출을 위한 차입 한도(30억파운드)와 연간 차입 한도(4억 5천만파운드)를 물가상승⁴⁵²⁾을 적용하여 인상
 - 이를 통해 스코틀랜드 정부는 학교, 병원, 도로 및 기타 주요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더 나은 유급 일자리와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자원이출(경상지출)을 위한 연간 차입 한도를 3억파운드에서 6억파운드로 상향 조정
 - 이는 예산 관리를 위해 더 큰 확실성과 유연성을 요구한 스코틀랜드 정부의 요청을 수용

450) HM Treasury, “Deal struck on a renewed Fiscal Framework for the Scottish Government,” Press release, 2023. 8. 2., <https://www.gov.uk/government/news/deal-struck-on-a-renewed-fiscal-framework-for-the-scottish-government>, 검색일자: 2023. 8. 9.

451) 투표 결과, 찬성 44.7%, 반대 55.3%로 최종 집계되어 독립은 부결

452) 스코틀랜드 예산 초안 당시 예산책임청의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

- 스코틀랜드 준비금(Scotland Reserve)에서의 인출 한도는 기존 7억파운드로 동일하나 2023-24회계연도 이후 물가상승이 적용되고, 연간 인출 한도는 폐지

- 영국 공공부문 부정관리국, 2022-23회계연도 절감액 목표 초과 달성(2023. 11. 13.)⁴⁵³⁾
 - (배경)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정 및 관련 오류를 관리하기 위해 2022년 공공부문 부정관리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을 설립
 - 부정에는 사기, 뇌물수수, 부패, 오류로 인한 손실을 포함
 - 설립 당시 공공부문의 부정 및 오류로 인한 손실을 연간 최소 330억파운드로 추정하고, 첫 해인 2022-23회계연도의 목표 절감액을 1억 8천만파운드로 설정
 - (주요 내용) 공공부문 부정관리국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부정 방지, 식별 및 복구 등을 통해 2022-23회계연도에 약 3억 1,100만파운드를 절감
 - 국가 부정 관리 이니셔티브⁴⁵⁴⁾를 통해 공공기관 기록들을 비교하고 부정으로 인한 불일치를 식별함으로써 약 1억 7,100만파운드 절감
 - 코로나19 대출제도 부정 분석 프로그램⁴⁵⁵⁾을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으로 인해 누출된 자금을 식별하고 회수하여 약 1억 4천만파운드 절감
 - 중소기업 대상 정부보증대출(Bounce Back Loan Scheme)에서 부정(부적격 대출)을 식별하여 약 9,950만파운드 절감
 - (평가) 공공부문 부정관리국장은 이번 성과는 AI 활용 강화, 공무원 기술 향상 교육,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모범 사례 공유 등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

453) Cabinet Office, "New counter fraud team saves taxpayers £311 million in first twelve months, beating target by more than £100 million," Press release, 2023. 11. 13.,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counter-fraud-team-saves-taxpayers-311-million-in-first-twelve-months-beating-target-by-more-than-100-million>, 검색일자: 2023. 11. 14.

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Annual Report 2022-2023," Corporate report, 2023. 11.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sector-fraud-authority-annual-report-2022-2023>, 검색일자: 2023. 11. 14.

454) National Fraud Initiative: 사기를 예방하고 감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내 전자 데이터를 매칭

455) Covid-19 Loan Schemes Fraud Analytics Programme: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데이터를 결합한 고급 도구를 활용

- 영국 내각부, 정부 기능(government roles)의 지역 이전에 대한 경과 발표 및 계획 수정 (2023. 12. 12.)⁴⁵⁶⁾
 - (배경) 영국은 2020년부터 ‘지역 기반 성장(Places for Growth)’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일자리와 정부 기능을 재배치하여 지역불균형을 해결하고 지역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2025년까지 1만 5천개, 2030년까지 2만 2천개(누적)의 정부 기능을 재배치하고, 고위 공무원⁴⁵⁷⁾의 50%를 런던 외 지역으로 배치
 - (경과) 2020년 3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만 6,061개의 정부 기능이 재배치되어, 2025년까지 1만 5천개의 기능을 재배치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
 - 런던 외 지역의 고위공무원 비중은 2020년 2분기에 26.0%에서 2023년 2분기에는 30.9%로 확대(2020년 2분기 1,285명 대비 39% 증가한 1,785명)
 - (수정) 당초 2030년까지의 목표 기한을 2027년으로 앞당겨 설정하고, 애버딘(Aberdeen), 달링턴(Darlington), 그레이터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지역에 주요 부처를 위한 제2 청사를 유치할 계획
 - (효과) 정부는 ‘지역 기반 성장’ 프로그램이 영국 전역의 경제 성장을 돕고 있으며, 재배치된 정부 기능 1천개당 3천만파운드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라. 통화정책

-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기준금리(5.25%) 동결(2023. 12. 14.)⁴⁵⁸⁾
 - (경제현황 논의) 금리 인상 결정에 앞서 세계경제 및 영국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

456) Cabinet Office, “Plan to move government roles out of Westminster brought forward and new headquarters unveiled,” News story, 2023. 12. 12., <https://www.gov.uk/government/news/plan-to-move-government-roles-out-of-westminster-brought-forward-and-new-headquarters-unveiled>, 검색일자: 2023. 12. 13.

Cabinet Office, “Places for Growth Relocations Data 2020-2023,” Corporate report, 2023. 12. 1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laces-for-growth-relocations-data-2020-2023/places-for-growth-relocations-data-2020-2023>, 검색일자: 2023. 12. 18.

457) 영국의 고위공무원(Senior Civil Servant)은 4단계의 고위관리직 공무원, 즉 과장(Deputy director), 국장(Director), 실장(Second Permanent Secretary, Director General), 차관(Permanent Secretary)을 의미

458) Bank of England, “Bank rate maintained at 5.25% - December 2023,” News & Events, 2023. 12. 14., <https://www.bankofengland.co.uk/monetary-policy-summary-and-minutes/2023/december-2023>, 검색일자: 2023. 12. 15.

- (국제경제) 세계 GDP 성장률은 2023년 3분기에 0.5%, 4분기에 0.4%로 추정되고, 선진국 간 성장률은 상이하나 미국보다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은 3분기에 -0.1%를 기록하였고, 4분기에는 0.0%로 예상되는데, 이는 서비스 및 제조업 생산 지표의 위축과 에너지 집약 산업생산의 부진에 기인
 - 미국의 GDP는 3분기에 1.3% 성장하였으나, 소비 둔화와 서비스 및 제조업 지표 약화로 인해 4분기에는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수요·생산) 국내 수요 약세와 가계소비 감소, 기업투자와 주택투자 감소로 인해 영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0.0%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정체는 4분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
- (공급·물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월에 6.7%에서 10월에는 4.6%로 급락하였고, 연말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식품 및 근원재화의 물가상승률은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분야의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금리 동결)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4회 연속 인상된 데 이어, 9월부터 5.25%로 세 번 연속 동결
 - 이번 기준금리 투표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은 5.50%로 인상, 6명은 5.25% 유지 의견 제시

표 3-V-7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날짜	2021	2022										2023					
	12.16	2.3	3.17	5.5	6.16	8.4	9.22	11.3	12.15	2.2	3.23	5.11	6.22	8.3	9.21	11.2	12.14
금리	0.25	0.50	0.75	1.00	1.25	1.75	2.25	3.00	3.50	4.00	4.25	4.50	5.00	5.25	5.25	5.25	5.25

자료: Bank of England, "Monetary Policy Committee Voting History," 2023. 12. 14.

03 주요 경제·재정 통계 및 보고서

가. 경제 통계

- 영국 통계청, 2023년 3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3. 12. 22.)⁴⁵⁹⁾
 - 2023년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감소, 명목 GDP는 1.4% 증가
 - 부문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서비스부문은 0.2% 감소하였으나, 건설과 생산부문은 각각 0.4%, 0.1% 증가
 - 지출항목별로 살펴보면, 기업 투자와 가계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정부 소비와 국제 무역량은 증가

표 3-V-8 GDP 성장률추이(계절 조정)

(단위: %)

구분	실질 GDP 성장률	명목 GDP 성장률
2022년	4.3	9.7
2022년 1분기	0.5	2.0
2022년 2분기	0.1	2.1
2022년 3분기	-0.1	1.5
2022년 4분기	0.1	2.4
2023년 1분기	0.3	2.2
2023년 2분기	0.0	2.4
2023년 3분기	-0.1	1.4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UK: July to September 2023," 2023. 12. 22., Tabl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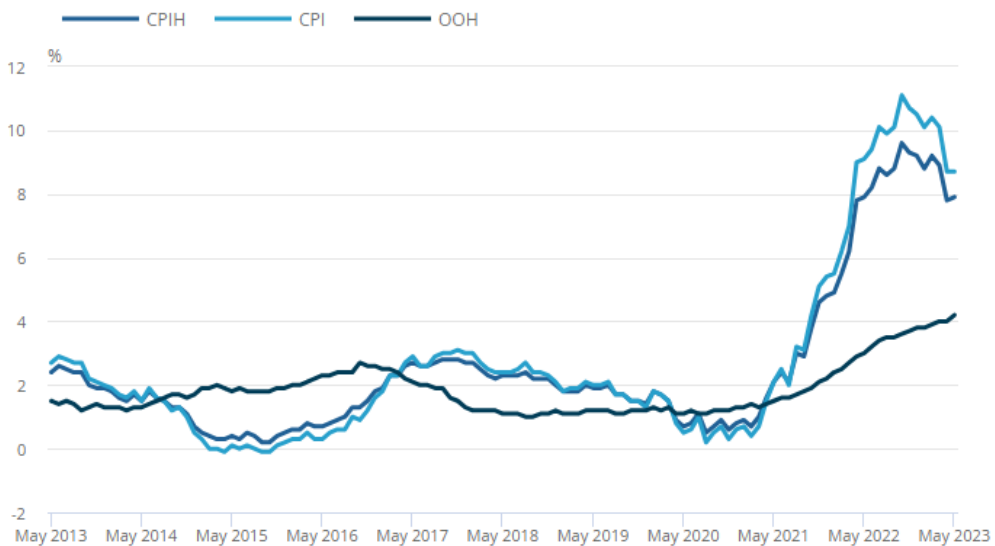
459)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GDP quarterly national accounts, UK: July to September 2023," Economy, 2023. 12. 22., <https://www.ons.gov.uk/economy/grossdomesticproductgdp/bulletins/quarterlynationalaccounts/julytoseptember2023>, 검색일자: 2023. 12. 26.

■ 영국 통계청,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2023. 12. 20.)⁴⁶⁰⁾

- 2023년 11월 CPIH⁴⁶¹⁾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 CPI는 3.9% 상승하였는데, 이는 10월 대비 각각 0.5%p, 0.7%p 하락한 수치
 - 교통, 여가 및 문화, 식품 및 무알콜 음료부문의 가격 하락이 연율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
- 에너지, 식품,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Core CPIH와 Core 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2%, 5.1% 상승
- 전월 대비 CPIH와 CPI는 각각 0.1%, 0.2% 하락

그림 3-V-3 물가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단위: %)



주: OOH(owner occupiers' housing costs)는 자가 거주비용 상승률을 의미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November 2023," 2023. 12. 20.,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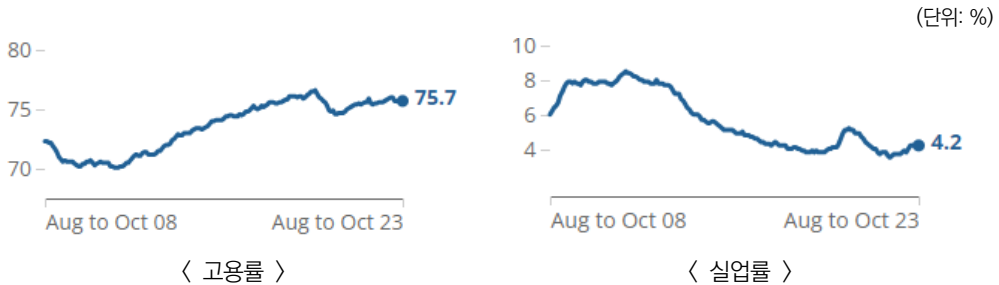
46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Consumer price inflation, UK: November 2023," Economy, 2023. 12. 20., <https://www.ons.gov.uk/economy/inflationandpriceindices/bulletins/consumerpriceinflation/november2023>, 검색일자: 2023. 12. 26.

461) Consumer Prices Index including owner occupiers' housing costs: 주민세(Council tax)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소유, 유지, 거주 비용을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

■ 영국 통계청,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2023. 12. 12.)⁴⁶²⁾

- 2023년 8~10월 고용률은 75.7%로 추정, 이는 5~7월 고용률보다 0.2%p 높은 수치
- 2023년 8~10월 실업률은 4.2%를 기록, 이는 이전 3개월에 대한 수치보다 0.1%p 감소한 수치
- 2023년 8~10월 비경제활동률은 20.9%로, 이전 3개월 대비 0.2%p 감소

그림 3-V-4 고용률 및 실업률 추이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December 2023," 2023. 12. 12.

나. 재정 통계

■ 영국 통계청, 2023년 11월 공공재정 현황 발표(2023. 12. 21.)⁴⁶³⁾

- (재정적자) 2023년 11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월 대비 9억파운드 감소한 143억파운드를 기록
 -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에너지 지원 계획 기간인 202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 이어 1993년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치
- (채무) 2023년 11월 말 기준,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6,714억파운드,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2조 4,186억파운드를 기록
 - GDP 대비 순채무(잠정치)는 각각 97.5%, 88.3%

462)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Labour market overview, UK: December 2023,"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2023. 12. 12.,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uklabourmarket/december2023>, 검색일자: 2023. 12. 26.

46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3," Economy, 2023. 12. 21., <https://www.ons.gov.uk/economy/governmentpublicsectorandtaxes/publicsectorfinance/bulletins/publicsectorfinances/november2023>, 검색일자: 2023. 12. 26.

- (수입·지출) 2023년 11월 중앙정부 경상수입은 776억파운드, 중앙정부 경상지출은 876억파운드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억파운드, 7억파운드 증가
- (순현금소요액) 2023년 11월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Central government net cash requirement)⁴⁶⁴⁾은 전년 동월 대비 81억파운드 감소한 174억파운드를 기록

표 3-V-9 2023년 11월 공공부문 재정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p)

구분	2022년 11월(a)	2023년 11월(b)	b-a
공공부문 순차입	15.2	14.3	-0.9
공공부문 순채무	2,476.7	2,671.4	194.7
(GDP 대비 %)	(95.7)	(97.5)	(1.8)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2,175.6	2,418.6	243.0
(GDP 대비 %)	(84.1)	(88.3)	(4.2)
중앙정부 경상수입	74.0	77.6	3.0
중앙정부 경상지출	86.9	87.6	0.7
중앙정부 순현금 소요액	25.5	17.4	-8.1

주: 1. 순차입과 순채무는 공공부문 은행이 제외된 공공부문 기준

2. 중앙정부 순현금소요액은 UK Asset Resolution Ltd와 Network Rail이 제외된 기준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s, UK: November 2023," 2023. 12. 21., Table 1, Table 2, 저자 재구성

다. 주요 보고서

■ 영국 예산책임청(OBR), 『2023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3*) 발표(2023. 7. 13.)⁴⁶⁵⁾

- (개요) 예산책임청은 2011년부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2017년부터는 『재정 위험 보고서』(Fiscal risks report)를 각각 발간해 왔으나, 2022년부터 이를 통합하여 발표
 - 기존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공공재정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을, '재정 위험 보고서'는 재정 위험의 주요 요인 분석을 포함

464) 현금 지출과 현금 수입의 차이로 정부 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금융시장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금 규모를 의미

465)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 – July 2023," Publications, 2023. 7. 13., <https://obr.uk/frs/fiscal-risks-and-sustainability-july-2023/>, 검색일자: 2023.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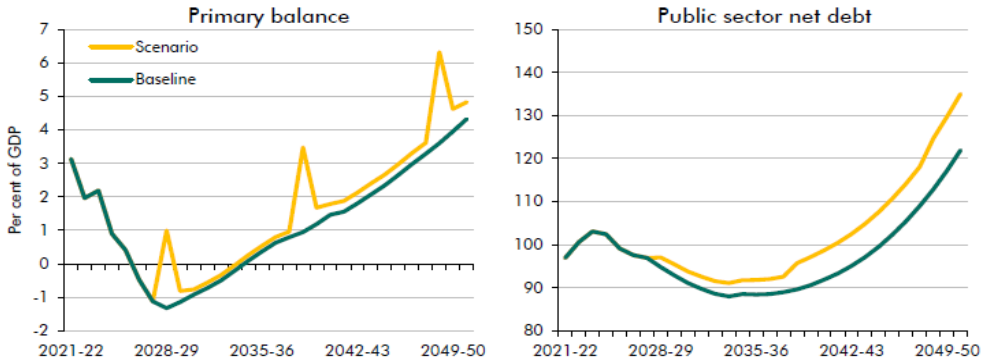
- 이번 통합 보고서는 세 가지 재정 위험 요인, 즉 건강문제로 인한 비경제활동의 증가, 가스 가격 상승, 높은 물가와 금리 상승에 중점을 두고 분석
 - 또한 2017년 재정 위험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재정 위험 등록부(Fiscal risk register)’에 업데이트 되고 있는 여러 재정 위험 요인의 변화를 분석
- (비경제활동 증가) 2023년 초 건강문제(장기질병)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생산가능인구의 6.1%(260만명)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잠재적인 채널을 통해 공공재정에 압력으로 작용
 - 건강 관련 사회보장 급여 청구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 팬데믹 직전부터 장기질병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4만명 증가, 근로 중 질병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49만명 증가, 이와 관련된 복지지출은 2023-24 회계연도에 약 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일하지 않거나, 적게 일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로 인한 조세수입 손실
 - 건강관련 비경제활동과 근로 중 질병으로 인한 세금 손실은 2023-24회계연도에 약 89억파운드로 추정
 - 건강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 건강문제로 인해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하는 개인별 연간 국가의료서비스 비용은 900~1,800파운드로 추정
- (가스 가격 상승) 영국은 가스 의존도가 높아⁴⁶⁶⁾ 세계 가스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공공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음
 - 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의 생애주기 비용⁴⁶⁷⁾이 더 저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 이후 영국의 재생 에너지 투자에 단계적인 변화는 미미한 상황
 - 가스 의존도가 변하지 않고 2022년과 비슷한 규모의 가격 충격(급등)이 10년 주기로 발생하여 가계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정책이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된다면, 연간 GDP 대비 2~3%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

466) 지난 30년 동안 탄소중립 정책의 비교적 빠른 진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주로 주요 에너지원을 석탄에서 가스로 전환함으로써 1990년 이후 G7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크게 감소시켰고, 2000년 이후 가스 순수입량이 국내 가스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

467) lifetime(lifecycle) cost: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처분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비용을 합한 총비용

- 추가적인 채무이자 비용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복적인 가격 급등은 2050-51회계연도까지 공공채무를 GDP 대비 약 13%p 높일 것으로 추정

그림 3-V-5 가스 가격 충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자료: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3," 2023, p. 12, Chart 1.6

- (물가·금리 상승) 영국은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공공채무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아,⁴⁶⁸⁾ 이는 향후 50년에 대한 장기 재정에 위협으로 작용(이하 시나리오별 분석 참고)
 - (기준선 전망) 향후 50년 동안의 인구 고령화⁴⁶⁹⁾와 최신 금리 변화를 고려할 경우, 조세수입 감소와 이자를 제외한 기초지출 증가로 인해 기초재정수지는 2027-28회계연도에 GDP 대비 1.1%의 흑자에서 2070년대 중반까지 10% 적자로 악화
 -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30년대 중반 기초재정수지 흑자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88%로 낮아지나, 이후 기초재정수지 적자 증가와 이자비용 급증으로 인해 2070년대 중반 3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는 2022년 보고서 예상보다 31%p 높은 수치
 - (금리 민감도 반영) 채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환 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이를 보상하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경우,⁴⁷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70년대 중반까지 376%에 이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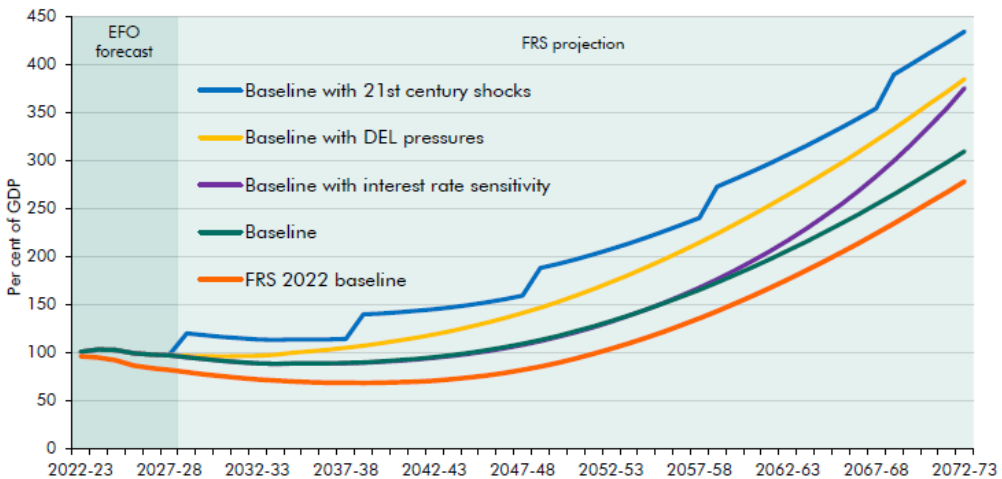
468)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공공부채 평균 만기가 기록상으로 가장 짧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채무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민간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이 더 많기 때문

469) 생산가능인구와 퇴직인구 비율이 4대1에서 3대1로 감소

470)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0%p 증가할 때마다 차입 비용은 17~30bp 증가

- (부처별 지출 압력 반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투자,⁴⁷¹⁾ 정부의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⁴⁷²⁾ 100% 자본공제의 영구화 등에 소요되는 부처별 지출한도를 반영할 경우, 207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38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반복적인 충격 반영) 21세기 현재까지 겪었던 세 가지의 주요 충격⁴⁷³⁾이 미래에도 반복될 경우, 207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35%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3-V-6 시나리오별 공공채무 장기 전망



주: EFO는 예산책임청의 2023년 3월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FRS는 재정 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의미
 자료: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July 2023," 2023, p. 17, Chart 1.9

- (재정 위험 등록부) 2021년 재정 위험 등록부에 업데이트된 재정 위험 요인은 53개로 지난 2년 동안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고, 이번에는 4개 요인이 추가됨
 - (재정 위험 요인 변화) 53개 위험 요인 중 13개는 발현, 15개는 증가, 4개는 감소, 19개는 유지, 2개는 제거
 - (위험 발현) 물가상승으로 인한 채무 이자 지출의 민감도 증가, 재정준칙 개정, 총요소생산성 저하로 인한 잠재생산량 감소 등

471) 2050년까지 매년 GDP 대비 0.4%의 비용 발생

472) 국방비 지출을 현재의 연간 GDP 대비 0.5% 수준에서 2.5%까지 증가

473) 2008-2010년의 금융위기,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과 에너지위기로 지금까지 GDP 대비 약 20%의 채무가 증가

- (위험 증가) 보건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과 수요 압력, 장기적으로 국가 연금에 대한 지출 증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지연됨에 따른 관련 재정 비용 증가 등
 - (위험 감소) 높은 조세지출 비용,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 하락, 행동양식 및 기술 변화로 인한 소비세의 장기적인 압력⁴⁷⁴⁾ 등
 - (위험 유지)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의 위험, 계획된 복지개혁 시행 관련 위험, 세금 미납 등
 - (위험 제거) 포스트 팬데믹이 수입과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⁴⁷⁵⁾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의 구조적 변화
- (재정 위험 요인 추가) 지속적이고 높은 물가상승,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글로벌 안보 위험, 사이버 공격

■ 영국 예산책임청(OBR), 『경제·재정전망 평가 보고서』(*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발표(2023. 10. 19.)⁴⁷⁶⁾

- (배경) 예산책임청은 매년 경제·재정전망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책임청이 수행한 경제·재정전망과 실적치를 비교·분석
 - 이번 보고서는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수행한 2022-23회계연도(2022. 4.~2023. 3.) 경제·재정전망과 실적치에 초점을 두고 분석
- 경제전망 평가
 - (물가상승률)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에서 2022-23회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실적치 대비 각각 8.2%p, 2.0%p 과소 예측하였는데, 이는 예산책임청이 전망을 수행한 이래 가장 큰 오차(그림 3-V-7)
 - 큰 폭의 오차는 예상치 못한 선진국의 강한 수요 회복, 공급 및 물류의 병목 현상 지속, 팬데믹 이후 예상보다 더욱 경직적이었던 노동시장,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속도, 규모)의 과소 설정에 기인
 - (실질 GDP)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에서 실적치 대비 각각 3.3%p, 0.6%p 과대 예측(그림 3-V-8)

474) 예) 탄소중립으로 전환함에 따른 배출 관련 세금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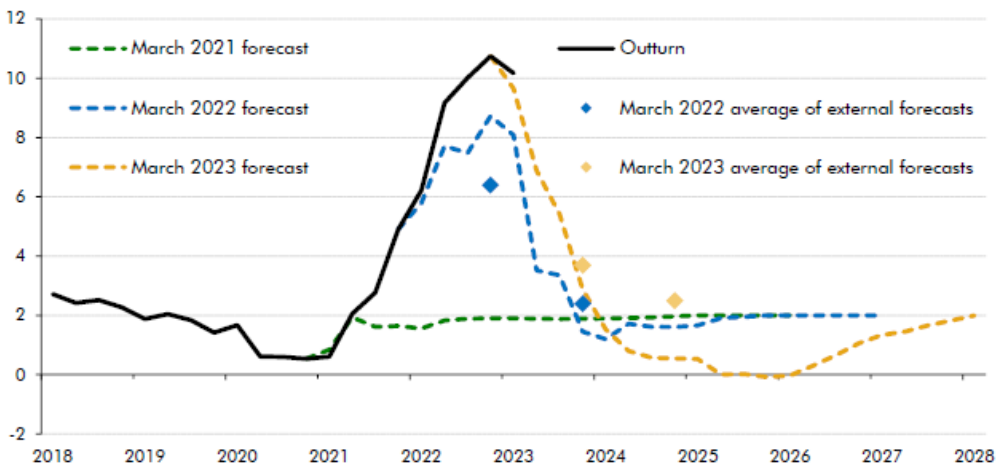
475) 예)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도 그간 적체되었던 환자들에게 소요되는 보건예산 압력

476)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Publications, 2023. 10. 19., <https://obr.uk/fer/forecast-evaluation-report-october-2023/>, 검색일자: 2023. 10. 20.

- 오차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세계 공급 병목 현상이 영국 생산성에 부담을 높인 데 기인
 - 2021년 3월 전망의 오차 3.3%p를 분해해 보면, 민간소비가 3.9%p, 기업투자가 0.6%p, 민간주택투자가 -0.1%p, 정부지출이 0.3%p, 순수출이 -1.0%p, 기타요인이 -0.4%p를 설명
 - 2022년 3월 전망의 오차 0.6%p를 분해해 보면, 민간소비가 0.2%p, 기업투자가 0.1%p, 민간주택투자가 -0.2%p, 정부지출이 0.6%p, 순수출이 -1.5%p, 기타요인이 1.3%p를 설명
- (노동시장)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측정한 2022-23회계연도의 노동공급 증가율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2.2%p, 0.6%p 낮게 나타남
- 이는 고용유지 정책⁴⁷⁷⁾ 종료 이후 평균 근무시간이 예상만큼 빠르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
 - 연간 고용 증가율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0.3%p, 0.1%p 높게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여 전망치 대비 각각 2.0%p, 0.3%p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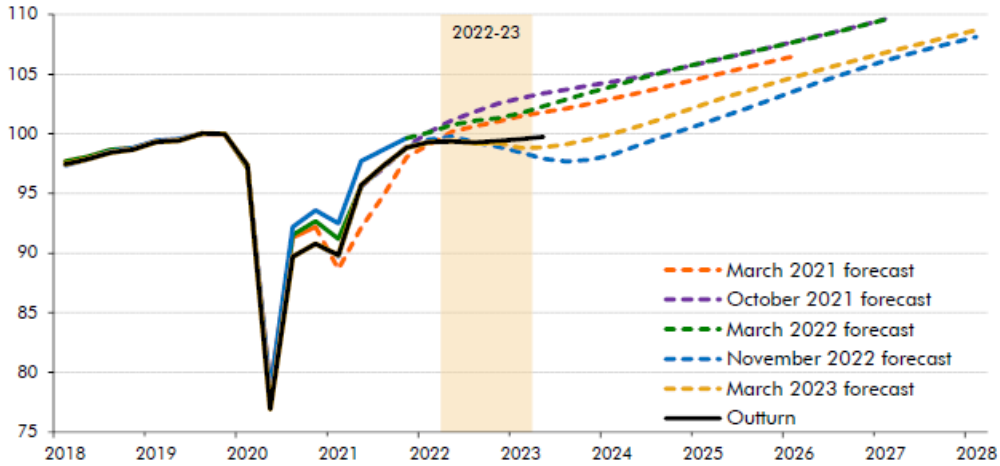
그림 3-V-7 물가상승률 전망과 실적치

(단위: %)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4, Chart 1.1.

477) furlough scheme: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월 임금의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

그림 3-V-8 실질 GDP 전망과 실적치



주: Q4 2019 = 100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5, Chart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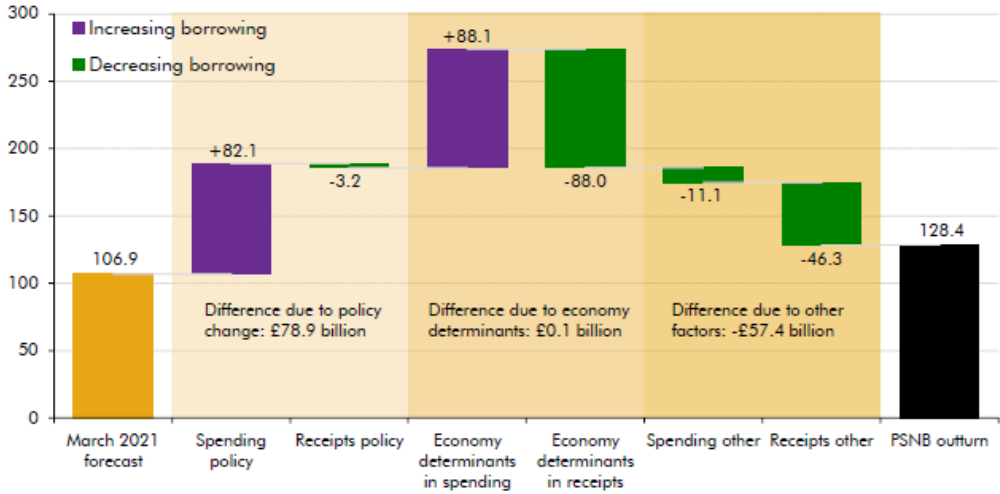
○ 재정전망 평가

- (순차입) 전망 대비 높은 수입 실적을 보였으나 이는 높은 지출로 상쇄되어, 2021-22 회계연도 순차입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 전망 대비 각각 215억파운드(GDP 대비 0.8%), 293억파운드(GDP 대비 1.2%) 높게 나타남([그림 3-V-9], [그림 3-V-10])
 - 2021년 3월 전망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서는 수입과 지출 오차가 거의 상쇄되었으나, 에너지 가격 보증제⁴⁷⁸⁾ 등 정책변화로 인해 차입이 789억파운드 증가하였고, 법인세 유효 세율 차이 등 기타요인으로 인해 574억파운드 감소
 - 2022년 3월 전망의 경우, 경제적 요인과 정책변화로 인해 차입이 각각 57억파운드, 521억파운드 증가하였으나, 기타요인으로 인해 285억파운드 감소
- (순채무) 2022-23 회계연도 순채무는 GDP 대비 98.0%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21년 3월 전망 대비 10.4%p 낮고, 2022년 3월 전망 대비 2.5%p 높은 수치
 - 이는 명목 GDP 전망, 2021-22 회계연도 말 채무 초기값 설정, 2022-23 회계연도 까지의 채무 누적 전망 등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

478) Energy Price Guarantee: 가정용 에너지 연간 요금에 상한(2022년 10월~2023년 3월: 2,500파운드, 2023년 4월~2024년 4월: 3천파운드)을 설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단위당 요금과 기본요금을 조정하여 에너지 연간 요금이 상한을 넘지 않게 하는 제도

그림 3-V-9 2021년 3월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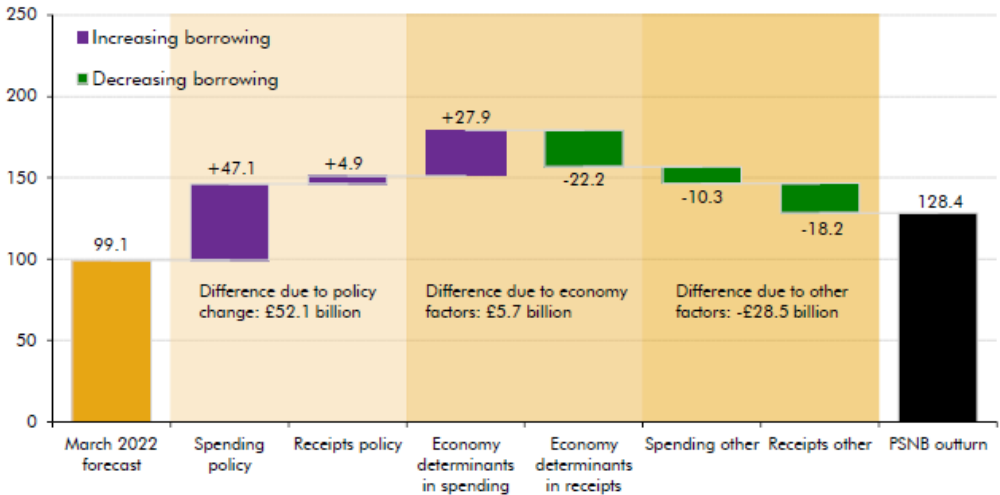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7, Chart 1.3.

그림 3-V-10 2022년 3월 순차입 전망과 실적치

(단위: 십억파운드)



자료: OBR, *Forecast evaluation report – October 2023*, 2023, p. 8, Chart 1.4.

주요 자료 출처

- 미국 -

- 미국 관리예산처(OMB), <http://www.whitehouse.gov/omb>
-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Briefing Room,
<http://www.whitehouse.gov/briefing-room/signed-legislation>
- 미국 연방준비제도, <https://www.federalreserve.gov>
- 미국 의회 상원 세출위원회, <http://www.appropriations.senate.gov>
- 미국 의회예산처(CBO), <https://www.cbo.gov/>
- 미국 의회 하원 세출위원회, <http://appropriations.house.gov>
- 미국 재무부, <http://www.treasury.gov/>
- 미국 노동부, <https://www.dol.gov>
-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https://www.bls.gov>
-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https://www.bea.gov>
-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 <http://www.crfb.org>
- 미국 감사원(GAO), <https://www.gao.gov/>

- 일본 -

- 일본 재무성, <http://www.mof.go.jp/>
- 일본 내각부, <http://www.cao.go.jp/>
- 일본 수상관방, <https://www.kantei.go.jp/>
-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www.stat.go.jp/>
- 일본 은행, <https://www.boj.or.jp/>

- 독일 -

- 독일 연방 정부, <http://www.bundesregierung.de>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https://www.bmfsfj.de>
- 독일 연방 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
-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 <https://www.bmas.de>

- 독일 연방 재무부,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 독일 연방 주택도시개발건설부, <https://www.bmwsb.bund.de>
- 독일 연방 의회, <https://www.bundestag.de>
- 독일 연방 통계청, <http://www.bundesregierung.de>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공동경제전망, <https://gemeinschaftsdiagnose.de/>

- 프랑스 -

- 프랑스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
- 프랑스 예산국, <https://www.budget.gouv.fr/>
- 프랑스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
-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see.fr/en/default.asp>
- 프랑스 사회보장서비스포털, <http://www.securite-sociale.fr/>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https://www.hcfp.fr/>
- 프랑스 공공정보서비스 사이트, <https://www.vie-publique.fr/>
- 프랑스 의회, <https://www.assemblee-nationale.fr/>

- 영국 -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 재무부(HM Treasur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treasury>
 -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health-and-social-care>
 -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 Net Zero),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ergy-security-and-net-zero>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ducation>
 -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

-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rime-ministers-office-10-downing-street>
- 내무부(Home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ome-office>
- 내각부(Cabinet Offic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cabinet-office>
- 공공부문 부정관리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public-sector-fraud-authority>
- 국가의료서비스(NHS England), <https://www.england.nhs.uk/>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http://www.bankofengland.co.uk/>
-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https://obr.uk/>
-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2023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2023년 12월 24일 인쇄

2023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김재진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주)다원기획(044-865-8115)

I S S N 2093-3541



ISSN 2093-3541

재정 동향

2023 | 하반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114 www.kipf.re.kr